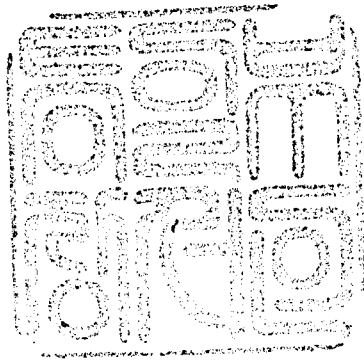


2011년 발표자료

# 2011 외안독회 자료집

2011. 12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 본 자료집은 중국의 외교·안보문제를 연구하는 외안독회 회원들이 2011년 한해동안 정례모임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통일부(남북회담본부)는 국내 중국연구 활성화와 자료의 공유·활용 차원에서 본 자료집의 발간을 지원한 바, 독자 여러분들의 중국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간에 부쳐

중국 외교·안보 독서회(이하 외안독회)는 2005년 4월 12일(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연구자 7인이 모여 제1기 모임을 출범시켰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2개월마다 이 분야의 싱크탱크 관계자는 물론이고 정책실무 책임자 및 학자들이 함께 모여 당면한 중국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2011년 12월 현재 제7기 회원들의 수는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현재이자 미래의 영역이다. 중국은 이미 G2라 불릴 정도로 급부상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부상하는 중국의 외교안보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통일이라는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다가온 중국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그 외교안보적인 함의는 복잡적이어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다. 중국을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순간부터 이미 중국에 대한 물이해가 시작된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결국,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와 더불어 보폭을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서로 지혜를 나누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외안독회’ 모임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다. ‘외안독회’는 매 2개월마다 모여 새로이 발생하는 중국 외교안보 관련 주요 현안들을 연구하고 분석해 왔다. 정책입안자, 실무자, 학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면서 사안을 복합적으로 조망하려 노력하고 있다. 비공개이고 비당파적인 모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정답을 구하기보다는 모든 대안들을 놓고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다.

외안독회는 이 결실의 일부를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그간 부족하나마 두 권의 공동연구서를 출간한 적이 있다.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오름, 2008)와 「중국의 영토분쟁」(동북아 역사재단, 2008)이 그것이다. 또 2012년 새해에는 「중국 외교와 당면한 새로운 이슈들」(가제, 오름 2012)이 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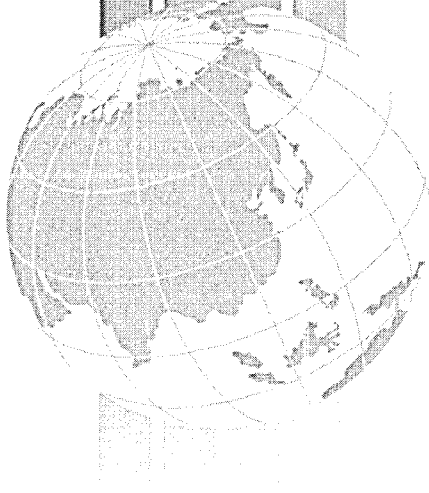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외안독회가 2011년 토론의 자료로 활용했던 내용을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준비했던 노력의 결실이다. 이 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물론이고, 다른 부문들에서도 중국 외교안보 분야를 이해하는 데 활용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이 모임의 회장으로서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고, 더불어 고민하면서, 중국 외교안보라는 불확실한 영역의 발을 일궈온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문대근 통일부 대외협력조정관(중국)과 관계자들께 회원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19일

외안독회 회장 김 홍 규(성신여대)



# 목 차

---

## I. 중국과 한반도

---

1.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김흥규	3
2.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중국의 인식	이정남	15
3. 중국의 동북·북한지역에 대한 인식	문대근	35
4.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 및 성과	이상숙	59
5. 북중우호조약의 현재적 함의와 양국 경제협력	이상숙	67
6.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최지영	85
7. G-2시대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	신종호	117
8. 한중관계: 협력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김애경	127
9. 미중관계 속에서의 한반도	신종호	137
10. 중국의 부상,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대근	155

---

## II. 중국의 대외전략 · 정책

---

11.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북아 안보	박병광	175
12.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관계	박병광	205
13.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이정남	229
14. 중국의 인권과 인권외교	최지영	261

---

## CONTENTS

15.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	유현정	301
16.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 발간과 그 의미	김애경	331
17.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 정책 분석	이상국	339
18. 중국의 전략사교의 변화와 함의	김흥규	353
19. 중국 새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및 한반도	김흥규	375
20.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신종호	385
21.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 국내외 정치 전망	이기현	399

---

**Ⅲ. 중국의 정치·대외관계**


---

22.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김애경	411
23.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협력 방안	신범철	437
24.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신종호	457
25. 이명박 시기 한미관계와 전망	김흥규	479
26.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이정남	4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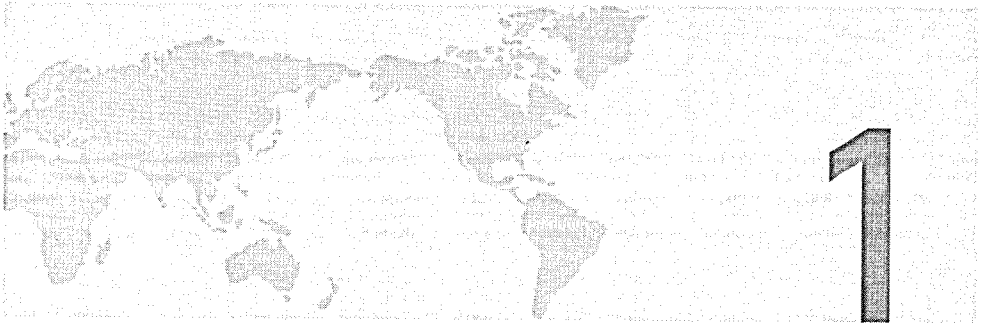






# I. 중국과 한반도





#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김흥규 | 성신여자대학교

- I. 핵심이익 이슈의 부상
- II. 핵심이익 논쟁
  - 1. 핵심이익 확대론
  - 2. 보수적 핵심이익론
  - 3. 핵심이익 불용/연기론
- III. 중국의 공식입장
- IV. 한반도에 대한 함의
  - 1. 핵심이익 논의의 적용
  - 2. 미중관계와 한반도

## I. 핵심이익 이슈의 부상

- ◆ 21세기 들어 중국의 핵심국가이익 개념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됨. 이는 최근까지 중국의 핵심이익은 당연히 경제발전이라 여겨왔으나, 국력의 상승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내에서 국가핵심이익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이익이란 국가의 최고이익, 국가 및 민족의 생존존망과 관계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sup>1)</sup>
  - 국가이익은 동태적인 개념이며, 핵심이익, 중요이익, 일반이익으로 분류. 후자로 갈수록 가변적임.
- ◆ 중국이 외교에서 사용한 ‘핵심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중국 대외정책 실무분야에서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이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석상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부터임.
  - 그 후 서해 한미연합훈련,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본격적으로 증폭되었음. 그러나 중국이 언제부터 핵심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지, 구체적인 의미와 현실적 적용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대체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 2009년 7월 당시 다이빙귀는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은 “중국 기본제도의 유지 및 국가안보, 영토 및 주권 보호,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발전”이라고 제시한 바 있음. 회의기간 중 미국은 이에 대해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중국은 미국이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음. 더 나아가 2009년 11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은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해주시기로 공동성명에서 합의했음(Respecting each other's core interests is extremely important).
  - 중국 측에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상호 핵심이익에 대해 존중하는 문제에 더 적극적이었고, 심지어는 내부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미국의 핵심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함.
  - 미국은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을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세계적

1) 懷成波, 怎樣理解國家核心利益? 『紅旗文稿』2011年 2期, p. 38.

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의 공동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할 수 있음. ‘핵심이익’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도 이러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었음.

- 동시에 다이빙귀가 제시한 핵심이익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음.
- ◆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막한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비협조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경험하면서 달라졌음.
  - 미국은 중국이 주요이슈에서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역시 2010년 미국의 대만무기판매, 달라이라마 방미,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 등 사안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반목을 드러내었음.
  - 미중은 당시 상호 기(氣)싸움의 양태를 띠면서 반목하였지만, 당시로서는 이 핵심이익이라는 개념이 추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미중관계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음.
  - 이후,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남중국해가 들어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였고, 2011년 1월 미중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문안에서는 ‘핵심이익’ 조항이 배제됨.
- ◆ 2010년 3월 한국의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태는 ‘핵심이익’에 대한 논란을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천안함 사태로 인한 미중 갈등과정에서 중국 군부의 일부장성이 남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지역으로 정의하면서 대외관계에 확장시켜 적용하려 시도하였음.
  -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러한 중국 일부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7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라고 주장하여 ‘핵심이익’이 본격적으로 국제이슈화 함.

## II. 핵심이익 논쟁

◆ 중국 핵심이익 관련 논쟁에는 크게 ‘보수적 핵심이익론’, ‘핵심이익 확대론’ 및 절충론이 존재함. 보수주의자는 주로 관방의 입장이거나 관방과 가까운 학자들(발전도상국 외교론자)임. 확대론은 중국의 부상에 고무된 일부 강대국론자들과 군부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고, 전통적 지정학론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있음 (전통적 지정학과 및 일부 부상하는 강대국 외교론자). 강대국론자의 다른 일부는 핵심이익 논쟁의 연기 혹은 불용을 주장함.

### 1. 핵심이익 확대론

◆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발전도상국론에 방점이 가 있는 외교부의 온건하고 신중한 대응 태도가 주류를 이루었음. 그러나 미 조지 와싱턴 호 항모가 서해에 들어와 한미군사훈련 계획이 알려진 이후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동원한 전통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강경 분위기를 주도하였음. 군부가 그 대표적인 세력중 하나임. 중국 군부측은 한·중간 경계수역인 서해(황해)를 핵심이익 영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양이(楊毅) 해군소장은 미 해군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 ‘국익’에 대한 도전이자 중국 인민들에 모욕을 주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 중국은 중국 동해(상하이와 저장성 앞바다)의 모 해역에서 6월 30일~7월 5일동안 합동 군사훈련을 단행했음. 실탄사격 훈련 마지막 날인 7월 5일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는 “미국 항공모함이 황해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음. 결국 중국 외교부 역시 비록 서해를 핵심이익지역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sup>2)</sup> 여론을 등에 업은 군부의 입장에 밀려 미 항모의 서해진입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로 전환하였음.

2)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남해를 핵심이익지역으로 공포한 바는 없다는 입장임.



- ◆ 중국의 환구시보는 2010년 7월 9일 사설에서 “황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핵심지역으로 수탉의 인후부(목구멍)와 같이 국가의 생사존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환구시보는 한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항공모함은 자체 무기만으로도 중국 연해의 어떤 지방도 타격할 수 있다”며 “만약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한다면 이는 ‘함포외교’의 현대판 버전으로 중국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마샤오텐 부총참모장은 홍콩의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과 인접한 황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음. 동시기 봉황TV의 스킨핑(石齊平) 역시 남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지역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음.<sup>3)</sup>
- ◆ 또 다른 예로 환구시보는 중국의 칭화대학 리씨광(李希光) 교수의 글, “한반도(특히 북한)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라는 사설을 발표함. 북한에 어떠한 정권 어떠한 제도가 들어서도 북한은 중국의 일급 핵심이익에 속한다는 것임. 중국은 현재 C자형 포위국면에 처해 있고, 파키스탄, 네팔, 북한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포위망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함. 동북 3성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안정과 유지는 필수적이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는 논지임.
- ◆ 중국 인민대 쉬엔여우청(玄有成) 교수는 중국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핵심이익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강한 국가와 민족발전, 국가주권과 영토, 영해의 보호,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인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음.

## 2. 보수적 핵심이익론

- ◆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중국 위협론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0년 7월 13일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다이빙귀가 제시한 핵심이익의 내용 중 당의 집정능력 부분을 생략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국가주권, 안전, 영토보전

3) 石齊平, “什麼是核心利益,” 中外管理 2010年 第 8期, p. 14.

및 발전이익이라고 소개하였음.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를 회피하고 양자간의 문제로 국한하고자 시도하였으며(제3자의 개입은 반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하였음.

- ◆ 중국의 “평화적 부상”론의 입안자이자 후진타오시기 대외정책을 입안하는데 주요한 조력자로 알려진 정삐젠(鄭必堅)은 미중간 중국의 핵심문제 확대를 놓고 알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한 건의에서 보수적인 핵심이익론의 종지(宗志)를 제시하였음.
  - 중국은 2020년까지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규정한 바 있음. 국력의 증대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역할도 증대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갈등하기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하여야 함.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구소련의 꿈’을 꾸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꿈’을 꾸어야 함.
- ◆ 북경대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왕지쓰 교수 역시 한반도문제 관련 내부토론에서 중국의 정치 군사상의 측면에서 핵심이익은 대만, 신장, 티벳 등이며, 북한 및 북핵문제는 중국 외교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중심적인 위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3. 핵심이익 불용/연기론

- ◆ 국방대 교수 한쉐동(韓旭東)은 핵심이익개념을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 이는 첫째, 국가간 충돌을 야기할 개연성이 지나치게 크고, 둘째, 중국의 국력이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셋째, 모든 외교사무가 이에 집중되는 것 같은 허상을 안겨주기 때문이라 주장<sup>4)</sup>
- ◆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장조리인 따웨이(達巍) 역시 핵심이익의 확대해석이 현 중국의 안보상황에서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4) 이는 『瞭望』 2010年 第30期 韓旭東의 글. 동시에 安慧林, 『理論與當代』 2010年 第9期, p. 55.

### Ⅲ. 중국의 공식입장

- ◆ 중국은 2010년 10월 중공당 제17기 5중전회 보고서 및 제12차 5개년 계획(規劃)(2011~2015년)의 기본노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한다고 천명함. 이어 중국 외교의 실무수장인 다이빙귀는 12·5규획에 대한 자신의 건의문인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하자’는 제목의 글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
- ◆ 다이빙귀는 중국의 핵심이익 확대를 주장하는 내부세력 및 공세적인 외교에 우려하는 외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중국은 기존의 평화발전노선을 견지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함. 이의 근거로 “중국은 아직 세계와의 조화를 통해 평화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발전도상국론).
  - 동시에 △중국의 국가체제 △주권보호, 영토보전, 국가통일 등 핵심이익의 침해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여 국내의 핵심이익 확대론자들에 대해서도 타협함.<sup>5)</sup>
  - 다이빙귀의 정리는 2010년 7월 13일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 ◆ 동시기 중국은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전략사고들 간에 타협점에 도달.
  - 즉, 현 상황에서 핵심이익의 대상을 남중국해로 확대하여, 미국의 개입 여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 분쟁의 국지화 시도.
  - 중국의 대외이미지의 추가적인 악화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 자제,
  - 남중국해의 핵심이익 포함여부는 가능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직접적인 거명 자제
  - 남중국해는 핵심이익지역이기는 하나 ‘분쟁중립’ 핵심이익지역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대만 및 신장문제 등과는 구분. 대응도 협상과 평화적 방식과 같이 다른 차원에서 진행.

5)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um=585980&sid=E&tid=3>  
(2011/10/08)

- ◆ 2011년 8월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은 미국 부통령 바이든의 방중시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간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함. 단, 그 내용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발전이익, 대만 및 신장 문제를 존중하는 것으로 제한함.<sup>6)</sup> 이에 바이든 부통령 역시 화답하였음. 시진핑이 언급한 중국의 핵심이익 내용은 그간 전개된 중국내부의 핵심이익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함.
  - ‘발전이익’은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개념이며 동시에 주변 환경의 안정과 평화를 더 강조하는 개념임.<sup>7)</sup>

#### IV. 한반도에 대한 함의

##### 1. 핵심이익 논의의 적용

- ◆ 북한은 그 자체로는 중국이 핵심이익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큼. 2009년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제시한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은 “중국 기본제도의 유지 및 국가안보, 영토 및 주권 보호,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발전”과 관련한 문제였음.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북한은 대만과 달리 중국의 주권과 영토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 북한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문제와 연관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 북한 급변시, 미국(혹은 한미연합군)이 중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군사적으로 진주하는 상황
  - 북한 상실(Who lost North Korea?)에 대한 책임론
  - 미중관계 악화시,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
  - 북한 급변으로 인한 중국 동북지역의 혼란과 불안정
- ◆ 북한은 전략적으로 중요(중요이익)지역이라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북한의 존재가 중국의 핵심국가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도 존재함.

6) 懷成波, 怎樣理解國家核心利益? 『紅旗文稿』 2011年 2期, p. 38.

7) 이는 潘慈娟, 中美核心國家利益之比較, 『國際資料信息』 2006年 第9期, p. 10.

- 지경(地經)화적인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존재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특히 북한이 야기한 북핵 위기는 중국이 미국 및 한국과의 군사적 분쟁에 연루될 개연성 존재
- 북한발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동북지역 경제 및 사회 안정 및 발전을 저해할 개연성
- 북한의 독자적 외교군사노선 증대
- 북핵 기술과 물질이 중국내 분리·독립주의자에게 확산될 개연성
- ◆ 현 상황은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 보다는 전략적 비용을 크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요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현재 중국내에 북한의 전략적 지위문제와 관련하여 전략파들과 전통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임.
- ◆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일 것임. 동시에 한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안정적 관리, 그리고 대미 억지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임.

## 2. 미중관계와 한반도

- ◆ 미중의 입장에서 보면, 탈냉전시기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되었음. 이제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이해가 중요할 것임. 현재의 상황은 결국 미중 모두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이나 북한을 최소한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조됨.
- ◆ 역으로, 북한이나 한국이 문제를 야기하여 미중관계의 변수가 되는 상황은 방지하려는 이해를 미중은 공유하고 있음.
- ◆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역내 안정을 해치면서 미중 관계를 갈등으로 이끌어 간다면, 미중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북한정권의 변화 혹은 한반도 통일에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할 개연성도 논리적으로는 존재함.





##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중국의 인식







#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중국의 인식

이정남 | 고려대학교

## I. 서론

## II.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1.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변화
2. 동아시아지역주의 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III. 동아시아 협력안보의 발전과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1. 탈냉전과 동아시아 협력안보의 발전
2.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목표, 제도화수준, 성원

## IV.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추진전략

## I. 서론

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전쟁이나 대규모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안보상황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안보협력에서 이 지역은 정치적인 의지, 안보기제의 배치, 그리고 법률적인 구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보딜레마에 봉착하기 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내 국가 간 충돌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세계화와 지역주의 추세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논의가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내의 학자들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건설이 중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국가들로부터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위협론을 제거하면서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간주되면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에 대한 중국내의 학자들의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낙관론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학자들로, 이들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분석하거나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분석하는 규범적인 논의가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sup>1)</sup>

다른 한편 동아시아 지역이 지닌 특수성과 한계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은 어려우며, 안보기제의 형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이라는 비관론적인 시각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을 구성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지역인 동북아는 동남아와 달리 지역내의 국가를 제일의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함한 모든 동아시아지역에게 해당되는 국가적인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

1) 段霞; 姜建新, “东亚安全共同体路径探讨”, 『现代国际关系』 2007年 第6期, 7-9; 王帆, “东亚安全模式: 共存·并行还是置换?”, 『世界经济与政治』 2005年 第11期, pp. 16-21; 阎学通, “关于建立东亚安全共同体的战略设想”, 『亚非纵横』 2004年 第1期, pp. 1-8; 刘箬, “东亚安全体制的未来设想: 建构东亚安全共同体”, 2008年 第3期, pp. 139-141. 张铁军, “中国与东亚共同体建构”, 『东北亚论坛』 第15卷 第2期, 2006年 3月, pp. 38-42.

에서 놓고 볼 때,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이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을 대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안보공동체의 건설은 앞으로도 상당시간 동안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안보기제와 비전통안보공동체를 동아시아 안보를 지키는 주요한 길로 선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안보공동체는 장기적인 평화적 교류로 발전하는 습관을 의미하며, 안보기제는 행위체의 이익이 완전한 협조도, 근본적인 대립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심지어 상호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안보공동체와 비교하여, 안보기제는 훨씬 낮은 그러나 훨씬 현실적인 층차이다. 현재 동아시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안보기제를 만드는 것은 절박하고, 비교적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간 충돌방지, 분규완화, 상호신뢰 확립, 특히 지역내에서 출현하는 혼란 혹은 전쟁국면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건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언급은 매우 찾기가 어렵다. 다만 16차 당대회보고에서 주변국가와 선린우호관계와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자적 지역협력이 당대표대회의 보고에서 처음으로 쌍무적 관계와 나란히 출현한 점이나,<sup>4)</sup> 1996년 제기한 협력과 상호안보를 중심으로 한 '신안보관'의 계기를 통해서 볼 때, 중국 지도부의 다자적인 협력안보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주룽지 총리가 중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정을 설명하면서, 우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정치안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단계적인 관점을 제기하고, 현재는 경제 공동체의 형성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한 점으로<sup>5)</sup> 미루어볼 때, 정치안보공동체의 즉각적인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며, 과연

- 
- 2) 王正毅·譚『构建安全共同体:东盟与地区秩序』上海人民出版社, 2004, p. 1-24.
  - 3) 李開盛·顏琳, “建构東亞安全共同体的可能性分析”, 『國際論壇』第11卷 第2期(2009年 3月), pp. 7-11.
  - 4) “全面建设小康社会, 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在中国共产党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2002-11-18), <http://www.cs.com.cn/csnews/20021118/300508.asp>(검색일: 2008-12-20).
  - 5) 朱容基, “加强东亚合作, 促进共同发展: 朱容基总理在第5次东盟与中日韩领导会议上的讲话”, 2001年 11月 5日([http://news.xinhuanet.com/world/2001-11/05/content\\_100675.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1-11/05/content_100675.htm))(검색일: 2009-10-6).

안보공동체 구상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내의 외교안보전문가나 중국의 지도부의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에 대한 언급에 기초하여,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Ⅱ.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1.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변화

중국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종종 동아시아, 아시아, 아태 혹은 동북아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공동체를 논의할 때,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인식에 대하여 해당범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동아시아의 구성원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학계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범위는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한중을 3개국을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동북아를 한중일 3개국으로 할 것인지 북한 몽고를 포함시켜 5개로 할 것인지, 또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8개 국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sup>6)</sup>

전통적으로 중국의 동아시아인식은 화이사상(華夷思想)에 기초한 중화질서(中華秩序)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중화질서는 근대화과정에서 중화주의질서가 해체되고 이른바 서구 중심적 근대국제질서로 편입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지역에 식민지질서와 냉전질서가 형성되어 존재해 오는 기간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여력이 부재하였고,

6) 한석희·강택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중국의 인식: EAS에 대한 정책과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2009년), pp. 284-286.

그 결과 사실상 동아시아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구상과 비전도 없었다. 이에 중국의 한 학자는 중국은 20세기 들어 1990년대 전까지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체계적인 시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sup>7)</sup>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다시 동아시아를 자신들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고자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영토의 68%, 인구의 65%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연 9.67%의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질서의 변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를 중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익이 집중된 지역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는 현 단계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고려할 중점으로 간주하고 있다.<sup>8)</sup>

특히 중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이 스스로를 동아시아 국가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급영향을 보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이로 인한 운명 공동체적 성격, 중국이 받게 될 영향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역내 국가로서의 책임의식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sup>9)</sup>

이처럼 중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정책은 과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서 점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의 변화과정을 밟아 왔다. 개혁개방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국제체제의 규범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았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덩샤오핑이 평화와 발전이 세계의 추세라는 말에 기초하여 평화공존 5원칙을 제기하면서 국제무대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는 개별적인 쌍무관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동아시아지역국가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지역주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sup>10)</sup>

7) 龙中英, “中国的亚洲战略:灵活的多边主义”, 『世界经济与政治』 2001年 10期, pp. 30-35.

8) 门洪华, “中国东亚战略的展开”, 『当代亚太』 2009年 第1期, p. 54.

9)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5, p. 68.

10) 서정경, 원동욱,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2009년, 여름), p. 274.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지지와 함께 지역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펴게 되었다. 2004년 4월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 BFA) 개막식 연설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아시아지역협력을 강화하는 5개항의 주장(선린우호와 정치적인 신뢰의 증진, 쌍무적 경제협력의 전개 및 심화, 경제통합 과정의 가속화, 문화교류와 인적왕래의 촉진, 안보대화과 군사교류의 증진)을 발표하였다.<sup>11)</sup> 또한 같은 해 4월 칭다오에서 개최된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제3차 외교부 장관회의 개막식에서 원자바오(溫家宝) 총리는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국 정부는 아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각종 다자간 협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sup>12)</sup>

중국이 이처럼 동아시아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중국의 경제발전 및 세계경제로의 효과적인 진입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위협론과 같은 중국에 대한 주변국가의 의구심을 줄이고 동아시아 안보딜레마를 제거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 외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정체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적인 리더십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이다.<sup>13)</sup> 특히 1997년 15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다자주의외교와 함께 지역주의를 중시하는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의가 오히려 동아시아 주변국가와 미국의 안보압력을 완화하고,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도움이 된다는 지도부의 인식에 따라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기존의 우려가 사라지게 되었다.<sup>14)</sup>

## 2. 동아시아지역주의 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중국은 지역 강대국으로서 지역주의가 자국의 역내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제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책임있는 지역 강대국의 이미지

11) 人民日报, 2004年 4月 25日.

12) 人民日报, 2004年 6月 23日.

13) 한석희·강택구(2009), pp. 287-289.

14) 孙学峰, “陈寒溪中国地区主义政策的战略效应”, 『世界经济与政治』2006年 第5期, p. 27.

를 확립하고 다른 국가들의 인정은 받는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재 형성중인 지역 레짐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언권을 강화하고 레짐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으로, 주요하게 아세안 +3의 틀 내에서 경제적인 협력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하여 점차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였다. 2001년 동아시아 12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인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동아시아 협력의 목표로 제기하였다. 2002년 민간영역에서 조직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은 보고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다시 제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은 각국의 이익과 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3년 12월 일본과 아세안 국가의 특별 수뇌 회의가 발표한 협력선언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제기하였다. 그 후 2004년 동아시아 지도자들이 라오스에서 거행된 10+3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합의하기에 이른다.<sup>15)</sup>

그러나 중국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계에서 아직 공통된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다.<sup>16)</sup> 다만 중국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해가는 실천적인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공동체의 발전방향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동의하지만, 이 제도화수준이 높은 지역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이 국가간 안보,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정치제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고도로 제도화된 동아시아 협력의 기제 속에서 중국의 행위가 구속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존재로 동아시아 지역내에서 중국이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17)</sup>

그리하여 중국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 방향은 동아시아 지역

15) 张蕴岭, “对东亚合作发展的再认识”, 『当代亚太』2008年 第1期, pp. 4-6.

16) 刘筠, “东亚安全体制的未来设想: 建构东亚安全共同体-从可能性论证到步骤分析”, 『前沿』2008年 第3期, p. 140.

17) 张蕴岭, “东亚合作和共同体建设: 路径及方式”, 『东南亚纵横』2008年 11月, p. 4.

을 관리하는 초급적 지역 권위체(super regional authority) 또한 제도화된 지역조직이 아닌 일종의 협상, 협조, 대화를 통하여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지역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일종의 협조적 구조이다.<sup>18)</sup> 이러한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주요한 기능에 기초하여 제도화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초지역적인 제도화보다 기능적인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 이롭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 안보, 사회문화 공동체를 건설하여, 역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정치체제, 문화, 종교 등의 다양성에 위배되지 않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제도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제, 안보, 정치, 문화 영역에서 기능적 차원의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왕이(王毅) 부부장은 중국정부의 입장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FTA수립을 중점 내용으로 하며, 점차 점진적으로 정치안보 대화영역에서 협력과 대화를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각 영역에서 종합적인 협의기구로 발전되어가야 한다는 점임을 분명히 했다.<sup>19)</sup> 따라서 현재의 발전방향으로부터 볼 때, 하나의 완성된 동아시아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 안보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있다.

둘째,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견지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역 내부의 협력과 일체화와 동시에, 동아시아 성원국의 기타 지역 및 국가와 쌍무적 혹은 지역적인 협력을 지지한다. 지역내에서 다양한 층차의 협력의 틀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고, 동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쌍무적 동맹이나 기타 협정도 허락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하나의 배타적이거나 혹은 내향적이고 폐쇄적인 지역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셋째,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10+3을 기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에 대응하여 지역주의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협력자이긴 하지만, 협력의 주도권을 전면에 내세우지

18) 한석희·강택구(2009), p. 291.

19) 王毅外交副副部长在外交学院“东亚共同体”研讨会发言摘要, <http://www.fmprc.elp.du/ehn/zxxx/t87474.htm>(검색일: 2008-10).

20) 张蕴领, “东亚合作和共同体建设:路径及方式”, p. 4



않으면서 아세안 방식의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외형적으로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협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동아시아 지역에 투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중국은 아세안이 지역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리더십 역할을 하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일간의 경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지역 협력과정에서 주도역적인 혹은 리더십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세안이 운전석에 앉고, 주도적이 혹은 리더십 역할을 하면, 다른 나라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 진다. 따라서 아세안을 지역 협력의 조정자이면서 조직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21)</sup>

동시에 중국은 아세안 +3가 아시아 지역협력의 주요한 차량이 되고, 아세안 +3 틀 내에서, 많은 협력 메커니즘이 확립되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정상회담, 상해협력조직, 6자회담의 성공의 가능성에 기초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 등에 참여하고자 한다.<sup>22)</sup> 그러나 중국은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은 아세안 +3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가령 중국은 2005년 12월에 등장한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지역 국가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대화하는 새로운 포럼이지만, 이것이 아세안 +3를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둘은 공존해야 하고, 서로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중국은 동아시아 협력체제에서 아세안이 그 핵이고, 아세안 +3가 주요 차량이며,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보조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넷째,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비전통적 안보영역의 협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다. 중국은 6자회담 등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즉 지역적 다자레짐을 통해 대만문제와 같은 국가의 핵심적인

21) Ren Xiao, "The Revival of China's Northeast and Community-building in Northeast Asia," *In Search of A Peaceful Northeast Community: Ideas, Society, and Institutionlization*(Sat. March 22, 2008, LG-POSCO Hall, Korea University), Co-organized by Institute for Peace Studies and East Asian New Governance Education & Research Team, Korea University.

22) 张蕴领, "东亚合作和共同体建设:路径及方式", 『东南亚纵横』2008年 11月.

이익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안보문제를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민감한 전통적인 안보문제보다 비전통적인 안보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비록 한반도와 같은 특수한 지역의 경우 개별국가들은 먼저 정치안보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정치안보협력을 다음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경제, 정치안보 협력을 병행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가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지역 협력의 핵심적인 과제는 fta를 통하여 경제협력을 계속적으로 확대 심화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역국가들은 안정적으로 정치안보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네트워크가 모든 주된 분야를 포괄하는 점점 포괄적인 메커니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4)</sup>

### Ⅲ. 동아시아 협력안보의 발전과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 1. 탈냉전과 동아시아 협력안보의 발전

냉전 이후 동아시아지역은 적과 아의 구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과 협력의 공존하는 상황에 기초하여 국가간 안보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다자안보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협력과 안정을 추구하고, 지역의 규범을 만들고 동시에 지역적인 정체성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군사동맹의 틀이 존재하는 과정에서도 동시에 다자안보의 틀을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지역은 냉전의 직접적 영향하에 놓여 졌다. 그리하여 미국 주도의 쌍무적 안보동맹과 중소동맹 혹은 사회주의 진영이 상호 대립하면서 안보영역에서 이른바 차가운 평화상태를 유지해 왔다. 당시 동남아와 한반도는 식민지로부터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에 바빴고, 1967년에 성립된 아세안은 외부의 개입과 내부의 응집력 부족으로 동아시아 질서 형성

23) 金熙德, “东亚合作的进展, 问题与展望”, 『世界经济与政治』 2009年 第1期, p. 54.

24) Ren Xiao, “The Revival of China’s Northeast and Community-building in Northeast Asia,”

에서 별다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960-1980년대 일본과 동아시아 4파리 용의 부상도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중국 또한 국내 혁명의 건설과 서방의 봉쇄와 소련에 위협에 대응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 중국이 국제전략을 조정할 때까지,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정치안보와 군사안보였다. 그러나 1982년 이후 경제안보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비록 여전히 핵심안보영역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정치안보와 군사안보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중국의 새로운 안보관의 형성이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동아시아 다자안보 기제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기제의 형성 동인은 미국의 동남아로부터의 철군이다. 탈냉전과 함께 양극체제의 붕괴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조정하고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축을 개시하였다. 특히 1992년 동남아의 필리핀 미군기지의 철수로, 동남아는 미군의 철수로 거대한 권력 동백이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냉전에 의한 모순 및 역사적으로 잔존해 온 영해 및 영토분쟁이 돌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국가들간의 경제발전수준, 문화와 민족, 종교 등 방면에서 차이는 이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존재하였다.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군의 철수 후 남은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안보안정을 위하여, 다자적인 안보기제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동아시아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기제인 동아시아포럼(arf)을 설립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여, 주변 국가와 안보협력과 협조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1996년 4월 '상하이 5국' 기제를 만들었고, '협력안보, 상호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신안보관'을 제시하였다.<sup>25)</sup> 그 후 1997년 3월 arf회의에서 정식으로 중국은 신안보관을 제기하였다. 또한 1998년 4월 러시아와 '다극화와 세계 신질서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보편적인 의의를 지닌 안보관을 확립하고, 쌍무적, 다자적인 협조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안전을 추구할 것을 호소하였다. 1999년 3월 26일, 장쩌민(江澤民)은 유엔군축담판에서 중국의 신안보관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신안보관의 핵심으로 '상호신뢰, 이익, 평등, 협력'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안보관은 이후

25) 门洪华, “中国的崛起与东亚安全秩序的变革”, 『国际观察』2008年 第2期, p. 17.

성립된 상하이협력조직의 건설, 중국과 아세안과의 fta 추진, 북핵 6자회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중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전략의 핵심은 첫째 이 지역 강대국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음으로 지역내 주변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인 동맹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sup>26)</sup> 동남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동하고 동력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2년 16대 보고에서 선린우호관계를 확립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지역협력이 당대표대회보고에서 최초로 쌍무적 관계와 나란히 등장하였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중국은 상하이 협력조직과 아세안+3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북쪽에서는 상하이 협력조직의 제도화가 완성되고, 안보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해 갔다. 남쪽으로는 중국과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은 출신수범하여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여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법률적 기반을 닦고, 또한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 그 지역 국가와 협력 수준을 격상시켰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과정이 본격화되고, 동아시아 다자안보기제가 이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게 되었다. 2003년 10월 거행된 아세안 제9차 수뇌회의는 2020년 전에 동아시아공동체를 설립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기능적인 영역에서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와 함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21세기 초의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신조류가 되었다.<sup>27)</sup>

현재 동아시아는 주요하게 다자주의 안보체제와 쌍무주의 안보체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 지역의 안보를 지키고 보호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질서의 출현은 냉전시기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쌍무적인 동맹, 다자대화, 기타 특수외교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적인 경쟁과 대항이 출현하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다자협력체제도 발전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sup>28)</sup>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다자안보대화기체인 arf에 적극적인 역

26) 门洪华(2008), p. 18.

27) 阎学通(2004), p. 1.

28) 门洪华(2008), p. 19.

할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ARF는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안보체제건립을 위하여 중요한 조직적인 기초를 쌓았지만, 동남아를 근거로 한 조직으로, 동아시아지역 모든 안보문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문제와 남중국해 등 전통적인 안보문제가 터졌을 때, 동아시아지역의 문제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전체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남아 안보기제로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처한 상황은 동아시아안보공동체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아시아 내부를 볼 때, 발전정도의 차이, 관념의 차이, 지역 내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상호 불신과 상호 정체성의 차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동반자과 경쟁자, 상호 충돌과 의존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동맹체계가 안보의 중요한 기초로 존재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비동맹을 강조하는 중국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지역은 지역 전체차원에서의 안보기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서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기제는 하나의 매우 느슨한 혼합체이다. 즉 주요하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델, 즉 전통적인 세력균형모델과 공동안보를 주장하는 새로운 안보모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sup>29)</sup>

## 2.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목표, 제도화수준, 성원

중국의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가 비록 발전되고 있지 않지만, 동아시아지역에 안보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되고, 동시에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에 관한 중국의 목표는 역내 구성원의 조화와 협력을 이끄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하는 유연한 지역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반테러 환경, 에너지, 해양, 다국적 범죄와 같이 역내 국가

29) 王帆, “东亚安全模式: 共存·并行还是置换?” 『世界经济与政治』 2005年 第11期, pp. 16-21.

들 모두에게 해결이 필요하고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통안보 이슈에 공동으로 연구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대한 의사일정을 제시하고 역내 안보대화를 상설화하며 지역안보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라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체제는 다자적 안전보장대화기제에 기초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지역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의 안보이념을 형성하며, 공동의 안보협력원칙을 준수하고, 집단안보를 위한 기제를 건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한 학자는 동아시아 다자안보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핵심으로 하여 조직적인 의탁을 형성한다. 아세안 10개국은 구속력있는 다자안보기제를 건립하고, 10+3은 포럼 성격의 다자안보협상기제를 만든다. 그리고 10+3+북한+몽고+지역의 국가는 쌍무적 안보신뢰 및 다자간 안보대화기제를 형성한다.

제2단계: 지역정체성을 통하여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건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아세안은 공동의 안보방위정책을 취하고, 10+3은 구속력 있는 다자안보기제를 만들며, 10+3+북한+몽고+지역 외 국가는 포럼 성격의 다자안보협상기제를 만든다.

제3단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핵심으로 하여 개방적인 아태 다자간 안보협력체계를 형성한다. 아세안은 공동 안보방위정책을 취하고, 10+3도 공동안보방위정책을 취하고, 10+3+북한+몽고+지역의 국가는 구속력 있는 다자간 안보기제를 만든다.<sup>30)</sup>

둘째, 동아시아 안보협력조직의 성격에 대하여, 동아시아는 공통의 군사위협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리 설정한 가상의 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 주요한 취지는 서로 다른 안보영역의 문제나 위협에 대항하여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서로 다른 형식의 안보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구체적 형식은 arf를 틀로 하여, 아세안 안보공동체를 핵심으로 하고, 동아시아안보협력조직

30) 段霞; 姜建新, “东亚安全共同体路径探讨”, 『现代国际关系』2007年 第6期, 7-9.

을 건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는 공동의 외부군사위협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군사집단모델은 동아시아지역의 전체적인 안보협력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쌍무적 군사동맹과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 동아시아 일부국가들은 미국의 동맹 혹은 준동맹국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진전 과정 중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은 현재의 역사적인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없다. 동시에 현실저긴 협력 한도에 기초한 협력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동아시아안보협력 반드시 전체 국제적인 정세, 및 지역의 정치의 총체적인 발전 상화에 부응해야 한다. 미래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는 비동맹국가와 동맹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성원은 주요하게 이 지역의 국가이지만, 나 미국 등 이 지역 외의 국가들의 참여과정 중의 역할을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동아시아는 미국의 전세계적인 전략적 이해가 가장 주요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협력에서 배척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주도하고자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구상은 아태안보 구상에 포함된다. 부시정부는 1990년대 초반, 북미를 기본점으로 하여 일본, 한국, 아세안을 포함하는 태평양공동체 전략구상을 제기하였다. 1993년 7월 클린턴은 역시 역량과 번영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민주적 가치에 대해 공동으로 의무를 지는 신태평양공동체를 제기하였다. 이는 미국이 아태평양경제 안보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안보협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개방적인 체제이다. 안보협력의 각도에서 볼 때, 공개성 개방성이 중요한 것은 협력 과정 중 안보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 중 새로운 분화를 피할 수 없다. 동아시아공동체와 미국이 주장하는 태평양 공동체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병행 발전하는 단계에 처할 것이다. 두 개 공동체의 공존과 병행이 앞으로 연결점을 찾아서 아시아 국가를 핵심으로 하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주축으로 하고, 지역 내외 국가들을 광범위하게 흡수한 새로운 아태 안보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sup>31)</sup>

#### Ⅳ.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추진전략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은 경제협력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공동체를 건설한 이후 정치, 안보영역으로 협력의 범위와 정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sup>32)</sup>

중국의 동아시아 다자안보공동체 전략의 추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arf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안보협력조직을 발전시킨다. arf를 동아시아 안보협력조직의 기초로 선택한 것은 현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층차의 다자안보협력의 경로에서, 즉 arf, 6자회담, 아태안보협력이사회, 동북아협력대화, 아태안보협력이사회 등이 있다. 이중에서 arf가 유일하게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주권국가에 참여하는 정부간 다자안보포럼으로, 급이 높고, 관련국가의 참여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rf의 기초하에, 동아시아안보협력조직을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현재 있는 기타 동아시아 안보협력기제를 융합하여, 동아시아 안보협력조직을 주제로 한 복합적 지역안보공동체를 최종적으로 건립해야 한다.<sup>33)</sup>

둘째, arf와 기타지역협력조직과의 연결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은 관방 대화기제로 10+3, 10+1, 6자회담, 아태지역방위당국포럼, 동북아협력대화회, 서태평양해군포럼, 유엔 평화와 군비감축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심 등 다자안보대화협력통로가 있다. 이들 제도들을 〇르이RT다 등. 이들 제도들을 ARF와 연결하는 제도적인 건설이 필요하다.

셋째, 아태안보협력이사회를 기초로 하는 동아시아 제2트랙 안보대화연결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아태안보대화협력기제는 비교적 대표적인 민간상설기구로서, 각종 제2트랙 기제 사이의 연결통로제도를 건립하여, 제2트랙 안보대화기제 및 임시적인 협력 조항 중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관방, 반관방, 민간 등 각 층차의 동아시아 안보대화협력기제의 연결망이 될 수 있다.

31) 刘箭, “东亚安全体制的未来设想: 建构东亚安全共同体-从可能性论证到步骤分析”, 『前沿』 2008年 第3期, 139-141.

32) 朱容基, “加强东亚合作, 促进共同发展: 朱容基总理在第5次东盟与中日韩领导会议上的讲话”, 2001年 11月 5日.

33) 阎学通(2004), pp. 1-8



넷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쌍무적 군사동맹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는 대부분은 동맹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 이상 일부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은 역사적 유산이 산물이거나, 관련국가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아세안국가 동맹을 하지 않는 정책, 그러나 동맹을 맺는 국기도 참석 가능하다.

다섯째, 중, 미, 일, 러 4강간의 전략대화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4강의 관계의 개선과 안정은 동아시아안보협력의 관건이다. 북한 문제 6자회담은 우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최고의 직접적인 대화무대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6자회담의 기제화를 실현하는 것은, 회의기간에 중, 미, 일, 러시아 4방 회담과정을 증가시킬 것이다. 내용도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4대 강대국의 안보대화는 주요 하게 4대 강대국 간의 전략적인 관계의 문제에 집중될 것이고, 지역의 주요한 안보문제에 대하여 4방의 입장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4대국의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할 것. 동아시아 대국간의 협조기제와 대화기제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건립되어야 한다. 요구로 되는 발걸음은 현재의 자회담의 주제를 북핵문제로부터 대국간의 전략적 관계, 기타 중요한 지역안보문제에 넓혀가는 것일 뿐이다. 상황이 성숙해지면, 4강의 외무부장관회의 및 국방부장관회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하여 4강의 협조기제를 진일보하게 제고해야 한다. 중, 미, 일, 러 의 안보전략대화는 ARF를 향하여 그 토론의 요지를 통보하고, 공동의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ARF의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동북아다자안보공동체와 동아시아 다자안보공동체의 결합이다. 6자 회담을 기초로 하여 동북아 안보협력기제를 확립하고, arf와 연결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된 동아시아 안보협력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arf가 비록 전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지만 동아시아지역의 모든 안보문제와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아태지역의 전통적인 핫이슈 즉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의 전통적인 안보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arf는 한계가 명확하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기제는 필수적이다. 현 단계의 지역 안보정세로부터 볼 때, 6자회담은 모종의 느슨한 협상과 협조기제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일종의 기제로서 공고화되어 동북아다자협력기제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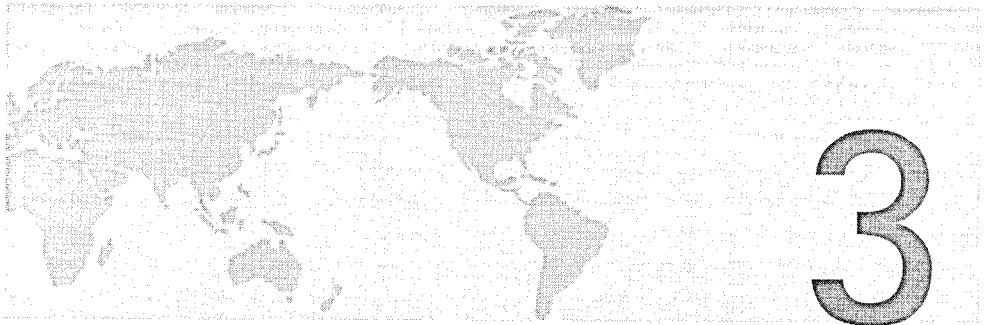
첫째, 6자회담은 필경 동북아의 모든 주요한 전략적인 역할을 모았고, 특히 이 지역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을 관련시켰고, 그 이전의 4자회담에 비

교가 되지 않는다.

둘째, 6자회담은 6자회담은 한반도 심지어 동북아지역의 안보형세의 결정을 모았다. 한반도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불안정 요소이다. 북한 핵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고, 각각의 쌍무적 관계, 냉전의 유산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포괄적 협상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 및 관련 국가들이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경제적인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만들고, 한반도의 전쟁의 우려를 제거하여,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동북아 안보문제 중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내에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제를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셋째, 6자회담은 이 지역 국가의 상호신뢰를 증진해 가는 과정이다. 냉전의 영향으로 관련 국가들 사이에 신뢰도가 낮고, 지역의 정세가 안정과 긴장을 번복하며, 이것은 북한이 핵문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근본 원인이다.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이 안보우려를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냉전의 잔여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관련 국가 간 상호신뢰를 쌓아야 한다.<sup>34)</sup>

34) 刘箬(2008), pp. 139-141.



중국의 동북·북한지역에 대한 인식:  
중북관계 뿌리 찾기





# 중국의 동북·북한지역에 대한 인식: 중북관계 뿌리 찾기

문대근 |

## I. 서론

## II. '동북'에 대한 인식

1. 전통시대의 동북
2. 근·현대의 동북

## III. '한반도'에 대한 인식

1.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
2. 대한반도 인식의 확장

## IV. '북한'지역에 대한 인식

1. 역사인식과 지정학
2. 대북한 인식의 분화
3. 전략적 자산론과 부담론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V. 결론

[참고문헌]

## I. 서론

한반도 내외정세는 중요한 시점에서 격랑이 일고 있다. 세계적 권력이동 과정에서 미중간 비협력적 게임이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그만 사건도 곧바로 미중간의 국제문제로 전화되고 있다. 천안함·센카쿠열도·연평도 사건이 그것이다.

주목할 것은 작년 10월 25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6·25전쟁과 관련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한 말이다. 한·미의 반박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를 ‘정론(定論)’이라고 밝혔다.<sup>1)</sup> 여기에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은 내외에서 중국·중북관계에 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인 중국의 북한편향 태도는 우리에게 북한·통일문제 해결과 관련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안정화와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파탄된 불량국가 북한은 부담이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그런데 국내의 관련 논의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기대, 무지와 무시 경향이 지배하고 있다. 역사경험에 따른 선입견, 특히 서구적 시각으로 중국을 보고 있다. 중북관계의 특수성 보다는 보편성, 희망이 담긴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북관계의 밀착도 내장된 불안정성과 갈등을 강조,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다.<sup>2)</sup> 이 같은 연구와 논의 경향, 오판은 우리의 대중국 외교에 지속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sup>3)</sup>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북한 안정(붕괴 방지) 및 영향력 확대 노력은 전통시대부터 이어온 깊고 끈질긴 역사적·지정학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본

1)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0년 10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중국은 그 역사 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고 밝혔다.

2) 국내의 중북관계에 관한 글 대부분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단, “북중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박종철, “북중관계 연구: 혈맹에서 이탈, 1953-1994”(중국사회과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수석, “북한·중국 동맹의 변화와 위기의 동학”(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등 참조.

3) 예를 들면,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이명박정부의 북핵 5자협의(안),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대중국 외교가 그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 중국이 왜 국제사회의 비난성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북한을 감싸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즉, 동북·한반도(특히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인식이 중북관계의 '뿌리'(본질)라고 보고 이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길으로 드러난 나무의 줄기·잎과 함께 그 '뿌리'를 파헤쳐 보면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태도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동북'에 대한 인식

### 1. 전통시대의 동북

먼 옛날 중국의 역사에서 동북(요동 또는 만주)<sup>4)</sup>은 '이적(夷狄 : 야만인)'의 공간이었고, '변군(邊郡)' 또는 '외군(外郡)'이었다. 위도가 높아 농경이 곤란하고 주거환경 역시 열악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동북을 중국 역사의 범주에서 배제했다.<sup>5)</sup>

그럼에도 만리장성 너머 동북에서는 한인(漢人, 漢族)과 다른 별개의 공동체들이 별개의 문화권에서 공존·융합하면서 중원과 다른 세력(거란, 여진, 만주족) 또는 국가들(고조선, 고구려, 발해, 후금)을 창출했다.

동북에서 세력을 키운 세력들은 중국은 물론 서북쪽 몽골지역에서 활동하던 세력들과 동서 간에 길항(拮抗)관계를 계속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의 동서통일은 남쪽으로 중국을 공격하거나 남방을 정복·지배하기 위한 전제였기 때문이다.

중국내에서 야만족으로 여기던 동북의 거란족과 여진족, 만주족이 중원을 공략, 중국을 지배한 역사는 정통 한족들에게는 치욕이었다. 동북 세력들의 중

4)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표현으로는 '동북'과 '요동', 그리고 '만주' 등 3가지가 있다. '동북'은 주로 중국이, '만주'는 일제에 의해 사용됐는데 선진시대부터 2,000여 년간 문헌에 빈번하게 나타난 역사적 명칭은 '요동'이었다. 동북(요동)의 원래 뜻은 '먼 동쪽의 땅', '요하(遼河)의 동쪽'을 의미했는데 그 위치와 범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김한규, 『요동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pp. 49-61 참조.

5) 동북의 많은 민족이 한족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고, 때로는 강대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국 진출과 정복은 다른 지역에서 야기된 변화보다도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고, 그 빈도도 잦았다. 이런 점에서 동북은 ‘동아시아 변동의 시발점’ 혹은 ‘진원지’와 같았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북쪽의 몽골을 방어하거나 정벌하기 위해서는 동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었다. 진(秦)과 한(漢)에 의한 1차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 과정(한무제의 고조선 정벌)과 수(隋)와 당(唐)에 의한 2차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수양제·당태종의 고구려 정벌) 과정, 그리고 원(元)과 명(明) 교체 과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漢은 조선을 정복해 흉노와의 남북 대결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원전 108년 흉노의 원팔 격이었던 고조선을 침략, 멸망시킨다. 고조선 멸망 후 그곳에 설치된 한사군(특히 평양지역의 낙랑군)은 400년 동안이나 존속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동북지역 및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역사인식의 모태가 되었다.

그로부터 600년 후 수양제는 서북쪽의 돌궐과 고구려 간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고구려를 침공했다. 수양제는 고구려를 ‘선제(先帝)의 땅’ 또는 ‘본래 중국의 균현(한사군)’으로 인식<sup>6)</sup>, 중화질서에 편입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면서 몰락한다. 이후 당태종은 선조의 땅을 되찾고(복수론),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반발하는 고구려를 평정(제국질서론)하기 위해 신라와 합세, 663년 백강구(白江: 지금의 금강) 전쟁에서 일본·백제 연합군을 격퇴하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킨다.<sup>7)</sup>

300여년 후 10-11세기 전후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10세기 초 거란족이 동북을 석권한 뒤부터 여진·몽골·만주족이 동북을 차례로 통일하고 중국으로 진출, 동북과 중국을 통합 지배하는 요·금·원·청의 왕조를 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동북의 세력들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자신들의 배후에서 진을 치고 있는 한반도 국가(고려, 명)를 제압해 후고(後顧)의 여지를 제거했다.

6) 선제의 땅이란 중국 주나라의 箕子가 동래해 고조선에 기자조선을 건립(주 황제가 기자를 조선왕으로 책봉)한 것과 한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균현인 한사군을 의미한 바,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7) 백강구 전쟁을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중일간, 중미간의 쟁패 등에 대해서는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서울: 위즈덤하우스, 2005), pp. 125-216,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8), pp. 91-132 참조.



동북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1592년 명의 임진왜란 참전이다. 명의 참전은 조선을 구원하는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결코 조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sup>8)</sup> 그보다는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갈 경우를 우려해 동북을 방어, 심장부인 북경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이 일본에 떨어지면 이를 전진기지로 삼아 일본이 중원대륙을 노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명과 왜는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한반도의 절반이라도 차지하려고 분할론을 제기했다.<sup>9)</sup>

이처럼 전통시대부터 중국인들은 동북지역을 심장부인 북경 또는 중원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여겼다.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주는 가교, 혹은 해양세력의 대륙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화질서를 거부하는 동북의 국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미(羈縻; 조공)관계로 통제하려 했다. 전통시대에는 지리가 역사를 결정하는 정도가 지금보다 강했다.<sup>10)</sup>

## 2. 근·현대의 동북

### □ 근대(16-19세기)

지정학적으로 동북지역은 ‘교류의 장’인 동시에 ‘분열의 장’이라는 변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861년 이전까지 동북지역은 중국제국의 가장 큰 정치적 불안거리이자 양자 교류의 장이었다. 여러 민족들이 이합 집산하는 공간으로서 ‘융합의 장’이기도 했다.<sup>11)</sup> 동북에서는 발해가 멸망한 후 여진족들이 계속 거주했으나 일제에 의해 만주국이 등장할 때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국가다운 국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야

8)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 7-24.

9) 김문자, “임진왜란 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 사명당(松雲大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3호(2005), pp. 230-240 당시 명의 심유경은 ‘조선의 땅을 갈라서 일본에 귀속시킬 것’을 제안했고, 일본의 풍신수길은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을 제시했다.

10) 남상수,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한반도 인식의 지정학적 기원과 중국”, 『세계정치』, 제25집 1호(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4), p. 180.

11) 이정태, “중국의 변경인식과 변경정치”, 『중국 동북 연구 - 방법과 동향』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11), p. 88.

비로소 중국의 국가에 의해 통일되었는데, 이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16세기 초 청조의 만주족은 동북<sup>12)</sup>을 ‘조상의 성지’라 하여 봉금(封禁)지역으로 선포, 이민족 유입을 금지해 동북은 약 200여년 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무주공산’처럼 변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미국·일본 등의 국제적 패권경쟁의 대상, 즉 ‘갈등의 요람’으로 변했다.<sup>13)</sup> 동아시아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동북은 물리적 충돌의 ‘각축장’으로 바뀌었고,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가장 먼저 중국의 동북지역을 탐낸 국가는 러시아였다.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진정책을 표방한 러시아는 아편전쟁(1840년) 이후 서구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곤궁에 처한 청조를 겁박해서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을 맺고 각각 흑룡강 이북의 땅(60여만km<sup>2</sup>)과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약 40만km<sup>2</sup>)를 빼앗았다.

19세기 말 열강의 서세동점(西勢東漸) 속에서 중국 청조의 위기는 날로 심화되었다. 동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와 그에 인접한 동북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동북 선점 경쟁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동북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증폭되었다.

1894년의 청일간의 전쟁, 삼국간섭 이후 1896년 청러밀약에 따라 러시아가 랴오둥반도의 뤄순·파렌을 조차한 것, 1900년 의화단운동 진압에 출동했던 러시아 군대가 진압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동북을 점령해버린 것, 이에 1905년 일본이 영일동맹을 맺고 러일전쟁을 일으켜 러일이 동북을 남북으로 분할 지배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청일·러일전쟁은 모두 랴오둥 및 동북과 연결된 한반도 북부를 전장으로 하여 일어났고, 번번이 중국의 참패로 끝났다. 그로 인해 중국의 국가주권은 갈수록 상실, 영토는 분할되어 갔다. 국가위기를 막지 못한 청조의 무능 속에 청조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운동(신해혁명)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12) ‘동북’이라는 명칭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정권을 건립하면서 자신을 ‘동북’간(汗)이라 부르고 1635년 청 태종 이 여진인을 동북인(滿洲人)으로 개칭한 후, 점차 부족명칭에서 지명으로 바뀌어 전해 내려왔다. 청말 민국(民國) 초에는 동북이 ‘동삼성’(東三省 봉천성·길림성·흑룡강성)으로 불렸다.

13) 이러한 상황에서 청조는 1860년대 이후 봉금정책을 완화하고 한족의 동북이민을 방관·장려했다. 그 결과 한족의 이민이 급증했고 한족의 관습과 문화, 경영방식 등이 동북에 전파되면서 동북사회는 ‘변지(邊地)’에서 ‘내지(內地)’로 변했다.

## □ 현대(20세기~)

20세기 초 신해혁명 지도자 중 쑨원(孫文) 다음의 제 2인자였던 송자오런(宋教仁)은 혁명기지로 만주의 간도를 선택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동북(만주)을 장악하면 베이징 장악은 시간문제라는 선배들의 지정학적 동북관을 따른 것이었다. 그는 중국이 동북을 영유하려면 조선을 울타리나 완충지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자오런의 전략적 판단의 진가는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군에 의해 증명되었다. 한반도를 침탈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동북전역을 차지한다. 이를 발판으로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원대륙 공략에 성공했다. 이후 '동북은 중국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sup>14)</sup>

동북을 선점한 세력이 중원을 제패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1946-49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다시 입증되었다. 해방 후 1945년 8월 동북의 지정학을 잘 아는 장제스(蔣介石)도 미 해군의 수송지원을 받아 중국공산당군보다 먼저 동북을 선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포진하고 있던 공산당군이 소련의 도움으로 동북을 선점, 그 기세를 몰고 남하해 중원대륙을 불과 2-3년만에 장악, 중국을 통일한다. 이는 동북의 청군이 명제국을 정복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그때 북한은 중공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357년이 지난 1950년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결정적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북한군이 38 선 이북으로 밀려나자 중국은 압록강에서 미군과 대적하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 중국이 참전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보가위국론(保家衛國論)'은 임진왜란 시 명의 참전 배경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스탈린이 죽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중공의 동북지부 최고 실력자이자 친소파 거두인 가오강(高崗)을 숙청했다. 이는 소련의 영향력 확장에서부터 동북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14) 1940년대 중국의 동북문제 전문가였던 저우징원(周鯨文)은 '중국의 생명선-동(中國的生命線-東)'이라는 글에서 동북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실파하고, 동방으로부터 공격과 우환을 없애기 위해 압록강 변과 소련의 국경선에 '新만리장성'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미 7함대가 타이완해협에 진입함으로써 기대되었던 타이완 해방은 일단 차후의 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상태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북문제의 연장인 한국전쟁이 타이완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것이다. 이 두 지역이야말로 중국이 미국과 직접 대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강이다. 타이완문제도 한국전쟁이 야기한 동북위기 때문에 미 해결의 상태로 남게 되었다고 보는 중국으로서는 동북변강이 가장 중요한 생명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Ⅲ. ‘한반도’에 대한 인식

#### 1.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

사실,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성격의 전략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주로 자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미·조공관계로 관리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명·청 시대에 들어와 중국은 자국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보호하고, 조선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에게 일관된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sup>15)</sup>

한반도에 대해 중국은 전통시대에는 동북국가 및 일본과의 세력경쟁을, 냉전시대에는 소련과의 경쟁을 고려했다.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한반도(특히 북한지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활용코자 한다. 중국은 임진왜란·병자호란·청일전쟁·한국전쟁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이 곧 자국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은 자국의 한반도 지배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수차례 타국과의 분할론도 고려했다.<sup>16)</sup>

15) 이삼성,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 I』 (서울: 한길사, 2009), p. 436.

16) 사실 한반도는 대륙·해양세력의 중간지대에 자리해 그 중요성이 ‘가교(교량), 관문, 요충(완충), 생명선·이익선, 헤머·단도라는 말들로 표현되었다. 자연스럽게 어느 한 세력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없게 되거나 분쟁이 악화될 때 어느 일방 또는 제3국에 의해 분할론이 제기되었다. 한반도 분단선은 청천강, 대동강, 38도선, 39도선 등이었고, 그 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역사상 9회의 분할론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① 648년 당 태종은 신라 김춘추에게 고구려 평정시 평양 이남의 토지와 백제를 주겠다고

특히 중국은 19세기 말 자국의 국방선·생명선이 일본의 주권선·이익선<sup>17)</sup>과 충돌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한반도가 자국의 안보상 더 없이 중요한 지역임을 실감한다. 일찍이 중국인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중국의 머리를 치려는 해머모양으로 놓여 있으면서 일본의 심장부를 겨냥한 단검모양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고,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일본의 대륙 진출이란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교량적 위치에 있고, 소련의 남진정책에서 보면 전진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세력을 저지해야 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방파제나 성곽과 같은 것이다.

한반도 지정학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변함없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달형 포위망은 무너졌으나 가장 중요한 고리인 한반도가 강대국의 손에 들어가면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처럼 자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정학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체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북한문제로 인해 동아시아에서는 신냉전의 조짐이 일고 있다. 동북아의 지정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은 중국에게 유리하다.

약속, ② 1592년 임진왜란 시 일본은 명의 참전으로 세가 불리해지자 평양 이남의 일본 귀속을 제의, ③ 1593년 인빈왜란 시 한반도 남부로 밀려난 일본은 명에게 조선 4도의 할양을 강화조건으로 제시, ④ 1894년 청·일간의 대결이 치열해지자 영국은 청·일의 한반도 공동점령안을 제시, 일본이 거부, ⑤ 1896년 한반도에서 러·일간의 대결시 일본이 수세에 몰리자 일본은 39도선 이남의 할양을 제의, ⑥ 1943년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세에 몰리자 막판에 한반도 남부 영유를 요청, ⑦ 1945년 해방 후 미소는 한반도 분할점령에 합의, 1차 38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분단, ⑧ 1950년 미국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북진 과정에서 중국 참전을 우려, 청천강선 이남까지 진격을 검토, ⑨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상 결과, 휴전 직전의 대치선을 경계로 2차 남북이 분할·분단(현재) 등.

- 17) 이는 1890년 일본 수상 야마카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주장한 것으로 일본이 주권선(자국 영토)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익선(주권선의 안위와 긴밀하게 관계되는 지역)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환, 『일본의 대륙정책에서 본 간도 - 러일전쟁 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25호 (동북아역사재단, 2009.9), pp. 77-79 참조.

## 2. 한반도 인식의 확장

중국의 한반도 인식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 간다. 전통시대에 국제관계의 시·공간은 분리돼 있었으나<sup>18)</sup> 교통통신의 발달은 공간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국가의 안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고려하게 했다.

중국의 한반도 인식에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는 시기는 1870년대 이후이다. 이때부터 중국은 조선을 중국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공간으로 중요성을 부여한다. 증기선과 철도의 출현으로 공간의 상대성이 변함에 따라 조선을 더 이상 지리적으로 단절되거나 격리된 장소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중국과 전략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인식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국인들의 시·공간의 경계가 해체되는 가운데 중국은 조선의 안전을 자신들의 안전과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①조선은 중국의 울타리이며, ②조선의 근심은 곧 중국의 근심이므로, ③중국은 조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었다.<sup>19)</sup>

19세기 말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청조는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을 향한 세력 확장에 대응, 조선의 속국화 정책을 추진한다. 당시 조선문제는 중국 청조의 현존하는 제국체제의 존망과 관련된 위기의 핵심으로서 전략적 비중이 증대되어 갔다. 이에 이홍장(李鴻章)은 청의 마지막 조공국이었던 조선의 속국화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 등의 중국 진출을 한반도에서 저지하려 했다.

중국 몰락과 동아시아 질서의 해체를 가져온 청일전쟁의 도화선은 한반도였다. 전쟁터 또한 한반도였다. 19세기 말 중국과 일본, 러시아 간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은 불행하게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시작해 조선에서 끝났다.

17세기 중반 조선의 복속(병자호란)을 통해 중원을 제패한 만주족의 청은 결국 일본에게 조선을 내줌으로써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두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한반도의 중요성과 치명성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18) 남상수, 앞의 논문, p. 175

19) 남상수, 위의 논문, p. 189

## IV. ‘북한’지역에 대한 인식

### 1. 역사인식과 지정학

중국이 과거의 북한지역과 현재의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남북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인들의 한반도 북부, 북한지역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북공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들은 우리가 한국역사로 여기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중국은 기자·위만조선을 자국의 유망민이 세운 지방정권으로 보고, 단군신화는 신화로 치부한다. 고구려와 발해 또한 자국 땅에서 건립된 지방의 소수민족정권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당의 고구려 정벌은 내부의 ‘통일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0)</sup>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이해는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와의 전후 처리문제 협상에서 대동강 이북은 당이, 이남은 신라가 지배하기로 한 합의를 낳았다.<sup>21)</sup>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고조선과 한사군, 고구려의 영토였던 대동강—원산선 이북을 사실상의 역사적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다음 <표 1>은 청천강 또는 대동강—원산선 이북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두고 볼 때 중국은 한반도의 청천강 또는 대동강과 원산을 잇는 선의 이북지역을 어떤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자국이 관여해야 할 선조의 땅, 적대세력을 저지해야 할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 新중국의 모택동도 한반도 북부지역은 적어도 강대국의 군사적 주둔을 방지해야 할 중국안보의 핵심지대로 인식했다. 1950년 10월 4일 한국전쟁 참전 논의 시 모택동의 순망치

20) 姜義華 主編, 『中華文化讀本』 (중국: 上海人民出版社, 2009), pp. 57-58,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임을 입증한 국내의 대표적인 자료는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 서울대출판사, 2009) 참조.

21) 당 태종은 648년 중국을 방문한 김춘추에게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의 토지를 다준다”는 약속을 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조 회고와 『구당서』, 백제전에 기록되어 있다. 동북아 역사재단, 앞의 책, p. 113에서 재인용.

22) 역사상 한반도에서 대륙·해양세력 간의 대분단선은 대체로 38선, 대동강선, 청천강 선이 있으며, 이는 대륙세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배기찬, 앞의 책 pp. 32-41

한 논리는 모든 반대의견을 잠재웠다.<sup>23)</sup>

<표 1> 대동강-원산선 이북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일 시	구체 내용	비 고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시	“고구려의 경역은 본래 중국의 군현인바, …” “고구려 땅은 본래 孤竹國, 주대 기자에게 봉했다.”	신하 襄矩 冊 침공 명분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시	“동북은 본래 중국의 땅인데, 수씨가 4번 군사를 냈지만 얻지 못했다. 이제 짐이 동방을 정벌해 중국 을 …” 나당간 한반도 분할 합의	자치통감, 197
거란의 고려 침략시	“너희 나라는 신라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 리가 소유할 터인데…”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	소손녕-서희의 담판 시
중국의 한국전 참전시	중국은 압록강을 ‘국방선’, 평양-원산선을 ‘전략선’ 으로 정해 한국전쟁을 수행, 동맹조약에 자동군사 개입, 중요문제 협의.통보 명시	마오쩌둥 군사 문, 중조 조약, 양국수뇌방문 협정
중국의 동북공정 실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소수민족정권, 중국의 강역 은 각 왕조의 강역의 총합, “오늘날의 중·조 국경은 조선 측이 끊임없이 북쪽으로 확장·형성된 것임.” (쑨진지)	2004년 전후

출처: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서울: 늘봄플러스, 2009), p. 199 표를 보완한 것임.

한국전쟁 중에서도 중국지도부는 압록강을 ‘국방선’, 평양-원산 선을 ‘전략선’으로 삼아 이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야 하는 선으로 인식했다. 특히 정전협상에서 중국은 38 선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를 사수했다.<sup>24)</sup> 이는 지난 1,500여 년 동안 중국의 국방선인 압록강이 적에게 위협받을 때 중국이 한반도 국가에게 반격 성격의 군사작전을 지원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23)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평양-원산선의 사수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4) 최경식, “6.25 60주년 특집 논문: 중국 6.25 참전 영행과 북한 유사시 중국 역할 전망 - 북한, 중국 간의 역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 『군사논단』, 제62호 (2010), pp. 58-66



<표 2> 역사상 중국의 한반도국가 지원 사례

구 분	전쟁 명칭	중국지원 유무	비 고
연 대			
4-5세기	왜인 침략	○	任那問題, 고구려/왜, 신라/왜 간
663	백촌강 전투	○	나당/제왜 연합군 전투
13-16세기	왜구의 난	○	대륙난인 포함
1592-1598	임진왜란, 정유재란	○	萬里朝鮮之役, 慶長之役
1872-1910	일본군 침탈	○	청일전쟁 포함
1910-1945	민족독립운동	○	광복군, 항일연군 등
1950-1953	한국전쟁	○	抗美援朝, 保家衛國

출처 : 육군사관학교, “20世紀中國地緣戰略与抗美援朝戰爭關係”, 『동북아 국가와 민족관계』, 제13회 화랑대 국제심포지엄 논문집(2006), p. 96에서 재인용

한편, 중국에게 동북과 한반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한국전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칫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다. 동북과 한반도를 자신들의 울타리, 현관으로 생각하는 중국인들로서는 저항의 대상이 16세기·19세기 말의 왜·일본에서, 20세기 중반과 그 이후 미국으로 바뀐을 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sup>25)</sup>

## 2. 대북한 인식의 분화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인식의 뿌리는 특히 미중관계가 협력보다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더욱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2008-2009년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자국이 예상보다 빨리 부상함에 따라 대외정책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표 3>에서 보는바, 다양한 전략적 사고들 간에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주의자’들과 ‘발전도상국론자’들, 그리고 ‘신흥 강대국론자’들이 그것이다.

25) 한명기, 앞의 책, p. 7.

<표 3> 중국내 전략사고의 분화와 정향

구 분	전통주의	발전도상국론	신흥 강대국론
미국과의 관계	경쟁	협력	경제적 관여(혜징)
대한반도 정책	영향력 회복	현상유지	변화를 내포한 현상유지
북한에 대한 인식	전통우방	문제아	문제아
대북정책 수단	정치적 지원과 경제원조	경제적 지원과 외교 설득	압력 포함 다양한 수단
북한급변시 정책	개입	신중함속 미국과 조정협의	기회주의적

출처: 김홍규, “천안함사태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 통일부 중국연구회 9월 월례포럼 발표문 (2010.10.1), p. 3 내용을 축약한 것임.

‘전통주의자’들은 중국의 전통적 강대국 지위(強漢盛唐 : 강력했던 한, 융성했던 당)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 지정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중국이 주변의 완충지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에 맞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선호하고, 북한을 중국의 완충지대로 해석한다.

중국외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발전도상국론자’들은 대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 및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종속적 지위로 인식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들은 자국을 세계적인 강국이라기보다는 지역강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흥 강대국론자’들은 강대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통주의자들과 유사하다. 다만 이들은 대미관계를 중시하지만 자국의 점증하는 역량을 내세워 핵심 이익과 관련 미국과 일정정도 갈등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도 억제하면서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사고를 둘러싼 논쟁은 자연스럽게 대북한 인식문제에 대한 논쟁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과거의 잣대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후 중국 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략적 자산론’과 ‘부담론’이라는 2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이 그것인데, 이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통일위협론’과 ‘통일이익론’과 연계되어 있다.

### 3. 전략적 자산론과 부담론

중국의 많은 전략가들, 주로 전통주의자들은 여전히 북한을 중국의 안보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지리적으로 동북3성과 접경하고 있어서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경유해 일본·미국 등 해양세력이 중국을 위협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인들은 한반도 북부지역이 중국에게 우호적인 세력에 의해 지배되기를 바래왔다.

이들은 또 북한에서 친중 정권이 유지되고 중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자국의 동북지역 안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정학적 고려로 인해, 중국인들은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방파제로 남아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은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자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미국과 한국이 자국의 역할을 중시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 최고지도부의 강력한 설득과 권유를 무시하고 핵무장의 길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체면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대를 이어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26)</sup>

미중관계의 틀, 즉 동북아의 지정학적 국익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sup>27)</sup>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체제, 국가이익, 발

26) 이는 2010년도 김정일의 2차례에 걸친 방중시 합의 및 북한의 당대표자대회(9.28)에서 김정은 후계 공식화 직후 보낸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축전에서 잘 나타나 있다.

27) 주펑(Zhu Feng), “천안함, 중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미래”, 『전략연구』, 제49호(2010.7), p. 81.

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8)</sup>

이들은 한반도 통일을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로 단정하고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상유지, 즉 평화와 안정을 선호하는 것이다.

한편,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서슴치 않는 북한에 대해 중국인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협력 상대가 아니라 골칫거리 또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일부 중국인들은 북한이 계속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중국적으로는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으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후부터 북한을 보는 중국 지도부의 시각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날 중국 외교부대변인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중국과 북한은 일반 국제관계 규범 하의 정상적 국가 간의 관계이다”라고까지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를 포함, 일부 중국인들은 부담스러운 북한을 계속 안고 가는 것 보다는 통일된 한반도가 자국의 안정과 발전에 이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이와 같은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인사들은 아직 소수로,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29)</sup>

####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중국정부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입장과 원칙은 ‘통일은 지지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은 남북당

28) 남중호, “중국의 북한 재인식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1호(2007), p. 214.

29) 신상진 박사의 현지조사 결과, 중국내 22명의 북한전문가 중 1명만이 북한을 중국에 부담이 될 뿐이라고 응답했다. 신상진,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 연구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2008.6), p. 284.

사자 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의 결과로서 통일한국의 대외정책은 자국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하며,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정에 비춰볼 때 한반도 통일이 점차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통일의 과정은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통일된 한국이 과연 중국에 유리하느냐의 여부와 관련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이롭다는 ‘한반도통일이익론’과 이롭지 않고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라는 ‘한반도통일위협론’이 있다.

<표 4> 중국내 한반도통일 ‘이익론’과 ‘위협론’ 비교

통일위협론의 논리	통일이익론의 논리
<p style="text-align: center;">&lt;통일과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의 대변혁이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북한주민의 동북 유입 가능성</li> </ul> </li> <li>○ 남북한 통일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불가능</li> <li>○ 북한 변화 및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충돌 가능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통일일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분단국으로서 한국인들의 통일 열망을 잘 이해</li> <li>○ 한중이 전통적 우의를 발전, 동아시아 평화질서 건립</li> <li>○ 한반도 통일로 역내 중미 협력이 보다 강화</li> <li>○ 통일한국은 중국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환경 제공</li> <li>○ 중국이 타이완통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제공</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통일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 주둔 통일한국은 안보상 중대 위협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일 카드 상실, 변방에서 미군과 직접 대치</li> </ul> </li> <li>○ 통일한국의 변성, 한민족주의 등은 新 변방문제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도와 북중국경조약 승계문제 등</li> </ul> </li> <li>○ 통일한국의 흡인력이 조선족 자치독립 야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통일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보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발전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한 안보환경, 경제 확대 등</li> </ul> </li> <li>○ ‘시장확대’와 ‘위협제거’라는 보다 큰 이익 제공</li> <li>○ 통일한국은 미국·일본보다 중국에 경사될 가능성</li> <li>○ 한국은 타국 침략 역사가 없고 위협 세력이 못됨.</li> </ul>

출처: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서울: 놀림플러스, 2009), pp. 322-323 2개의 표를 축약한 것임.

두 견해는 각각 상술한 전략적 자산론(=한반도통일위협론) 및 북한 부담론(=한반도통일이익론)과 연계되어 있다. 과거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통일위협론’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탈냉전 이후에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계속되는 모험주의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한반도통일이익론’이 제기되었다. 2009년 말부터,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전통주의자들의 ‘한반도통일위협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사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통일의 과정 및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보다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통일의 ‘과정’이나 ‘결과’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남거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할 수 있는 통일한국을 선호한다.<sup>30)</sup> 그러나 중국은 당분간 북한을 지정학적으로는 ‘대미 완충지대’, 지경학적으로는 ‘자원기지화’ 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친중 성향의 북한체제 정착률 기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확대하려 한다.

## V. 결론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체제적 이해, 역사적 경험,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 등이 있다. 이중 어떤 요인이 민감한 요인일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이해라고 할 것이다.<sup>31)</sup>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이해는 양국관계의 뿌리이자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은 1930년대부터 밀월·갈등 속에서도 연대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수(特異)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일제시대 공동항일투쟁, 국공내전 시 북한의 중공 지원, 한국전쟁 시 중공의 항미원조 등은 양국간 혈맹·

30) 주평, 앞의 논문, p. 81

31)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 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제31집 1호(2007 봄), p. 30

순치관계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나아가 냉전시기 중소분쟁과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는 양국관계 만이 갖는 ‘특수한 관계’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①일관된 동맹, ②내정불간섭, ③중국 노선의 북한 견인, ④중요 문제 비공개 협의 처리 등이 그것이다.<sup>32)</sup> 북한은 중국 최초의 수교국이자 현재까지 ‘자동군사개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양국관계는 일반 국가 간의 관계보다 당 대 당의 관계가 기본이다.

물론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바, 중북 간의 역사는 순탄치 만은 않았다. 불안한 동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sup>33)</sup> 그러나 양국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양국 간의 역사적·이념적 유대가 제반 갈등을 상쇄, 기본적으로는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 60여년 동안 중국의 기본적인 대북지원은 끊이지 않았으며 거의 없었다.<sup>34)</sup>

특히 북한의 고립·위기 시 양국관계에서는 과거 혈맹의 관성과 관행이 작동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최종 순간에는 언제나 유엔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이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역할을 해 왔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는 시종 중립적이면서도 북한을 보호하는 모습이다. 시진핑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 발언은 북한을 친중 정권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이다.<sup>35)</sup>

요컨대,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의 안위는 동북·북한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최근 북한지역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북한체제의 안정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북관계는 상호 체제의 유지·발전이라는 국가이익도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북한의 안정성을 관리하고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역사 인식뿐만

3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 8, pp. 299-303 참조, 이러한 관행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한중수교와 핵문제 등으로 인한 중북관계 악화로 유명무실화되었으나 2009년 10월 온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과 함께 특히 2010년 김정일의 방중 과정에서 양국관계가 정상화 단계를 넘어 밀착 추세를 보이면서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이종석, 위의 책, p. 8, 최명해, 앞의 책, pp. 189-358 참조.

34) 이에 대해서는 한석희, “중국은 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는가”, 『Luuxmen』, Vol. 03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0.12), 박창희, 앞의 논문,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제32호(2008) 등 참조.

35) 문창국, “역사전쟁”, 『중앙일보』, 2010년 11월 2일 칼럼.

아니라 현실 안보전략 측면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냉철한 지정학적 국기이익에 따라 순망치한의 북한을 특수하게 다루면서 대북지지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점차 강력한 대국이 되어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배력과 흡인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것은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중국 쪽으로 향하면서 한반도에서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북부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은 경제적으로 하나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sup>36)</sup> 한반도는 과거 역사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sup>37)</sup> 역사 안목을 통해 현재를 보는 통찰력, 통일한국의 미래를 여는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36) 신상진, “북중관계, 혈맹관계로의 회귀인가?”, 『통일시대』, (2010, 10월호), pp. 10-13

37)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비롯해 통일신라, 고려, 나아가 조선 세종대 이전까지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대부분은 한반도 국가(신라, 고려, 조선)보다는 중국 또는 요동국가가 통치하는 지역이었다. 압록강-두만강 선의 국경은 조선시대 세종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한규, 『요동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 서울대출판사, 2009)  
 동북아역사재단·중국사회과학원 編, 『초기 고구려 역사 연구』 (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2008.11)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8)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서울: 늘푸르리스, 2009)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5)  
 이삼성,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 I.Ⅱ』 (서울: 한길사, 2009)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서울: 혜안, 199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姜義華 主編, 『中華文化讀本』 (중국: 上海人民出版社, 2009)

### □ 논문, 글

- 고성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국가전략』, 제12권 4호 (2006).  
 김문자, “임진왜란 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 사명당(松雲大  
 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3호  
 (2005).  
 김홍규, “천안함사태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 통일부 중국연구회 9월 월례포럼  
 발표문 (2010.10.1).  
 남상수,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한반도 인식의 지정학적 기원과 중국”, 『세계  
 정치』, 제25집 1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4).  
 남중호, “중국의 북한 재인식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1호 (2007).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 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  
 소연구』, 제31집 1호 (2007).

- \_\_\_\_\_,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제32호 (2008).
- 문창국, “역사전쟁”, 『중앙일보』, 2010년 11월 2일 칼럼.
- 신상진, “북중관계, 혈맹관계로의 회귀인가?”, 『통일시대』, (2010, 10월호).
- \_\_\_\_\_,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 연구 -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8.6).
- 원동욱, “중국의 대북 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2호 (2010).
- 이성환, “일본의 대륙정책에서 본 간도 - 러일전쟁 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25호 (동북아역사재단, 2009.9).
- 이정태, “중국의 변경인식과 변경정치”, 『중국 동북 연구 - 방법과 동향』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11).
- 장공자,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한국동북아학회, 2009).
-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 외교전략”, 『통일전략』, 제9권 제1호 (2009.4).
- 주펑(Zhu Feng), “천안함, 중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미래”, 『전략연구』, 제49호 (2010.7).
- 채규철, “북중간 갈등상태와 관계 재정립 가능성”, 『국제문제연구』 (2008 봄).
- 최경식, “학술논문: 6.25 60주년 특집 논문: 중국 6.25 참전 영행과 북한 유사시 중국 역할 전망.
- \_\_\_\_\_, “북한, 중국 간의 역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62호 (2010).
- 한석희, “중국은 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는가”, 『Luuxmen』, Vol. 03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0.12).
- 陳龍山, “朝鮮半島統一問題略論”, 『東北亞研究』, 1999年 第2期.
- 陳峰君, “朝鮮半島和平統一中國樂觀基成”, 『東北亞研究』, 2001年 第1期.
- 金景一·金強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研究”, 『中國外交』 (中國人民大學, 2008.11).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 및 성과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 및 성과

이상숙 | 외교안보연구원

2011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2010년 5월 이후 최근 1년간 세 번째 중국 방문으로,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방문 일정 중에 방문 사실을 확인 보도하였다. 북중 경제 협력이 적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북중 경제 협력 강화와, 북한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대한 안정 확보, 그리고 6자회담의 돌파구 모색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문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효과적인 대북정책 및 대중외교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중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고, 양국 최고지도자간의 방문이 점차 정례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다. 한국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김위원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 “중국에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이번 방문은 양국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난의 완화이다. 이미 수년간 누적된 경제난은 외부 자본 유입 없이는 회복 불가능한데, 최근 중국 자본은 북한 경제에 가장 친화력이 높은 자본이다. 이러한 중국 자본의 북한 유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북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중국 전체의 균형발전 목적을 위해 시작된 중국 동북지역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2005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자원외교를 위해 북한지역의 자원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대북한 경제 협력 의지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양국 지도자간의 회동은 양국 경제 협력 가속화가 주요 목적이다.

북한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보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 방문시 베이징(北京) 이외 지역 방문은 경제적 목적의 방문들이었다. 중국 및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 농업, 공업, 상업, 인민생활에 대한 시찰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즉 무단장(牡丹江) 방문은 농업 및 농민 생활을, 창춘(長春) 방문은 동북건설계획 전시관과 중국 제1자동차 생산라인을, 양저우(揚州) 방문은 IT전략센터, 태양열에너지 공장 및 유통현장을, 난징(南京) 방문은 전자공업 및 IT 단지를, 베이징 방문은 첨단 IT 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중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무단장은 지난 해 8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 지도자들이 잇따라 단체 방문한 곳으로 양국 농업 협력 강화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양저우 및 난징 등 중국 남부지역은 전자공업, 신에너지공업, IT 등 첨단산업 선도지역으로 김 위원장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경제 발전상에 대한 현장학습이라는 목적이 있다.

이번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은 북한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안정 확보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차기 북한 최고지도자로 낙점을 받고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들어섰다. 2010년 9월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후계자 지위를 일정 수준에서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후계자 구축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대내적으로 사회적 안정이 필요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난의 완화에 집중해야 하고 그 주요 수단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이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 회의 직전인 8월 중국 동북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으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여 당 대표자 회의를 전후하여 당원들에게 선물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번 방문에서 직접적으로 북한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상호 내정불간섭을 양국관계의 원칙으로 유지해왔고 이는 현재에도 공식적으로는 유효하다. 중국 정부가 북한 후계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후계자 선정 및 구축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으며, 북한 내부 결정을 인정하고 지도자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북한의 후계문제에 대해 중국이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던 것은 1980년대 초가 유일하다. 그 즈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후계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정은 차기 지도자의 권력 이양에 중국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김정은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승인’의 의미 보다는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상견례’의 의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내외적 문제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북한 당국에게 민감한 후계문제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의 돌파구 모색 역시 이번 방문의 목적중 하나이다.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 안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대화

창구인 6자회담은 유명무실화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무력 충돌로 인한 남북관계의 냉각은 남북대화를 단절시켰고 6자회담의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한다면 다른 수단으로라도 대미 직접 협상을 하려는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이 후진타오 주석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간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이번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 북중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북중관계를 냉전 시기 동맹의 연속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양국간 불협화음이 의미 있는 변화인 반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전략적 차이에 바탕을 둔 시각에서 보면 양국간 불협화음은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에 대한 평가에는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양국간의 협력은 지속되지만 사안에 따라 양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었다는 관점에서 이번 방문을 평가해본다.

먼저 북중 경제 협력 강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은 일정 수준의 실익을 챙겼고 향후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 협력 목표는 동북지역 경제 성장, 자원이동 항구의 확보, 북한의 지하자원 확보 등이다. 중국은 최근 ‘창-지-투’ 계획을 통해 동북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접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나선특구를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중국 북부와 남부지역 간 물류이동통로로, 또는 동해로 나가는 해외 수출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북한은 지난 6월 8일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가진 데 이어, 6월 10일 나선특구 개발 착공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나선특구는 중국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 행정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을 통해 양국이 본격적 개발에 착수한다면 나선특구는 중국과 북한의 물류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원 소비대국인 중국의 기업들이 최근 북한지역에서 석탄과 철광석 채굴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희토류 등 희귀자원 발굴에도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동하는 원인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1990년



대까지 만해도 채산성이 거의 없어 방치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1년 현재 채산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 자원 개발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자원 확보를 위해 북한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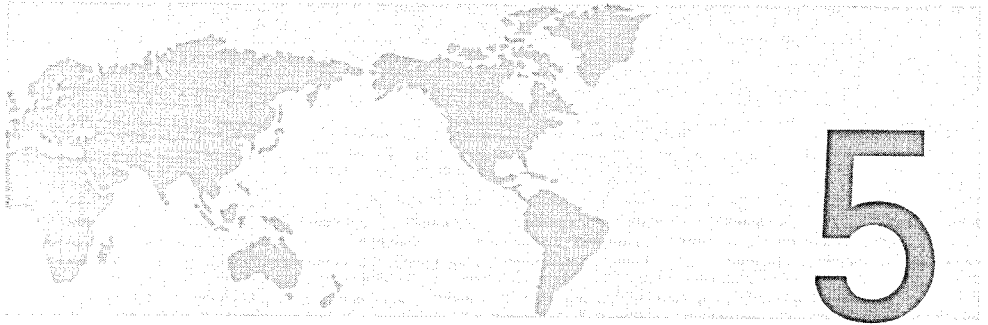
둘째, 북한 후계자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안정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역시 일정 수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오히려 강화하고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리더십 약화 상황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 존속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 상황을 가장 우려하며 안정적 권력 이양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지난해 8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의 등장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었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의 돌파구 모색은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재개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중 양국은 현재 한미일의 합의를 이끌어낼 대안 모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6자회담 돌파구 모색이라는 목표는 양국간 협력 강화 확인이라는 원칙만 확인하고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에 대한 평가 외에 이번 북중 지도자 회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중 양국 지도자 회담은 향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약 9개월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한 사실은 이러한 방문이 일회적인 회동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시 양국 지도자가 합의한 5개항 중 1항인 상호 의사소통 강화 및 지도자간 상호 방문 확대와, 2항인 양국 내정 및 외교에 대한 전략대화 강화가 실현되고 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도자간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적으로 지속적인 전략 대화 채널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둘째,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력 건재를 과시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북한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북한 최고지도자는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차로 장시간의 일정을 소화할 만큼 김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 김위원장의 지도력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북한 차기 지도자로서 여러 경험을 쌓으며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의 2인자로서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 여러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중 양국은 나선특구 공동 개발식에서 북중 경제 협력에 대해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주가 되며, 시장의 원리로 운영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4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양국 모두가 양국 경제 협력의 상호 경제적 실리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단지 중국이 북한에게 중국 투자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제도화하도록 북한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국간의 공동 이익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경제협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양이 베이징에 전한 메시지와 베이징이 평양에 전한 메시지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북중 지도자간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북중우호조약의 현재적 함의와  
양국 경제협력





# 북중우호조약의 현재적 함의와 양국 경제협력

이상숙 | 외교안보연구원

## I. 문제제기

1.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과 북한-중국의 동맹관계
2.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 II. 북중우호조약 체결과 탈냉전 시대의 변화

1. 안보동맹의 정의와 북중동맹
2. 북중우호조약의 내용과 평가
3. 탈냉전 이후 북중동맹 간의 변화

## III. 후진타오 시대 양국 경제협력 확대 현황

1. 2005년 양국 지도자 간 경제협력 논의
2. 2008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 IV. 북중우호조약의 유효성과 양국 경제협력의 의의

1. 2008-2009년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와 양국 경제협력 확대
2. 북중우호조약의 현재적 의미
3. 북중우호조약과 양국 경제협력 확대

## V. 고려사항

## I. 문제제기

### 1.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과 북한-중국의 동맹관계

- 1961년 7월 11일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이하 북중우호조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올해로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짐.
  - 냉전시기에 체결된 조약이 50년 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양국관계의 오랜 역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조약이 양국간의 오랜 연결고리였다는 점을 증명함.
  - 특히 이 조약에 포함된 소위 ‘자동개입조항’은 양국을 군사동맹 관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왔던 바, 이 조약의 지속은 양국관계를 군사동맹 관계의 유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양국은 냉전시기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혈맹(血盟)’ 또는 ‘안보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국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 조약은 ‘사문화’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2009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정상국가간의 관계’라고 설명하였고, 북한도 중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자국을 안보적으로 자주적인 국가라고 주장함.
  -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장비의 수출 및 지원을 하거나, 합동 군사훈련을 하거나, 안보분야의 정보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안보동맹을 규정하는 안보협력의 관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맹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 조약의 폐기 및 수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조약이 폐기되거나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은 여전히 유효함. 2011년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약이 현재 양국관계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북중조약의 존재로 형식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이나 탈냉전 이후 동맹의 내용이 변화한 상황에서 여전히 조약의 유효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 2.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 2011년 5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0년 5월 이후 1년 동안 3번째 이루어진 방문으로 양국 지도자간의 빈번한 회담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북한의 나선 특별시와 황금평 개발특구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공동 농업시범구 조성, 지하자원 공동 채굴 등의 농업 및 광업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은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긴장 확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국관계의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북한의 누적된 경제난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악화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협력 확대는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켜주고 있음. 중국의 대북한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해 양국 동맹관계의 복원이라는 해석이 등장함.
- 따라서 이 글은 최근 양국 경제협력 강화가 50년간 지속된 북중우호조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짐.
  - 북중우호조약의 유효성 논의는 대부분 과거 조약 체결의 배경을 배제한 논의들이거나,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진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과거 조약 체결의 원인과 함께 현재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 상황을 통해 그 의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먼저 북중우호조약의 체결 원인을 동맹의 내외적 위협을 통해 당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분석하고, 최근 양국 경제협력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약이 가지는 함의와 양국 경제협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II. 북중우호조약 체결과 탈냉전 시대의 변화

### 1. 안보동맹의 정의와 북중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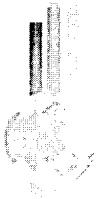
- 안보동맹의 정의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1961년 북중우호조약의 체결로

안보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그 협력관계가 정형화된 비대칭 안보동맹 관계에 있음.

- 비대칭 안보동맹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군사협력관계를 정형화한 관계로써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약소국은 자율성을 제약받는 관계임.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는 위와 같은 약소국과 강대국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임.
- 비대칭 동맹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은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강대국은 약소국이 자국의 이익에 복종(deference)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지만 약소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주(autonomy)를 추구하기 때문임. 이때 강대국은 약소국이 또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스스로 방어능력을 확대시킬 경우 약소국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반면 약소국은 강대국이 자국의 자주(autonomy)를 제한하는 압력 행사에 반대하며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에 대해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는데, 이러한 상호간의 우려가 비대칭 관계의 갈등 상황을 발생시킴.
- 북한과 중국이 안보동맹관계를 조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1961년 북중조약의 체결이지만 양국의 실질적 동맹관계는 한국전쟁 시기에 형성됨.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1950년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여하여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성립됨
  - 정전협정 이후에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이 1958년까지 북한에 남아서 한반도 안보균형을 유지하였음.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 이후에는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북한에 안보 지원을 하였음
- 1961년 양국의 북중우호조약 체결 목적은 북한과 중국의 내외적 위협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특히 중국은 중소분쟁의 상황에서 미국과의 충돌 방지라는 외적 위협 균형과, 북한의 도발 방지에 대한 내적 위협이 중요한 동맹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었음
  - 동맹 형성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인데, 동맹은 외적 위협과 함께 내적 위협도 가지고 있음. 내적 위협은 상대국의 행위로 인하여 자국안보가 위협받고 자국이 이익이 침해될 위협을



- 의미함. 결국 상대국의 행위가 자국의 안보이해를 해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결박(tethering)’의 기능은 내적 위협에 대한 동맹의 기능임.
- 당시 중국은 구소련과 갈등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국경 문제가 드러난 시기였음. 이에 중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베트남, 몽고에 협력조약을 체결할 것을 먼저 제의했으며, 여기에는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국경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중인국경분쟁과 중소분쟁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당시 한국은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불안정 상황을 오판하는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중국은 자국의 국경안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 사태를 야기할 경우 이것이 자국 안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 중국이 다른 어떤 국가와 맺은 조약보다도 북한과의 조약은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지닌 것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경 불안정과 한반도 불안정 상황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 것임. 따라서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외적 위협과 함께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내적 위협이 동맹조약 체결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
- 반면 북한의 경우 한미 동맹의 외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의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음. 북한은 냉전시기 미국과 일본에 대해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등장하자 이에 대한 외적 위협을 가짐.
- 1958년부터 본격화된 중소분쟁은 중국과 구소련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던 북한에 안보 위협 인식을 가져왔음. 두 강대국이 충돌할 경우 북한은 어느 국가로부터도 안보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
  - 당시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의 사회불안정과 뒤이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는 한반도의 긴장을 증가시켰으며, 북한은 유사한 시기에 중국과 구소련 모두와 동맹조약을 체결함.
  - 북한은 1961년 6월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과 그해 7월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각각 체결함. 여기에는 중국과 구소



런 양국 모두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 즉 양국의 북한에 대한 ‘방기(abandonment)’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

## 2. 북중우호조약의 내용과 평가

- 조약의 제2조는 상대국의 안보 위협 상황에 지원을 한다는 구체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제2조는 양국의 안보에 대한 의무를 상호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조약에서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면서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함으로써 상호 군사 안보의 지원을 명시함.
- 조약의 제3조는 상호 동맹의 규제와 대외정책의 제약 내용으로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과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반대하는 동맹과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상호 외교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조약의 제4조는 양국 간의 대외정책에 대한 협력을 제시하여 상호 의사소통 긴밀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제4조는 대외정책의 상호 협의할 것을 명시하여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고 함으로써 대외문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협력할 것을 제시함.
- 이러한 북중간의 안보조약은 북한과 소련간의 안보조약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여 북한의 원하는 내용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임. 이 조약으로 한국 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북한과 중국의 ‘혈맹’이 외교 조약으로서 공식화됨.

## 3. 탈냉전 이후 북중동맹 간의 변화

- 탈냉전 이후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국교정상화에 합의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북중우호조약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실효성이 약화되었음.

- 한국과 중국이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이에 대해 북한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 한중수교 이후 1992년 12월 중국에 대해 관광, 문화, 스포츠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항의하며 중국에 대해 대외부채 약 250억 위안(약 30억 달러)을 면제해줄기를 요구함. 또한 북한은 중국측에 ‘항의 비망록’을 전달하고 중국이 김정일의 중국방문 및 덩샤오핑과의 회담을 북한에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중국 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도 취소함.
- 1993년 2월초 리펑 총리가 한 외교부 회의에서 대한반도정책의 기본입장에 대해 북한과의 정치군사관계를 확대하지 않기로 하고,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였음. 당시 ‘8개 원칙’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은 북한과 정치적·군사적 회담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폐쇄된 접촉과 관련된 실무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현대 무기기술의 공급을 거절하고 북·중간의 관계에 손해를 초래할 어떤 행동도 자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우호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2011년 현재까지도 유효함. 이는 1999년 북한과 러시아가 ‘조소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북-러 신조약에 가조인하고 2000년 8월 정식 조약을 체결한 것과는 대조적임. 북-러 신조약에는 양국간의 군사협력 부분 조항이 삭제되었음.

### Ⅲ. 후진타오 시대 양국 경제협력 확대 현황

#### 1. 2005년 양국 지도자 간 경제협력 논의

-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이 본격화되고 북중 간의 경제관계가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됨.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4월 방중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원자바오의 언급 이후 중국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중국의 대북투자액은 2004년 1,4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2003년의 110만 달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함. 실제로 중국정부는 북중경제협력을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2월 민·관영 회사인 소위 ‘베이징차오화요우렌원화자취공사(北京朝華友聯文化交流公司)’를 설립하여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해왔음.

- 이후 2005년 1월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작동(政府引導, 企業參與, 市場運作)’의 원칙을 제시함. 이를 통해 북중간 경제협력이 과거 전통적인 방식(우호가격 등)에서 벗어나 상호이익, 공동발전, 윈-윈협력의 시대에 접어들 것을 목표로 하였음.
-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이 후베이성과 광둥성 등의 지역을 방문하였음.
- 200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자원의외교 강화는 북중 경제협력에 또 다른 동력이 되어 중국의 ‘에너지 안보’ 중시 전략은 북한과의 에너지산업 협력으로 나타남.
  - 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한 중국은 2005년 10월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에 제출된 제11차 5개년 계획(이하 ‘11·5 계획’, 2006-1010년)을 통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액을 2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그리고 에너지 구조의 다원화 전략을 실현하기로 하고 해외 다원화된 에너지 기지를 건립하고, 석유비축 제도와 예보체계를 수립하였음.
  - 2005년 11월 중국 최대 국영철광석 무역기업인 중강(中康)그룹과 통화강철기업 등이 70억 위안의 대북투자를 결정하였고, 북한 발해만의 유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하여 자원의 공동 채굴이 본격화함.
- 2005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동북지방의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은 북한과의 협력을 유인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됨.
  - 중국정부는 2003년 10월 “동북지역 등 구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대

한 몇 가지 의견(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을 하달하고 공식적으로 동북진흥계획전략을 추진하였음. 이를 위해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고, 주요 변경하구에 변경경제협력구, 무역구, 가공수출구, 초국경공업구를 건설해 주변국가와의 에너지, 원자재 및 지하자원 등의 개발 협력을 추동하며, 투먼강지역 합작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UN 대북결의안에 동참하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였음. 특히 북한의 해외자금 은닉처로 사용되던 마카오의 델타 아시아 은행(BDA)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공조함으로써 북한에 타격을 주었음. 이에 북한이 반발하고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북중 경제협력은 잠시 주춤하게 되었음.

## 2. 2008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 2008년부터 양국 지도자간의 방문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대북한 식량 수출이 늘어나고 양국 교역 규모가 확대됨.
  - 2008년 중국은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북한이 옥수수 수출 할당제를 요구하자 2008년 북한에 대해서만 옥수수와 쌀 등 식량수출이 증가시킴. 2008년 1월부터 국제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식량수출 억제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식량수출은 2007년보다 오히려 더 증가됨.
  - <표 1>과 같이 2008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41.2%의 급상승을 보였으며, 수입액 역시 46%가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음.
- 이후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한 압박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북한 경제협력을 확대시킴. 이것은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긴밀히 할 것을 요구함.
  - 2009년 11월 국무원은 정식으로 ‘중국 투먼강지역협력개발규획요강-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선도구’를 공포함. 중국의 ‘동북진흥’이라는 과

제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창춘(長春), 지린(吉林), 투먼(圖門)을 연결하여 동변도 철도, 압록강 대교의 삼각 구도 하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구상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본격화 함.

<표 1> 북한의 대중국 교역 실적

(단위: 미 천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85,703	48.2	499,157	-14.8	467,718	-6.3	581,251	24.3	754,046	29.7	793,048	5.2
수입	799,503	27.4	1,081,184	35.2	1,231,886	13.9	1,392,453	13.0	2,033,233	46.0	1,887,686	-7.2
무역총액	1,385,206	35.4	1,580,341	14.1	1,699,604	7.5	1,973,974	16.1	2,787,279	41.2	2,680,734	-3.8
무역수지	-213,800	-	-582,027	-	-764,168	-	-810,932	-	-1,279,187	-	-1,096,638	-14.3

출처: 코트라 2008/2009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KOTRA자료 09-020, 2009년 6월/10-038, 2010년 6월).

- 2010년 11월 20일 중국 상무부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신의주의 위화도·황금평 지역과 나선 지역을 묶는 ‘일구양도(一區兩島: 一區는 나선 지역, 兩島는 위화도와 황금평을 의미)’의 특구개발 계획에 합의함.
  - 이를 위해 북한은 이미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나선특별시로 승격하여 나선경제무역지대를 조성하여 50여 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 공포하였음.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적기초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함.
  - 201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동북지역 방문과 창춘(長春) 정상회담은 5월 방문에서 중국이 제시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대담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임.
  - 2011년 6월 8일과 9일에 각각 황금평과 나선특구에 북중 경제특구 공

동개발 착공식을 시작으로 특구 중심의 경제협력이 구체화됨. 이중 접경지역인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서 양국은 ‘공동개발과 공동관리(共同開發, 共同管理)’ 경제협력모델을 적용하기로 함.

- 현재 중국 르린(日林)그룹 등의 3개 기업이 투자에 참여하여 중국 단둥시 ‘단둥산업원구(丹東產業園區)’와 황금평 일대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데에 합의함. 북한 노동자들을 단둥 및 황금평에 고용하여 섬유산업 및 IT산업 등을 발전시키려는 이 계획은 수해방지 대책과 함께 올해 연말에 확정될 계획임.
- 2005년 양국이 합의한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용’의 경제협력 방침이 2010년 8월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용, 상호이익(政府主導, 企業爲主, 市場運做, 互利共贏)’의 방침으로 변화됨.
  - 이것은 201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에 합의된 바,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양국의 호혜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확대·심화시킨다는 데에 동의한 것임. 2005년과 비교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기업을 중시하고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11년 6월 북한은 훈춘(琿春)~나선간 도로에서 뻗어 나온 청진으로 향하는 약 1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또한 2015년까지 청진~룡정(龍井)시 싼허(三合)통상구 고속도로와 허룡(和龍)-북한 남평-청진 고속도로도 신설될 예정으로 중국의 ‘창지투’ 관문인 훈춘과 투먼, 싼허의 뱃길이 모두 열리게 될 예정임.
  - 위의 도로 개발에 자재와 비용을 모두 중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투먼시 정부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함. 이러한 도로 건설 등의 SOC 개발 참여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중국측의 개발비용을 중국 투먼시가 투자하고 있으나 투먼시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IV. 북중우호조약의 유효성과 양국 경제협력의 의의

### 1. 2008-2009년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와 양국 경제협력 확대

- 2005년부터 양국 정상 간 합의된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2008년부터 본격화됨.
  - 2008년 중국의 대북한 식량지원 확대와 경제협력 추진은 두 가지 배경이 있었음. 하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안정적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9월부터 흘러나온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제어임.
  - 이것은 중국이 북중우호조약을 체결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대북한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북한 무력도발 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협력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으로 인한 북한 내부 불안정성을 제어하려는 의지도 나타남.
-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당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 것과는 달리,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그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 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것은 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과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대북한 제어 의도가 원인임.
  - 2009년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 확대 상황이 있었음.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인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으로 인한 것이었음. 2009년 1월 8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리제강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하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음.
- 2010년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확대 의지는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 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의 조심스러운 대응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의 대응 전략 변화



를 보여주는 것임. 중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경제협력 확대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음.

-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그해 5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였음. 당시 후주석은 양국 협력에 대해 5개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도자간 상호 방문 확대와 상호의사소통 강화가 합의되었음.
- 당시 북한은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가 일어난 상황이었음. 북한 당국의 위기의식은 화폐개혁의 담당자를 문책하고 2010년 1월 신년사에서 '민심'이란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데에서 알 수 있음.

## 2. 북중우호조약의 현재적 의미

- 탈냉전 이후 조약에 위배되는 양국의 외교행위가 나타났으나 조약의 유지에 조약 위반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으로써 조약의 실효성이 약화됨.
  - 1992년 한중수교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과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약 3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양국관계의 단절이 있었으나, 조약은 변함없이 지속됨.
  -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협의하지 않았음. 이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조약 4조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이 역시 조약의 존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북중우호조약의 각 조항이 모두 실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약의 각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음.
- 조약의 실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양국이 조약을 폐기 또는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인은 조약의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함.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가장 안보 불안정성이 높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도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은 한미동맹의 외적 위협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을 지속시킴.

- 한편 2009년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의 무력 도발 및 내부 붕괴 제어를 위한 것이며, 경제협력과 상호지도자방문 및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조약의 일부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게 됨.
  - 북중우호조약은 포괄적 조약으로서 안보 조항 이외에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일부 조항이 실현되고 있음.
  - 또한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2010년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상호지도자 방문 확대와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가 합의되어 조약의 3조 조항이 회복되고 있음.
- 따라서 북중우호조약은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여주었으며, 탈냉전 이후 각 조항의 준수 실효성은 사라졌으나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제어 기능을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안보협력은 진전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확대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3. 북중우호조약과 양국 경제협력 확대

- 2006년부터 주춤하였던 양국 경제협력이 2008년부터 본격화되고 2009년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속에 두어 관리하려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임.
  - 중국은 북한 체제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북한 관리 및 한반도 영향력 유지의 필요성으로 북중우호조약을 유지하려 함.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무력 충돌이 있었던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 제어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어 이를 제어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발전시킴.
-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약을 유지하려 함. 남북관계가 무력 충돌까지 이어져 한반도 위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남북한 및 미국에게 한반도 무력 충돌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북중우호조약을 활용함.
- 북한은 안보 위기와 체제 내부의 경제난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수용하고 북중우호조약을 유지하려 함.

- 2008년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대북한 제재 조치 등은 북한의 안보 위기를 증대시켰음.
- 여기에 후계체제 완성과 화폐개혁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 방지를 위한 체제 내부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경제난의 해결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김정일을 등장시킨 201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의 직전인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음.
- 북중우호조약의 유지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무력 갈등에서 중국의 개입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형성해줄 수 있음.
- 따라서 북중우호조약은 안보조항의 준수 실효성은 사라졌으나 경제협력과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조항은 회복된 형태로 지속될 것임. 양국의 조약 유지 목적은 중국의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 제어 및 내부 붕괴 방지이며, 북한의 경우 한반도 무력 충돌 확대 방지임. 결국 북중우호조약은 현재 소극적 분쟁 억제와 안보기능과 적극적 경제협력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성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V. 고려사항

- 한중간의 다각적 전략대화 강화
  - 중국에 한국정부의 과거 '정경분리' 대북정책 추진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해소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군, 지방정부, 기업 등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다양한 분야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인사들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함.
- 북중간의 경협모델 및 협상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해외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화되어 진행되고 있어 중국의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북한의 나선특구와 황금평 특구는 개성공단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3통(통행, 통신, 통관)' 부분을 제공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한국이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할 경우 중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함.
- 중국 동북3성 지역과의 협력 강화
  - 중국 동북3성 지역은 지역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바, 우리가 중국 동북3성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 중앙정부 역시 창-지-투 개발계획 등 이 지역 경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우호적임.
  - 또한 동북3성은 북한지역과 밀접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효과가 있으며,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도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시켜 통일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음.



# 6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한·중 관계에서 함의를 중심으로





#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한·중 관계에서 함의를 중심으로\*

최지영 | 한림대학교

## I. 들어가며

## II. 재한 중국 유학생 실태와 한국에 대한 의식

1. 재한 중국 유학생 실태와 특징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

## III. 중국의 민족주의와 재한 중국 유학생의 민족주의적 성향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민족주의적 성향

## IV. 글을 맺으며 - 한중 관계에서의 함의와 정책적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림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I. 들어가며

최근 한·중 관계가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비단 정부차원 뿐 아니라 양국 시민들의 우호적 인식과 다방면에 있어 활발한 교류가 국가 간 관계의 튼튼한 기초라 할 때, 현재 한·중 관계는 외적 성장에 비해 내실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92년 수교 이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는 교류가 급성장 하였으나, 양국 정책결정권자와 일반 시민들의 상호이해는 아직 과거의 단편적 민족주의 하의 역사인식과 냉전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민족주의와 관련된 양국 간 이해차이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관련 시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독립 지지자들의 성화 봉송 저지에 맞서 집결한 약 3,000여 명의 재한 중국 유학생은 성화 봉송을 호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과격 행위와 반한(反韓)감정이 격하게 표출되었으며, 이는 다시 인터넷 등에서 각종 소문에 근거한 양국 네티즌간의 민족주의적 감정충돌로 표출되었다. 특히 유학생들의 과격 시위의 배후에 주한 중국 대사관과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개입의 흑까지 제기되면서, 자칫하면 한·중 간 정치·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뻔 하기도 하였다.<sup>1)</sup>

유학생 집단이 단순히 제반생활에서의 불만이 아니라, 민족적·정치적 문제로 유학 대상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한 것은 한국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귀국 후 유학 대상국에 대해 친화적 정서를 가지고 양국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상황에서, 전체 유학생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의 격렬한 반한(反韓)감정은 단순한 이율배반일 뿐 아니라, 한국의 대 중국 외교자산의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 민족주의(국가주의)는 문화주의, 중화사상 등의 형태로 서구의 제

1)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26356](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26356)(검색일: 2010.11.04). “중국 시위대 배후 세력은 CSSA 중국 유학생, 학자 연합회?” 『주간동아』 통권635호(2008. 5.13), pp.16; “그 눈빛 번뜩이던 허망한 민족주의: 베이징 올림픽 중 성화 봉송 중에 집단 난동 일으킨 중국 유학생들, 그 분노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겨레 21』 통권709호(2008. 5.13), pp.16~17.



국주의 침략시절부터 국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sup>2)</sup> 피해자로서의 광범위한 인식론적 기반 하에 현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권 외교”라 불리울 정도로 국제관계에서 “주권·영토·민족”과 관계된 문제에서 줄곧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sup>3)</sup> 중국의 이와 같은 외교적 입장과 정책은 민족주의에 공명하는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정서적 동의를 바탕으로 대미 외교협상이나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 대만 등의 문제에 있어 중국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 왔다. 실제 1999년 주(駐)유고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2001년도 미국 정찰기의 중국 영공 추락 등 당시 대중의 민족주의적 반미(反美) 정서와 시위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과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군성노예 등으로 불거진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2005년에는 당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평가했듯이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sup>4)</sup> 최근에도 조어도(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중국 내 강경한 민족주의적 여론에 힘입어 중국의 대 일본 희토류 수출 금지와 같은 강공책의 배경이 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sup>5)</sup>

한국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정당화되는 역사적 무대가 시공간적으로 중첩되어 고대사와 문화유산을 둘러싼 논쟁부터, 지정학적 경쟁관계와 이념적 차이 등 양국 간 민족주의적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실제 고구려사 관련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으로 인한 양국 간 민족주의적 대립은 현재 한·중 관계의 주요한 갈등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의 반한(反韓)감정의

2) Levenson, J. R,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A Tri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3) Peter Hays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Choi Jiyoung, “Chinese Nationalism in Sino-Japanese relation,” in Guy Faure, (ed.), *New Dynamics between China and Japan in Asi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2010).

4) 물론 중국의 외교나 양자관계에서 실제 민족주의가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중국 또한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내립속의 균형을 이어가며, 때로 시의적절하게 이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비합리적 행위를 유발하는 민족주의는 기술적·도구적으로만 파악될 때,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폄하하게 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설사 그 시작이 위로부터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가나 정부 차원을 넘어서 대중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구조적·제도적, 그리고 우연적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통제하기 힘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5) 김동환, 오병석, “중국의 자원민족주의의 부상과 실패: 희토류(REEs)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2호(2010).

표출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향후 한·중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초(前哨)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사회주의보다 민족주의의 이념적 세례를 강하게 받은 빠링호우(80后), 지링호우(90后) 세대<sup>6)</sup>로서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양국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한국 대학 내 중국 유학생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2000년대 중반이후 이들의 실태와 문화, 혹은 대학 생활 적응,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에 그쳐,<sup>7)</sup> 한·중 관계와 한국의 대 중국 정책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의 재한중국 유학생에 대한 조망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의 배경, 중국의 해외유학 정책, 한국에 대한 이미지 연구와 경제적 분석 등도 있으나, 이 글에서 목적으로 하는 바는 매우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글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 및 민족주의적 성향을 제2의 유학집단이라 할 수 있는 몽골 유학생들과의 비교를

6) 1979년 개혁개방 이후 1가구 1자녀 정책 시행 후인,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로 2000년대 말 기준, 각각 약 2억, 1억5천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로 개인주의적, 소비지향적 성향과 개방적, 합리적 사고방식을 지닌 편이다. 반면 대부분 외동아들, 외동딸로 자란 '샤오황디(小皇帝)' 세대로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중국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의 문화적 시각에서 빠링호우, 지우링호우를 조망하고 있기도 하다. 张颐武, “从韩寒看八零后问题,” 『了望』 第5期(2007), p.38.

7) 하정희,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2008); 최영옥, 이상휘, “대학 교육 품질이 유학생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집 제1호(2006); 김선남,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1호(2007); 이수범, 김동우,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1호(2009); 이익수, 지봉우, “중국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29권제5호제51집(2006); 최준명, 김미정, 이선화, “우석대학교 중국 유학생의 적응 실태 분석,” 『교육학연구』 제10권제1호(2007); 임성용, 김영학, “지적 전공분야의 New Face 기반 지적인력 pool,” 『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2호(2008); 김홍유, 김중구 등, “재 한국 중국 유학생의 직업의식 특성에 따른 효율적 진로상담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제2호(2009).

8) 전홍철, “韓留熱(한국유학 붐),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어문학지』 제30집(2009); 조혜영,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2호(2003); 안인혜, “중국 해외 유학의 전개과정과 국가정책,” 『중국학논총』 제25집(2009); 채규철, “중국의 해외유학생 파견정책,” 『사회과학』 38권2호(2000). 한국 유학생들과 관련한 중국의 유학정책이 향후에는 세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통해 연구 검토하는 것을 기본적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 유학생 집단이 한·중 관계에서 가지는 함의와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이들을 장기적 우호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중국 유학생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한국에 대한 의식의 구체적이고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 권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319명(학부생 232, 대학원생 37명, 어학연수생 50명)과 몽골 유학생 195명(어학연수 90명, 학부생 20명, 대학원생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sup>9)</sup> 또한 정량적 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지 응답자의 일정 비율(약 10~15%)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성적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재한중국유학생 생활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부 글을 참조하였다.

## II. 재한 중국 유학생 실태와 한국에 대한 의식

### 1. 재한 중국 유학생 실태와 특징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의 절대다수는 중국 학생들이다. 중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은 1994년 <한중문화교류협정> 체결을 시발점으로 점차 증가하여, 현재 어학연수생을 포함 64,592명에 이르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전체 유학생의 76%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0)</sup>

한국에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학업이 우선인 학생 신분으로 파악된다. 아시아 및 제 3세계 국가의 유학생은 학업 이외의 목적이 있다는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고, 또 일부 중국 유학생의 경우 학생의 신분을 입국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 3>의 국가별 불법

9) 설문지 원문 및 전체결과는 이 논문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전체는 따로 실지 않는 것으로 한다.

10) <표 1, 2, 3>에서 총 (체류자)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이들과 해당 교육기관 산하 어학원에서 연수를 하는 이들, 그리고 그 외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이다. 또한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수치이다.

체류자 비율을 보면, 중국이 13.21(8.96)%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47.88(26.38)%), 베트남(31.73(27.36)%), 몽골(13.22(8.38)%에 이어 네 번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 비율은 어학연수(D4비자)와 학부이상(D2비자)을 구분하는 데, 어학연수생의 경우 대략 20% 수준을, 학부 이상의 경우 10% 내외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불법 체류자 비율은 순위로는 높으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과는 달리 관리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으며, 학부 이상의 비율만 보았을 때는 대부분이 유학을 주(主)목적으로 체류한다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표 1> 국적별 유학생 체류현황(2010년 3월 31일 기준)

국 적	총 수	점유비율(%)
중 국	64,592	76.01%
몽 골	4,076	4.79%
베 트 남	3,016	3.54%
일 본	1,966	2.31%
미 국	1,163	1.36%
인 도	643	0.75%
우즈베키스탄	829	0.97%
말 레 이 시 아	610	0.71%
러 시 아	569	0.66%
방 글 라 데 시	531	0.62%
인 도 네 시 아	419	0.49%
기 타	6,563	7.72%
총 계	84,977	99.9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기존 통계를 재구성 한 것임.

<표 2> 재한 중국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국 유학생 수	30,815	47,769	58,793	63,553	64,592
총유학생 수	42,217	61,766	75,551	82,341	84,977
점유비율	72.99%	77.3%	77.81%	77.182%	76.0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기존 통계를 재구성 한 것임.

<표 3> 국가별 불법 체류자 (2010년 3월31일 기준)

국 적	총 수	불법체류자	비율(%)
중 국	64,592	8,537	13.21%(8.96%)
몽 골	4,076	539	13.22%(8.38%)
베 트 남	3,016	957	31.73%(27.36%)
일 본	1,966	23	1.169%
미 국	1,163	68	5.84%
인 도	643	19	2.95%
우즈베키스탄	829	397	47.88%(26.38%)
말 레 이 시 아	610	-	0%
러 시 아	569	18	3.16%
방 글 라 데 시	531	24	4.51%
인 도 네 시 아	419	1	0.23%
기 타	6,563	327	4.98%
총 계	84,977	10,910	12.83%(8.8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기존 통계를 재구성 한 것임  
 · (%)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정규교육과정 종사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 ( )은 학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불법체류자 비율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설문지를 통해 드러난 재한 중국 유학생의 실태적 특징으로는 1) 자비유학, 중산층 유학의 높은 비율, 2) 취업 등 실용적 유학동기, 3) 한국어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4) 강한 결속력과 민족주의적 성향을 꼽을 수 있겠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비 유학, 중산층 유학의 높은 비율

우선, 유학형태라는 측면에서 중국 유학생의 자비유학 비율은 90.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몽골 유학생의 89.74%와 거의 유사하게 모두 90% 전후에 육박하는 비율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유학생의 교환학생 비율은 9.09%로, 몽골 2.56%를 한참 앞서는 수치인데, 이는 한·중 수교이후 붓물 터지듯 진행된 활발한 대학 간 교류의 결과로 보여 진다. 반면 정부 장학생의 경우, 중국은 0.62%, 몽골은 4.6%를 보여주고 있다.

유학 형태에서 특기할 만 한 점은, 편입생 비율이 전체 8.56%(몽골은 0%),

학부만 보았을 때는 10%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 유학생에만 보이는 현상으로 한국어과가 초기에 중국의 中專, 高專(한국의 2, 3년제 전문대에 해당)에 많이 개설되고, 이들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편입함으로써 드러난 현상으로 보여 진다.

계층별로는 중국 유학생의 68.33%가 중산층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몽골 유학생 또한 67.69%가 중산층이라 답하는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국 유학생은 25.07%가 중하층, 4.38%만이 상류층이라 답한 반면, 몽골 유학생은 14.35%가 상류층, 기타 9.74%, 그리고 중하층은 4.61%에 불과했다. 중국과 몽골 모두 중산층 유학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중산층 이하 비중이 몽골보다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몽골보다 발전하여 유학을 선택할 계층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답변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언급한 것이 객관적 의미에서 중산층인지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중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가 연구기관 간 기준이 상이하여 임의적으로 정의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산층에 대한 객관적 정의와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 연간 수 백 만원 씩 하는 한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것이 최근의 중국 유학생 집단이라는 점이다.<sup>11)</sup> 즉 한국 대학교육서비스의 주요 외국인 수요자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규 중국유학생은 과거와 같은 불법체류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더 이상은 아니라 할 수 있다.

## 2) 취업 등 실용적 유학 동기

중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로는 ‘취업’(41.06%),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배양’(15.36%)으로 학문적 동기보다는 실용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14.1%), ‘한국 교육의 우수

11) “한국에서 학비를 주요하게 누가 조달하는가”에서 중국 유학생의 81.81%(몽골 유학생 59.48%)가 부모님이라 응답하고 있다. 그 외, 본인(10.65%, 몽골 유학생 32.3%), 반반 부담(2.19%), 장학기관(5.32%) 등이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생활비도 부모님이 지원해 준다는 응답자가 63%에 이른다는 것이다.

성'(10.65%) 등 한국 선호에 의한 선택도 눈에 띈다. 반면 '국내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자가 10.34%로 몽골 유학생(0.51%)에 비해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대학의 정원 제한으로 인한 한국 유학의 비(非)자발적인 동기를 보여준다 하겠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한국 유학 뒤 한국에 취업해 체류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 유학생의 55%, 몽골 유학생의 61.53%가 긍정적 답을 하였다. 이는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정서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경우, 한국과 이익일체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해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양국 유학생의 이유는 다소 상이한데, 중국 유학생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역사·문화적 배경이 유사한데다가 한국에서의 취업이 장래 귀국 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몽골 유학생의 경우, 몽골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귀화나 이민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즉 중국 유학생들은 귀국을 염두에 둔 취업을 고려하나, 몽골 유학생은 이민이나 귀화를 염두에 둔 취업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중국 유학생의 경우 희망연봉이 2,500~3,000만원(34.48%), 2,000~2,500만원(26.33%), 1,500~2,000만원(19.1%) 순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유학생은 1,500~2,000만원과 2,000~2,500만원이 각각 26.15%이며, 1,200~1,500만원도 6.15%(중국 유학생은 2.19%)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국 유학생의 기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력을 위해서 연봉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중국과 몽골 모두 15% 전후인 것으로 드러나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 3) 한국어에 대한 높은 호감도

통상적으로 영어, 저렴한 학비, 문호 개방성이 국제 유학 시장의 3대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 중 국제어로서 영어의 활용도로 인해 영어권 국가들이

12) 2010년도 중국 대학 입시에서 전국적으로 957만 명이 응시했는데, 이중 입학정원이 657만 명으로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의 진로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대학 입시 시작, 중국의 창 <http://korean.cri.cn>(검색일: 2010.11.25)

유학강국의 지위를 누리왔고, 또한 현재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13)</sup> 그러나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중국 유학생의 상당수는 영어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가장 잘 배워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유학생의 60.5%가 ‘유창한 한국어’라 응답했다. ‘전공 관련 지식’이 37.93%, ‘영어’는 9.4%에 불과했다. 이는 ‘인맥’을 선택한 9.09%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비교군인 몽골 유학생의 경우에도, ‘전공 관련 전문지식’이 45.1%, ‘유창한 한국어’ 36.9%, 영어 12.8%로 한국어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었으나, 중국 유학생은 이의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잘 배우고 싶은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유사 질문에서도 중국 유학생의 71.1%가 한국어(몽골 유학생은 55.89%)로, 영어를 선택한 경우는 20.68%(몽골 유학생은 37.43%)에 불과했다.

이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sup>14)</sup> 적어도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중국 학생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 관련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역내 유학’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한다.<sup>15)</sup> 또한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이 한국을 장래 직무와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이들이 양질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단순한 호감 차원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4) 강한 결속력과 민족주의적 성향

‘한국에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같은 국가(중국 혹은 몽골)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 몽골 유학생 모두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나, ‘방과 후 활동 등 단체 활동’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78.05%가 ‘있다’라 응답하였고,

13) 2008년도 기준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가 전 세계 유학생의 4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 “국제유학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SERI경제포커스』 제310호(2010).

14) 예상한,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10.9). 일부 연구보고서에서는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강의를 강화할 것을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전체 유학생의 76%가 넘는 중국인 유학생의 선호는 영어보다는 한국어인 것으로 보인다.

15) 교육의 세계화, 영어권 유학의 강세 하에서 역내 유학의 증가, 중국학생의 절대적 다수는 전 세계 유학시장이 보이는 보편적 현상인데, 그 중 대륙 간 이동이 감소하고, 권역 내 유학이 증가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홍(2010), p. 3.



‘없다’의 경우는 21.63%에 불과했다. 몽골 유학생의 경우 54.35%가 방과 후 단체 활동이 ‘없다’고 답하여 중국 유학생이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모임의 방식도 운동모임, 공부모임, 놀이모임, 취미 등 동호회 모임, 동문동창 모임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의 성격과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중국 유학생은 총 319명의 응답자 중 339명이 중복 응답을 한 것과 달리 몽골 유학생은 195명 중 오히려 무응답이 33명에 이르렀다. 중국 유학생의 민족 간의 사적 결합 모임이 더 빈번하고 활발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인이 대만은 중국과 다른 별개의 국가이다, 중국이 티베트 문제에 왜 간섭 하는가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당신의 느낌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중국 유학생의 52.72%가 ‘매우 화가 난다’, 21%가 ‘화가 난다’, 3.76%가 ‘약간 화가 난다’로 응답하였으며, ‘보통 이다’를 선택한 경우가 15.98%, ‘느낌이 없다’와 ‘무응답’은 각각 3.44%로 드러났다. 70%이상이 ‘화가 난다’를 선택하여 영토와 주권 등의 문제에 예민한 중국 유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렬한 반응은 설문을 대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질문 자체에 거세게 반발하여 강한 반한(反韓)적 감정을 드러내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III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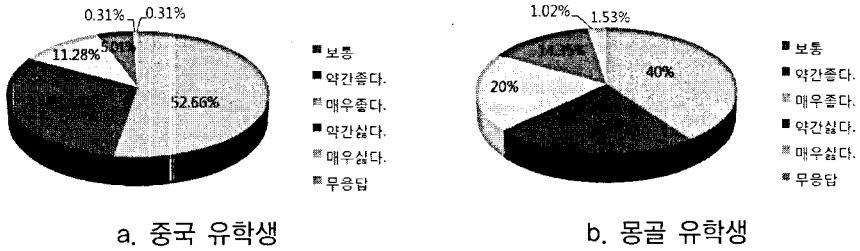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유학생의 상당수가 자발적 유학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 중산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높다는 주관적 요인은 현재 두 자리 수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발전, 한·중 상호간 경제적, 지정학적 관계 등 객관적 요인과 더불어 이들이 향후 중국에서 한국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한·중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 유학생들이 보이는 강한 결속력과 민족주의적 성향은 이들의 한국 유학 중 불만사항이 반한(反韓) 감정으로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의 존재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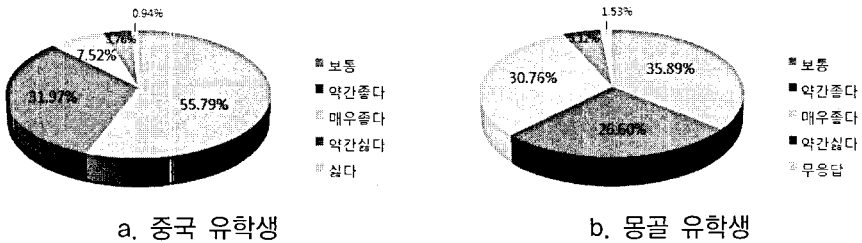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은 크게 ‘한국 및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한국 유학 전반에 대한 만족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중국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인종적 거부감, 한국에 대한 접근시각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 생활에 대한 중국과 몽골 유학생의 호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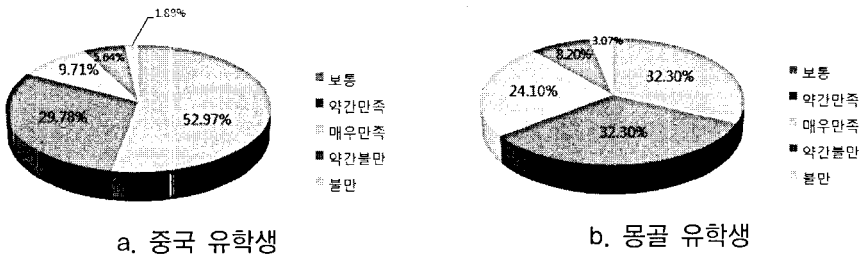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림 2] 당신은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림 3] 당신의 한국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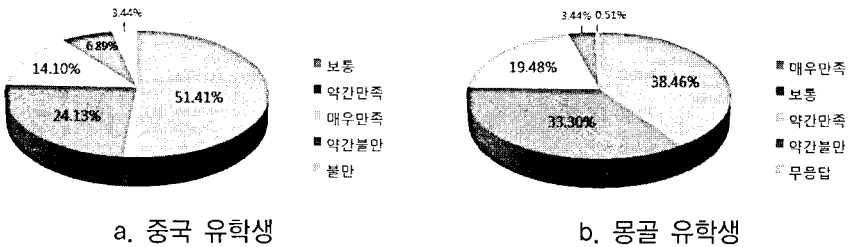
상기 그림표를 보면 중국 유학생의 한국과 한국인, 한국 생활에 대한 호감도가 몽골 유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는 떨어졌으나, 적극적 비호감군은 오히려 적었다. '한국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중국 유학생의 비호감 정도는 '약간 싫다'(5.01%), '매우 싫다'(0.31%)인 반면, 몽골 유학

생은 각각 14.35%, 1.02%를 보였다.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도 중국 유학생은 비호감군이 '약간 불만'(5.64%), '불만'(1.88%)인 반면, 몽골 유학생은 8.2%, 3.0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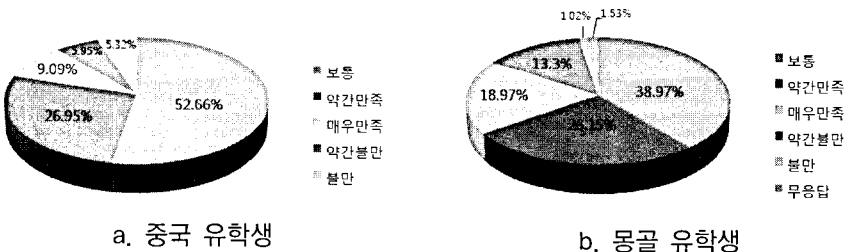
한국 유학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국 유학생이 몽골 유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의 유학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중국 유학생의 경우 '보통'(51.41%)-'약간만족'(24.13%)-'매우만족'(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유학생의 경우 '매우만족'(38.46%)-'보통'(33.3%)-'약간만족'(19.48%)이다.

한국 유학에 대한 적극적 불만군의 경우, 중국 유학생과 몽골 유학생 모두 10% 전후로 드러났는데, 중국 유학생의 경우 '약간불만'(6.89%)-'매우 불만'(3.44%), 몽골 유학생의 경우 '약간불만'(8.2%)로 유학에 대한 불만 강도는 중국 유학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한국 유학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림 5] 한국 유학을 오기 전 본인의 기대에 만족되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한국 유학을 오기 전 가지고 있던 본인의 기대치에 만족되었느냐는 질문에 중국 유학생의 경우 '보통'(52.66%)-'약간만족'(26.95%)-'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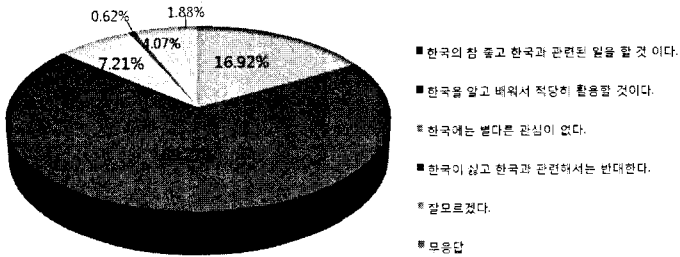
우만족(9.09%)-'약간불만'(5.95%)-'매우불만'(5.32%)의 순으로, 몽골 유학생의 경우 '보통'(38.97%)-'약간만족'(26.15%)-'매우만족'(18.97%)-'약간불만'(13.3%)-'매우불만'(1.02%)로 나타났다. 중국과 몽골 유학생 모두 한국 유학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공부가 장래 당신의 취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중국 유학생의 47.96%(약간 그렇다), 26.33%(매우 그렇다)을 선택 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유학이 향후 본인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도 '약간도움'(46.7%), '매우도움'(28.21%) 순으로 한국 유학이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 결과에 대해서는 6~70%가 매우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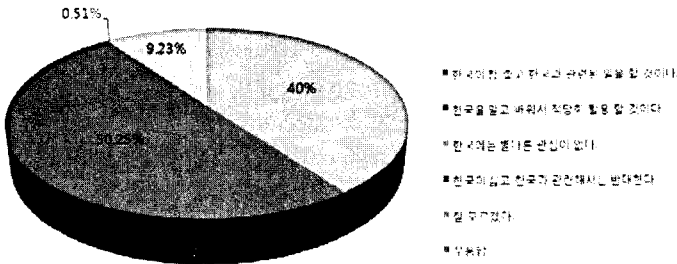
또한 중국과 몽골 유학생 모두 민족적 동질성 혹은 동화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이나, 중국 유학생이 몽골 유학생에 비해 한국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인종적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자 혹은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가' 라는 실제경험에서는 중국과 몽골 유학생 모두 84% 정도가 '없다'고 나왔으나, '한국인 남자 혹은 여자를 사귄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지적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 유학생의 31.97%가 '있다' 라고 답함으로써 몽골 유학생의 22.05% 보다 10% 정도 높았다. '한국인 남자 혹은 여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국 유학생의 13.16%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는데, 몽골 유학생 4.10%보다 높은 수치이다. 물론 이는 상대적 수치로, 두 가지 동일 질문에 중국과 몽골 학생의 45.14(62.06)%와 52.30(81.02)%가 부정적 응답을 하여, 민족적 동질성 혹은 동화정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접근은 '친한'(親韓)적이라기보다 '지한'(知韓) 혹은 '용한'(用韓)적인 실용적 취지의 시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참 좋고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라는 친한(親韓)파적 잠재군의 비율이 몽골 유학생이 40%에 이르는 반면, 중국 유학생은 16.92%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소극적 반한(反韓)파 잠재군이 7.21%, '한국이 싫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반대 한다'는 적극적 반한(反韓)파 잠재군 또한 0.62%에 이르렀다. 이는 동일 질문에 각각 0.51%, 0%인 몽골 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 하겠다.

[그림 6] 장래 당신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a. 중국 유학생



b. 몽골 유학생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국 유학생이 언어, 역사 등 문화·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생활에 대해서는 적응도가 높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문화적·인종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유학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이에 반해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한'(知韓) 혹은 '용한'(用韓)적인 실용적 취지의 시각에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으며, 미비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잠재적 '반한'(反韓)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 Ⅲ. 중국의 민족주의와 재한 중국 유학생의 민족주의적 성향

####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

재한 중국 유학생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의 민족주의에 관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급속한 공감대를 얻게 된 일반적 배경이다. 이에 는 무엇보다 개혁개방 이후 등장한 인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전통적 계급 개념보다는 추상적 국민(중화민족) 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 통합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 장구한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강한 문화적 자부심과 민족적 우월감(중화사상)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다민족 국가로서 국가통합을 위해 위로부터의 국가 민족주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과, 대만이나 해외 화교들의 대륙 투자와 통일을 위해 한족 중심의 인종적 민족주의 경향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거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가속화되는 세계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천안문 사건 등을 겪으면서 90년대 민족주의는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된다.<sup>16)</sup>

둘째, 중국에서 기존의 주류 이데올로기였던 사회주의와의 관계이다. 칼 맑스에서 시작된 고전적 사회주의는 “노동자에게는 국가가 없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를 표방하기에 전통적인 서구의 민족주의 개념과 대립되는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회주의 전통에 기반 한 이념은 사실상 형식적 구호로만 남게 되고, 결국에는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주의가 광범위하게 의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생산관계와 계속 혁명을 중시했던 마오쩌둥 집권 시기만 해도 민족주의는 계급적 일체감을 훼손시키는 낡은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국제주의(사회주의)와 민족주의(국가주의)가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중국 역시 천안문 사건을 겪으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주의가 통합과 통치의 이데올로기로서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

16) Zhao Suisheng, “Chinese Intellectuals’ Quest for National Greatness and Nationalistic Writing in the 1990s,” *The China Quarterly* No.152 (Dec, 1997), pp.735~737; 이희욱, “중국 민족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학 연구』 제 47권(2009), pp.153~154.

17) 그러나 국내의 소수민족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중국은 오히려 한족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소수민족의 특수한 역사는 배제된 급진적 민족동화정책을 펼치는 모순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모택동 당시 중국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나 혹은 민족주의나 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 중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유효한 관점으로 생각된다.

국은 현실 사회주의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애국 애족(愛國愛族)의 국가주의가 적극 활용되게 된 것이다. 즉 과거 민족주의의 발호를 일정하게 억제하던 사회주의 이념이 쇠퇴한 상황에서, 취약한 시민사회와 자유주의적 흐름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 민족주의”<sup>18)</sup>의 하부체계에 포섭되어, 모든 사회적 논의는 “강국몽”(強國夢)이라는 부국강병의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민족주의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가고 있다 할 것이다.<sup>19)</sup>

셋째,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국가주의”와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민족국가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 국가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국가주의는 오히려 여러 민족을 단일 국가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국내적으로 소수민족의 분열가능성을 안고 있는 중국이 자민족의 통일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주의(애국주의)”이다. 2005년의 역사교과서 파동과 2010년 조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민족적 갈등 당시, 민족주의적 격한 감정에 거리를 뒤흔쳐나온 인민들에게 중국 정부가 감정적 자제를 호소하면서 동원한 것은 “애국주의(국가주의)”였다. 이와 같이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의 모순이 체제 하에 잠복해 있는 중국에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발호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주의가 “국가 혹은 관 주도 민족주의(state-led nationalism or official nationalism)”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때,<sup>20)</sup>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인

18) 중국의 민족주의를 지적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것이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에서 연원한 ‘중화주의’라는 독특한 ‘문화 민족주의’적 특성이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자부심이 집권층 뿐 아니라 지식인과 인민들 사이에서 종교적 확신(혹은 신념의 보편성)과 같이 심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James Townsend, “Chinese Nationalism,” in Jonathan Unger (ed.), *Chinese Nationalism* (Armonk, NY: M.E. Sharpe, 1996), pp.1-30.

19) 물론 정치적·이념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는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여타 국가와 같이 공공연히 자유롭게 유통되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는 중국 공산당에게 여전히 일종의 내부 검열 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긴장관계는 사회주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Joseph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8), pp.83~163.

20) Zhao Suisheng, “The Rise of Chinese Nationalism in the 1990s,” in Edward Friedman (eds), *What if China Doesn't Democratize?: Implications for War and Peace* (M.E.Sharpe, 2000), pp.24~27.

민의 “대중 민족주의(popular nationalism)”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위에서 아래로의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아래로부터의 일반 대중의 정서적 동의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일체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혹은 관) 주도 민족주의”는 실용적이고 이성적 색채가 강하게 되지만, 인민 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는 감성적이고 순수한 원형을 추구하는 원리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된다. 또한 “국가(혹은 관) 주도 민족주의”는 국가 통합적 차원에서 인종, 민족에 구애 없이 국가주의를 주로 강조하게 되지만, 인민의 대중 민족주의는 인종적, 민족적 색채 또한 상당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 민족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중국 사회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대중 민족주의”의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민족주의가 지니는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항적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인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제3세계 국가에서 목도되는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로서 집단적 경험과 기억에 의해, 침략이라는 상황이 종결되어도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할 수 있게 하며, 대부분의 피침략 국가에서 국가재건을 위한 국민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최소한 일본이나 서구의 구(舊)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방위전쟁을 수행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입장에 서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자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확신도 강한 편이다. 또한 구체적 역사의 한 시기에 “해방과 진보의 담론”<sup>21)</sup>으로 기능했던 저항적 민족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이는 동시에 쉽사리 과열되는 특성, 더 나아가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하여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99년 NATO의 주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사건과 2001년 미 정찰기 사건, 2005년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2010년 조어도 사건 등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민족주의 시위는 모두 빠르게 과열되며,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록 적정한 시기 중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더 이상 확산, 가열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으나, 평소 시위 등

21) 최지영, “주권과 인권: 인권담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중소연구』 제28권 제4호 2004/2005, pp.67~68.



의 집단적 움직임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이는 매우 놀라운 폭발력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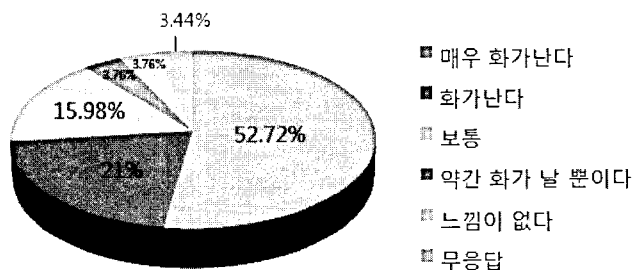
##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민족주의적 성향

이와 같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과 특징은 ‘빠링호우’ 혹은 ‘지우링호우’에 속하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유학생의 결속력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은 몽골 유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불만도 몽골 유학생이 주거, 비자, 학교생활 등 유학 생활 전반에 걸친 일상적 불만을 드러내는 것에 반해, 중국 유학생은 중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 시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중국의 영토, 주권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대만을 중국과 다른 별개의 국가이다. 중국이 티베트 문제에 왜 간섭하는가 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에 대한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3%가 ‘매우 화가 난다.’ 21%가 ‘화가 난다.’라 답해, 71%에 이르는 응답자가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느낌이 없다’는 3.76%로 매우 미비했다.

[그림 7] 한국인이 “대만은 중국과 다른 별개의 국가이다”, “중국이 티베트 문제에 왜 간섭하는가?”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통계적 수치보다 이들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설문에 대한 반응이다. 일부 학생들은 설문지에 욕설과 욕지거리, 오성홍기, 애국주의적 구호를 그려 넣으며 질문 자체에 매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아래는 설문지에 대한 중국 유학생의 격한 반응의 일부를 옮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묻다니 간도 크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의 일이나 잘 하시던지’

‘공자 가라사대 입에 넣는 거라고 다 먹어서도 안 되며 말이라고 다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자신의 입을 잘 간수하길.’

‘한번만 더 이런 문제를 묻는다면 가만 두지 않겠다! 질문하는 사람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한국인들이여 자신들의 입장이나 잘 간수하시길, 물어봐야 할 문제가 있고 물어보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중국 내정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말길…자신의 집안일도 잘 처리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입장으로 이러한 문제를 묻는지…(중간 욕설)…중국인이 당신을 깔보게 하지 말기를!’

또한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반발(反撥)적 논리를 제기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의 강한 민족적 의식이 향후 반한(反韓)적 태도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매우 화가 나고 분노마저 느껴진다. 만약 제주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북한의 영토라 한다면 느낌이 어떨겠는가! 또 북한이 한국을 통일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한국이 북한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었는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묻지 않기를 바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의 대부분은 1980~90년대 이후 출생한 ‘빠링호우’ 혹은 ‘지우링호우’(80后 또는 90后)라 불리는 ‘소황제’(小皇帝) 신세대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탈 냉전에 따른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와 중국의 민족주의 열풍 하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로 사회주의 보다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민족주의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이들은 또한 최근 20년 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G2로 불릴 만큼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의 현실에 따라 대국(大國)으로서 자부심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한 성(省)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을 잘 모른다. 중국에는 수박이 있냐, 아파트가 있느냐 등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 60년대 중국의 이야기를 한다. 기회가 되면 중국에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다. 현재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꼭 한번 보라고 하고 싶다.’

‘중국이 진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은 곤경에 빠질 것이다.…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연평도 사건 이후) … (내가 중국인인줄 알고 내 앞에서) 중국에 대해 마구 욕을 한다. 중국이 북한만 도와준다는 것이다.… 정말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면 한국은 어렵도 없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일부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에서 출발하여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 유학이 점차 보편화된 현상은 대다수가 중국 국내의 실업문제로 인하여 취업을 위한 스펙강화라는 지극히 생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상적 형태의 유학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화민족주의에 기반 한 대국적 우월인식과 중산층 자녀로서 취업을 걱정하면서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따라 한국에 유학 온 이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어려움이 쉽사리 격렬한 민족주의와 반한감정으로 표출될 소지가 존재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중 관계에서 중국유학생의 민족주의적 성향만이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설문지와 인터뷰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한국인들끼리 푹푹 뭉쳐서 중국인 들을 깔본다. 한국 친구 사귀고

22) 이동률, “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21집(2001); 윤휘택,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중국사연구』 제18집(2002).

인맥(關係) 맺기가 너무 어렵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서양 사람 처럼 대했으면 한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주인아저씨는 한국인 아르바이트 학생과 중국인인 나를 차별한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나를 시키고, 한국 학생은 나보다 편한 일을 하게 한다. 그런데도 시급은 내가 더 적게 받는다.’

‘미국 사람이 영어하면서 이야기 하면 웬지 수속이 빨리 끝나는 것 같다. ...한국어를 쓰는 나는 웬지 더 무시당하는 것 같다.’

물론 일부는 오류적 인식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적 우월의식과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도 중국 유학생의 피해의식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시민들의 의식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 우월감과 경멸감은 인식의 차이를 쉽사리 대립으로 전환시킬 수 원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 특히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미디어 중심의 선정적 대중영합주의(populism)는 작은 대립에도 여론을 쉽사리 악화시켜 양국 간 단순한 이견차이도 충돌로 전화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짧은 시간에 양적인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정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기본적 사항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여, 허심탄회한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이 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의 중국 유학생들을 자극하면서 한국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키울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IV. 글을 맺으며 - 한중 관계에서의 함의와 정책적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은 상당수가 귀국 후 중국에서 한국과 관련

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10년 내 중국에서 대(對) 한국 여론주도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도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사회여론의 흐름을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즉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조어도 분쟁 시, 인터넷이나 시위 등의 형태로 표출되는 강력한 반일(反日)여론을 중국 정부가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어가는 지금, 중국 내 여론을 한국에 유리하게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나마 한국을 잘 알고, 한국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될 이들을 한국에 대한 잠정적 우호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향후 한중 관계의 정치, 외교적 방향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8년 중국 유학생의 반한(反韓) 혹은 혐한(嫌韓) 감정이 격하게 표출된 이후, 이들의 한국에 대한 정서와 감정에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sup>23)</sup> 반면 상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한국을 장래 자신의 직무와 연계시켜 고려하는 지한(知韓) 혹은 용한(用韓)적인 실용주의적 시각을 가진 집단이 몽골 유학생보다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다(II장 2 참조). 중요한 것은 중국 유학생들이 여타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유학과 생활에 느낄 수 있는 불만과, 민족주의적 성향에 따라 표출되는 반한(反韓)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학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2008년도 시위에서와 같이 격렬한 반한(反韓)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빠링호우’ 혹은 ‘지우링호우’ 세대로서 가질 수 있는 이울배반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 중국의 애국주의 운동 열풍 하에서 자라 대국(大國)으로서 중화주의적 자부심이 강한 이들은, 동시에 전(前)세대 민족주의가 보여주는 ‘상처받은’<sup>24)</sup>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보여주는 데, 이에 따라 영토·주권 등에 매우 예민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들의 대국으로서의 자부심과 뒤엉킨 피해자로서의 영토나 주권문제

23)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전국 15개 대학 1220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펴낸 ‘한중 양국 민 간 우호정서 저해 원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가 ‘반한 정서’라는 말을 들어봤고 41%는 반한 정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반한 정서는 중국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었다. “중국, 알아야 전략 세운다,” 「동아일보」 (2010-12-18).

24) Lucian W. Pye, “How China’s Nationalism was Shanghaied,” in Jonathan Unger (ed.), *Chinese Nationalism* (M.E. Sharpe, 1996).

에 특별히 예민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정책도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극보다 상호이해의 증진이라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한중 양국의 시민사회 간 교류는 공통규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라는 점이다. 상기 조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이 티베트나 대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를 곧바로 영토, 주권, 내정간섭의 문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티베트나 대만 문제의 학술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에 대해 상대방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개별 연구자의 티베트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중국정부나 중국인들이 방해한다면 비판을 가할 수 있겠지만,<sup>25)</sup> 일상적 접촉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로서 결국 대립으로 치달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문화권의 종교적 신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이에 동의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두 번째로 이러한 중국 유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상호작용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상기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불편의 상당수는 한국의 편향되고 낮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다. 주로 장년층의 경우 6~70년대 공산주의 국가((中共)를 대하듯 중국을 바라보거나,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을 잠재적 불체자로 간주하거나, 서양인과 차별적으로 대하는 태도 등 한국의 민족주의적 시각 또한 중국 유학생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며, 반한(反韓) 감정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신뢰 구축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쉽사리 건드리지 않는 성숙한 규범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 외교적 함의 외에도, 재한 중국 유학생은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다. 2010년 전 세계적으로 3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유학생 수는 2025년에는 두 배가 넘는 7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26)</sup> 그 중 대륙 간

25) 서울의 중국어 표기 한성(漢城)을 서울(首兒)로 바꾸게 한 정책,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고대사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6) Banks, Melissa, et al(2007), Global Student Mobility, An Australian Perspective, Five Years On, IDP, 예상한(2010)에서 재인용.

이동이 감소하고 권역 내 유학이 증가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나타난 국제유학 시장의 특징으로, 전 세계 유학 시장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 유학생들이다.<sup>27)</sup> 이에 향후 한국의 국내 교육 시장 또한 더욱 세계화될 것이며, 역내 유학생으로 중국 유학생의 잠재적 유입군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교육산업정책 구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sup>28)</sup> 한국 또한 우수한 이들을 역내 유학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적극적 정책과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sup>29)</sup> 또 다른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귀국 후 중국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잠재군이다. 중국 국내 시장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소비력과 구매 패턴을 보여주는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세대는 향후 10년 소비의 새로운 주력으로 여겨지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최근 한국 무역협회의 조사에서는 이들이 중국 현 소비 세대보다 한국 제품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sup>31)</sup> 이에 한국 유학 경험을 가진 중국 유학생의 경우, 중국 국내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세대와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익숙함이 존재한다.<sup>32)</sup> 따라서 향후 10년 이들이 귀국 후 중국 국내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잠재적 소비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방식

27) 최홍(2010); 예상한(2010).

28) “유학생 유치 수입, 연 18조원, 호주 서 교육은 4대 산업,” 「한국경제」 (2010-04-14).

29) 상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중국 유학생의 상당수가 한국어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는데, 역내 유학을 선택하는 특성 상 이들의 주된 목적이 한국 지역과 한국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한국어 교사 및 교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류(韓流)에 호감 있는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및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및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한국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보다 체계적 교류나 조기(早期) 스किन십 교류를 통해 장래 한국 유학의 양질의 잠재적 집단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0) 李仍, 『中国八零后与九零后消费行为对比研究-以济南地区为例』 (硕士学位论文: 山东大学, 2009), pp. 8~9; “10년 뒤, 中소비의 주축은 빠링호우,” 「헤럴드 경제」 (2010-08-16); “中, 소비시장의 큰 손 주링호우,” 「문화일보」 (2008-08-21).

31) “中, 10대 청소년, 한국 상품 글썽요,” 한국무역협회 조사 참조, 「파이낸셜뉴스」 (2009-09-20).

32) 인터뷰와 설문지 응답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의 상당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핸드폰, 노트북, 아이폰 등 디지털 제품에 환호하며,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맥도널드를 자주 찾는 등 중국 국내 ‘빠링호우’ 세대와 유사한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김치, 자장면, 김밥, 떡볶이, 삼겹살, 비빔밥 등 한국음식에 점차 입맛이 길들여져 가고 있으며, 한국패션과 음악, 춤, 라이프스타일을 동경하고 있다.

의 마케팅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한 중국 유학생은 한국의 대 중국 외교의 자산이자 향후 한·중 관계와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한 상업적 필요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도 이들에 대한 인식 수준 고양과 함께 체계적 정책 수립을 통해 이들이 한국에 우호적 집단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33)</sup>

33) 장기적 지한(知韓)과 육성의 핵심은 결국 이들이 한국과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목적의 상당수가 실용적 측면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국 관련 기업이나 분야에 취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취업의 경우, 국내 실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으나, 국내 창업이나 또는 중국내 한국 기업이나 중국 국내기업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보다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동환, 오병석. “중국의 자원민족주의의 부상과 실태: 희토류(REEs)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2호, (2010).
- 김선남.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2007).
- 김홍유, 김종규 등. “재한국 중국 유학생의 직업 의식 특성에 따른 효율적 진로상담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2009).
- 안인해. “중국 해외 유학의 전개과정과 국가정책.” 『중국학 논총』 제25집, (2009).
- 예상한.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0.9.28).
- 이동률. “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제21집, (2001).
- 이익수, 지봉구. “중국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29권 제5호 제51집, (2006).
- 이수범, 김동우.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1호, 2009.
- 임성용, 김영학. “지적 전공 분야의 New Face 기반 지적인력 pool.” 『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8.
- 이희옥. “중국 민족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199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47집, 2009.
- 윤휘택.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중국사연구』 제18집, (2002).
- 전홍철. “韓留熱(한국유학 붐),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어문학지』 제30집, 2009.
- 조경란. “중국 민족주의의 구조와 성격.” 『시대와 철학』 제20권 4호, 2009.
- 조혜영.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3.
- 최영옥, 이상희. “대학 교육 품질이 유학생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집 제1호, 2006.
- 최준령, 김미정, 이선화. “우석대학교 중국 유학생의 적응 실태 분석.” 『교육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7.

최지영. “주권과 인권: 인권담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중소연구』 제28권 제4호, (2004/2005).

최홍. “국제유화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SERI경제포커스』 no.310, (2010).

채규철. “중국의 해외유학생 파견 정책.” 『사회과학』 제38권 제2호, (2000).

James Townsend. “Chinese Nationalism.” Jonathan Unger (ed), *Chinese Nationalism*. M.E. Sharpe, 1996.

Levenson, J. R.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A Tri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Lucian W. Pye. “How China’s Nationalism Was Shanghaied.” Jonathan Unger (ed), *Chinese Nationalism*. M.E. Sharpe, 1996.

Hays Gries, Peter.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Jiyong, Choi. “Chinese Nationalism in Sino-Japanese relation.” Guy Faure(ed), *New Dynamics between China and Japan in Asi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2010.

Joseph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8.

Suisheng, Zhao. “Chinese Intellectuals’ Quest for National Greatness and Nationalistic Writing in the 1990s,” *The China Quarterly* 152 (December, 1997),

\_\_\_\_\_. “The Rise of Chinese Nationalism in the 1990s.” Edward Friedman (eds), *What if China Doesn’t Democratize?: Implications for War and Peace*. M.E.Sharpe, 2000.

李伪. 『中国八零后与九零后消费行为对比研究-以济南地区为例』 硕士学位论文: 山东大学, 2009.

邱靜. “빠링허우(80後) 직원에 대한 관리.” *China’s Business Focus* 10-17 (2010).

張頤武. “從韓寒看八零后問題.” 『了望』 (2007).

<http://korean.cri.cn>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26356](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26356)

[http://www.csaik.com/csaik\\_new/index.php](http://www.csaik.com/csaik_new/index.php)(재한중국유학생연합회)

<http://bbs.icnkr.com/>(중국 유학생 생활 커뮤니티 사이트)





## G-2시대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





# G-2시대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

신종호 | GRI 통일동북아연구센터

- I. G-2 시대의 도래
- II. 중국개황 : 廣, 大, 雜, 多
- III. 고대~근대시기 중국과 한반도 : 中華-東夷
- IV. 현대시기 중국과 남북한 : 唇亡齒寒
- V. 개혁개방과 '중국의 부상' : 黑猫白猫
- VI. 수교이후 한중관계 : 桑田碧海
- VII. 한중관계 전망 : 松茂柏悅

## I. G-2 시대의 도래

### < '중국역할론' >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8%) 달성(반면,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모두 경기 침체)  
→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이 광범위하게 확산

### < 'G-2체제'의 등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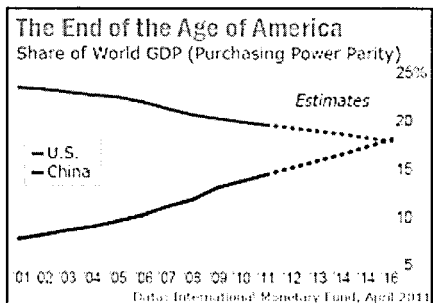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전략적 비중 증대
- 미·중 '전략·경제대화'(2009.7, 2010.5, 2011.5)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  
→ 중국은 미국과 함께 소위 'G-2체제'의 반열에 등극
-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 제고 + 미·중 협력관계 강화 추세  
→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핵문제 해결 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세계 GDP 전망>

순위	2007	2030	2050
1	미국	중국	중국
2	일본	미국	미국
3	독일	인도	인도
4	중국	일본	브라질
5	영국	브라질	러시아
6	프랑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자료: Goldman Sachs Paper, No. 170 (2007.7).

<미국과 중국의 세계 GDP 비중 추이>





## II. 중국개황 : 廣, 大, 雜, 多

### <국가개관>

- 中華人民共和國 (약칭 中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 1949년 10월 1일 성립. 수도 北京.
- 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
- 기념일 및 휴일:元旦(1월1일), 春節(-1월1일), 勞動節(5월1일), 國慶節(10월1일)
- 중국의 국경선 총길이는 22,800 km로서 총14개 국가와 육지를 접함
- 면적은 9,596,900 km<sup>2</sup> (한반도의 43.45배·남한의 약96.66배, 세계 3위)
- 중국의 4대강: 황하(黃河), 장강(長江), 흑룡강(黑龍江), 주강(珠江)
- 다민족(多民族)국가: 한족漢族(92% 이상) 및 55개 소수민족
- 중국의 인구: 약 13억
- 행정지리 : 22省, 5自治區, 4直轄市, 2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
- 중국사 : 三皇五帝→夏→殷→西周→東周,春秋全國→秦→西漢,東漢→三國時代(魏蜀吳)→魏晉南北朝→隋→唐→五代十六國→北宋,南宋→元→明→清→중화인민공화국

## III. 고대~근대시기 중국과 한반도 : 中華-東夷

### <중화질서에 입각한 중국의 한국관>

- 중(中)은 '중앙', 화(華)는 문화
- 한족(漢族) 중심 사상. 華夷思想. "중국중심체제"(Sino-centric system)
- 전통중국의 대외관계: 중화질서에 입각한 주변국 관계 (主從관계 혹은 朝貢관계)



### <근대이후 중국과 한국 상호인식>

-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중국의 조선인 像 급변  
조선의 중국관: 事大하는대상으로서의 ‘上國’or‘大國’
- 청일전쟁이후 조선의 새로운 중국인식: 천한 중국(淸), 개혁모델, 세력균형의 축

## IV. 현대시기 중국과 남북한 : 唇亡齒寒

### <수교이전(1949-1992) 중국과 한반도>

- 1940, 50, 60년대 : 미소 냉전구도의 영향으로 적대적·대결적인 관계 지속
- 한국전쟁과 중국
- 7,80년대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적 실익 일치
- 개혁개방 이후 : 한국의 경제적 성과 및 점진적 민주화의 척도로 중국의 현실을 평가
- 한중 수교(1992년 8월24일)의 의의 : 水到渠成

## V. 개혁개방과 ‘중국의 부상’ : 黑猫白猫

<전방위 발전 전략> : 点(1980년대) → 線(1990년대) → 面(2000년대)

###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의 성과와 문제점>

- 수출위주의 고도성장 지속 → 세계경제불균형의 원인으로 부각
  - 선진국의 급격한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는 통상마찰 유발 요인으로 작용
- 투자 위주의 성장 → 세계 원자재가격 급등, 국내경제 불균형 심화
  - 원자재/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세계경제 불안요인
  - 중국정부의 강력한 투자억제 조치, 그러나 지방정부/기업의 성장우선주의 팽배

- 제조업 위주의 과잉 (중복)투자로 인해 산업간 불균형, 환경파괴의 후유증 심각
-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부작용 : 양극화 심화, 소외계층
  - 비정규직 양산
  - 농촌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양극화 심화
  - 내수 기반의 안정적 경제성장 저해
  - 사회안정 불안정 요인 확대

###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

- 중국은 연평균 9%이상의 경제성장 유지 과정에서 축적된 경제운용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으로 이행하기 위해 체질 개선 중.
  - '先富論' 중심의 고도성장 → '共同富裕' 추구의 안정 성장 동시 추구
  -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해소 위한 지역균형발전 실시
  - 내수확대 전략,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무역 흑자폭 축소와 위안화 평가절상 추진
  - 아프리카·중남미 자원부국과의 '경제외교' 및 아시아국가와의 FTA 적극 추진

### <수퍼차이나 중국>

- 2010년 세계 2위 무역대국(2조9728억 달러)(수출(10.3%), 수입(23.2%))
- 2011년 현재 GDP 세계 2위(5조8786억달러)
- 2010년 외환보유 세계 1위(2조8473억달러)
-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2010년 5월 상하이 엑스포
- 2009년 국방비 세계 2위(SIPRI, 988억 달러 추산), 2011년 12.7% 증액
- 핵 보유국((비확산연구센터, 핵탄두 400기 추정)
-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미국, 구소련에 이어 세계 세 번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미·러·영·프와 5강 형성)
- 소프트파워 외교: 공자학원, 대외원조, 유엔PKO, 국제기구에서 발언권 확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역할론' 증대--> 미국과 'G-2' 시대 주도
- "12.5계획"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 민생 중시, 내수확대, 공공안전, 사회관리

## VI. 수교이후 한중관계 : 桑田碧海

### <한중관계 현황>

- 1992년 수교시 ‘우호협력관계’ →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 1992년 당시 교역액 50억달러 → 2009년에 1,410억달러(약 22배 증가)
-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세번째 교역대상국
- 한중간의 교역량 > 한미 + 한일 교역량,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
- 수교 당시 인적교류 4만명 → 2010년 현재 연간 450만명
- 총 66만명의 한국인과 56만명의 중국인이 각각 상대국에서 거주
- 在中 외국인유학생 중 한국인이 30%(1위) 在韓 유학생 중 중국인이 77%(1위)
- 수교 이후 50회에 이르는 양국 고위급 지도자간 교류

### <한중관계 발전 요인>

- 중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및 “경제적 상호보완성”
- “지리적 인접성”(可闻邻国鸡鸣犬吠)(远亲不如近邻)
-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양국간 교류”
- “문화적 유사성”: 한자, 유교문화, 한의학, 고전(有朋自远方来不亦悦乎)
- “전략적 공동인식의 존재와 협력의 필요성”

### <한중관계 장애 요인>

-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 역사문제를 둘러싼 양국 민간차원에서의 갈등
-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혐한(嫌韓)이나 폄중(貶中) 문제
- 무역과 통상에 관련된 분쟁

###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기본 구상>

- 원칙: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한반도에

서의 비핵화 실현,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 정책: 북한체제 존속(생존)과 개혁,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한반도의 점진적 통일 지지

**<한중관계 주요 현안>**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북한문제 및 북핵6자회담 포함

한중 역사분쟁: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2002.2~)

한중 FTA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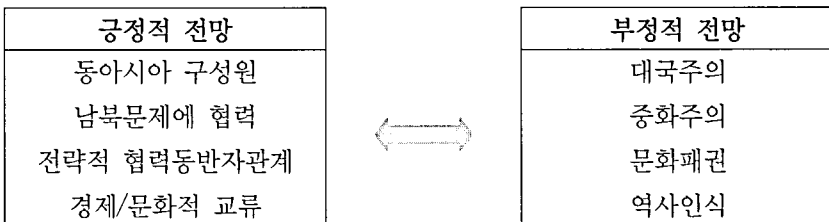
한반도통일과 중국

**VII. 한중관계 전망 : 松茂柏悅**

**<對중국 인식 및 정책목표>**

- 우리가 중국을 친근하게 여기는 이유?
- 우리의 對中 관심 ≠ 중국의 우리에게 대한 관심
- 한중관계가 “오래되었다” ≠ “좋았다”

**<한중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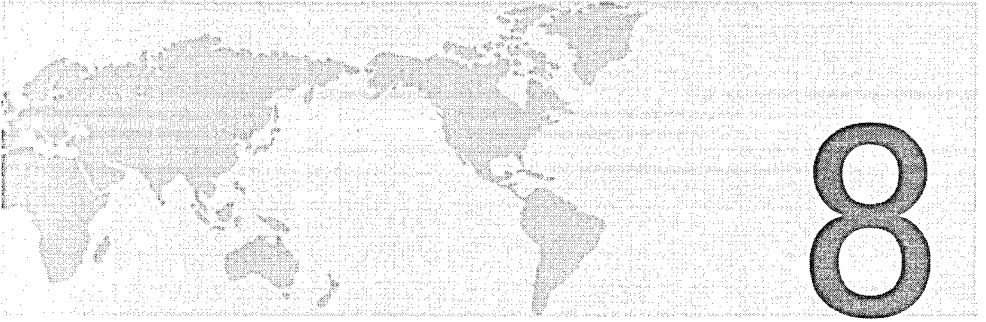


중국기회론

중국위험론

<對중국 정책 기조>

- 미중협력체제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對중국 지렛대 마련
-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위한 상호신뢰 증진 및 협력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정책의 지지와 협력 유도
- 한국의 경제적 실리 확대를 위한 FTA 추진
- 한중 교류협력의 다원화(청소년 교류 등)를 통한 양국관계의 저변 확대
- 중국내부의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  
→ 用中用美 ?    聯美通中 ?    聯美聯中 ?    聯美和中 ?



한중관계:  
협력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 한중관계: 협력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김애경 | 명지전문대학

- 한중 관계는 수교이후 전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음.
  - 경제적 성과: 양국의 수출입 교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 → 2010년 1,884억 달러(한국의 대중무역수지는 2010년 452억 달러로 한국의 무역수지 411.7억 달러를 상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FDI)도 1992년 2.2억 달러 → 2010년 37.6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의 위치
  - 정치·안보적 성과: 선린우호관계 → 협력동반자 관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무관부 설치(1993, 1994), 군사안보 분야 인사의 상호방문, 국방정책 실무회의의 비정기적 개최, 한중 해군 및 공군 간 ‘핫라인’ 개설(2008).
  - 문화 및 기타 인적교류: 2009년 중국 방문 한국인 수는 320만 명, 한국 방문 중국인 수는 134만 명; 2010년 차례로 407.6만, 187.5만 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78.5%와 71.5% 증가; 2010년 한국인의 총 출국인원이 1,280.7만 명이므로 출국 한국인 3명 중 1명(31.8%)이 중국을 방문, 한국 방문 외국인이 876.7만 명이므로 한국 방문 외국인 5명 중 1명(21.4%)은 중국인; 2010년 현재 중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6.7만 명(전체 유학생 중 25%), 한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6.3만 명(전체 유학생 중 75.9%).

<표 1>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추이 (신고기준)

(단위: 천, 억불)

구분	1992	1995	1997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중 투자 건수	314	1,270	1,139	594	3,100	2,508	3,100	3,964	4,609	4,683	4,594	3,270	2,110	2,145
대중 투자 금액	2.2	12.8	9.2	9.1	10.0	21.0	28.2	37.1	35.8	45.3	71.1	48.6	26.5	37.6
전체 투자 금액	20.4	52.2	60.3	58.2	61.1	63.5	59.4	81.0	92.0	185.4	299.7	367.5	299.8	325.2
비중 (%)	10.9	24	15	15	16.2	33.1	47.5	45.8	38.9	24.4	23.7	13.1	8.8	11.6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총계 DB(<http://www.koreaexim.go.kr>)

<표 2 한·중 양국 교역 추이>

(단위: 억불)

구분	1992	1995	1997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중 수출	26.5	91.4	135.7	119.4	184.5	237.5	351.0	497.6	619.1	694.5	819.9	914	867	1,168
대중 수입	37.2	74.0	101.2	64.8	128.0	174.0	219.1	295.8	386.4	485.5	630.3	769	543	716
대중 수출입 (A)	63.7	165.4	236.9	184.2	312.5	411.5	570.2	793.5	1,005.8	1,180.0	1,450.1	1,683	1,410	1,884
전체 수출입 (B)	1,584.1	2,601.8	2,807.8	2,256.0	3,327.5	3,146.0	3,726.5	4,784.2	5,456.6	6,348.5	7,283.3	8,572.8	6,866.2	8,915.9
비중 (A/B)	4.0	6.4	8.4	8.0	9.4	13.1	15.3	16.6	18.4	18.6	19.9	19.6	20.5	21.1
대중 무역수지 (a)	-10.7	17.4	34.5	54.6	56.5	63.5	131.9	201.8	232.7	209.0	189.6	145	324	452
전체 무역수지 (b)	-51.4	-100.6	-84.5	390.3	117.9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132.7	400.4	411.7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한중관계는 2000년 전후로 발전양상을 달리함.
  - 수교이후 19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양국관계는 상호간의 배려 속에서 ‘밀월기’라고 불릴 만큼 큰 갈등 없이 빠른 속도로 관계진전을 보여 왔음.
  - 2000년대에 접어들며 한중 양국 간에는 잠복되어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 1999-2000년 마늘파동, 2000년 납꽃게 파동, 2003/4년 동북공정, 2005년 김치분쟁, 2005/6/7년 문화논쟁,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한중 양국의 갈등이 표면화된 대표적 사례들임.

<표 3> 한중관계의 시기별 특징과 추이

	특징과 추이
<p>선린 우호 (1992 ~1997)</p>	<p>적응기(磨合期) * 경제분야에서는 - 수출입교역액 총 금액에서는 4배 증가(63.7억불 → 236.9) - 대중투자 2.2 → 9.2 4배 증가 * 정치 및 군사 안보 - 국가 정상의 상호방문 진행, 상호 군 무관부를 설치하였으나 형식적 차원. - 한중 관계진전에 방해 되었던 기존의 전통적 구조적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으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당사자간 해결원칙 주장.</p>
<p>협력 동반자 (1998~ 2002)</p>	<p>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였지만 * 경제분야 교류 여전히 활발 - 1997-1998년 상대적으로 경제분야의 교류가 주춤, 이후 빠른 증가세 유지; 대 중국 수출입 비중이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서 2002년 13.1%까지 증가. - 2002년 대중투자 금액 21억불로 한국의 전체해외 투자(63.5억불)의 33.1%, 대미 22.2%를 훨씬 상회. * 정치 및 군사 안보분야 군사대표단들의 상호 방문으로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함.</p>
<p>전면적 협력 동반자 (2003 ~2007)</p>	<p>이 시기 양국의 협력은 보다 확대되어 실질적인 차원으로까지 심화,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졌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 * 경제분야 -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 2004년 한국은 중국의 제4대 교역상대국, - 2007년 대중 교역액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로 20%에 육박. - 대중투자는 다른 양상: 절대금액에서는 여전히 증가추세, 전체투자에서 대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 2003년 47.5%에서 2007년 23.7%까지 감소. * 정치 및 군사 안보 분야 - 2007년 군사합작인 개통에 합의, 제2차 북핵 위기 해결과정에서 양국은 해결수단에 대해 공통인식 하였던 것. 일부 학자들은 한중관계 발전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거론되었던 북한요인으로부터 중국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있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함. * 인적교류도 비약적으로 증가</p>

	특징과 추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2008 ~현재)	<p>양국관계 추이가 그동안과는 다른 양상을 띠</p> <p>* 경제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역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li> <li>- 대중투자는 현저히 감소세를 띠, 절대금액도 감소, 비중도 10%초반 대를 유지, 특히 2009년의 경우 8.8%. 이는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li> </ul> <p>* 정치 및 군사 안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호협력의 필요성은 주장하고 있으나 양국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li> <li>- 지도부의 상호방문 및 정상회담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많았고 협력의 동력도 많았지만, 핫라인 개설(2008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임,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양국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음.</li> </ul> <p>* 인적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교류로만 보면 최상의 상황이지만, 2010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83만 중 6.3만 명을 차지하는 중국유학생은 75%를 차지(4명 중 3명).</li> <li>- 유학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 개별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li> </ul>

- 위와 같이 수교이후 19여 년 동안 한중 양국관계는 계획과 전망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보여 왔으나, 여전히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특징을 보임.
-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전망해 볼 때 양국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함, 단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은 상당부분 동시에 양국의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협력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가 양국관계 발전의 명암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력 촉진요인
  - 지리적 근접성: 한중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짧은 기간이지만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직접적 동인으로 작용함;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던 중국은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 우호관계 유지를 위

해 노력하고자 함(물론 한반도 지역의 안정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차이가 있어는 것은 사실).

- 경제협력: 양국의 경제협력은 수교이후 현재까지 양국관계의 발전과 협력을 확대시키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 현재 나타나는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은 향후 당분간 양국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교육,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한류(韓流)현상과 한열(漢熱)현상은 양국의 유학생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향후 양국 협력 촉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북핵문제: '북한 핵 보유 반대'라는 원칙에 한중 양국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 '어떻게'라는 수단의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는 한 북핵문제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슈임.
- 동북아 안보기체 구축: 한중 양국 모두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지역의 안보기체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기체 구축에 양국의 협력이 절실할 것으로 사료되나 참여국 수준에 대한 논의와 이 지역 국가들의 상호신뢰가 전제가 필요함.

○ 협력 제약요인

- 한국 대중국 경제의존도: 교류하는 모든 국가 간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21.1%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1999/2000년 마늘파동과 같이 양국간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찾지 못하고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종결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 향후에도 한국에 미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적시에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역사문제와 문화적 교집합의 문제: 동북공정, 단오제, 한의와 중의, 한자 등의 역사와 문화 분쟁은 양국 각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가에 대한 정서적 반발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토 및 (EEZ)경계획정 문제: 한중 양국 간에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국정부의 공식입장이지만, 실제로 간도와 이어도는 잠재된 영토분쟁이며 해양경제획정의 문제로서 양국정부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폭발적인 후과가 우려되는 사안임.

- 북핵문제: 현 한국 정부와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이 상이하다, 때문에 북핵문제 대한 자국의 해결방안을 상대국에 강요할 때는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핵문제의 적절한 해결이 모색되지 않을 시에 초래될 파장, 즉 북한의 도발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통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입장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이지만 여기에는 통일한국이 최소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정부, 최대 친중 정부였으면 하는 실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중국은 또 한반도 현상의 변화로 올 수 있는 불안정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 도모를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력에 의한 통일도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력이 동원되는 통일과정에서 중국은 수수방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극적 지지자로 나서지 않을 것임.
  - 위협인식(동맹)과 상호신뢰의 문제: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자 역할로부터 지역강대국 부상역제 역할로 전환되고 있어서 만약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국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몹시 우려하고 있음; 결국 이는 한중 양국의 상호신뢰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한국 정부의 미국 경도 정책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관련 이슈,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어렵게 함;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처하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정책과 맞물려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제시한 한중 양국의 협력 제약요인은 해당 이슈가 갈등으로 부각될 때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국이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 상호간 이견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미중관계 속에서의 한반도





# 미중관계 속에서의 한반도

신종호 | GRI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 I. 문제제기

## II. 역사적 고찰

## III. 사례 분석

1. 한국전쟁과 미중관계
2. 북핵위기와 중미관계
3.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중미관계

## IV. 시사점 및 고려사항

[참고문헌]

## I. 문제제기

-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정치의 속성상 핵심변인은 국가간 역학관계임. 21세기 국제정치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음.
  -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들이 협력적 관계(cooperational relations)를 갖는 이유는 現국제질서가 자국에게 유리하고 유익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Ex: 19세기 유럽협조체제, 2차세계대전이후 ‘G-7’,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G-2’(?)]
  - 강대국과 약소국간 관계는 대체로 강대국이 주도하며, 강대국은 자국의 대외전략에 근거하여 글로벌·지역적 차원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약소국과 관계를 맺음[Ex: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1949년), 소련-바르샤바조약기구(1955년)]
  - 외교적 역량과 자원이 미비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외교적 지렛대를 가짐으로써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할 수는 있음. 그러나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포기’되지 않기 위해 결국 강대국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
  
-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美蘇냉전체제, 탈냉전기 미국패권,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美中관계(‘G-2’체제) 등과 같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음.
  -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갈등이 취약한 안보구조를 가진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고, 특히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중관계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미중간 협력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과 중국은 안정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위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혹은 강한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임.
  
- 21세기 글로벌 질서 변화 및 ‘G-2’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 한국이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직면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중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향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대중, 대미 외교전략 수립이 필요

## II. 역사적 고찰

□ 역사적으로 미중관계의 대립과 협력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핵심변수로 작용해 옴.

- 戰後 초기 美蘇냉전의 시작과 중화인민공화국 탄생(1949.10) 이후 미중간의 대립 시기
  -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한국의 미국 의존성 증대
- 周恩來/키신저 회담(1971.10)과 毛澤東/닉슨 정상회담(1972.2)을 통한 미중 데탕트
  - (저우언라이-키신저 회담: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 위험 감소, 그리고 (러시아, 일본 등) 다른 힘의 한반도 개입 방지라는 전제하에서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데 비밀 합의)
  -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남북관계 해빙모드 출현
- 미중정상회담을 통한 수교협상(1978.12)과 관계정상화(1979.1)를 통한 미중협력시대
  - 美 카터 정부, 주한미군 철수문제 제기(←중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
- 1980년대 소련 쇠퇴와 미국 국력 상승, 중국의 개혁개방의 지속 추진을 위한 對미 협력
  - 美: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재평가를 통해 군사원조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
  - 中: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 발전
- 1990년대 냉전 해체 이후 공동위협(소련)의 소실로 인해 미중 갈등/대립

국면 출현, 양국 모두 新국제질서 탐색을 위해 상호정책조정과 협조 모색  
(ex: 1997년 미중정상회담)

→ 美: 한미동맹 강화, 북한 붕괴 유도 포기 및 ‘관여’ 정책 강화,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지지, 1차 북핵 위기 타결

→ 中: 남북한 균형외교(Two Koreas) 실시 및 한중수교(1992.8)를 계기로 동북아에 서의 발언권 제고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 2000년대 비전통안보위협 증대 및 중국의 부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중 협력은 확대(→‘stake holder’), 반면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 차원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상존

→ 1, 2차 북핵위기를 둘러싼 미중 협력과 대립 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역할론’ 증대, 미중 정상회담(2009.11, 2011.1)과 ‘전략·경제대화(2009.7, 2010.5) 등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현실적·구조적 제약성을 상호인정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위주로 운용. But, 2010년 새로운 미중관계 출현

→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 2011년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질서 변화(G-2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 미중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위상과 전략적 가치 상승.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한국의 소외 가능성 ↑

### Ⅲ. 사례 분석

#### 1. 한국전쟁과 미중관계

- 한국전쟁 발발 당시 신생국으로서 국내외적 불안정 상황에 직면한 중국은 소련과 <友好同盟互助條約>(1950.2)을 체결하여 안보와 경제원조를 보장 받았으나, 오히려 중미 갈등은 격화

-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관심은 각자의 국가이익 구조에 따라 변

화해 옴. 특히 대만과의 통일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주변지역의 안보 위협 방지가 중요했던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전제조건은 바로 미군이 38선을 넘느냐의 여부였음.

- 중국은 한국전쟁 초기 한반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만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중시했으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및 10월 미군과 유엔군의 38선 통과 이후 중국국경에 대한 군사안보위협이 가시화되자 ‘抗美援朝, 保家衛國’을 위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
- 미국 역시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는 애치슨 라인의 선언(1950.1) 등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높지 않았으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참전을 결정하고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

- 국제질서변화⇔남북관계 : 戰後 냉전체제의 성립은 한국전쟁의 발발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전쟁 역시 美蘇양극체제 고착화 및 중미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전쟁 휴전협정(1953)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상태의 고착화에 합의했고, 이후 미중관계는 1970년대 말까지 적대관계를 지속하게 됨.

## 2. 북핵위기와 중미관계

- 북핵위기는 비단 한반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임. 특히 중국은 북핵위기를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위협이자 자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
- 중국은 북핵위기 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중국의 대외정책정책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정치·군사적인 비중이 여전히 높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는 바라지 않음.

- 중국은 특히 1차 북핵위기때와는 달리 2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는 바, 이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 강화라는 것을 새롭게 고려한 결과임.
  - 또한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대로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으로 다자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 특히 중국과의 관계 및 미국대외정책상의 고려 등으로 인해 북핵문제가 영향을 많이 받음.
- BDA를 통한 대북금융제재 논란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2006,10)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대북강경책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대북정책(일명 ‘젤리코 보고서’)을 모색
  - 2006년 4월 부시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북미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타진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결국 2006년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2007년 2.13합의를 이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결국 북핵위기는 남북관계 내부요인 보다는 외부요인(북미관계, 미중관계 등)에 따라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음. 즉, 남북한 양측은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중관계의 변화나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성을 보임.

### 3.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중미관계

- 천안함 사건은 남북내부의 문제로 출발했으나 결국은 ‘G-2’시대의 도래에 따른 글로벌 질서의 복잡성이 동북아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음



을 잘 보여주고 있음. 아울러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라는 점을 실증함.

-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중국 외교가 추진하는 ‘책임있는 대국’ 외교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사안임.
  - 중국은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한국정부에게 줄곧 과학적·객관적 증거에 따라 행동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자국의 한반도 전략 목표(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달성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음.
  - 한미 연합 군사훈련 계획이 공표되자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관리 외에 자국의 안보이익 보호 및 증진을 추가로 강조 → 천안함 사건은 남북문제가 아닌 미중문제로 전이
-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함께 대북 군사적·경제적 압박 정책 추진을 시사
  - 그러나 미국 역시 동북아에서의 전쟁상황으로의 발전은 반대했고, 미중 전략·경제대화(2010.5) 이후 클린턴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비핵화를 two-track으로 동시 추구하고, 북한의 방향전환을 위한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을 지적
  -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중국의 북한 지지입장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책임있는 글로벌 대국외교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미·중 협조체제가 순탄치 않음.
- 천안함 정국이 지속되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남북간 대립과 한중간의 미묘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고, 또한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동맹국인 한국과 북한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함으로써 한·미와 북·중간의 대결구도를 형성
- 천안함 사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해결과정을 보면 그동안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쳤던 주요 변수들도 복합적으로 작용

- 양국은 동북아에서 미·중간 전략적 협력 기조 유지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긴장 조성 행위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한반도를 이용해 자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우려
  - 중국은 ‘북한변수’로 인해 미중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不願함과 동시에 북한을 방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북 영향력 상실을 우려. 이로 인해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6자회담이나 미·중 협조체제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2010.7)의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가 여전히 강대국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잘 드러냄.
- 중국은 ‘천안함 사건’처럼 연평도 포격 사건 해결 과정에서도 원칙론적 입장(남북한 양측의 냉정과 자체 요구와 상황 악화 방지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과 함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회가 대안이라는 기존 중국 정부 입장을 확인
-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고립과 단절은 심화되는 반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요인에 의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경향성이 강해짐.
- 한미일 공조 체제 vs 북중러 관계 강화 등으로 인해 동북아에 新냉전이 도래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중관계 역시 손상
  - 북한의 대남 도발 이후 12월 중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의 중국 방문과 다이빙귀 대외연락부장의 남북한 동시방문,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 개최 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차례의 ‘전략 및 경제대화’를 통해 협력관계를 모색하던 미중관계는 2010년 ‘구글 사건’, 위안화 절상 및 무역불균형 문제, 남중국해 영토 분쟁, 그리고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갈등적 관계가 심화되었음.

- 이러한 미중갈등 구조는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한국에게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 방안 마련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남기고 있음.

#### IV. 시사점 및 고려사항

- 남북내부 요인으로 국제정치 및 남북관계가 변화한 측면도 적지 않지만, 냉전·탈냉전시기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 최대 변수는 외부요인임. 특히 미중간 대립과 협력 관계의 순환적 기복(ups and downs)은 한반도 및 남북관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침.
  - 미중간 협력적 관계 유지 시, 남북관계는 전체적으로 ‘협력 > 갈등’ 기조가 우세
  - 미중간 갈등적 관계 지속시 한국은 한반도 및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경험
-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 뿐만 아니라 한중협력도 갈수록 중요함. 즉,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전략에 대한 조정이 필요
  - 2011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과 중국은 사할적·핵심국가이익(주권, 영토문제 등)에서는 갈등의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상호간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큰 틀에서의 협력기조는 유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대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 한국이 강대국간 경쟁 혹은 갈등 심화 상황에서도 소위 ‘약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캐스팅보트(지렛대)를 쥐게 된다면 결국 한국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 즉, 미중 갈등 혹은 경쟁 심화된다고 해도 한국이 지렛대를 가지고 있을 경



우, 미국은 한국의 대중국 편승을 염려하여 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ex: 한미동맹 강화, 한미 FTA 체결 등), 중국 역시 미국의 동북아 시야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노력을 강화할 것임(ex: 북핵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한중 FTA 체결 노력 등).

□ 결국, G-2시대의 도래에 따른 글로벌 질서변화 및 2012년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첫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특히 미국과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도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취약한 안보구조를 감안하여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되, 중국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동맹이 역내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안보기제라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성이 있음.

- 향후 미중관계는 국제규범·가치관(인권, 민주주의) 및 글로벌 표준을 둘러싼 경쟁 혹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의 모호한 입장에 놓이거나 어느 일방에 대한 편승을 모색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생존공간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처할 경우 미중양국은 조율·타협을 통한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때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둘째, 현재 한국 내 중국문제에 대한 소위 ‘이중적 잣대’를 개선하고, 동시에 對중국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중적 잣대’: 지식경제부 등 경제라인은 중국의 최대 파트너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외교통상부 등 외교안보라인은 대미, 대북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

- 컨트롤 타워 구축: 한국의 對중국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 통해 우리의 대외전략에서의 중국 중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정부차원의 시의적절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 중국 정책 관련 조직과 인적 자원을 조직화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와 정보공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조정기구(가칭 ‘對중외교추진위원회’)의 신설이 고려되어야 함.
  - 아울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산하에 ‘중국小위원회’ 내지는 TFT를 구성하여 對중국 정책에 대한 감독과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셋째, 중국의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정책에 대한 냉정한 대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사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국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중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위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6자회담을 북한 비핵화보다는 동북아 긴장 완화를 메커니즘으로 활용
  -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한미동맹 및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변수를 활용하는 ‘균형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문제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함.
  - 우리의 틀과 시각을 통해 중국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입장이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사를 통해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함.
- 넷째, 중국의 새로운 성장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이 기존의 수출과 투자 주도의 성장전략 대신 소비에 기반을 둔 내수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여전히 생산기지가 대세이고, 대중 수출의 50%가 가공무역임.
- 중국의 내수시장화에 대비한 한국기업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업과 문화사업 분야의 개방에 대비해야 함. 또한 중국 정부주도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외교적 지원 체계 역시 필요함.

- 중국의 내수시장 본격화에 대비하여 대금회수와 지적재산권 분쟁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리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국내거주 중국인(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對중국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래의 親韓 세력으로 만들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전체외국인 유학생의 75%인 중국유학생에 대한 허술한 학사관리와 부실한 문화교류, 교수와 동료 학생의 차별,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이들 유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유학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어 능력에 따른 유학생의 수강 제한을 실시하고, 학과공부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ex: 교내 중국센터 설치, 단과대별 해당국 유학생 전담 조교 등) 및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내 취업 배려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21%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싸구려 관광’, 가이드와 해설사 수 절대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지나친 저가상품 판매 여행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재가 시급하고, 중국인 선호 관광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싸구려 관광’ 이미지를 극복함과 동시에, 중국어 전공 학생 및 국내거주 중국인 이주자(유학생, 결혼이주자 등)를 활용한 가이드 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부록] 역대 미중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한반도 문제

일시/장소	원 문	
2011/01/19 워싱턴	미·중	<p>The United States and China agreed on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underscored by the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19, 2005 and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oth sides expressed concern over heightened tensions on the Peninsula triggered by recent developments. The two sides noted their continuing efforts to cooperate closely on matters concerning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improvement in North-South relations and agreed that sincere and constructive inter-Korean dialogue is an essential step. Agreeing on the crucial importance of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n order to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iterated the need for concrete and effective steps to achiev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and for full implementation of the other commitments made in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DPRK's claimed uranium enrichment program. Both sides oppose all activities inconsistent with the 2005 Joint Statement and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two sides called for the necessary steps that would allow for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process to address this and other relevant issues.</p>
	중·미	<p>中美一致認為，正如六方會談“九·一九”共同聲明和聯合國安理會相關決議所強調，保持朝鮮半島和平穩定至關重要。雙方對近期事態發展導致半島局勢緊張表示關切。雙方注意到兩國在半島問題上保持了密切合作。中美強調改善半島南北關係的重要性，都認為朝韓開展真誠和建設性對話是非常重要的一步。鑒于半島无核化對維護東北亞地區和平與穩定至關重要，中美雙方重申，有必要採取切實有效步驟實現无核化目標，並全面落實六方會談“九·一九”共同聲明中的其他承諾。在此背景下，中美對朝鮮宣稱的鈾濃縮計劃表示關切。雙方反對所有違反六方會談“九·一九”共同聲明和相關國際義務和承諾的活動。雙方呼吁採取必要步驟，以盡早重啓六方會談進程，解決這一問題及其他相關問題。</p>

일시/장소	원 문	
2009/11/17 베이징	영문	<p>The two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he Six-Party Talks process and implementing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The two sides stated that they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 parties concerned to comprehensively achieve the purpose and overall goal of the Six-Party Talks through consultations and dialogues. The Chinese side welcomed the start of high-level conta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The two sides expressed the hope that the multilateral mechanism of the Six Party Talks would convene at an early date.</p>
	중문	<p>双方重申繼續推動六方會談進程并落實二〇〇五年“九·一九”共同聲明的重要性, 包括朝鮮半島无核化, 關係正常化及在東北亞地區建立永久和平机制。双方表示, 愿与有關各方共同努力, 通過協商對話, 全面實現六方會談宗旨和總体目標。中方對美朝開始高級別接觸表示歡迎。双方希望六方會談多邊机制早日重啓。</p>
1997/10/29 워싱턴	영문	<p>As two majo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ady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to meet various challenges and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promoting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Recognizing that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of great importance,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through the Four-Party Talks to help establish a durable peace on the Peninsula, and will continue consultations to this end. They also stress that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other important regions, including the Middle East, the Gulf, and South Asia.</p>
	중문	<p>中美作為亞太地區的大國, 愿加強合作, 共同對付面臨的各種挑戰, 為促進本地區的穩定與繁榮作出積極貢獻。双方認為, 維護朝鮮半島的和平與穩定具有重要意義, 双方通過四方會談推動建立半島的持久和平, 并繼續就此進行磋商。双方還強調, 維護中東, 海灣和南亞等重要地區的和平與穩定符合兩國的共同利益。</p>



일시/장소	원 문	
1972/02/28 베이징	영문	The U.S. side stated: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its close ties with and suppor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ek a relaxation of tension and increased commun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hinese side stated:(...) It firmly supports the eight-point program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April 12, 1971, and the stand for the abolition of the "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중문	中國方面聲明：(...)堅決支持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一九七一年四月十二日提出的朝鮮 和平統一的八點方案和取消“聯合國韓國統一復興委員會”的主張 美國方面聲明：(...)美國將保持其与大韓民國的密切聯系 和對它的支持；美國將支持大韓民國爲謀求在朝鮮半島緩和緊張局勢和增加聯系的努力. 美國最高度 地珍視同日本的友好關係, 并將繼續發展現存的緊密紐帶.

[참고문헌]

- http://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and-releases
-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
-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1/19/us-china-joint-statement
-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
-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788163.htm
-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627468.htm
-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7514.htm
- http://www.nti.org/db/china/document.htm
- http://www.nti.org/db/china/engdocs/commk72.htm
- http://www.nti.org/db/china/engdocs/commk79.htm
- http://www.nti.org/db/china/engdocs/commk82.htm
- http://www.nti.org/db/china/engdocs/uschst97.htm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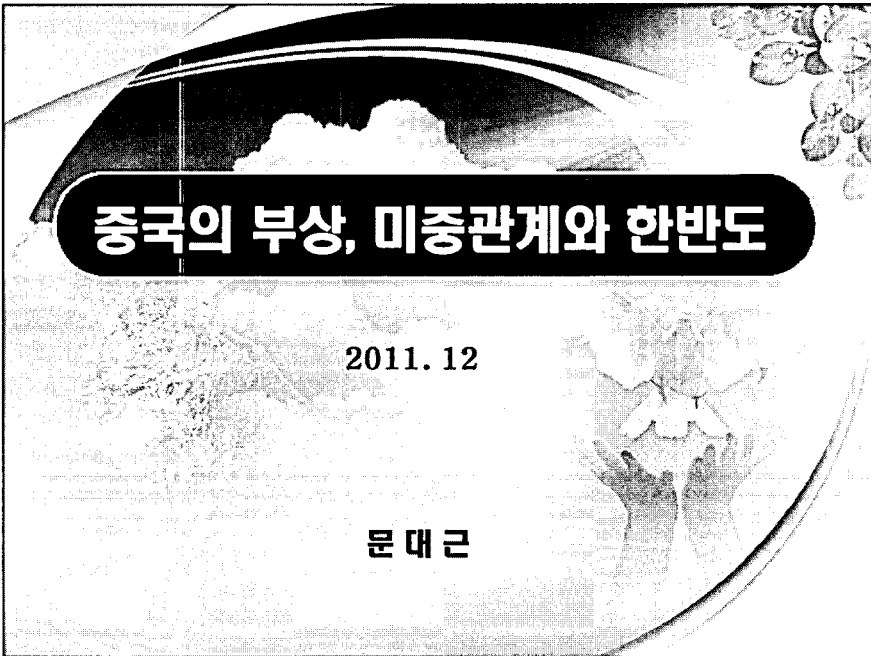
# 중국의 부상, 미중관계와 한반도



# 중국의 부상,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대근 |

- I. 개관
- II. 중국의 부상
- III. 미국의 상대적 쇠퇴
- IV. 미중관계의 현황·전망
- V.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 VI. 결론



# 중국의 부상, 미중관계와 한반도

2011. 12

문대근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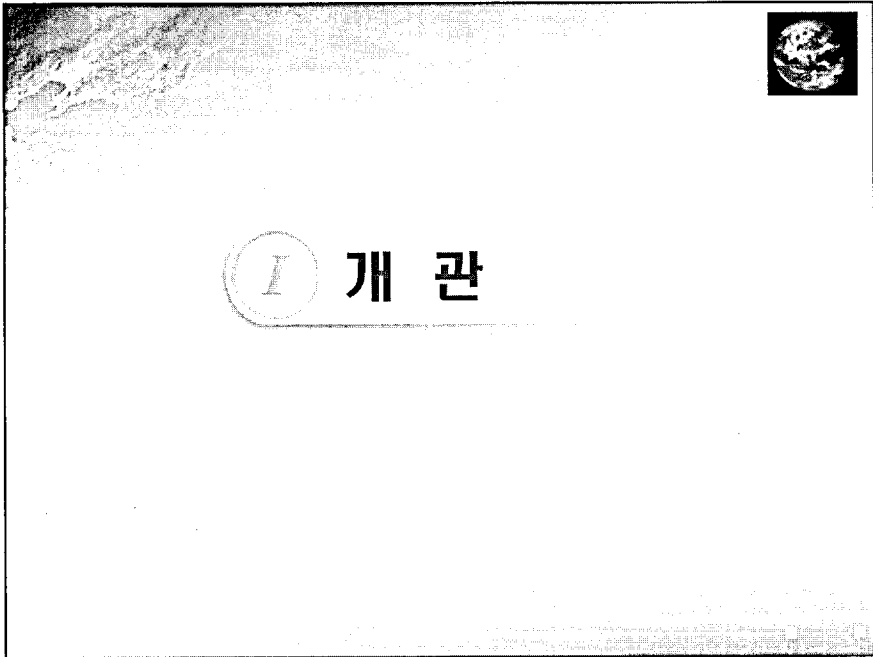
I. 개 관

II. 중국의 부상



III. 미중관계의 현황 · 전망

IV. 미중관계 변화의 영향

V. 맺음말



## 역사의 변화 발전

**사회** 수렵사회 ⇒ 농경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 ⇒ 녹색사회 ⇒  
 산업혁명 ⇒ IT혁명 ⇒ GT · NT혁명

---


**패권** 포르투갈·스페인(213년) ⇒ 영국(200년) ⇒ 독일(61년) ⇒ 미국(115년)  
 영국(방직기/증기기관) ⇒ 독일(철도/철강/전기) ⇒ 미국(석유/자동차/IT/GT) ⇒ 중국(?)

---

**강대국  
 흥망** 제조대국 ⇒ 무역대국 ⇒ 군사대국 ⇒ 금융대국 ⇒ 버블, 쇠락

※ 경제불황 주기 : 1929년 대공황, 1968년 오일쇼크, 2008년 금융위기 ※

## 자본주의 발전과정



18~20세기 초  
자유방임주의

- > 시민혁명
- > 산업혁명

1830~1870년  
수정자유주의

- > 1, 2차 세계대전
- > 30년대 세계공황
- > 공산주의 출현

1870~2000년  
심자유주의


- > 공산권 붕괴
- > 금융자본주의
- > 카지노자본주의

2000년  
P


- > 양극화
- > 승자독식
- > 시장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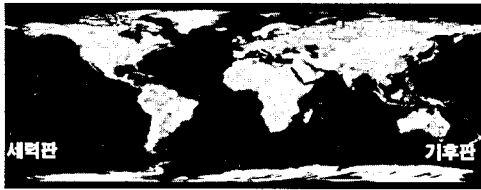
**正 + 反 = 승의 진화·발전**  
**공존의 숲, 따뜻한 사회를 지향**





## 세계판 구조의 변화





■ G20 회원국

G5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G6  
이탈리아

G7  
캐나다

G8  
러시아


G13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G20  
한국 호주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 EU의장국

G7 · G8 ⇒ G20 · BRICs ⇒ G0


The Rise of the Rest

西유럽에서 東아시아로 !






## 중국의 부상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13억의 인구,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영토에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알기 어려운 나라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나라다.


중국은 역사가 유구한 대국이며, 개발도상국이자 가장 오래된 젊은 나라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13억으로 곱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아무리 큰 경제규모도 13억으로 나누면 평균수준은 매우 낮다.  
침단과 원시가 공존하는 나라, 벤츠 옆에 우마차가 지나가고,  
인력거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나라가 오늘의  
**중국이다.**



## 1. 경제적 부상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성공**
  - 20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3% 고성장
- **경제대국 (G2)**
  - 1989~2009 시장규모 11배 증가
  - 2008~2010 사이 세계 경제성장의 약 40% 담당
  - 경제규모 세계2위, 외환보유액, 교역총액 각 3조\$, 미국국채 1조1,080억\$ 보유
  - ※ 미국인들은 세계경제 대국으로 47%가 중국, 31%가 미국을 지목(2011, 퓨리서치)
- **세계의 공장 ⇒ 세계의 시장, 투자자, 규칙 제정자**
  - IMF 의결권 재분배, 新기축통화 도입, 금융자본 통제 강화, 해외투자 증대
  -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적 영향력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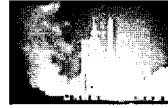
## 2. 군사적 부상



### □ 군사비 급증

- 세계 2위 (실제 1,050-1,500억\$)

\* 미국보다 20-30년 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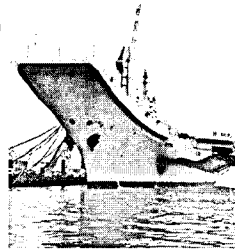


### □ 무기 현대화 : J-20, 항공모함, 위성요격(風雲1)

### □ 핵무기 425개 보유

### □ 군사작전능력 향상

- 통합적 적극방어 (新時期國家軍事戰略方針)



###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특히 對 항공모함 요격능력 (동평-25) 개발에 주력

## 3. 소프트파워



### □ 규범력·문화력 증가

- 중국모델 (中國模式 : Beijing-Concensus)

- 중화문명 (유가사상) : 각국에 孔子學院 설치·운영

- 외교력 (韜光養晦, 有所作爲, 和平發展, 負責任大國, 和諧世界 등)



### □ 아직 미국, 일본에 뒤짐

- 인권, 법치의 문제도 상존

### □ 軟性力을 통한 中華復興·強漢盛唐 추구

대내 : 민족적 자긍심·자신감, 응집력이 고조  
 대외 : BRICs 대표주자, 지역·경제면에서 주도적 위상 확보

## 4. 평가



### □ 중국의 부상은 중국 특색, 세계화, 신자유주의 산물

- 인구 대비 자원 부족(개방), 제2-4세대 지도부의 일관성·리더쉽 등이 견인
-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중국의 '세계의 공장·시장·은행'화를 촉진

### □ 세계금융위기,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맥락에서 부각

\* 현재 국민 1인당 GDP는 4,382\$ (미국 47,000\$의 1/10 수준)

### □ 불균등성 (경제강국), 지역성 (지역강국), 취약성이 특징

- 최대 개발도상국
- 많은 내부문제 (압축성장과 일당독재, 다민족국가의 모순 등) 상존

**내부적으로 조화·발전, 대외적으로는 평화·협력 추구**

## 4. 평가



### □ 중국 부상은 지구적 중요성을 갖는 국제정치 담론의 핵심 화두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으나,  
 1989년에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

###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부상이 세계를 흔들고 있음 (중국 영향론)

- 고임금국가(서구)의 제조업 공동화→ 실업 증가→ 경제 침체→ 부의 양극화.
- 절대 빈곤층화·청년실업 급증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 야기
- \* 나폴레옹·잠자는 사자(중국)를 깨우지 말라, 세계가 흔들리게 된다.

### □ 급부상은 중국인들에게도 이중적 자기규정의 모순을 안겨줌.

- 최대 개도국임을 강조, G2 개념 거부



## 미중관계의 현황 · 전망

### 1. 미중관계의 변천



1950  
-1960

미국은 中蘇연대 차단에 주력, 대만정책 (에치슨선언) 발표  
- 한국전쟁 이후 20여년간 적대관계 유지(미, 대중봉쇄), 중소분쟁

1970  
-1980

미중화해, 수교  
- 以中制蘇, 안보협력

1990  
-현재

주기적인 갈등과 협력 지속  
- 소련의 붕괴, 중국의 가치 하락, 갈등 증대, 중국위협론 대두  
- 경제면에서 Chimerica(China+America), 군사안보면에서 갈등·대립  
\* 일일 10억\$ 상당의 상품 거래

※ 양국관계는 흑백도, 친구도, 경쟁자도 아닌 복잡한 관계 (1.14, 윌러리) ※

## 2. 현황



### □ 양국관계 본질 : 상호 대화·협력하는 가운데 견제·대립

- 현재는 상호 협력이 양국에 이익이라는 점을 공유(同舟共濟)
- 민감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마찰 지속(同床異夢)
- \* 민감: 남중국해, 대만, 무역불균형/위안화 절상, 북핵(북한), 자원 확보, 인권 등

### □ 미국: 아직 최강의 군사·과학기술, 창의력 보유, 주요문제 결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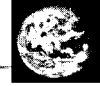
### □ 중국: 신중하게 실력을 배양, 우군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 추진

- 韜光養晦, 4不(不霸權, 非同盟, 內政不干涉, 不當頭)정책, 和平發展 견지
- 문명적 대안으로 공자사상과 베이징 컨센서스(북경모델)도 준비

### 전면 대결·충돌 가능성이 희박, 翻而不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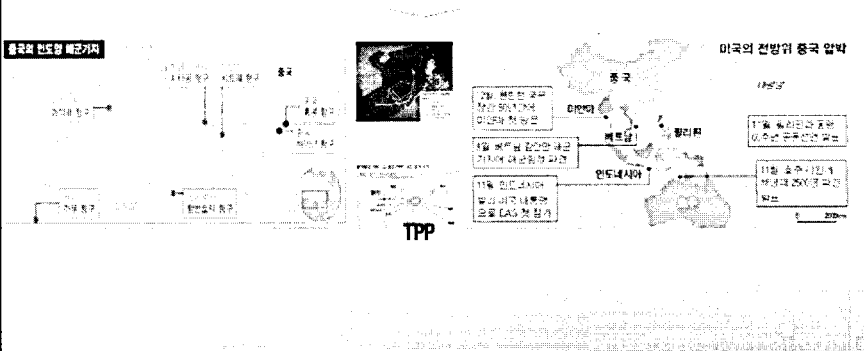
- 상호 공포의 핵·경제·재정균형으로 생존과 번영이 연계 -

## 2. 현황



### □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의 해양대국화 적극 견제 (갈등의 요체)

-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주력,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 추진
- 미국은 미일/미호동맹 강화, 동남아국가들과 군사협력 (균형자 역할) 모색



### 3. 전 망



□ **향후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

- 미국이 현재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 중국의 전진이 어떤 양상과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

□ **최근 미국 패권시대의 균열, 경제적 부-권력이 중국으로 이동**

- 그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보다 갈등·대립 불가피
- 현재 본격적인 세력전이 조짐-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향후 양국관계는 갈등·균형·협력·해장이 혼재된 형태로 전개**

- 구조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양국간 힘의 배분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①현상유지(미>중)  
→②전략적 협력관계(미=중)→③적대적 경쟁관계(미<중) 예상
- 상당기간 협력·공존하는 양극체제(Pax-Chimerica = BI-gemony) 예상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는 파괴적 세력전이 (패권전쟁) 불용**

- 이데올로기 중심의 진영재편, 신냉전체제 형성 가능성 희박 -



## 미중관계 변화의 영향

## 1. 개황



### □ 미중관계의 변화는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

### □ 세계의 무게중심인 동아시아에서 양국이 세력경쟁

- 미국: 아시아로 회귀, 역내 동맹·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중국 견제)
- 중국: 주변지역의 핵심이익을 강조, 군사력 및 대북·대러관계 강화

### □ 미중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한반도에서 경쟁이 치열

- 한반도의 전략적·지정학적 중요성이 배가
- 양국은 한반도문제 접근 시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고려

☞ 안미동맹 강화 → 북중동맹 강화

## 2. 남북한관계



### □ 미중관계 우호 = 남북한관계 개선

- 7.4공동성명(태탕트), 기본합의서, 6.15, 10.4선언(탈냉전)

### □ 남·북한은 미국·중국간 상호 봉쇄·견제의 최전선화

- 미중간·남북간 갈등이 구조화
- 한반도에서 냉전적 긴장 지속
- \*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가 미중간의 게임의 장임을 확인



### □ 향후 북핵·미중관계 악화 시 한반도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

- 미시적·국지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것
- 예: 미국의 '殺鷄(북한)嚇猴(중국)之計'



### 3. 한중관계



#### ▶ 경제 면에서는 발전 지속

- 중국 진출 한국기업 : 3만여 개
- 교역액 : 1,900억\$ (450억\$ 흑자)
- 연간 600여만 명 왕래 ('10년)

#### ▶ 정치·안보 면에서 갈등, 소원

- 대북정책 갈등, 반중·반한 정서 ↑

한국은 중국의 북한 편향, 중국은 한국의 미국 편향 비판

### 4. 북중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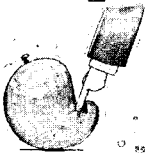


#### ▶ 한미동맹 강화에 대응, 밀착

- 정부 주도의 전략적 경험 추진
  - \* 황금평/신의주·나선지구 공동개발·관리
- 교역액 : 34억\$ ('10년)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 83%

#### ▶ 정치·안보 면에서 포괄적 협력

- 金 3회 방중·肅亡肅寒 관계 복원



풍선효과 : 한반도 내 구심력이 약화되고 원심력이 증대

- 남북한통합 보다 북중통합이 진전? -



# V 맺음말

## 어떻게 할 것인가?



### 대내

- > 정보실때 답습 ×  
- 壬亂·胡亂·6.25
- > 中堅國의 자신감  
- 균형·실리  
- 주도

### 대북

- > 대북 지렛대 ↑  
- 대화·협력
- > 한반도 정치력 ↑  
- 자율성 ↑  
- 구심력 ↑

### 대외

- > 聯美通中  
↓
- > 聯美和中  
↓
- > 聯美聯中

### 정부

남북대화채널 확보, 긴장완화, 통일준비, 평화·상생공영 통일 추구

##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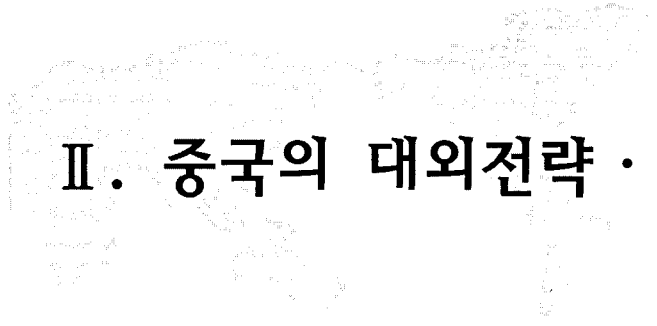
- 현재 세계의 판구조(국제질서) 변화가 진행 중 -  
역사적 안목과 외교적 통찰력으로 큰 정세의 흐름을 파악,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물줄기를 터나가야 할 때

**국제정세 변동 과정에서 기회의 창을 여는 지혜 필요**  
북한주민들이 주저 없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길

우리의 소원은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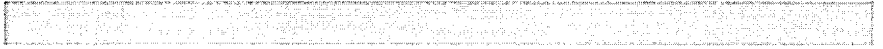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 Ⅱ. 중국의 대외전략 · 정책





# 11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북아 안보:  
군사력증강 현황과 파급영향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북아 안보: 군사력증강 현황과 파급영향을 중심으로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I. 서론
- II. 중국의 대외안보환경과 군사전략
  1. 중국의 대외안보환경 인식
  2. 중국의 군사교리와 전략
- III. 중국의 국방비와 군사력 증강 현황
  1.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추이
  2.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
- IV.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파급영향
- V. 결론: 시사점과 대응방향

[참고문헌]

## I. 서론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급속히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 대륙에 대한 反접근 및 접근 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능력 강화, 정밀타격능력 향상, 핵 억지력 강화, 원거리 공정작전능력 확충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군은 군사전략의 변화, 첨단무기의 확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전략은 이른바 'G2시대'에 걸맞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관계를 보다 가시적 차원에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대만문제로 인한 양안(兩岸)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전력균형을 꺾으로써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으로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기존의 경제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군사력 증강현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강대국(great pow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상(rising)의 현실은 이제 '경제영역'을 뛰어넘어 '군사영역'에서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사력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강대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강대국의 지위는 대체로 상대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결정 된다"<sup>2)</sup>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다.

한편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실존의 영역으로 다가갈수록 그에 따른 파급영향에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은 동

1) Jonathan D. Pollack, "The Changing Political-Military Environment: China," Zalmay Khalilzad (ed.),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1), pp. 137-161.

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p. 5.

아시아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세계대국의 부상은 먼저 그 나라가 위치한 지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장악하며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오늘날 동아시아를 바라봄에 있어서 세계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도약대’이자 ‘발판’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하다.<sup>3)</sup>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될 경우 한중관계의 심각한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상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는 첫째, 군사문제를 다루고 해석하는 데 필요시 되는 비교적 특수한 전문성의 요구 둘째, 중국의 군사력증강이 최근에 들어서야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 셋째, 관련분야의 전문연구인력 부족과 자료 습득의 난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필자 역시 중국 군사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 군사력 증강 현황과 그에 따른 파급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사성과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II. 중국의 대외안보환경과 군사전략

### 1. 중국의 대외안보환경 인식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대외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있어서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자체의 국가발전 목표에 조응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외정세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국방백서를 보면 중국은 2010년대를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간주하면서 중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략적 경쟁’은

3)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葉自成, 『中國大戰略』(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p. 307; 門洪華, “中國東亞戰略的展開,” 『當代亞太』 2009年 第1期, pp. 54-55;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6권 2호(2010), p. 36 참조.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위기 및 군사적 과도 신장에 따른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현상이 뚜렷해지는 반면 중국의 부상과 G20 등 중급국가들의 약진이 반영되면서 국제질서는 다극화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중국은 중국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을 불가분의 관계로 상정하면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따른 '대외적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부는 국가안보상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대만과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국경문제와 영토분쟁 가능성, 해상보급로에 대한 위협, 초국가적 위협, 그리고 주변 지역의 불안정 가능성 등 잠재적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sup>5)</sup>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봉쇄로 인한 위협이다. 중국은 언제나 자국이 미국의 '평화적 전이(和平演變, peaceful evolution)' 전략과 봉쇄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줄곧 인권과 종교자유를 명분으로 '티베트(西藏)'나 '신강(新疆)'의 분리주의를 자극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또한 인민폐 환율과 금융개혁 등 경제무역문제 등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통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은 1997년 이후 4년 주기로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QDR에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최대 잠재적 군사 도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군사전략의 중심을 아시아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에 발표된 2010년 QDR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지칭하는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면서 특히 중국의 우주군사력 증강을 통한 위성공격과 사이버공격 능력의 향상이 국제질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6)</sup> 따라서 중국지도부는 비록 최근의 중·미 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방향

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0年中國的國防』(北京: 人民出版社, 2011).

5) 劉靜波 主編, 『21世紀初中國國家安全戰略』(北京: 時事出版社, 2006), pp. 70-77.

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qdr/>

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중국은 대만 및 티베트, 신장 등 '분리 독립주의' 위협의 직면과 더불어 남사군도(南沙群島) 등 일부 영토분쟁지역으로 인한 '국가영토주권'에 대한 위협을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개입여부에 달려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적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 '대만을 통한 중국 억제(以臺制華)'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sup>7)</sup>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2010년 1월 미국 의회에 약 64억 달러 상당의 對대만 무기판매계획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미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4개항의 대응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sup>8)</sup> 한편 국경문제 및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은 대표적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분쟁 중에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중국의 해양권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셋째, 중국은 주변 환경의 불안정이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2009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6자회담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더욱이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sup>9)</sup> 또한 동북아 6개국의 군사비는 세계 군사비의 55%에 이르는 등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 안보불안 요소의 상존은 중국에 대하여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검색일: 2010.5.31); 한편 QDR내용에 관한 국내에서의 분석은 정철호, "미국 2010년 QDR과 대한반도 정책함의," 『정세와 정책』 2010년 3월호, pp. 5-8 참조.

7) 楊毅, 『中國國家安全戰略構想』(北京: 時事出版社, 2009), p. 261.

8)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를 전후한 2010년 미중갈등에 대해서는 박병광, "미·중 외교갈등의 함의와 전망," EAI Issue Briefing No. C2010-01 참조.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0021818471611.pdf](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0021818471611.pdf) (검색일: 2010.5.28).

9)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國際戰略與安全形勢評估』(北京: 時事出版社, 2011), pp. 113-129.

이밖에도 중국은 현대 전쟁양상이 변화하고 주요 국가들이 군사혁신(RMA)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군사 분야에서의 첨단기술력 차이는 중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미국의 국방변환과 일본의 방위체계 혁신, 그리고 ‘강한 러시아’의 재부상 등 주변국의 군사동향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최근의 세계화, 정보화 추세로 인해 안보대상과 영역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위 ‘비전통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중국은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와 2001년 9.11테러 이후 경제안보, 인간안보, 환경안보,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로 ‘포괄안보’와 ‘협력안보’, ‘공동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 2. 중국의 군사교리와 전략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이룩해야만 한다는 역사적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방대한 영토와 상이한 전장 환경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군사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그럼에도 중국의 군사전략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그것이 기존의 군사전략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폐기했다기보다는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혼재된 상황에서 내용 및 중점을 충실(充實)하고 세련되게(完善)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중국 건국 초기의 군사전략(교리)은 ‘인민전쟁론’으로서 이는 자국의 최강

1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0年中國的國防』(北京: 人民出版社, 2011).

11) 중국군에 관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학자들 간에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샴보(David Shambaugh)는 ‘적극적 방어’라는 개념을 중국의 군사전략으로 간주하는 반면 프래블(Taylor Fravel)은 ‘첨단기술조진하 국부전쟁’을 중국의 군사전략으로 본다. 그리고 핀켈스타인(David Finkelstein)은 중국이 군사전략에 관한 공식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지도부가 제시해온 ‘군사전략방침’을 일종의 국가군사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제32권 3호(2008), pp. 54-55.

12)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태호 외, 『중국의교연구의 새로운 영역』(파주: 나남, 2008), pp. 79-82 참조.

전쟁요소인 인구나 국토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장기적 소모전과 전면전을 전제로 미국과 소련의 대중국 침략을 방어한다는 전략이었다. 인민전쟁론의 핵심은 시간을 벌기 위해 공간을 양보하다가 마침내 가상적(미국, 소련)을 격멸한다는 게릴라전 수행에 있으며 저기술 무기의 다량 확보와 대규모 병력의 유지가 필수요소였다. 그러나 인민전쟁론은 개혁개방에 따른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병력, 조직, 무기감축 등 군의 현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1970년대 말 이후 쇠락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은 早期戰, 全面戰, 核戰에 대비한 전력태세에서 국경지역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 국지전에 대비한 '유한국부전쟁(有限局部戰爭)'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유한국부전쟁전략은 1985년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상정하는 미래전은 초강대국의 대륙침략이 아닌 주변국이 연루된 국경지역 내외에서의 국지전을 의미한다. 중국군이 규정하는 국지전은 한국전쟁(1950), 베트남전쟁(1979), 걸프전쟁(1991), 이라크전쟁(2003)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까지 '유한국부전쟁'에 기초한 현대전 경험이 없으나 이 전략은 중국군 현대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중국지도부는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미래전의 성패가 첨단 군사기술의 획득 및 운용에 있다고 판단하여 1993년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高技術條件下的局部戰爭)'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특히 대만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주요한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 현대화는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확보 및 미국의 對대만사태 개입 저지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지상군의 신속대응능력, 해군의 적극적 근해방어능력, 공군의 원거리 투사능력, 핵·미사일 전력의 기술수준 제고 등 전반적 군 현대화의 기본 독트린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들어 중국은 정보전 능력과 중국적 특색의 전략 결합을 강조하는 미래의 새로운 전장 운용개념으로서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 전략'을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여전히 제한된 국부전쟁을 상정하고 있지만 미래의 적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고도의 무기체계와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능력, 나노기술 등을 보유한 강대국일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군사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포함하여 우주전 능력, 사이버전 능력, 심리전 능력제고, CAISR체계 구축, 항공모함 구비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sup>13)</sup>

현재 중국의 군사전략은 1993년 제시된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교리와 2004년에 『국방백서』를 통해 처음 제시된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교리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4)</sup> 결국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서구의 정보화에 편승하고 따라잡겠다는 ‘도약(跨越)식’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표 1>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

시 기	주요사건	군사전략	비 고
건국초기 (1949-1952)	한국전쟁(1950-1953)	인민전쟁전략	인민전쟁전략의 한계성 인식
1차5개년 계획 (1953-1957)	중·소 우호조약(1950) 중·소 국방신기술협정(1957)	인민전쟁전략의 후퇴와 현대화·정규화사상 대두	소련의 적극적 지원 군사제도에 의한 개혁 시도
대약진운동 (1958-1965)	금문·마조도 위기(1958) 중·인 국경분쟁(1962) 핵실험성공(1964)	인민전쟁전략으로의 복귀	중·소관계 악화 모택동 혁명화 강조 인민전쟁 복귀 핵무기계획 추진 정규화노선 대두
문화대혁명 (1966-1976)	중·소 국경분쟁(1969) 임표사건(1970)	현대적조건하 인민전쟁	모택동 군중노선 추진
개혁·개방시기 (1980년대)	중·월 전쟁(1979)	유한국부전쟁전략	등소평/개혁파 등장 국경지역의 소규모 국지전 대비
1990년대	걸프전쟁(1991) 코스보전쟁(1999)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	첨단무기체계 및 고도의 군사과학기술이 운용 되는 지역전 대비
21세기 초	아프간전쟁(2001) 이라크전쟁(2003)	정보화조건하 국부전	첨단무기체계 및 고도의 군사정보기술이 운용 되는 미래전 대비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83.

13)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88, Issue 1(Jan/Feb 2009), p. 33.

14)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에서 ‘정보화(信息化)’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02년 국방백서부터이며,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군사혁신(新軍事變革; RMA)’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국방백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자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 국방(defensive defense, 後發制人)’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방어는 ‘소극방어전략’이 아니라 ‘적극방어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5)</sup> 적극방어의 핵심요소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주권과 영토 내의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의 공격시에도 방어에서 나아가 적극적 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반접근 및 접근거부(A2/AD)전략의 발전이다. 즉 중국은 일단 유사시 미국의 지원전력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에 전개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탈취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대만을 공격하는 동안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활주로를 미사일로 타격하여 미공군의 즉각적인 출동을 방해하는 한편 우주공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위성을 파괴하여 C4ISR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2010년 QDR에서 중국의 A2/AD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군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sup>16)</sup>

### Ⅲ. 중국의 국방비와 군사력 증강 현황

#### 1.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추이

중국의 국방비에 대한 평가는 군사력과 현대화의 추세 및 군사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은 국방예산의 투명성이 낮고 관련자료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은 자국의 국방비가 23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제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전력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한다.<sup>17)</sup> 그럼에

15) 적극방어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pp. 59-62 참조.

1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검색일: 2010.5.31).

17) 그러나 중국의 공식국방비에는 군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인민무장경찰예산, 무기 구매예산, 인민해방군 자체수입(무기판매수익, 상업 활동이익 등) 등이 누락되어 있다.

도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매년 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효과가 군사력 강화로 전이되기 시작했다. 즉 경제력은 군사력 증강의 가장 중요한 물질 토대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발전의 파급영향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 분야에도 직접적인 작용을 미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18)</sup>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군사비가 상대적 수준은 물론 절대적 수준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국방비는 2000년 279억 달러에서 2008년 601억 달러, 2010년 786억 달러, 2011년 91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국 국방비는 2007년 일본을 추월하였고, 2008년 영국을 추월하였으며, 2009년에는 미국 국방비인 6,6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에 달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국방비 규모를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과거의 국방백서와 달리 최근에 발표한 ‘2010 국방백서’에서는 일본 등 주변국가와 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1989년 이후 2009년까지 해마다 평균 두 자리 수로 증가해왔다. 국방예산 규모만 본다면 세계 1위인 미국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이미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을 추월한 상태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이 예외적으로 2010년에 한자리수인 7.5% 증액에 그쳤던 것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았고 민생을 고려한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중요한 국방예산을 국방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회의적 시각을 견지한다. 예를 들면, 중국 군사력에 대한 미 국방부의 의회 연례보고서는 2009년 국방비가 중국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755.6억 달러가 아니라 그 2배에 달하는 1,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방예산에서 연구 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항공모함 건조비용과 같은 구체적인 국방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sup>19)</sup> 2010 국방백서는 중국 국방비의 사용 구분을 병력유지비,

18) 모든 강대국에게 있어서 군사력 강화의 원천은 경제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ch 3 참조.

19) Robert Meginnis, “China Masking Huge Military Buildup,” April 5, 2011, <http://www.china-defense-mashup.com/?s=China+masking+huge+military+buildup> (검색일:2011.4.25)

교육훈련비, 장비비로 구분하였으며, 국방비 증가가 부대 근무지원 조건의 개선, 다양한 국제적 군사임무의 수행, 첨단기술 무기장비의 구매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원가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는 많은 첨단무기 체계와 장비 등에 중국이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건설한 첨단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sup>20)</sup>

<표 2>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1988-2011)

단위: 億元(인민폐)

연도	인민폐	전년대비 증감율(%)
1988	217.96	+3.90
1989	251.46	+15.37
1990	290.33	+15.47
1991	330.29	+13.76
1992	377.89	+14.41
1993	432.48	+14.44
1994	550.62	+27.32
1995	636.72	+15.64
1996	720.06	+13.08
1997	812.57	+12.84
1998	934.72	+15.03
1999	1,076.70	+15.19
2000	1,197.96	+11.27
2001	1,411.56	+17.83
2002	1,660.00	+17.60
2003	1,850.00	+9.6
2004	2,123.00	+11.6
2005	2,440.00	+12.6
2006	2,838.00	+14.7
2007	3,509.21	+17.8
2008	4,177.70	+17.6
2009	4,806.86	+14.9
2010	5,321.15	+ 7.5
2011	6,011.00	+12.7

20) 미국의 이러한 비판은 미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중국의 군사력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거의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 2.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

중국은 군현대화 전략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는 2010년까지 정보화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2단계는 2020년까지 기계화를 완성하고 정보화의 가시적 성과를 이룩하며, 3단계는 21세기 중반까지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우선 향후 10년 동안 병력을 23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상비 병력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항공모함도입, 5세대 전투기 개발, DF-21C 탄도미사일개조, 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 강화 등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군 정보화와 첨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sup>21)</sup> 아래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을 주요 부문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해군력 증강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해군력 현대화’이다.<sup>22)</sup> 오랫동안 낙후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중국 해군은 다방면에서 현대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연안 해군에서 탈피해 태평양과 인도양의 일정 범위에 대한 해양통제를 염두에 둔 ‘이양전략(二洋戰略)’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은 전략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신형 구축함 등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해군력 현대화 과정에서 원양작전능력 및 효과적인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를 위해서 그 동안 항공모함 보유 의지를 꾸준히 표출해왔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 마침내 최초의 항공모함 시험운항에 들어간 바

21) 한편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최근 발표한 ‘국가 군사전략보고서’에서 중국군 현대화의 규모와 전략적 목적, 우주와 사이버공간·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강한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February 8, 2011) 참조. <http://www.au.af.mil/au/awc/awcgate/nms/nms.pdf> (검색일: 2011.2.10).

22)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준, “동아시아 해군력 현대화 추세와 전망,” 『국방연구』 52권 2호(2009), pp. 3-37; James R. Holmes and Toshi Yoshihara,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Naval Institute Press, October 2010) 참조.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우크라이나에서 1998년 구입한 미완성 항모 바랴그(Varyag)를 개조한 것으로서 바랴그는 옛소련이 건조하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에 넘겨진 쿠즈네초프(Kuznetsov)급 항모이다. 일반적으로 쿠즈네초프급 항모는 대략 6만t에서 6만5000t 규모로서 바랴그호는 증기터빈 엔진을 장착했으며 갑판길이 302m, 최대속력 29노트로서 승무원 1960명이 탑승 가능하고, 항공기 50대 가량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3)</sup> 중국은 항공모함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고 아시아 해역 전체에 걸친 작전능력을 보유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에 따른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등 주변국들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항공모함과 더불어 중국의 해군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잠수함전력이다. 미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위협적 수준으로서 핵잠수함을 포함 최소 6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척씩 첨단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잠수함 탑재 핵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자체 개발한 최신예 진(秦)급(SSBN) 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사정거리 8,000km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취랑(巨浪)Ⅱ’를 구비하고 있다.<sup>24)</sup>

이외에도 중국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 21척 가운데 11척은 1950년대 이후 취역한 노후화된 함정이지만 다른 10척은 1990년대 이후 도입한 것으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을 포함하여 최신형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신 함정은 그 이전의 함정에 비해 대공·대함 및 대잠능력이 보강되었고 항속거리가 약 1.5배 정도 증가되어 원거리 작전능력이 강화되었다.

## 2) 공군력 증강

중국공군은 “공방겸비(攻防兼備) 현대공군”이라는 전략개념에 따라 최근 들어 더욱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sup>25)</sup> 1990년대 중

23) 『중앙일보』 2011년 7월 28일.

24)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p. 17.

25) 최근 중국공군의 현대화과정에 대해서는 조관행·홍성표, “중국 군사혁신(RMA)에 따른 중국공군 현대화와 한국공군에 주는 함의,” 『현대중국연구』 제12권 2호(2010), pp. 1-40 참조.

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생산된 항공기는 대부분 1950년대 소련기술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J-10과 같은 첨단항공기를 생산하고 Su-27과 Su-30과 같은 제4세대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F-16에 버금가는 전투기 J(殲)-10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2006년부터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인 J-15 역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u-33을 모델로 하여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세대 또는 제3세대에 불과하던 중국공군이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에 제4세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것은 금년 1월 중국이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시험비행 성공사실을 미국무장관의 방중에 맞춰 공개했다는 사실이다.<sup>26)</sup> 뿐만 아니라 중국 관영 CC TV는 지난 4월 초 중국이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수직 이착륙기 J-18의 시험비행을 실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sup>27)</sup> 중국의 잇따른 5세대 첨단 항공기 개발에 대해 중국이 2020년이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하던 미국은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은 그들의 군사기술이 미국의 턱 밑까지 따라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J-20의 경우 아직 미국의 F-22레퍼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군의 공중 전력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2009년 실시한 '건국 6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조기경보기 '공경(空警)-2000'과 공중급유기 '홍유(宏油)-6' 등의 면모를 드러냈으며, 2010년 11월 주하이(珠海)에어쇼에서는 항모킬러 미사일인 사정거리 1100km의 '창젠(長劍)-1' 대함미사일과 무인폭격기(WJ-600)를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첨단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핵심이익(core interest)' 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공중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군과 연계하여 도련선(island chain) 범위 내에서 적의 공중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8)</sup>

26) "후진타오, 스텔스기 젠-20 15분간 날았다," 『조선일보』 2011년 1월 12일.

27) "중 수직이착륙기도 개발," 『동아일보』 2011년 5월 4일.

28) Kenny Fuchter, "Air Power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Air Power Review*, (Winter 2008), p. 6.

### 3) 우주군사력 건설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반(反)위성무기(ASAT)체계의 개발과 자체적인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北斗)’ 구축,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우주군대(天軍)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중국이 우주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추진성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sup>29)</sup>

특히 반위성무기(ASAT)의 경우 중국은 지난 2007년 1월 11일 지상에서 KT-1 미사일을 발사하여 865km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기상위성 ‘평원-1C(FY-1C)’를 격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sup>30)</sup> 이를 통해 중국은 탄도미사일로 정확하게 우주공간의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반위성무기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을 뿐 아니라 우주무기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독점을 마감하겠다는 중국의 장기적 포부를 확인시켜 주었다. 중국은 반위성무기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통신첩보수집, 전장감시 등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우주자산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왜냐하면 반위성무기에 의해 미국이 첩보위성이나 정찰위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결국 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의 상실 역시 군부대에 의한 지휘통제 능력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항법위성(GPS)의 상실은 군사력의 이동, 항공모함이나 각종 군함의 운항, 정밀타격무기의 활용 등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중국은 올해 중 20기 이상의 인공위성을 새로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은 총 67기로서 미국 441기, 러시아 99기에 비해 수적으로는 아직 뒤지고 있지만 중

29) 자세한 내용은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15권 4호 (2009), pp. 44-49 참조.

30) KT(KaiTuoze, 개척자)-1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정거리 1,700km-2,500km의 동평-21(DF-21 IRBM)계열의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공격 대상이었던 평원 위성 은 1999년 발사된 기상위성으로서 본체 1.4m×1.4m, 태양전지판 3.5m×3.5m, 중량 0.9t의 규모였다.

31) 중국의 위성요격(ASAT)실험은 이미 과거에도 실시된 바 있는데 미국 정찰위성은 2005년 7월과 2006년 2월에도 중국의 ASAT 실험을 모니터링 한 바 있다. John J. Tkacik Jr, “Beijing’s Intentions in Space,” WebMemo #1431, Publish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25, 2007. [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1431.cfm](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1431.cfm) (검색일: 2011.4.28).

국의 인공위성은 군사목적 등 특화된 분야에서 그 동안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던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sup>32)</sup> 중국이 구축하는 정찰위성 네트워크는 최근 개발한 대함 탄도미사일과 스텔스기, 항공모함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이 주변국과의 분쟁을 일으켜 미국 항공모함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미 항모를 직접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사이버군사력 건설

20세기 후반부터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육·해·공·우주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을 5대 안보영역으로 설정하고 ‘사이버전’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가 원자탄 사용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중국에게 있어서 사이버전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미국 등 첨단무기로 무장한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른바 ‘점혈(點穴)전쟁’<sup>33)</sup> 개념에 입각하여 ‘비대칭전쟁(asymmetric war)’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1997년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하였고, 정보전 ‘시물레이션 센터’도 건립하였다. 2000년 하반기부터는 유사시 적군의 정보시스템을 교란·마비시키고, 평시에는 정보교란 모의훈련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자·정보전 특수부대인 ‘넷 포스(Net Force)’를 설립·운영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4대 주요 軍區에 ‘전자전부대’를 설립·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4)</sup> 아울러 중국의 전자전 부대에는 미국 MIT 유학생 등 2천여 명을 배치하여 해킹기술 개발과 함께 외국 정부기관의 자료를 빼내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사이버전 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보화 의존성 심화가 중국의 승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전자전 능력을 통해 중국과의 전투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고 대규모 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미군의 특정지역(대만

32) *Financial Times*, July 12, 2011.

33) ‘점혈전쟁’이란 상대방이 첨단화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취약점(급소)을 공략하여 무력화시키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개념이다.

34) “제2의 국토 ‘사이버공간’을 지켜라,” 『연합뉴스』 2009년 7월 9일.



등) 이동 지연과 보급물자 제공을 막음으로써 미군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sup>35)</sup>

<표 3> 중국군의 대표적 신형무기

신형무기	개발과 배치상황	제원과 성능	비고
094형 진(晉)급 전략잠수함	현재2척 배치, 4-5년 내 4척 추가배치	핵탄두탑재 사거리 8,000km 취량(巨浪)-2 미사일 12기 탑재	094, 093형 핵잠수함을 비롯해 잠수함 69척 보유
항공모함	2015년까지 재래식항모 2척, 2020년까지 원자력항모 2척 보유 추진	6만5000톤급의 경우 전투기 50대 이상 탑재가능	2011년 8월 10일 최초의 항모(바라그) 시험운항
J-15, J-20 전투기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	작전반경 1500km이상, 스텔스기능보유 (J-20), 항공모함 탑재용도(J-15)	2006년 최신폭전투기 J-10 개발완료, 이미65대 실전배치
동평(DF)-21D 미사일	2011년 실전배치	사정거리 1500km, 항공모함킬러	美항모 공격용도로 개발

#### IV.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파급영향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인해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의 대립구조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안보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조는 동북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35) Martin C. Libicki, *Testimony: Chinese Use of Cyberwar as an Anti-Access Strategy*, RAND Corporation(January 2011).

군비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미·중, 중·일 간의 군비경쟁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속화 추세에 있다.

<표 4> 동북아 각국의 국력비교(2009년)

	인구(명)	GDP(\$)	병력(명)	국방비(\$)
미국	3억 300만	12조 8000억	158만	6,600억
중국	13억 2860만	4조 8600억	228.5만	703억
일본	1억 2700만	5조 3000억	23만	526억
러시아	1억 4000만	1조 3700억	100만	410억
한국	4850만	8820억	68.7만	245억
북한	2266만	280억	110만	50억

자료: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2010), 북한 병력과 국방비는 『2008국방백서』(2009.1).

동북아 6개국의 군사비는 세계 군사비 지출의 55%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 군비증강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경제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그래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0년 12월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에서 향후 320조원을 투입해 해·공군력 증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36)</sup>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 증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물론 중국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군방예산을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공식발표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직·간접적으로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해·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데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는 데에는 이 지역에서 냉전시대의 영토·주권분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해양권익을 둘러싼 대립도 갈

36) 자세한 내용은 박영준, "일본 <방위계획대강 2010>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점," 제16호 EAI논평(2010.12.28) 참조.

수륙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7)</sup> 무엇보다도 해상영유권 분쟁의 핵심에 중국이 놓여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조어도/센카쿠열도(釣魚島/尖閣列島) 및 남사군도(Spratly Islands) 그리고 서사군도(Paracel Island)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각기 일본 및 동남아시아 5개국과 분쟁상태에 있다. 중국이 하이난다오(海南島) 산야(三亞)에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기지를 건설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항공모함형 호위함(준항공모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이 호위함은 미국 조지 워싱턴호의 3/4 크기로 제작될 예정이며, 헬기 14대, 군용트럭 50대를 탑재할 수 있고, 2014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sup>38)</sup> 일본은 특히 2010년 9월에 발생한 釣魚島분쟁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우선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은 물론 그 동안 일본의 군비증강을 규제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최근 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센카쿠열도에 중국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감시대’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표 5> 중국과 일본의 해군·공군력 비교

중 국		일 본	
해군	25만5000명	해상자위대	4만2400명
공군	30만-33만명	항공자위대	4만3700명
잠수함	65척	잠수함	16척
프리깃함	50척	호위함	52척
구축함	27척	전투기	361기
전투기·폭격기	2450기		
항공모함	1척		

자료: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2010), SIPRI Annual Report(2010).

사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매년 발간하는 『중국군사력보고서』(The Military Power of the

37) 중국의 영토분쟁 현황 및 해결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동을 외, 『중국의 영토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참조.

38) “일본도 항공모함형 호위함 만든다”, 『중앙일보』 2009년 10월 28일.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미국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군사력에 관한 집중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은 중국뿐이다. 그만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 미국이 주목하고 있으며 깊이 신경 쓰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력 증강노력이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데 필요한 투명성을 상당부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sup>39)</sup> 때문에 미국은 최근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2010'에 대해서도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의 목표와 의도만을 설명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 군사능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sup>40)</sup>

물론 현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년센스일지 모른다.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는 턱없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1년 국방예산 규모는 7290억 달러(약817조원)인데 비해 중국은 780억 달러 규모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지역과 미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승부에서는 언제나 쫓기는 자가 불리하다. 예컨대, 미국이 비록 수백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지만 중국이 단 1개의 ICBM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국에는 위협이 되는 것이다. 결국 소련의 붕괴 이후 21세기 군사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미국에게 유일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역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미국은 물론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게도 적잖은 우려의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들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자 인도는 2010년 6월 33억 달러(약4조원)를 들여 수호이 30(Su-30) 전투기 30대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으며, 2018년까지 동종 전투기 272대를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공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

39) U. S. 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pdf](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pdf) (검색일: 2010.8.30).

40) Center for Naval Analysis, *CNA China Studies: Panel Discussion on China's Defense White Paper*, April 24, 2011. <http://192.189.236.117/news/videos2/2011/china-studies-panel-discussion-chinas-defense>(검색일: 2011.5.2)

로 알려지고 있다.<sup>41)</sup> 또한 인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었던 베트남 역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러시아에 해군잠수정 10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3척은 베트남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력이 아직 미약한 베트남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대폭적인 군사비지출을 시도하기 보다는 미국을 균형자로 내세워 중국의 안보위협에 맞서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은 2010년 8월 12일 남중국해에 인접한 베트남 앞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공동 해상훈련을 실시했다.<sup>42)</sup> 이는 1995년 양국의 재 수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연합훈련으로서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의 공동 대응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비교

	중국	미국
국방예산(2010년)	780억 달러	7290억 달러
병력(명)	226만	158만
전투기(대)	1320	2379
스텔스기(대)	2011년 시험비행	139
항공모함(척)	2011년 시험운항	11
잠수함(척)	65	71
구축함(척)	27	57
핵탄두(기)	240	7900

자료: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2010), SIPRI Annual Report(2011).

21세기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을 모토로 하여 글로벌 차원의 ‘강대국(強國)’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따른 국가이익 수호의 범위와 영역 역시 급속히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지도부의 군사력 증강과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 의지는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41) *US Defence News*, August 13, 2010.

42) 『중앙일보』 2010년 8월 14일.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기본의 방어적이고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전쟁을 상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계 및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세적인 성격의 첨단 군사력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과 갈등의 여지를 낳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배경에는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 둘째, 중국군의 전문화 셋째, 미국의 개입전략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네트워크화, 첨단화, 우주화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선진국과 최소한 10년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군 현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군사력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경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우월하고 배타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국력(power) 그리고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팽창은 책임과 공약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더 큰 군사력(power)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중국지도부의 군사력 증강 의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불변할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쉽 없는 군사적 부상은 향후 동북아 지역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력 뿐 아니라 핵 및 미사일 등 전략무기 현대화, 그리고 우주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은 주변국들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이들과의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확대는 불가피하게 미국 및 일본의 영향권과 충돌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공군 및 해군력 증강으로 과거 연안에 머무르던 수준에서 벗어나 근해는 물론 원해로까지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권 확대 노력은 미일동맹의 활동영역 확대와 함께 두 영향권이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문제, 역내 영유권 분쟁,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미사일 방어 등의 현안을 놓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셋째, 중국의 군현대화에 따른 군사적 부상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함으로써 역내 불

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한국 및 미국과의 갈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sup>43)</sup>

## V. 결론: 시사점과 대응방향

20세기는 ‘경제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는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군사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목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향후 경제·군사적으로 부상한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군사강국으로 등장한 미래의 중국에 대해 ‘낙관론’과 ‘경계론’이 공존하고 있다. 낙관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1840년대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서구 식민세력과 일제 군국주의에 의해 유린된 수모의 역사와 냉전기 동안 서방의 포위를 경험한 데 따른 ‘방어적 반작용(pull)’일 뿐이다.

그러나 경계론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행동(push)의 발로’가 군사력 증강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특히 미국정부와 학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제도주의자들은 미래 미중관계를 ‘협력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중접근론(engagement)’을 주장하지만,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자들은 미래의 미중관계를 갈등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중봉쇄론(containment)’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44)</sup>

분명한 것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부상이 미국의 우려와 견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었고, 따라서 미중관계의 향배가 동북아 안보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역사적

43)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2010), pp. 33-59 참조.

44) 이와 관련된 가장 흥미롭고 대표적인 논쟁으로는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와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토론을 다룬 “Debate: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Feb 2005)를 참조.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게도 분명 ‘도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군사적 강대국으로 군림하거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했을 때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 직·간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역내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는 미국의 대응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에게 점차 군사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향후 어떠한 기조와 전략 하에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갈수록 중요한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우선 인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장기적 안보전략은 對중국 적대관계를 상정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의 ‘비적대적 공생’은 불가피한 전제이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미래 한반도의 생존과 번영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자극받는 군비경쟁을 지향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방어적 억제전략’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위에서 군사 분야 교류와 협력확대, 상호 군사분야 신뢰구축, 공동 군사훈련 실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최소한의 억지전력을 갖추는 것 또한 선택이기보다는 ‘필수’의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직접적으로 미국을 상대하기 보다는 한국에 대해 점진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확대와는 별개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하고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대비태세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종의 ‘고슴도치전략’이라 할 것이다. 즉 고슴도치와 같이 주변 강대국에 대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 보유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령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서해와 한반도 해역을 작전권에 넣고 우리의 안



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경우 한국은 항모 등 수상함정을 목표로 하는 대함미사일 개발 등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중국의 공격용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의 연해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순항크루즈미사일 등을 자체 개발하는 것도 최소억지력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태호 외, 『중국 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 파주: 나남, 2008.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15권 4호(2009).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6권 2호(2010).

박영준, “일본 <방위계획대강 2010>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점,” 제16호 EAI 논평(2010.12.28).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제32권 3호(2008).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2010).

윤석준, “동아시아 해군력 현대화 추세와 전망,” 『국방연구』 52권 2호(2009).

이동률 외, 『중국의 영토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조관행·홍성표, “중국 군사혁신(RMA)에 따른 중국공군 현대화와 한국공군에 주는 함의,” 『현대중국연구』 제12권 2호(2010).

정철호, “미국 2010년 QDR과 대한반도 정책함의,” 『정세와 정책』 2010년 3월호.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Center for Naval Analysis, *CNA China Studies: Panel Discussion on China's Defense White Paper*, April 24, 2011. <http://192.189.236.117/news/videos2/2011/china-studies-panel-discussion-chinas-defense>(검색일: 2011.5.2)

James R. Holmes and Toshi Yoshihara,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Naval Institute Press, October 2010.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Jonathan D. Pollack, “The Changing Political-Military Environment: China,” Zalmay Khalilzad (ed.),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1.

- Kenny Fuchter, "Air Power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Air Power Review*, (Winter 2008).
- Martin C. Libicki, *Testimony: Chinese Use of Cyberwar as an Anti-Access Strategy*, RAND Corporation (January 2011).
-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 (검색일: 2010.5.31).
- Zbigniew Brzezinski and John J. Mearsheimer, "Debate: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Feb 2005).
-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February 8, 2011).
- U. S. 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pdf](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pdf) (검색일: 2010.8.30).

- 門洪華, "中國東亞戰略的展開," 『當代亞太』 2009年 第1期.
- 楊毅, 『中國國家安全戰略構想』 北京: 時事出版社, 2009.
- 劉靜波 主編, 『21世紀初中國國家安全戰略』 北京: 時事出版社, 2006.
- 葉自成, 『中國大戰略』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國際戰略與安全形勢評估』 北京: 時事出版社, 2008.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0年中國的國防』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동아일보』 2011년 5월 4일.
- 『연합뉴스』 2009년 7월 9일.
- 『연합뉴스』 2010년 11월 18일.
- 『조선일보』 2011년 1월 12일.
- 『중앙일보』 2009년 10월 28일.
- 『중앙일보』 2010년 8월 14일.

*U.S Defence News*, August 13, 2010.





# 12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관계



#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관계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I. 들어가는 말

## II.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추세

1.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배경
2. 한미일 안보협력의 내용

## III.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국

1. 한미일 안보협력이 주는 딜레마
2.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는 중국의 시각

## IV. 한반도관련 주요 안보쟁점과 중국의 입장

1. 주한미군 주둔문제
2. 북한 급변사태 및 통일문제
3. 미사일방어(MD) 문제

## V. 결론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내용을 검토하고,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과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득’이 되는 점은 무엇이고, ‘실’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검토한 뒤, 한국의 교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반추할 때, 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한미동맹에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작용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처한 또 다른 환경은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의 국제정세 및 동아시아 세력구도는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하는 중국이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국익과 관련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중국변수에 대한 고려가 보다 심각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한미관계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웃 주요국들과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동맹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정부의 목표는 역내의 복잡한 세력관계 및 안보구도 등으로 인하여 혹독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시기 중국은 서해상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감싸면서 한·미와는 대척점을 형성했다. 또한 금년 초에는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한일 방위협력’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sup>2)</sup>

한미일 안보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반발과 한중관계 발전의 딜레마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축(軸)으로 삼았던 우리의 대외전략이 이제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요소와 공존을 추구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으로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1)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2009.3), p. 22.

2) 『중앙일보』 2011년 2월 24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의 방향과 성격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지체로운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국제관계의 형태를 예측하고 주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 외교가 추구해야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추세

### 1.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배경

주지하다시피 한·미·일 안보협력의 출발점은 냉전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냉전시기에 이미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른바 ‘남방삼각’으로 불리는 안보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물론 한미일 세 나라는 함께 동맹관계를 맺거나 협의체를 가진 적은 없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간접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즉 냉전시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기본 축으로 3국간에 유기적 연대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배의 역사적 유산에 따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동질성 속에서 준(準)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sup>3)</sup>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구도는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거대한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갈등이 줄어들면서 일정기간 서로간의 연대와 제휴가 느슨해지기도 했다. 오히려 한미일 3국은 탈냉전기 경제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호관계가 일정부분 소원해지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한·미간에 인식차가 확대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도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sup>4)</sup>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1992년 한·중수교

3) 냉전시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1호 (2011), pp. 289-309 참조.

이후 양국관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효성과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느슨해져가던 한미일 안보협력이 최근 들어 다시금 강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첫째,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의 등장 둘째,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격화 셋째,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영향력 확대 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지난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외정책의 기본 가치로서 ‘글로벌외교’와 ‘실용외교’를 표방하였다.<sup>5)</sup> 그리고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외교노선은 ‘한·미동맹 강화’, ‘한·일 협력관계 증진’, ‘한·중 관계 격상’이라는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복원은 이명박 정부 외교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 미국과 보다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對미국, 對중국 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던 前 노무현 정부의 외교노선과는 분명히 대별되는 길을 상징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현재까지 한미일 3국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인 발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의 ‘총괄사령탑’ 역할을 했던 제프 베이더 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좋았던 때는 없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은 한국과 모든 단계에서 매우 잘 협조·조율했고, 양국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sup>6)</sup> 이는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목표한 한미동맹관계의 강화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긴장조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

4)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글로는 김영재·박인휘, “온건주의 연합: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한미일 정책공조,”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2004), pp. 197-216 참조.

5) 대통령취임사 참조.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view.php?uno=6](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view.php?uno=6) (검색일: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외교’는 주변 4강에만 편중되지 않고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으며, ‘실용외교’란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6) 『조선일보』 2011년 6월 13일.

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비난과 반감을 표시하면서 대남 긴장분위기를 유지했다. 특히 북한은 美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장거리 로켓발사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오바마 대통령을 테스트함으로써 미국에 강한 불신감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역으로 한미 공조를 강화시키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의해 자행된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은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더욱 결합시켰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간에도 동북아 긴장상황에 따른 군사적 공동대응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최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된 배경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들 수 있겠다. 美오바마 정부는 출범 이후 설득과 대화를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외교’를 표방하였으나 이란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사안에서 사사건건 중국과 부딪힘으로써 ‘스마트외교’가 동아시아에서 자리 잡기 어려웠다. 이런 지역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한 지지와 중개 역할을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핵심이익을 지키는 레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불가피하게 미국, 일본 등과의 전략적 긴장관계를 고조시켰으며, 양국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sup>7)</sup>

## 2. 한미일 안보협력의 내용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는 동시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수준 역시 상당히 발전되는 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양국은 2008년 4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가치, 신뢰, 평화구축동맹에 기초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 동안 군사·안보분야가 중심이 되었던 한미동맹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쏠방위적으

7)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박병광,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정세변화,” 세계일보 주최 ‘동북아안보 심포지움’ 발표문(2011.7.1) 참조.

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특히 2009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란 문서를 채택하고 전략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맹비래비전에서 한미 양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등 강력한 안보태세 유지를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동맹비래비전’의 내실 있고 적극적인 이행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으며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sup>8)</sup>

한편 2010년 3월 말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한미 양국의 군사·안보협력을 수식어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천안함 발생 직후 곧바로 항공모함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철저한 안보협력태세를 과시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토론토의 G20 정상회의 중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미국 안보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뒤이어 7월에는 서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처음으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회의’를 갖기도 했다. 2+2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대북억지’와 함께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명시함으로써 회담의 상징성 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양국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회의로 평가되었다.<sup>9)</sup> 이후 실제로 한미 양국은 7월 말 동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으며, 11월 하순에는 서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북공조의지를 과시하였다.

2011년에 들어서도 한미동맹관계는 별다른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및 비핵화 관련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

8) 외교통상부, 『2010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10), pp. 33-35.

9) 박병광, “한미 2+2회담 이후 북한의 선택과 대응,” 『통일시대』 2010년 9월호, p. 22.

조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사건 사과와 재발방지 등으로 인해 한미 공조관계에 균열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한미 양국은 견고한 공조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역시 비교적 순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정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안보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2009년 4월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공동 군사훈련을 정례화 하는 등 군사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바 있다.<sup>10)</sup> 또한 2011년 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만일 한·일 군사협력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3국간 ‘남방 결속’은 더욱 힘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는 자연스럽게 한·미·일 3국간 군사·안보협력관계 증진과도 연결되었다고 하겠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5월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일 3각공조의 상징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부활이 논의되었으며<sup>11)</sup> 실제로 2008년 10월 14일 한·미·일 고위급 3차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일 3국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며 UN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협력 체제를 과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PSI에 가입하여 안보협력 체제를 확대·강화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한국은 처음으로 ‘코브라 골드’훈련<sup>12)</sup>에 참가하여 미국, 일

10) “한-일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 합의,” 『한겨레신문』 2009년 4월 25일.

11) “한일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협력강화’ 논의. TCOG부활,” 『연합뉴스』 2008년 5월 31일.

12) ‘코브라 골드’훈련은 美태평양사령부와 태국 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군사훈련으로 1981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한국은 2002년부터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하다가 2010년 처음으로 미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더불어 실제 군사훈련에 참여했다.

본 등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한미일 3국간의 자체적인 군사훈련 추진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반도에서의 유례없는 긴장상황 만큼이나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체제가 냉전시대보다 더욱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례로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는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참관단으로 참가해 한미일 3국간 직·간접 군사협력을 시도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한미일 3국은 워싱턴에서 공동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으며, 이 회담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sup>13)</sup>

### Ⅲ.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국

#### 1. 한미일 안보협력이 주는 딜레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방중(訪中)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사실 한국에게 있어서 ‘긴밀한 한·중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최근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게도 분명 ‘도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은 ‘기회’의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원활한 경제교류가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일례로 2010년 한·중 교역규모는 1884억 달러(교역의존도 20%)로서 대미(900억\$), 대일교역액(725억\$)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452억\$)이자 최대 해외투자대상 국가이다.<sup>14)</sup>

13) 『문화일보』 2010년 12월 3일.

안보·외교적 측면에서도 유연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동아시아의 강력한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최대의 안보현안이라 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또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중국의 적극적 지지와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의 의미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차 중국은 반드시 ‘공생’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미래 한반도의 생존과 번영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 지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한국의 장기적 안보전략은 對중국 적대관계를 상정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의 비적대적 공생은 불가피한 전제이다.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과정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변수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와 ‘한·미 전략동맹관계’의 이중구조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양자택일의 정책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과의 안보협력과정에서 한·미동맹과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국에 의한 ‘포기(abandonment)’ 혹은 ‘연루(entrapment)’의 안보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sup>15)</sup> 반면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또 다른 함의는 한국이 향후 부상하는 중국과 국력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의 범주가 강대국 중심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중국이 한국에 협력할 것보다 한국이 중국에 협력할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up>16)</sup>

14) 주요 지역별 수출입 통계 및 경제교류 현황에 관해서는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at.go.kr/economic/economicdata/statistics/index.jsp> (검색일: 2011.5.13)

15)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정경,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 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신아세아』 제15권 1호(2008), pp. 95-118 참조.

16) 전성홍,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정세와 정책』 2008년 7월호, p. 7.

요컨대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경우에 따라서 한중 전략적 관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둘째, 동맹 또는 동반자관계를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value)'와 '인식(perception)'의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마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이란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공개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치동맹이란 가치의 공유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모든 분야를 미국과 통합 또는 공조화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및 전 세계적 차원의 전략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sup>17)</sup> 그러나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는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서구사회와 확연한 가치와 기준의 차이를 드러내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리 힘주어 동맹관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공존과 조화를 강조하더라도 결국 한국과 중국은 가치관이 동일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바라보는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한국이 미국을 중시하고 중국은 홀대한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방중 기간 친강(秦剛)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즉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이 남겨준 유산으로서 탈냉전기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불편한 심경을 초기부터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방적인 대미접근에 대한 우려를 애써 감춰왔지만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적극적인 북한 감싸기에 나서면서 노골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때로 거칠게 그리고 때로는 외교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어졌고 이는 한국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제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언론인 중국의 環球時報는

17) 이혜정, “MB정부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평가와 전망,” 『동아시아브리프』 제3권 3호(2008), p. 100.



2010년 7월 7일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이 서해 군사훈련으로 망령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12월 23일에는 “한국은 낭떠러지를 추궁장으로 여기지 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을 손봐줄 필요가 있다”는 협박한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낸 바 있다.<sup>18)</sup> 한국정부는 環球時報의 보도에 대해 대체로 “상업성이 농후한 신문이어서 큰 의미가 없고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대표적 기관지인 人民日報의 자매지인 環球時報의 성격과 위치를 고려한다면 한국을 향한 거친 보도는 결국 한국을 향한 중국 당국의 불편한 심기가 교묘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 도발하자 한국이 미국을 끌어들여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불만이 環救時報를 통해 은연중 배출되었던 것이다.<sup>19)</sup>

중국의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향한 불만과 우려는 최근 들어 외교무대와 학계에서도 공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금년 2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외교부장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sup>20)</sup> 중국 학계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필자가 방문한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와 국제안보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한 바 있다. 즉 그들은 최근의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이 그러한 미국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출하곤 했다.<sup>21)</sup>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는 사실 노무현 정권시기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면서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노골적인 불만과 우려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

18) 『環球時報』 2010년 7월 7일; 『環球時報』 2010년 12월 23일.

19) 유상철, “언론인이 본 중국 언론: 환구시보(環救時報)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시아브리프』 제6권 2호(2011), pp. 70-75 참조.

20) 『중앙일보』 2011년 2월 24일.

21)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한반도전문가 인터뷰(2011년 5월 16일); 中國國際問題研究所 한반도전문가 인터뷰(2011년 5월 17일); 中國軍事科學院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2011년 5월 18일).

턴'호가 서해상에 진입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중국 측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안보전문가들과 싱크탱크는 '2010년도 동북아정세'를 평가하면서 천안함피격사건이 동북아정세에 미친 영향을 주요하게 다루는 한편 이를 대하는 서방의 태도가 '북한위협론'을 넘어 '중국위협론'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결국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였다고 평가한다.<sup>22)</sup>

한국정부는 양국 정상의 회동과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양국간 교류를 통해서 중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과정 속에서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가 지니는 한계와 딜레마를 깊이 체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상하는 중국이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국익 그리고 미래와 관련하여 한중관계는 물론 중국변수에 대한 고려가 보다 심각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對美 군사동맹을 축으로 삼았던 한국의 대외전략이 이제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요소와 공존을 추구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 2.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는 중국의 시각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한반도가 줄곧 해양세력의 대(對)중국 침략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여긴다. 역사적으로 보아 한반도가 안정적이었을 때 중국의 안보도 확보되었지만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세력이 약화되면 주변국간 각축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안보도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비록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중국의 국력이 크게 증강되었고 중미관계가 거시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인만큼 한반도의 완충지대 역할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미간 마찰요인이

22) 林利民, “變中生亂, 亂中求變: 2010 國際戰略形勢評析,” 『現代國際關係』 2011年 第1期, p. 45;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國際戰略與安全形勢評估2010/2011』 (北京: 時事出版社, 2011), pp. 119-123.

여전히 존재하고 양국간 상호경계심 및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아직도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23)</sup> 요컨대 중국은 정치지리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존재 자체가 중국과 서방 세계사이에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강대국(global power)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이 동북아 국제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적 지위 증대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점차 한반도를 자신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전진기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러한 의도와도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전략과 역내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한반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sup>24)</sup>

한편 중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서 줄곧 동북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만 고려되고 있으며 미일동맹에 비해 전략적 가치도 낮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25)</sup>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추종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증대되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역시 미국과의 군사안보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중 대립구도 하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려는 것으로 이해한다.<sup>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체제 강화 등에 관해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내정문제’이며 양자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한미동맹이 불가피하게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만일 한국 측이 한미동맹 강화

23)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15, No.5(March 2004), pp. 1-3.

24) 박병광, “한·중관계 15년의 평가와 과제: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77호(2007), p. 139.

25) 石源華·汪偉民, “美日韓美同盟比較研究: 兼論美日韓安全互動與東北亞安全,” 『國際觀察』 2006年 第1期, pp. 61-68.

26) 劉鳴, “奧巴馬政府東亞戰略調整及其對中國的影響,” 『現代國際關係』 2011年 2期, p. 24.

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심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sup>27)</sup> 미국이 잠재적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다방면에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동맹은 중국 입장에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와 주한미군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에 관해 민감성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한일관계 복원에 관해서도 역시 한미관계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내정문제'이며 양국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패권을 놓고 일본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일본과의 관계복원이 어느 수준까지를 상정하고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對日관계 개선이 과거 냉전시기 한미일 3각 동맹처럼 긴밀한 협력체계의 정도로 발전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에서는 한미관계와 달리 한일관계는 '과거사문제'와 '독도문제' 그리고 '대북정책' 등 적잖은 분야에서 관계개선과 협력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sup>28)</sup>

중국은 한·미·일을 '3각동맹'체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을 미국의 지역안보전략 구성원으로부터 중국의 대항전선의 일원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과거 중국, 소련, 북한 등이 유지하던 '북방3각'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남방3각'은 여전히 유지될 뿐 아니라 더욱 강고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최근 들어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동맹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함으로써 결국은 지역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으로 하여금 위협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sup>29)</sup> 따라서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관계의 복원추세는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케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한미동맹이 한중

27)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의 복수의 동북아안보문제전문가 인터뷰(2011년 4월 27일).

28) 張菲, "解析韓國新總統李明博的外交," 『領導科學』 2008年 第6期, pp. 54-55.

29) 虞少華, "東北亞安全形勢與中韓戰略合作,"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5期, p. 30.

관계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 동맹 강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중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신안보관’의 논리에 근거해 탈냉전 시대의 국가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전략 동반자의 형태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30)</sup> 즉 동맹관계가 전략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응하여 한국과 전략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기점에서 실제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을 추구한 것은 한미, 한중관계의 양자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이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만큼 중국이 한국을 더욱 중시하고 그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sup>31)</sup>

이와 같은 사실은 한미동맹 강화 이후 중국이 보여준 다른 한 대응의 축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잘 나타난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근거해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 불신(strategic mistrust)’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카드의 과도한 활용이나 한미동맹의 對中 지렛대(leverage)를 무리하게 추구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겠다.

#### IV. 한반도관련 주요 안보쟁점과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는 한미 전략동맹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반(反)중국전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기초하여 중국은 특히 주한 미군의 지위변경,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 북한 급변사태 대응, 미사일방어(MD)체제 등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30) 金正昆, “伙伴關係: 中國外交的理性抉擇,” 『教學與研究』 2000年 第7期, pp. 45-46; 兒健民·陳子舜, 『中國國際戰略』 (北京: 人民出版社, 2003), p. 24.

31) 전성홍,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 인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문가세미나 발제문 (2011.6.29).

## 1. 주한미군 주둔문제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 국가가 타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주둔시키는데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주한미군의 남한주둔에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sup>32)</sup>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공적인 입장과 사적인 이해의 개념으로 분리, 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적인 입장이란 제3국에의 군대파견 및 주둔에 대한 중국정부차원에서의 일관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철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주권국가로서의 한국과 미국사이의 양자적인 정책선택으로서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주둔은 그 행위의 대상이 제3국에 미치지 않는 한 양해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주한미군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중국 측도 주한미군이 남북한간의 군사분쟁(특히 북측의 도발)을 억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철수는 주일미군의 명분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주일미군의 철수는 곧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앞당긴다는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기능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sup>33)</sup>

또한 중국은 최근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역할조정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개념에 따른 구조변화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sup>34)</sup> 그러나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및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 발생시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군부의 경우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국봉쇄 내지는 對중국 군사전략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적잖은 경계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이후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32) “中 천빙더 軍 총참모장 단독 인터뷰,” 『조선일보』 2009년 3월 26일.

33) 이러한 인식을 나타내는 글로는 Bonnie Glaser and Ronald N. Montaperto, “Northeast Asia,” in Hans Binnendijk and Ronald N. Montaperto (eds.), *Strategic Trends in Chin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p. 111.

34)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2003年 第7期, pp. 7-12.

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며 한국정부가 통일 이후 미군의 계속주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국민의 높은 민족주의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 2. 북한 급변사태 및 통일문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추구해왔을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혈맹관계’ 또는 ‘순치관계’로 묘사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이해를 지니고 있는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주변국들 간 주도권 경쟁에서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일 뿐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의 전개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sup>36)</sup>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밀접한 전략적 이익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내부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중국인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요 관심은 북한 급변사태의 사전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가피할 경우 인민해방군의 직접개입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다.<sup>37)</sup> 중국 측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둔 대응을 최우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정부와는 경우에 따라 일정부분 마찰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한반도 통일문제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미국 등 외세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

35) 중국이 “남북한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입장 속에는 통일한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관련 논의 동향 및 입장에 대해서는 박병광,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 『동아시아브리프』 제3권 4호(2008), pp. 107-112;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2010), pp. 33-59 참조.

3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USIP and CSIS Joint Working Paper, January 3, 2008.

도의 여하한 현상변경과 불안정 요인의 등장을 최대한 회피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가능성 및 통일논의가 본격화되고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한중 양국 간 목표와 인식의 차이는 확대 부각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역시 한국정부가 한미 안보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토대를 둔 통일과정을 지향할 경우 한중간에 주요한 안보쟁점 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 3. 미사일방어(MD) 문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MD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릴 뿐 아니라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가 간 상호신뢰와 협력에 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38)</sup> 즉 MD체제 수립 시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MD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대북 방위 차원을 넘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편입되어 장차 중국 미사일 발사의 ‘추진단계’ 및 ‘초기 비행단계’에서 정보제공 및 초기 요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강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이 MD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편입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MD협력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에게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PSI가입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적잖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PSI에 대해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PSI에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신장(新疆) 및 티베트(西藏) 분리주의자들의 수중에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질이 유입되어 중국에 테러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PSI 참여국들이 대체로 미국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는 등 미국의 자의적 판단과 행동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도 견지하고 있다.<sup>39)</sup>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PSI 참

38) “中 천병더 軍 총참모장 단독 인터뷰,” 『조선일보』 2009년 3월 26일.



여가 한중 양자관계에는 실제적으로 큰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하여 주시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09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실험과 연이은 제2차 핵실험을 계리고 PSI에 가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정부의 PSI 가입을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동맹 편향에 대한 정치적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PSI가입보다 더욱 중대한 안보사안으로 간주하는 MD체제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 가입여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및 한중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V. 결론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질서의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까지 역내 강국들의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과 갈등의 기저에는 중국의 부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의 방향과 근본적 성격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일방적인 對美일변도 정책이나 무조건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행동의 폭을 제한시키고, 주변 강국으로부터 방기(abandon)되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뢰를 강화하는 것 역시 우리로서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일국적 접근은 신중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중국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중국과의 대립을 불가피한 것

39) 김홍규, “MD와 PSI에 관한 우리정부의 정책고려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문가세미나 발제문(2008년 7월 23일).

으로 규정하려는 듯한 일각의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보다 냉정하고 균형적일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독자적인 결정능력을 갖추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G2시대로의 도약을 알리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국가전략과 중국변수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동북아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정 현상에 있어서 ‘한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관중(觀衆)’을 의식하는 일관성 있는 원칙의 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미·중간에 갈등이 생겨도 “한국의 정책은 원래 그랬다”며 강대국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한미동맹의 수정이나 약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동거리외교가 달성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고 동시에 중국과 손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일본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국가경쟁력을 키우면서 대미관계의 평등성을 확보해 왔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미관계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역학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와의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강조 역시 어느 면에서는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 으로서는 한·중·일 대화 등 다자외교를 통해 배타적 동맹논리에서 벗어난 국제적 입지를 다져나가는 한편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영재·박인휘, “온건주의 연합: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한미일 정책공조,” 『국 제정치논총』 제44집 4호(2004).
- 김홍규, “MD와 PSI에 관한 우리정부의 정책고려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전문가세미나 발제문(2008년 7월 23일).
- 박병광, “한·중관계 15년의 평가와 과제: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 방정책연구』 제77호(2007).
- 박병광,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 『동아시아브리프』 제3권 4호(2008).
- 박병광, “한미 2+2회담 이후 북한의 선택과 대응,” 『통일시대』 2010년 9월호.
-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 (2010).
- 서정경,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 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 (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신아세아』 제15권 1호(2008).
- 유상철, “언론인이 본 중국 언론: 환구시보(環救時報)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시아브라프』 제6권 21호(2011).
- 외교통상부, 『2010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10.
- 이혜정, “MB정부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평가와 전망,” 『동아시아브리프』 제3 권 3호(2008),
- 전성홍,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정세와 정책』 2008년 7월호.
- 전성홍,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 인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문가 세미나 발제문, 2011.6.29.
-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2009.3.
-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과정 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 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1호(2011).
- 『문화일보』 2010년 12월 3일.
- 『연합뉴스』 2008년 5월 31일.
- 『중앙일보』 2011년 2월 24일.
- 『조선일보』 2009년 3월 26일.
- 『조선일보』 2011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 2009년 4월 25일.

Bonnie Glaser and Ronald N. Montaperto, “Northeast Asia,” in Hans Binnendijk and Ronald N. Montaperto (eds.), *Strategic Trends in Chin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USIP and CSIS Joint Working Paper, January 3, 2008.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15, No.5(March 2004).

金正昆, “伙伴關係: 中國外交的理性抉擇,” 『教學與研究』 2000年 第7期.

石源華·汪偉民, “美日韓美同盟比較研究: 兼論美日韓安全互動與東北亞安全,” 『國際觀察』 2006年 第1期.

兒健民·陳子舜, 『中國國際戰略』 北京: 人民出版社, 2003.

劉鳴, “奧巴馬政府東亞戰略調整及其對中國的影響,” 『現代國際關係』 2011年 2期.

林利民, “變中生亂, 亂中求變: 2010 國際戰略形勢評析,” 『現代國際關係』 2011年 第1期.

虞少華, “東北亞安全形勢與中韓戰略合作,”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5期.

張菲, “解析韓國新總統李明博的外交,” 『領導科學』 2008年 第6期.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向,” 『現代國際關係』 2003年 第7期.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國際戰略與安全形勢評估2010/2011』 北京: 時事出版社, 2011.

『環球時報』 2010年 7月 7日.

『環球時報』 2010年 12月 23日.



# 13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중화질서(中華秩序)와  
조화세계(和諧世界)론을 중심으로





#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중화질서(中華秩序)와 조화세계(和諧世界)론을 중심으로

이정남 | 고려대학교

## I. 서론

## II. 중화질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화이사상과 국제관계

## III. 조화세계론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조화세계론의 등장과정과 배경

### 2. 조화세계론의 내용적 구성

## IV. 중화질서와 조화세계론의 동아시아지역 질서관 비교

## V. 결론

[참고문헌]

## I. 서론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는 화이사상(華夷思想)에 기초한 중화질서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중화질서의 중심에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타 주변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비록 역사적으로 중국의 국력에 따라 그 통제력의 범위와 강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근대화와 함께 중국이 서구 중심적인 국제질서로 편입되기 전까지 동아시아는 이러한 중화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근대화과정은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질서가 해체되고 이른바 서구 중심적 근대국제질서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과거 중화질서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서구 열강과 일본의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비록 1949년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으로 자주독립 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여력이 부재하였다. 한 중국학자의 말대로 중국은 20세기 들어 1990년대 전까지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체계적인 시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이는 냉전시기의 중국이 국력상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지역정책을 추구하기 어려웠으며,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목표였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다시 동아시아를 자신들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고자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영토의 68%, 인구의 65%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연 9.67%의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질서의 변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에 중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어 있어,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는 현 단계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중점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sup>3)</sup>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이 스스로를 동아시아 국가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발전시

1) 龙中英, “中国的亚洲战略:灵活的多边主义”, 『世界经济与政治』 2001年 10期, pp.30-35.

2) 张小明, “中国与周边国家关系的历史演变”, 『国际政治研究』 2006年 第1期, p.10.

3) 门洪华, “中国东亚战略的展开”, 『当代亚太』 2009年 第1期, p.54.



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급영향을 보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이로 인한 운명 공동체적 성격, 중국이 받게 될 영향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역내 국가로서의 책임의식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sup>4)</sup>

이처럼 중국이 동아시아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해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동아시아전략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sup>5)</sup> 이에 중국내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면 우선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역강대국이 되고, 이에 기초하여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월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중국은 또한 동아시아지역에서 현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평화로운 발전'과 '조화세계'를 강조하면서 힘에 기초한 일방주의를 추구해 왔던 미국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각국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규범을 제기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국의 동의에 기초한 지역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조화세계(和諧世界)”론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임과 동시에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학자들은 조화세계를 중국의 평화적 발전이 추구할 목표이고, 서구와 다른 새로운 국제질서관의 창조이며,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상으로 간주하고 있다.<sup>7)</sup> 더 나아가 조화세계론을 중국의 국력과 지위가 상승함에 따른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구상임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기로 간주하고 있다.<sup>8)</sup> 비록

4)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3, Winter 2004/5, p. 68.

5) 박병광, “중국 2020: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동아시아연구원 세미나발표논문(2009년 8월 18일).

6) 门洪华(2009), pp. 54-55; 叶自成, 『中国大战略』(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p.307.

7) 杨宇·熊吴明, “和谐世界思想与中国软实力塑造”, 『国际关系学院学报』2008年 第3期, pp. 13-17; 刘清才, “改革开放以来中国国际秩序理论的发展与创新”,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2008年 第4期(7月), p.83.

8) 하도형, “중국의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4집(2008년 2월), pp.167-192; 王公龙, “和谐世界:国际秩序的新构想和新范式”, 『现代国际关系研究』2007年 第3期.

조화세계론은 중국내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胡锦涛)정권의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임과 동시에 국제질서 및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임에는 틀림없다.<sup>9)</sup>

조화세계론은 아직 이론적으로 발전과정 중에 있고, 또한 미래의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임과 동시에 목표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를 둘러싸고 제기한 두 번째의 거대담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전통적인 동아시아질서의 틀로 자리해온 ‘중화질서(혹은 화이질서(華夷秩序))’라면, 조화세계론은 중국의 재부상에 따라 두 번째로 제기된 동아시아질서를 구상하는 거대 담론인 것이다. 이 두 담론은 비록 이론이 제기된 역사적인 배경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구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조화세계론에 기초한 동아시아 질서구상이 어떠한 성격을 띠는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구성되고 주도된 전통시기 동아시아질서인 중화질서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재부상한 중국이 동아시아질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화세계론에 기초한 동아시아질서구상이 전통적인 중화질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조화세계론에 기초한 중국의 동아시아질서구상을 전통시기 중화질서론과 비교하여 이해하고자 한 시도는 서방이나 중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과 관련하여 서방의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 화이질서를 회복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대국(大國)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sup>10)</sup> 중국의 연구자들 또한 “조화세계관을 민족국가를 기초로 하면서도 천하주의(天下主義)를 지향하는 수정된 천하주의”로 간주하면서 조화세계론이 전통 중국의 중화주의적인 세계질서와 일정한 연속성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9) Jean-Marc F. Blanchard and Sujian Guo, “Introduction: ‘Harmonious World’ and China’s New Foreign Policy,” edited by Jean-Marc F. Blanchard and Sujian Guo, *“Harmonious World” and China’s New Foreign Policy*, Lanham·Boulder·New York·Toronto·Plymouth, UK: A division of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4-6.

10)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Calif: Rand, 2000), p.231; David Shambaugh, “China’s New Engagement with Aisa,” *Asia Wallstreet Journal*, March 2(2004).

이들 연구들은 조화세계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보다는 특정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질서를 사고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이론체계인 중화질서와 조화세계론을 등장배경, 사상적인 기반, 국제관계의 성격, 외교수단과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재부상한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은 전통시기 불평등한 국제관계에 기초한 중국 중심의 패권적인 질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패권적인 질서의 부활을 꾀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전통적 중화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인 동아시아질서의 모색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전통시기 중화주의적 동아시아 질서관과 조화세계의 기치로 내걸면서 제시되고 있는 동아시아질서관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중화질서와 조화세계를 등장기반, 사상적 기반, 국제관계의 성격에 대한 시각, 외교수단과 방식 등 4개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면서, 조화세계론이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질서구상이 전통적 중화질서와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 II. 중화질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화이사상과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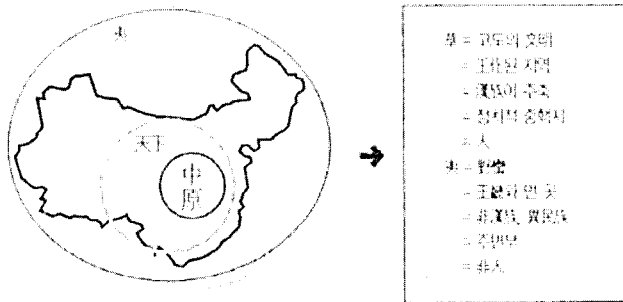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지역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세계(=동아시아세계)를 華夷觀念과 유교원리로 규율하는 화이질서로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華와 夷를 구분하여 차별하는 이른바 화이사상의 발전은 공간적인 개념과 자질로 설명되었다. 즉 夷의 위치는 王畿(천자의 권력이 미치는 곳)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상 王化가 미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문명적

11) 任云仙, “近代以来中国世界秩序观念的变迁”, 『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9年 3月, pp. 184-189; 李宝俊·李志永, “和谐世界观与霸权稳定论——一项比较分析”, 『教学与研究』 2008年第6期, p.81; 江西元, “从新天下主义到和谐世界:中国外交理念选择及其实践意义”, 『当代亚太』 2007年 第12期, pp.20-27.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sup>12)</sup> 이리하여 화=한족, 왕화된 문명, 이=이민족, 미개한 민족, 야만으로 간주되었다.

아래 [그림 1]로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中原은 天子가 머무는 곳이고, 중원을 차지한 민족은 漢族이며 천하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하는 王畿가 미치는 곳이고, 천자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夷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고대의 天下는 유일한 문화의 구현 즉 天子의 덕으로서 주변민족을 王化시키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의 편입여부는 단순한 정치권력에 대한 참여 또는 복속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갈림길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전자를 華, 후자를 夷로 구분하는 이른바 華夷思想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sup>13)</sup>

[그림 1] 일반적 華와 夷의 구분



출처: 이홍중·공봉진(2000), p.169.

이같은 화이관념의 출발점은 殷(商)나라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sup>14)</sup> 周나라 이전에는 차등관념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다. 즉 주나라 이전에는 이적이 夏商(華夏)인과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뒤섞여 살았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대에 이르러 武보다는 文을 숭상하며, 고도로 화려한 자신들의 문화를 형용하기 위하여 華夏라는 말을 만들어

12) 김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철학』, 379집 5호, 1992년(한국철학회), p.32.

13) 이홍중·공봉진, “중국의 화이사상에서 화이개념의 재해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5집 2000년, pp.168-169.

14) 은대의 갑골문자에는 夷족들을 지칭하는 戒, 夷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이춘식, 『中華思想』, 교보문고, 1998년, pp.161-162.

내었고, 이적에 대해서는 한없이 탐욕스러운 시랑(승냥이와 이리) 등 금수와 다름없는 존재로 격하시켰다.<sup>15)</sup>

그리하여 화이관념에 크게 두 개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화이분별·차별론으로서, 중화는 천하의 중심으로 사방의 이적과는 엄격히 분별해야 하며 이적은 중화의 경계 바깥으로 물리쳐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주는 이적의 문제로 인해 중국 백성들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적과 華夏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적은 화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인식되었다. 더욱이 이적의 땅이나 사람은 중국에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정벌이나 통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편입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sup>16)</sup> 이는 강렬한 華夏族 중심주의로서 중화족의 자민족 우월감과 이민족 배타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적이 중화를 침범하거나 어지럽히지 못하게 방지함으로써 중화문화의 전통을 보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華夷無別, 華夷一家, 天下一家 또는 王者無外 등으로 부르는 화이동화·융합론이다. 이 논리는 화하와 이적간에 간격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一視同仁의 원칙에 따라 이적에게도 중화문명의 은택을 베풀고 그들을 덕화·교화시킴으로써 주변의 이적을 중국화하여 마침내 내외원근 즉 천하를 합쳐 하나가 되는 이른바 天一家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즉 주변의 이민족도 중화세계의 일원으로 수용 포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관념은 중국의 국력이 강성하고 중국인들의 자신감이 충만하던 시기에는 후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중국의 국력이 약하거나 외환에 시달리는 시기에는 전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중국의 화이관념이 시대와 국력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大一統사상의 주도하에 화이분별론이 강조되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sup>17)</sup>

상술한 화이관념에 근거한 세계질서는 기능적으로 다원적인 통치관계와 원리로 안과 밖을 통치 규율하는 중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이 질서 안에는 중앙의 朝廷, 조정이 지방에 파견한 관료의 직접통치, 소수민족의 土司,

15) 권선홍,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사상,” 『부산외대국제문제논집』, 9집(1997년 12월), p.12.

16) 金翰奎, “漢代의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중국의 天下思想』, (서울: 민음사, 1988), pp. 91-92.

17) 권선홍(1997), pp. 19-26.

士官에 의한 간접통치, 理藩院이 관할하는 이민족통치, 그 밖으로 국제관계에 해당하는 朝貢체제와 互市체제, 또한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化外지역이 존재한다.<sup>18)</sup>

바로 상술한 화이관념에 근거한 세계질서가 근대이전의 동아시아국제질서이다. 이러한 중화세계질서는 天下=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삼고 그 질서원리가 개인으로부터 가족, 사회, 국가, 국가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세계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질서원리의 기본은 유가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화이질서는 춘추전국시대 이래 중국대륙에서 흥망성쇠한 국가들 사이의 질서로 등장하여 주변 제국에 퍼져나간 후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정치, 문화적으로 포괄하는 세계제국을 건설한 당나라 무렵부터 세계질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2. 화이사상과 국제관계의 제도화: 조공제도

이상에서 살펴본 화이사상은 중국 역대왕조의 대이민족정책(=대외정책)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었다.<sup>19)</sup> 전통적으로 중국의 이민족지배방식으로는 군현지배와 책봉·조공제도가 있었다. 군현지배는 이민족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중국의 판도로 편입시키고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장 강도 높은 지배방식이었다. 가장 약한 지배방식은 이민족의 군장에게 관작을 수여하여 명분상의 신복·신속관계를 설정하고 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려는 책봉·조공제도였다. 그러나 한나라 이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책봉조공제도였다.<sup>20)</sup>

비록 역사적으로 중국 중심의 단원적 대외관계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대등한 존재를 인정하는 다원적인 대외관계가 존재한 적도 있지만,<sup>21)</sup> 상하차등관

18) 김봉진, “화이질서의 재해석”, 『전통과 현대』, 1997년 겨울호, pp.244-245.

19)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 영토 확장과 이민족문화의 흡수, 분열시기 분열된 국가들 사이의 각종 책략과 무자비한 경쟁, 그리고 정복 이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동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국의 외교관계의 전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Michael H. Hunt, *The Genesis of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1-9.

20) 유경민, “중국·북한관계를 통해서 본 중화사상의 현대적 해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2000), pp.18-19.

21) 中村榮孝는 화이관계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양자가 군신관계에 있는 책봉체제, 둘째, 부자, 형제 등 혈연의제적인 盟約이 체결되어 있는 會盟체제, 셋째, 조공

제를 전제로 하는 책봉조공제도는 역대 중국 제왕이나 유학자들의 이상이었으며, 대표적인 외교제도로써 장구한 기간 시행되어 왔다. 이리하여 조공제도는 중국과 주변 민족·국가간의 관계를 중화사상과 유교원리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상하주종관계로서 제도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2)</sup>

역사적으로 조공체계는 춘추전국시대의 주(서주와 동주)나라 왕조가 지방의 제후를 책봉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확립시켜주는 대신 제후는 그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전시에 왕조를 보위하고 평시 일정시기에 예물(貢)을 가지고 왕조를 참배(朝)한 데서 유래한다. 그 후 이 체계는 大小의 제후국 사이로, 그리고 漢대에 이르러 주변국에게로 퍼져나가 국제관계를 규정, 규율하는 원칙, 질서의 하나로 발전하였다.<sup>23)</sup> 또한 이 제도는 魏晉南北朝시대를 거쳐 수당시대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더욱 성숙되어 중화세계질서의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宋代에 이르러 북방 이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한족의 민족적 감정이 크게 자극 받았고, 특히 성리학이 대두하면서 중외관계를 매우 규범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그 결과 중·외간에 대등관계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오로지 상하차등의 조공관계만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같은 송대의 태도는 명청시대에 그대로 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한층 강화된다. 그리하여 중국과 이민족간에 조공관계 외에도 대등관계나 사적인 통상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해 왔지만, 명대에 이르러서는 폐쇄적인 외교정책으로 원칙상 조공관계만이 유일한 것으로 되었다.<sup>24)</sup>

이같은 華夏중심적 조공관계는 중국과 이민족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국제관계로, 조공의 전제로서 조공국은 중국으로부터 국왕의 승인 및 책봉을 받아야 하며, 국왕이 교체되거나 경축 등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여 참배를 해야 하고, 중앙정권의 각종 활동에 신복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중국

은 행하여지나 군신관계가 없는 修貢체제, 넷째, 공식외교관계의 성립없이 사적인 통상만이 공인되는 사통상체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中村榮孝, 『日朝關係史の研究』, 上(東京: 吉川弘文館, 1965), p.3, 권선홍(1997), p.186, 재인용. 한편 김봉진은 화이관계를 조공체계와 互市체제로 구분하고 있다. 그이 따르면 조공체계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가간 외교체계로서 정치, 경제, 군사 등 우호관계를 수립 유지시키는 체계이고, 互市체계란 국가간 무역을 허용, 통제관리하는 체계로서, 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경제적 외교관계의 하나로 오늘날의 영사관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봉진(1997), pp.246-248.

22) 권선홍(1997), p.31.

23) 金翰奎,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서울: 일조각, 1982), pp.113-114.

24) 권선홍(1997), pp. 36-38.

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방식이었다. 중국은 이같은 조공국을 근대 서구적인 의미의 외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내외 상하로 층을 이루며 황제를 호위하는 울타리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서구의 주권국가체계가 국가간 평등 및 상호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법체계에 근거하고 있지만, 조공체계에서는 중국의 조공국에 대한 간섭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sup>25)</sup>

따라서 상술한 조공질서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종주국인 중국이 국가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조공국은 이로 인하여 상설적인 군사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는 지역내부의 분쟁을 무력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조공국에게 비관세 교역이라는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세계에 대하여 매우 매력적인 상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셋째, 조공질서가 신봉하는 이념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가 四海를 은혜와 덕으로 교화하여 다른 성질의 문화를 물리친 것이며, 조공국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절차를 복행하면 조공국이 되어 조공체계내의 다른 기타의 조공지역과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사실상 이질적인 요소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을 핵심으로 하여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와 서북아시아 및 인도경제권과 교차되는 지역을 밀접하게 연결한 아시아 전 범위에서 존재하는 조공관계와 조공무역관계는 하나의 유기적인 整體이며, 아시아만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역사체제라고 볼 수 있다.<sup>26)</sup>

결국 이와 같은 조공관계는 바로 종주국이 국제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소프트 파워(문필과 덕에 의한 교화 및 무역기회의 제공)을 조공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세계패권체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조공관계는 결코 무력이나 수탈에 의한 지배 종속관계가 아니라 온정, 이익공여와 존경, 감사의 교환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로마제국이나 근대 서구식민지체제와 같은 직접적인 지배 통제관계가 아니라 교화·덕화의 과정이다.<sup>27)</sup> 따라서 국가간 관계가 비록 상하차등적이었으나 상호 대립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大同세계를 추구하는 이른바 유기체적 위계주의가 강조되었다. 이같은 화이질서 혹은 華夏중심적인 동아시아질서는 19세기 중국에 대한 서구제국주

25) 喻希來, “重新審視中國曆史大時代” 『戰略與管理』 2000年 5期, p.66.

26) 喻希來(2000), p.66.

27) 권선홍,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 권선홍·황귀연·김홍구·박장식·우덕찬, 『전통시대의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사, 1999), pp. 21-22.



의 침입으로 중화세계가 붕괴되기 전까지 동아시아지역의 국제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 Ⅲ. 조화세계론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조화세계론의 등장과정과 배경

조화세계론은 21세기 초 중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 제기되었고, 국가 대전략의 새로운 관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화세계론에 대한 중국 지도자의 언급은 2003년 12월 10일 원자바오(溫家宝) 총리가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행한 한 연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중국의 전통 문화 중 조화(和諧)사상을 설명하였다.<sup>28)</sup> 그 후 2004년 10월 14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통하여, 양국이 평화와 발전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실현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화세계관념이 처음으로 국제정치영역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sup>29)</sup>

그러나 조화세계라는 용어가 보다 완결된 형태의 이론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 4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연설에서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상이한 문명의 우호적 공존과 평등한 대화,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여 함께 조화세계를 구축하자”는 언급을 통하여, 비교적 완성된 형태의 조화세계이론을 처음으로 다자적인 국제조직에서 제기하였다.<sup>30)</sup> 그 후 2005년 9월 15일, 후진타오는 또 다시 유엔성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지속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자>주제의 연설을 하면서, 조화세계의 함의 및 그 실현 경로, 전략적 함의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평화적 발전 및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 기타 국가와의 평화와 번영,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sup>31)</sup> 2005년 12월 22일

28) 『人民日報』 2003/12/17.

29) 『人民日報』 2004/10/15.

30) 『人民日報』 2005/4/22.

31) 『光明日報』 2005/9/19.

중국정부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길>이라는 책에서 민주, 화목, 공정, 포용이라는 4개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조화세계의 함의를 개관하고, 국제정치, 안보, 경제발전, 문명과 대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화세계 건설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조화세계이론은 지역협력의 방향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6월 15일, 후진타오는 상하이협력조직(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수뇌회담에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들은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본 지역을 평화, 공동 번영의 조화지역으로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조화세계이론을 지역협력의 방향으로 제기하였다.<sup>32)</sup> 이 연설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각종 국제무대에서 “조화아시아(和谐亚洲)”<sup>33)</sup> “조화중동(和谐中东)”<sup>34)</sup> “조화동북아(和谐东北亚)”<sup>35)</sup> 등의 다양한 지역적인 구상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질서의 형성방향으로 조화질서의 이념과 함의가 보다 진일보하게 명확해졌다. 2007년 17차 당대회 이후에도 조화세계는 주요 당대회나 공식적인 문건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조화세계론은 그동안의 중국의 국제질서이론의 계승이고 새로운 창조로,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지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화세계의 기본 이념과 발전 목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sup>36)</sup> 그러나 조화세계론의 제기는 처음부터 일정한 개념적 완결성을 가지고 제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정책적 방침을 모색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은 도광양晦(韬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为)를 지침으로 삼아 국제사회 주변주에 머물면서 소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2년 16차 당대회이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화평굴기(和平崛起)와 평화발전노선을 통하여,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적극적인

32) 『人民日报』 2006/6/16(第一版).

33) 胡锦涛, “加强友好合作 创建美好未来”, 『人民日报』 2005/11/18(第一版).

34) 胡锦涛, “促进中东和平 建设和谐世界”, 『人民日报』 2006/4/24(第一版).

35) 吴仪, “中国政府愿与各国共同构建繁荣和谐东北亚”, [http://www.gov.cn.lhdh/2006-09/02/content\\_376324.htm](http://www.gov.cn.lhdh/2006-09/02/content_376324.htm) (검색일: 2008/1/30).

36) 刘清才(2008), p. 79.

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sup>37)</sup> 그러나 화평굴기론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주요하게 중국 위협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 강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타이완 문제의 해결에서 무력개입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화평굴기론은 공식석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평화발전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평화발전론은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화평굴기론과 구별되는 외교정책의 발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함의를 제기하지 못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다. 결국 화평굴기와 평화발전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전략적, 이념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조화세계론이 등장하였다.<sup>38)</sup>

그렇다면 중국은 조화세계론을 통하여 대외정책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한마디로 증강된 국력에 기초하여 세계질서에 대한 거시적인 구상을 제기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단극체계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화세계론의 등장배경에 대한 중국내의 학자들의 견해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첫째 경제의 고속발전을 기초로 하여 중국이 세계에 대한 청사진과 이상으로서 조화세계론을 제기하였다; 둘째 비록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중국이 평화적 발전의 길을 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일종의 선서에 불과하며, 중국이 전체 세계의 발전을 어떻게 고려하고 획책하고 있는가,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구상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질문에 화답하기 위하여 조화세계론이 제기되었다; 셋째, 중국의 국내 조화사회의 건설은 조화세계의 건설을 위하여 가치관적 기반과 이론 소양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조화세계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넷째, 중국의 신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은 조화세계 이념을 제기하고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와 조건을 창조하였다; 다섯째, 미국이 현재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담론의 주도권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하여 인권, 민주, 자유, 평등 등의 용어들이 미국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담론 주도권으로부터 다양한 가치와 문명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로 조화세계론이

37) 화평굴기론에 대해서는 김예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2005), pp.215-233 참조.

38) 하도형(2008), pp. 171-177.

제기되었다.<sup>39)</sup>

결국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화세계론은 다음 두 가지의 전략적 의도에서 제기되었다. 첫째,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이다. 기존의 화평굴기론과 평화발전론을 통하여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중국위협론에 대한 불식전략과 함께 더욱 더 능동적인 상황타개를 위해 기존의 화평굴기와 평화발전이 제시하지 못한 보편적 이상과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보편적인 이상 제시를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추출함으로써 강대국의 이미지에 걸맞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자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 수립 시도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이 기초하여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자신의 종합국력과 영향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발전방향 혹은 청사진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곧 중국적 가치관과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체제와 질서의 보편적 이상과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담론권 확대와 게임 규칙의 제정권 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sup>40)</sup>

## 2. 조화세계론의 내용적 구성

조화세계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용어가 처음으로 비교적 완성된 형태로 제기된 후진타오 주석의 유엔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동 연설에서 조화세계론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첫째,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공동안보를 실현하며, 둘째, 상호이익협력을 견지하여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셋째, 포용정신을 견지하여 조화로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고, 넷째, 온당한 방침을 견지하여 유엔개혁을 추진한다.<sup>41)</sup>

그러나 이와 같은 개괄은 조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에 가까우며, 조화세계가 지향하는 이념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39) 肖晞·于海洋, “试论和谐世界理念” 『理论探索』 2006年 第3期, pp.41-43; 任晶晶, “中国和平发展国际战略的总纲-和谐世界理论研究述评”, 『学术述评』 2008年 第3期, p.72.

40) 하도형(2008), pp. 181-183.

41) 『人民日报』 2005/9/16.

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 입장이 표명된 것은 2006년 8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4가지의 구체적 주력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2)</sup> 첫째, 상호존중, 인식공유 확대, 조화로운 공존, 각국 인민의 자주적인 사회제도와 발전경로선택 존중, 각 국가의 평등한 국제 업무참여, 국제관계의 민주화 촉진이다. 둘째, 협력심화, 공동발전, 상호이익과 공영, 경제 글로벌화와 과학기술진보 성과의 공동향유, 세계의 보편적 번영을 촉진한다. 셋째, 다른 문명과의 교류 강화 및 이해증진과 상호발전 촉진, 세계의 다양성 제창, 인류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추동한다. 넷째, 각 국가의 상호신뢰 심화 및 대화강화와 협력증진, 인류가 당면한 각종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촉진, 세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한다.

또한 2007년 10월 17차 당대회 보고는 조화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안보, 환경보호 등 5가지 방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함의를 설명하였다. 첫째,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 평등한 협상,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둘째, 경제적으로 상호협력과 상보성, 경제의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문화적으로 상호 본받고, 차이점을 나누고 공통점을 추구하며,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문명의 번영과 진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넷째, 안보상으로 상호 신뢰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전쟁수단을 통한 국제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평화적 방식을 통한 국제의 분쟁의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보호에서 상호 돕고 협력하여 추진하며, 공동으로 인류의 생존 공간인 지구를 보호한다.<sup>43)</sup>

조화세계이론은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 인정과 함께, 언론매체의 홍보 등을 통하여 개념적으로도 점차 풍부해져 갔다. 중국내 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조화세계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화세계에서 제기하는 세계 질서관 및 현재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이다. 조화세계론은 국제사회의 상태를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천하주의(天下主義)로 인식한다. 세계(天下)를 인류의 공동의 정치적인 공간과 자원으로 간주하고, 세계를 축도로 하여 세계에 속하는 정치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세계

42)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舉行”, 『人民日報』 2006/8/24.

43)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大旗幟，為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網』 (2007年 10月 15日).

를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선형적 단위로 볼 때, 세계에 속하는 거시적인 이익과 가치와 책임을 바라볼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하주의세계관은 전통적인 천하질서관과는 달리, 민족주의를 초월할 것을 요구하지만 민족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는 수정된 민족주의와 수정된 천하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화세계론은 국가 간 민족적 이익의 점진적 협조를 통하여 인류의 전체적인 이익이 최종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4)</sup>

이런 세계질서관을 기초로 하여, 조화세계론을 제기하는 것은 현 시대의 성격과 국제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조화세계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로,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조화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어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근거로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와 이익 다원화, 다극화, 문화적 다양성의 심화를 들고 있다. 그리고 비록 미국 중심의 불공정한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평화적인 세력전이 현상으로 조화세계가 건설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둘째 국제관계의 성격과 조화세계의 주요 내용이다. 조화세계론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이익충돌을 제로섬게임이 아니며,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간 이익의 상호 수용성을 믿고 협력과 협상을 통하여 세계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의 국가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6)</sup> 또한 다원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국제질서의 수립을 강조한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 위커핑(俞可平)에 따르면 이상적인 조화사회는 다원적 세계이고, 민주적인 세계이며, 공정한 세계, 관용적인 세계이고, 진실한 세계, 협력하는 세계, 상호 돕는 세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제사회이고, 전 세계가 하나의 가정이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sup>47)</sup>

44) 李宝俊·李志永(2008), p. 82.

45) 俞可平, “‘和谐世界’理念下的中国外交”, 『中新网』 2007/4/24.

46) 李宝俊·李志永(2008), p. 83.

47) 俞可平, “‘和谐世界’理念下的中国外交”.

이처럼 조화세계론은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국력의 차이 및 이로 인한 국가의 역할의 차이가 존재함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서로 다른 능력에 기초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에 따른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지위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와 동아시아에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8)</sup>

이처럼 조화세계론은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나 각종 NGO의 기본적인 역할과 권리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민주화, 다양성, 협력적이고 다자적 안보 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강대국의 역할 및 권리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조화세계론’을 제기한 것은, 협력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안보 환경을 마련하고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과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하는<sup>49)</sup>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화(和)를 기초로 한 가치관이다. 중국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화세계이념은 중국 고대의 조화(和諧)문화와 영속적 평화관을 현실 외교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남과 어울리면서도 맹종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는 사상(和而不同)”의 실현이다. ‘화이부동’은 중국 고대에 국제관계측면에서 발전된 정치사상으로, “화(和)”가 차별과 모순을 인정하는 조화(和諧)를 말한다며, “동(同)”은 차이를 부정하는 동일성을 의미한다.<sup>50)</sup> 이 사상은 국가간 관계에서 화(和)를 강조하는 동시에 차이(異)의 존재를 견지하고, 차이의 합법적인 존재를 장려하며, 그리고 차이의 비교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조화에도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사상은 다른 민족, 국가, 문화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1)</sup>

넷째 외교수단과 조화세계의 추진방식이다. 조화세계론은 새로운 질서는 역

48) 秦亚青, “和谐世界: 中国外交新理念”, 『前线』 2006年 12期, pp.22-23.

49) 吴逃雪·马廷深, “构建和谐社: 中国外交的新理念与新实践” 『安徽前线』 2006年 12期.

50) 李文, “东亚共同体的逻辑与形态”, 『东亚合作论坛 2009: 东亚地区主义的现状与展望』(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东亚研究中心 主办, 2009年12月19日)发表文, p.6.

51) 王柏松, “中国传统文化中的和谐思想对构建和谐世界的启迪”, 『管子学刊』 2009年 第二期, pp.87-91; 徐诚·寿杨宾, “坚持和而不同, 构建和谐世界”, 『孔子研究』 2006年 第6期, pp.10-15.

사발전과 시대의 진보를 실현하고, 과거시대의 권력정치라는 낡은 길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화세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첫째,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 평화와 안보를 공동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다자적 집단안보메커니즘의 건설, 지역공동체의 건설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 공동 번영의 실현, 포용정신의 견지를 통해 조화세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2)</sup> 둘째,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행위를 규범화하여,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3)</sup> 셋째, 중국 전통의 전략문화의 영향력, 친화력, 흡인력(혹은 매력)을 이용하여 조화세계 개념을 세계에 유행하게 하여 강대국의 이미지에 걸맞는 소프트파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sup>54)</sup>

#### IV. 중화질서와 조화세계론의 동아시아지역 질서관 비교

동아시아지역 질서에 대한 중화주의 질서관은 2천년에 가까운 긴 역사속에서 실제로 존재해 왔다면, 조화세계론은 중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고 전략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양 질서관을 등장배경 및 현실적 존재조건, 사상 및 이념적 차원, 국제관계의 성격에 대한 시각, 외교적 수단 및 방식 등 4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등장배경과 현실적 조건에 있어서, 중화질서는 중화제국이 존재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현실적인 조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반면에 조화세계는 세계화로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와 국제관계에서 힘의 다원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미국의 패권적인 질서하에서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질서에서 세력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조건하에서 등장하였다. 화이사상과 조공책봉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화주의적 질서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졌다. 이 질서는

52) 秦亚青(2006), pp.22-23.

53) 孙建社, “构建和谐社会:中国外交战略的新理念”, 『南京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第2期, pp. 10-14.

54) 刘国华·李阵, “和谐世界理念及其体系构建”, 『理论建设』 2006年 第6期, pp.8-11.



역대 중국 왕조의 한족 여부 및 유교화정도, 조공국들의 중국과의 지리적 원근이나 정치 사회적 조건, 특히 유교 문명권의 수용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있지만,<sup>55)</sup> 중국의 제국질서가 유지되어 오는 동안 동아시아지역 질서로 자리해 왔다. 한편 조화세계론이 등장한 배경과 현실적인 조건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세계화로 국가 간 상호의존이 강화되면서 다원적이고 민주화된 국제질서의 발전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질서의 세력전이 일어나고 있는 조건을 특징으로 한다.

<표 1> 중화질서와 조화세계의 비교

	중화질서	조화세계
배경 및 현실적 조건	○ 중화제국의 존재와 중국의 패권적인 지위의 유지.	○ 미국의 중심의 패권적 질서속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세력전이 발생.
사상, 이념적인 차원	○ 화이사상과 사대관념에 기초 ○ 중국적 가치와 문화를 보편적 가치로 간주	○ 和而不同: 차이를 인정하면서 화합을 강조,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 강조 ○ 실제로는 문화와 가치영역에서 중국의 담론 주도권 확보 및 중국적 가치의 보편화 추구
국제관계에 대한 시각	○ 천하질서: 폐쇄적인 국가관념을 뛰어 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 문화 문명공동체 ○ 위계적 국제관계: 유가의 윤리관념에 기초한 일종의 주종관계	○ 주권국가를 전제로 한 유기체적 세계(천하)질서. ○ 제한된 평등주의: 주권국가의 독립성 인정, 동시에 강대국의 우월적인 지위 인정. ○ 중국: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지님.
외교수단과 방식	○ 힘(무력)+경제(조공무역)+유교적 가치관 ○ 무력보다 황제의 덕치와 예치를 강조	○ 힘(종합안보)+다자적 국제조직+경제+문화자원 ○ 무력보다 다자외교와 소프트파워외교 강조

55) 권선홍(1999), p. 15.

따라서 중화질서론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제국적인 질서를 공고화하고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조화세계론은 세계화로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존재하는 현존 질서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질서의 민주화, 다양성, 협력과 공존을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현존 질서의 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국력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사상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로, 중화질서에서는 화이사상에 기초하여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설명하고 있지만, 세계 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문화적으로 차등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로 성격지우고 있다. 중국은 스스로를 지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천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수한 문화의 원천이라고 자부한다. 아울러서 중화와 이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중화사상(화이사상)과 중국과 중국 주변의 조공국들이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사대관념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조공국들 사이에는 현실적인 외교제도로서 책봉과 조공제도가 형성, 운용되었고, 이러한 이념과 제도 전반을 유교사상, 규범에 따라 인식하고 정당화하였다.<sup>56)</sup>

이에 반해 조화세계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 조화와 협력(和而不同)”사상의 실현으로 간주된다. 화이부동은 국제관계에서 화(和)를 강조하는 동시에 차이(異)의 존재를 견지하고, 차이의 합법적인 존재를 장려하고, 그리고 차이의 비교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조화에 도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 사상에 입각하여 다른 민족, 국가, 문화가 조화롭게 나아가도록 하면서 화합하는 세계를 이루는 원칙이라는 것이다.<sup>57)</sup> 이점에서 볼 때, 조화사상은 사상적으로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의 인정, 평등과 정의에 기초한 국제사회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내에서는 조화세계론이 기초하고 있는 사상적인 내용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사상과 문화적 가치로 발전되어 가치와 사상의 영역에서 담론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의 한 학자는 포용, 관용, 협력, 조화 등을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56) 권선홍(1999), p. 15.

57) 王柏松(2009), pp.87-91;徐誠·寿杨宾(2006), pp.10-15.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가치는 전 인류의 가치관이 되어, 전 인류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8)</sup> 이는 조화세계론을 통하여 문화와 가치의 차이성과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조화세계라는 중국적 가치를 새로운 가치체계로 확립하고, 이를 전인류적 차원의 보편적 가치로의 발전을 의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중화질서의 가치와 사상체계와 비교할 때 조화세계론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가치와 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제관계를 바로 보는 시각의 차이로, 양자 모두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전체질서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천하주의적인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중화질서론에서는 세계를 서구의 근대 국제사회와는 달리, 나와 남의 나라를 준별하고 대립시키는 관념이 매우 희박하며, 오히려 국가간의 관계를 군신관계 부자관계로 비유하여 상하포섭관계로 보는, 곧 폐쇄적인 국가 관념을 뛰어 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 문화와 문명공동체로 간주한다.<sup>59)</sup> 또한 중국은 스스로를 지리적 및 정치적으로 천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수한 문화의 원천이라고 자부하며, 아울러서 중화와 이적(夷狄: 非漢人)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중화사상과 중국 주변의 조공국들이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사대(事大)관념을 기반으로 하였다.<sup>60)</sup>

그러나 조화세계론은 전통적인 중화질서처럼 상하간의 차등적인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 세계질서가 아니라 주권국가간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세계질서 혹은 천하를 상정하고 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이러한 조화세계론의 특징에 대하여, 민족국가 간 질서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민족국가 간의 국제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정된 천하주의로 간주하고 있다.<sup>61)</sup> 또한 어떤 학자는 오늘날의 천하주의는 화이와 야만과 문명의 차이에 기초한 천하주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간의 공존과 평화적 교류를 추구하는 천하주의라고도 주장한다.<sup>62)</sup> 그리하여 조화세계는 세계화의 배경에서 제기된 국

58) 俞新天(2008), p.22.

59) 이용희, 『한국 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1977), p.156, 173, 177.

60) 권선홍(1999), pp. 14-15.

61) 李宝俊·李志永(2008), p.82.

제질서의 관념으로, 고대 천하대동의 이상이 지구화시대에 새롭게 발전된 것으로 간주된다.<sup>63)</sup>

또한 중화질서는 국제관계를 유교적 이념에 기초한 위계적 관계로 인식하였다. 중국과 조공국들 사이에 현실적인 외교제도로서 책봉·조공제도가 형성 운용되었고, 이러한 제도 전반을 유교사상, 규범에 따른 상하차등의 관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조공국 또는 조공국들과 조공국의 관계는 상호 대립 투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추구하는 이른바 유기체적 위계주의가 강조되었다.<sup>64)</sup> 따라서 중화질서는 유가의 윤리관념에 기초하여 건설된 일종의 주종관계고, 주종관계를 인정한 것에 기초한 일종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sup>65)</sup>

이에 반하여 조화세계론은 주권국가간의 주권독립과 평등을 강조한다. 또한 약소국들의 힘이 성장하여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강대국과 힘의 균형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6)</sup> 이처럼 주권국가의 독립을 강조하고, 약소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의 강화를 인정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 이익충돌을제로섬계임으로 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 모두 이익실현을 둘러싸고 원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고대의 차등적인 조화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세계론은 국가별 능력의 차이는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책임은 권리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7)</sup> 그리고 현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지위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와 동아시아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8)</sup>

이는 비록 중국이 세계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세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담론 주도권의 쟁취를 강조하는 등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62) 盛洪, “从民族主义到天下主义” 『战略与管理』 1996年 第1期, p.19.

63) 任云仙(2009), p.184.

64) 권선홍(1999), p. 20.

65) 任云仙(2009), pp.188-189.

66) 俞新天, “和谐世界与中国的和平发展道路”, 『国际问题研究』 2007年 第1期, pp.7-9.

67) 吴建民·俞新天 外12人, “和谐世界与中国外交”, 『外交评论』 2006年 第2期, p. 16.

68) 秦亚青(2006), pp.22-23.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강대국으로서 책임을 지고 역할을 발휘하면서, 국제질서의 건설자이고, 국제적 규칙제정에 대한 참여자며, 국제질서의 이익 상관자로서 국제관계를 건설하고자 한다.<sup>69)</sup> 결국 국제사회에서 약소국보다 강대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화세계론이 강조하는 국제관계 역시 제한된 평등에 기초한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외교수단과 방식이다. 전통적인 중화질서에서 주요한 외교수단은 힘과 중국의 우수한 문화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주요한 수단인 조공무역과 유교적 가치였다.<sup>70)</sup> 그러나 중화질서는 기본적으로 도덕을 매우 중시하였던 하나의 윤리적 질서였다. 따라서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우수한 문명과 덕, 특히 황제의 덕화에 기초하였다. 황제는 조공국에 대하여 예로써 위무하고 덕으로써 편안하게 하여 一視同仁의 모범을 보이며, 중화문명의 은택을 널리 베풀고 교화, 덕화시킴으로써 비중국인까지 중국화 하여 마침내 내외·원근 즉 천하를 합쳐 하나가 되는 것이 이상이었다. 무력정보보다는 도덕교화를 통하여 “만방의 協和”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조공국들은 종적으로는 중국과 사대·조공을 행하고, 횡적으로는 이웃과 우호교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유교 문명권내의 상호협력과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였다. 한마디로 무력이나 수탈에 의한 지배 종속관계가 아니라, 온정, 이익의 공유와 존경과 감사의 교환관계였다.<sup>71)</sup>

조화세계론 역시 무력사용을 선호하기보다 경제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에 기초한 소프트파워외교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외교를 강조한다. 이처럼 소프트파워와 다자주의외교를 강조하는 데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안보관에서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안보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군사력 외에 경제, 과학, 문화, 에너지, 정보 등이 안보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국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가들 사이에 상호이익 존중과 신뢰

69) 苑爽·项茹敏, “和谐世界与构建国际新秩序”, 『边疆经济与文化』2008年 第3期, pp.77-78.

70)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플레테이아, 2006), p.138.

71) 권선홍(1999), pp. 18-21.

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안보조건을 창출하고 집단안보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 민주화된 국제관계속에서 평화적 담판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안보문제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sup>72)</sup> 바로 이러한 종합안보관에 기초해 볼 때, 각종 국제조직과 지역조직, 그리고 집단안보의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외교는 핵심적인 외교영역이다. 중국이라는 신흥대국이 불러일으킨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가 주변국으로부터 수용되는 지역질서의 틀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새로운 지역질서관, 즉 조화지역의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화지역의 건설은 바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인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이러한 기제는 법률과 조약의 등을 통한 제도화된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73)</sup>

또한 중화질서에서 문화와 경제적 수단에 기초하여 평화가 유지되었듯이, 오늘날에도 문화와 경제 등 소프트파워자원을 활용한 외교를 매우 중요시 한다.<sup>74)</sup> 이들은 동아시아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이해를 강화하고, 공동의 동아시아 문화가치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5)</sup> 그러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담론 주도권을 패권적으로 장악하여 소프트파워의 핵심자원인 미국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회제도가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고, 그 결과 다른 가치가 주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와 문화의 공존적인 질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화세계론을 통하여 담론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다.<sup>76)</sup> 이들은 중국문화 중 오랫동안 전해내려 온 조화사상은 포용, 협상, 구동존이, 화이부동 등 그 내용이 풍부하여, 이를 지역 정체성을 위한 가치관으로 삼아 지역협력에 적절히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에 기초하여 서방과 구별되는 동아시아적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이를 인류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가치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에 기초하여 미국의 가치외교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7)</sup>

72) 李宝俊·李志永(2008), pp. 80-84.

73) 俞新天, “中国培育东亚认同的思考”, 『当代亚太』2008年 第3期, pp. 25-28.

74) 宋四辈, “古代中国所建立的国际秩序的两重性及其现实意义”,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8年 第6期, pp.42-43.

75) 俞新天(2008), P. 29.

76) 许晓春, “和谐世界理念与中国的国际新秩序观”, 『天府新论』2009年 第2期, p.16.

## V. 결론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한 중국은 이른바 조화세계론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이른바 ‘조화로운 동아시아’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과거 역사속에 실재했던 중국 중심의 패권적인 동아시아 질서, 즉 중화질서의 다른 형태에 불과한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인 동아시아질서의 모색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화세계론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주장을 종합하면서 중화질서의 논리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 질서관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화질서론은 2천 년이라는 긴 역사동안 실재해 온 중화제국의 질서의 틀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반면에 조화세계론은 근대화와 함께 중화제국이 붕괴되고 동아시아질서의 주변으로 퇴각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에 기초하여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제기한 지역질서(혹은 세계질서) 구상이다. 또한 세계화로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존재하는 질서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중화질서론을 기존의 제국적인 질서를 공고화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조화세계론은 현존하는 질서의 틀을 새로운 질서의 틀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질서의 민주화, 다양성, 협력과 공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새로운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사상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로, 중화질서에서는 화이사상에 기초하여 세계를 문화적으로 하나의 차등적인 질서로 규정짓고 있지만, 조화세계론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관념에 기초하여 차이와 공존 및 평등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세계론을 통하여 중국이 가치와 사상의 영역에서 담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의 가치와 문화를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중국 중심적 문화적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화질서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77) 俞新天(2008), pp. 30-35.

셋째, 조화세계론은 전통적인 중화질서처럼 상하간의 차등적인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 국제관계가 아닌 주권국가간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국제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능력에 따른 책임과 권리의 차이 및 강대국의 우월적인 지위도 인정한다. 그리고 중국이 부상한 국력에 기초하여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새로운 국제질서의 전환과정에서 중국은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약소국보다 강대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록 중화질서처럼 상하차등의 주종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국제질서를 제한된 평등에 기초한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중화질서에서 주요한 외교수단은 조공무역이라는 경제적 수단과 유교적인 가치체제로, 덕치와 호혜적인 행위에 기초한 이른바 소프트외교를 강조한다. 조화세계론 역시 무력사용을 선호하기보다, 경제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에 기초한 소프트파워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문화적 영역에서의 담론과 규칙제정에서 주도권의 확보를 강조하고, 다자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간의 교류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외교를 강조한다. 따라서 외교수단의 관점에서 볼 때, 양자는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결론에 기초할 때,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 및 동아시아 질서구상으로 제기한 조화세계론은 소프트파워외교를 통해 중국적 가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국제질서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화질서론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조화세계론이 추구하는 동아시아질서가 단순한 구시대의 중화질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간 관계를 위계적인 주종관계를 기초로 한 중화질서와 달리, 주권국가를 단위로 한 국가간 관계 혹은 국제질서를 전제로하고 있다. 이는 곧 조화세계론이 구상하는 동아시아질서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근대화된 국제질서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화된 천하질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정된 천하질서’ 구상이라는 중국의 한 학자의 규정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중국이 조화세계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구상하는 동아시아질서는 소



소프트파워라는 매력외교에 기초하여 중국적인 문화와 가치가 지배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주권국가간 국제질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도적인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강압적인 패권적 질서추구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조화세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이상적인 가치와 정책들을 실천하면서 주권국가간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면 보다 민주화된 동아시아 질서추구로 나아갈 것이다.

상술한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조화세계론은 결국 세계화라는 조건하에서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미래의 동아시아지역(혹은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이다. 따라서 다극화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공존적 국가간 관계를 질서의 틀로 제시하면서, 현재의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비판하고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다자주의와 소프트파워외교를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데 주변국가로부터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강권적인 힘의 사용보다 주변국가들로부터의 동의에 기초하여 지역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결국 조화세계론은 아직 세계적인 강대국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통해 주변국가로부터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국제질서관에 대한 보편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 담론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 지역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극복하고 중국이 지역 강대국으로서 주도적인 지위를 공고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강대국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패권을 향한 중국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동아시아 각국이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규범을 주장함으로써 미국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중국위협론'을 극복함과 동시에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력에 기초한 강권적인 외교보다는 선린외교, 다자외교, 경제외교, 그리고 소프트파워외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선홍,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사상,” 『부산외대국제문제논집』, 9집(1997년 12월).
- \_\_\_\_\_,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 권선홍·황귀연·김홍구·박장식·우덕찬, 『전통시대의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사, 1999).
- 김봉진, “화이질서의 재해석”, 『전통과 현대』, 1997년 겨울호.
- 김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철학』, 379집 5호, 1992년(한국철학회).
-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2005).
- 金翰奎, “漢대의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중국의 天下思想』, (서울: 민음사, 1988).
- \_\_\_\_\_,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서울: 일조각, 1982).
- 박병광, “중국 2020: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동아시아연구원 세미나발표논문 (2009년 8월).
-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레테이아, 2006).
- 유경민, “중국·북한관계를 통해서 본 중화사상의 현대적 해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2000).
- 이용희, 『한국 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1977).
- 이정남, “중화사상과 근대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국제지역연구』 (2003, 4), 24집 1호.
- 이흥종·공봉진, “중국의 화이사상에서 화이개념의 재해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5집 2000년.
- 이춘식, 『中華思想』, 교보문고, 1998년.
- 하도형, “중국의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4집(2008년 2월).
- 龙中英, “中国的亚洲战略:灵活的多边主义”, 『世界经济与政治』 2001年 10期.
- 张小明, “中国与周边国家关系的历史演变”, 『国际政治研究』 2006年 第1期.
- 门洪华, “中国东亚战略的展开”, 『当代亚太』 2009年 第1期.
- 叶自成, 『中国大战略』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 杨宇·熊吴明, “和谐世界思想与中国软实力塑造”, 『国际关系学院学报』 2008年 第3期.

- 刘清才, “改革开放以来中国国际秩序理论的发展与创新”,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2008年 第4期(7月).
- 王公龙, “和谐世界:国际秩序的新构想和新范式”, 『现代国际关系研究』 2007年 第3期.
- 任云仙, “近代以来中国世界秩序观念的变迁”, 『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9年 3月.
- 李宝俊·李志永, “和谐世界观与霸权稳定论—一项比较分析”, 『教学与研究』 2008年 第6期.
- 江西元, “从新天下主义到和谐世界:中国外交理念选择及其实践意义”, 『当代亚太』 2007年 第12期.
- 喻希来, “重新審視中國曆史大時代”, 『戰略與管理』 2000年 5期.
- 『人民日報』 2003/12/17; 『人民日報』 2004/10/15; 『人民日報』 2005/4/22; 『人民日報』 2006/6 / 16(第一版); 『人民日報』 2005/9/16.
- 『光明日報』 2005/9/19.
- 胡锦涛, “加强友好合作 创建美好未来”, 『人民日报』 2005/11 / 18(第一版).
- \_\_\_\_\_, “促进中东和平 建设和谐世界”, 『人民日报』 2006/4 / 24(第一版).
- 吴仪, “中国政府愿与各国共同构建繁荣和谐东北亚”, [http://www.gov.cn.1dhd/2006-09/02/content\\_376324.htm](http://www.gov.cn.1dhd/2006-09/02/content_376324.htm)(검색일: 2008/1/30).
- 肖唏·于海洋, “试论和谐世界理念”, 『理论探索』 2006年 第3期.
- 任晶晶, “中国和平发展国际战略的总纲—和谐世界理论研究述评”, 『学术述评』 2008年第3期.
-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舉行”, 『人民日報』 2006/8/24.
-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大旗帜, 为夺取全面建设小康社会新胜利而夺门: 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人民网』 (2007年 10月 15日).
- 俞可平, “‘和谐世界’理念下的中国外交”, 『中新网』 2007 / 4 / 24.
- 吴逃雪·马延深, “构建和谐世界:中国外交的新理念与新实践” 『安徽前线』 2006年 12期.
- 秦亚青, “和谐世界:中国外交新理念” 『前线』 2006年 12期.
- 孙建社, “构建和谐世界:中国外交战略的新理念”, 『南京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第2期.
- 刘国华·李阵, “和谐世界理念及其体系构建”, 『理论建设』 2006年 第6期.

王柏松, “中国传统文化中的和谐思想对构建和谐世界的启迪”, 『管子学刊』 2009年 第二期.

徐诚·寿杨宾, “坚持和而不同, 构建和谐世界”, 『孔子研究』 2006年 第6期.

吴建民·俞新天外 12人, “和谐世界与中国外交”, 『外交评论』 2006年 第2期.

盛洪, “从民族主义到天下主义”, 『战略与管理』 1996年 第1期.

俞新天, “和谐世界与中国的和平发展道路”, 『国际问题研究』 2007年 第1期.

俞新天, “中国培育东亚认同的思考”, 『当代亚太』 2008年 第3期.

秦亚青, “和谐世界: 中国外交新理念”, 『前线』 2006年 12期.

苑爽·巩茹敏, “和谐世界与构建国际新秩序”, 『边疆经济与文化』 2008年 第3期.

宋四辈, “古代中国所建立的国际秩序的两重性及其现实意义”,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8年 第6期.

许晓春, “和谐世界理念与中国的国际新秩序观”, 『天府新论』 2009年 第2期.

李文, “东亚共同体的逻辑与形态”, 『东亚合作论坛 2009: 东亚地区主义的现状与展望』 (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东亚研究中心 主办, 2009年12月19日)发表文.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5.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s,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Calif: Rand, 2000).

David Shambaugh, “China's New Engagement with Aisa,” *Asia Wallstreet Journal*, March 2(2004).

Michael H. Hunt, *The Genesis of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14

## 중국의 인권과 인권외교

(China's Human Rights Diplomacy under  
its Characteristic Ideas of Human Rights)





# 중국의 인권과 인권외교

(China's Human Rights Diplomacy under its Characteristic Ideas of Human Rights)

최지영 | 한림대학교

## I. 들어가며

## II. 중국의 인권인식

1. 근대 중국의 서구 인권 개념의 수용
2. 현대 중국의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입장

## III. 중국의 인권외교

1.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인권외교
2. 중국의 인권외교의 특징과 함의

## IV.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 I. 들어가며

프랑스 혁명 이후 개인이 인간이기에 가지는 천부적·생득적 권리로서의 근대적 '인권'사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입헌국가의 보편적 명제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과 해석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 기독교나 이슬람, 유교와 같은 종교 혹은 문화, 그리고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와 같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이 서구 국가와 비(非)서구 국가(혹은 제3세계 국가) 간의 인권에 대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여, 국제관계에서 인권외교를 둘러싼 갈등은 오랜 역사를 지녀왔다. 최근에는 세계화의 흐름이 확산에 따라, 재스민 혁명에서 촉발된 리비아 사태이나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서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한계(즉 인권 범위의 한계)로 여겨진 주권도 현실 국제정치에서 인권을 매개로 한 외부적 개입과 변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단계에 이르게 되자, 인권의 본질과 인권외교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주권 국가 간 체제라는 현대국제관계체제에서 “국가 간 상호실체와 정당성 인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맞닿아 있다. 자주 논쟁이 되는 인권의 범위(humanitarian intervention), 즉 “국제사회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이념 하에 어느 정도까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가?” 혹은 “한 국가의 주권 범위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억압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한 국가가 주권 범위를 넘어서 다른 국가의 물리적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간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묻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인권관(국가관)에 따를 경우,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권의 국제적 공인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 인권외교의 철학적 바탕으로, 이에 자국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非)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민주평화론”이 그 배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를 그대로 현실 대외정책에 대입할 경우, 국제사회(혹은 자유주의적 인권 관을 수호하는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국제평화를 위해 타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억압적 정권에 대해서는 해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적 봉쇄나 물리적 봉괴와 같은 급진적 수단의 사용까지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철학적·역사적 배경 하에 자유주의적 인권관을 보편적 명제로 수용하고 있는 서구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 하의 인권담론 즉 그들이 보기에 비(非)민주주의 체제 하의 중국 인권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하겠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오늘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G2 체제를 논할 정도의 정치경제적 파워를 가지게 된 지금, 중국의 인권문제는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진영과 관계개선에 있어 핵심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천안문 사건과 반체제 인사문제, 파룬공(法輪功)과 같은 종교탄압 문제, 티베트·신장 등 소수민족 인권탄압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중국과 미국의 날카로운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 인 상황이다.

인권정책(Foreign policy in human rights) 혹은 인권외교(Human Rights Diplomacy)란 “국제관계에서 타국의 인권상황이나 정책에 관여하여 그 정책의 실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sup>1)</sup> 혹은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에 근거하여 자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타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정책과 인권외교 개념은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과 서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폭넓게 받아들여졌고,<sup>2)</sup> 무엇보다 미국의 외교에서 미국적 가치(사실상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양자·다자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이 글은 인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서방)의 대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

1) Human Rights in China.

2)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view Press, 1998), p.3; Costas Douzinas, *The End of Human Rights: Critical Legal Thought at the turn of the Century* (Oxford: Hart Publishing, 2000), p. 11.

3) 대부분의 경우, 비(非) 서구권 국가들의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 남용이 이뤄졌다고 보았기에, 지난 반세기 서구의 인권외교는 상당부분 비(非)서구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진행되어왔다.

제사회에서 인권담론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전제하에 “중국의 인권과 인권외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인식론적 기반에서 서구와는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이다.<sup>4)</sup>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인권의 본질과 해석에 있어서 서구와는 끊임없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 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의 “피부가 없는데 털이 있을 수 있는가? 국가의 독립적 주권이 없다면 인민의 생존과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sup>5)</sup>는 발언은 중국과 중국인의 인권인식을 잘 보여주는 언급이라 하겠다.<sup>6)</sup> 이에 이 글에서는 근대 중국이 서구 중심의 국가간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은 특수한 사회·역사적 경험이 중국의 서구 인권 개념 수용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이와 같은 중국의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을 “중국의 인권인식 혹은 인권관념”(China's perception (or ideas) on Human Rights)이라 정의한다.<sup>7)</sup> 중국의 인권인식과 이에 기반한 인권입장에 관해서는 II 절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중국 인권외교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4) 이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정 불변하는 사실(fact)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사회적 배경하에서 ‘구성(construct)’된 개념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다른 관념들과 상호 경쟁과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되는 열린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진제한다. 개념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Thomas J. Biersteker and Cynthia Weber ed.,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5) 鄧小平, <人民日報>(1991.5.11).

6) 근대 역사 속에서 중국은 서구의 보편적 인권주의에 따른 팽창정책의 피해자였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서구 국가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외부로 무한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권과 그 국경 내의 인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무참히 유린당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근대의 경험 하에서, 중국은 현재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의 인권외교 혹은 인권정책이라는 것이 인권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내정 간섭, 즉 주권침해이자 타국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이는 결국 중국의 부상을 무력화시키고(和平演變) 서구 중심의 패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중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 하여 강한 반발을 보이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민족주의적 정서와 연계되어 대다수 중국 인민들에 의해 지지되는 상황이다. 최지영, “주권과 인권: 인권담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중소연구』 제28권 제4호(2004/2005), pp. 67~68.

7) 이 글은 “개념”을 특정 시공간에서 공유되는 경험을 추상화 한 것으로 동시대 상호경쟁하는 여러 관념들이 고도화, 추상화된 것이라 본다. 인식주체가 현실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식 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그러한 인식작용은 인식 주체가 당시 처한 사회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권인식 혹은 인권관념은 서구의 인권개념에 대한 중국적 인식과 구성이라 하겠다.

서구적 의미의 ‘인권외교’ 혹은 ‘인권정책’을 일정한 목표 하에서 특정 의도와 수단을 가지고 진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인권의 경우, 힘의 정치(power politics)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현안과 연계 혹은 중층적·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인권외교’를 국제관계에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주는 일련의 정책적 입장과 대응이라고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중국의 인권외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8)</sup> 이에 이 글은 중국이 서구의 인권외교에 대하여 취하는 전략 혹은 정책을 ‘중국의 인권외교’(China’s Human Rights Diplomacy)<sup>9)</sup>라 정의하고, III 절에서 그 양태를 중국과 서구의 인권문제에 대한 갈등, 특히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II. 중국의 인권인식

### 1. 근대 중국의 서구 인권 개념의 수용

서구의 인권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중국의 근대적 지식인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모든 사회에는 인권에 상응하는 개념이 존재했으며, 전통 중국 역시 그러하였다는 “인권 개념 자생론”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근대적 개인의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구로부터 소개·수

8) 실제로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가 중국의 인권외교 및 정책의 전제하에 분석하고 있다. Andrew J. Nathan,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Quarterly* 139 (september, 1994), pp. 622~643; Ann Kent, *China and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The Limits of Complia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Elizabeth Economy and Michael Oksenberg eds, *China Joins the World: Progress and Prospect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0); James D. Seymour,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Relations,”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Policy Faces the New Millennium* (Boulder, Colo: Westview, 1998); Ming Wan,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Relations: Defining and Defending National Interes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1).

9) 이 글에서는 개념적으로 인권외교와 인권정책을 구분하도록 하겠다. 인권외교는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드러나는 정책이라 한다면, 인권정책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는 정책들의 모음이라 정의하도록 하겠다.

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0)</sup> 1895년 옌푸(嚴覆)의 『論世變之亟』에서 서구의 천부인권사상이 처음으로 정식 소개되었고, 그 후 프랑스 계몽주의 사조와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마젠중(馬建忠) 등의 학자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청조 말기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에서는 신민(臣民)의 기본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인권 개념이 제도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sup>11)</sup>

그런데 중국 근대 사상의 주류적 흐름에서 보면, 근대 중국이 서구의 사상과 제도를 수용한 것은 민족적 위기에 처한 중국을 구하고 부강하게 만들 최적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sup>12)</sup> 서구의 인권 개념의 수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근대적 지식인들의 수용과 이해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강유웨이(康有爲)의 경우, 대동세계(大同世界)나 남녀평등 등 시대의 제약을 뛰어넘는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 하였으나, 인권의 궁극적 보장은 입헌군주제의 틀 속에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sup>13)</sup> 이러한

10) 근대 이전 중국은 영어의 개인(individual) 혹은 권리(rights)에 해당하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권리”라는 개념은 19세기 일본이 서구 근대 사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합된 단어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권리(權利)란 1) 권세와 재화, 2) 권력과 힘을 가진 이, 3)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등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단어의 부재는 개인 혹은 권리 등과 같은 개념이 중국에서 자생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개인”이나 “권리” 등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념”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이는 설사 그 개념과 동일한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복합적 어휘를 통해 실질적 내용을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 사상과 윤리 체계에는 근대 서구의 자유주의에서 가정하는 개인 중심의 평등적 인권관이 발전되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설사 유교적 윤리 이론 체계 속에 “권리와 의무”의 유기적 관계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유교사상과 윤리 체계 속에 평등한 개인주의적 서구 근대 인권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사회관계 중 그와 상응하는 이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Henry Rosemont, “Why Take Rights Seriously?” Leroy S. Rouner ed., *Human Rights and the World's Religion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pp. 167~182.

11) 청 정부가 유신변법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흠정헌법대강>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적 문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 “신민의 권리의무”부분에 처음으로 법률적 범위 내에서 모든 언론, 저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모든 신민이 구속이나 구금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12) 문화와 도덕에 근거를 둔 중국적 전통 질서가 19세기 말 경쟁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럽 중심의 국가 간 체제와 조우하면서 생존을 위해 부강한 국민 국가와 민족주의 형성이 절대 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13) 郑杭生 主编 『人权新论』(北京: 中国青年出版社, 1993), pp. 264-265.

시각은 량치차오(梁啓超)의 국가와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인간이 인간이기에 가지는 생득적 권리”로서 인권을 논하였으나, 인민이 주체가 되는 그의 민권(民權)적 구상은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이 거세지고 중국이 분열적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유보적인 길을 걷게 된다. 결국에는 중국이 쇠약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군권(君權)에 비해 턱없이 약해진 민권으로 보아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구성원이자 토대”로서의 민권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sup>14)</sup> 특히 그의 국가유기체론은 사회진화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일치단결하여 부강한 민족과 국가만이 개체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5)</sup> 또한 불륜체리, 보댕, 루소 등 국가 그 자체를 최고의 목적적 존재로 보는 국가 이론에 동의하며,<sup>16)</sup> 집단 혹은 국가와 개체의 이익이 충돌되었을 때 집단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심지어 불가피할 경우 국가는 개개 국민의 목숨조차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7)</sup> 사실상 이러한 개체의 권리에 대해 국가(혹은 민족) 중심적 혹은 우위적 인식은 량치차오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청말(清末)의 양무운동(洋務運動), 유신변법(維新變法), 자강운동 등 제도권 내의 정치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근대 중국에서는 정치·경제·사상·도덕 등 사회문화 저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기하는 “신문화 운동”이 전개된다. ‘민주’와 ‘과학’의 가치 아래 진행된 신문화 운동이 인간에 대한 모든 속박을 깨뜨리고자 하는 인권의 전파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만 “구국(救國)과 구망(救亡)이 계몽을 압도했다”는 리저호우(李澤厚)의 진단<sup>19)</sup>에서

14) 梁啓超 “西学数日表后序” 裁夏晓虹编『梁啓超文选』(北京: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2), p. 374.

15) 양계초의 경우, 자연계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며 집단을 이룬 군체의 능력이 개체의 존망을 결정짓는다는 “合群原则”을 피력한다. 이에 따라 개화되고 보다 문명화된 민족이 미개화된 민족을 딛고 역사의 발전에 살아남는다 하여 개체의 생존을 위해 유기체적인 집단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張瀛, 崔志海, 葛夫平 譯, 『梁啓超与中国思想的过渡(1890-1907)』(南京:江蘇人民出版社, 1997) p.70

16) 양계초는 국가를 개인이나 정부, 이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그 자체 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의 존재로 규정한다. 권리와 의무는 통일 되어야 하며 의무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그의 관점은 그의 단체주의(집단주의) 사상에 잘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 단체주의란 가장 최고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국가를 본위에 두는 국가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羅玉中, 万其刚, 『人權与法制』(北京大學出版社, 2001) pp. 223~224.

17) 張瀛, 崔志海, 葛夫平(1997), p. 184

18) 刘禾, “跨语际的实践: 往来中西之间的个人主义话语”, 载许纪霖, 『二十世纪中国思想史论』(东方出版社, 2000) p. 232; 張瀛, 崔志海, 葛夫平(1997), pp. 143-144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권리는 전통적 群體(유교의 낡은 공동체주의)를 비판하는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다. 결국에는 이를 통해 부강한 근대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기에, 개인의 권리(인권) 역시 국가(혹은 민족)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자기 목적적인 개체담론으로 진행되었다 하겠다.

초기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억울한 대우를 받는 모든 개체의 해방”을 주장하며 “국가권력 존재의 타당성을 인권보장”에서 찾았던 천두씨우(陳獨秀)조차도 결국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존엄과 가치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신문화운동 시기 민주주의의 신봉자였던 천두씨우는 집단과 단체,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민주집중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는데, 이는 곧 인권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sup>20)</sup>

“개인의 독립과 자주적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이 모여 국가를 이루니 개인의 인격이 높으면 그 국가의 인격도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공고하면 그 국가의 권리 역시 공고해 지는 것이다.”<sup>21)</sup>

“인권은 국가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인권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일 뿐이다”<sup>22)</sup>고 하여 서구의 천부인권사상에 근접한 관점을 보였던 후쓰(胡適), 루어롱지(羅隆基)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sup>23)</sup>

쑨중산(孫中山)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유사하다.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을 제정하여 “중화민족의 모든 권력은 전국 의 모든 인민에게 속한다”라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수립한 쑨중산의 경우 초기에는 천부인권설의 영향을 받아 “인권의 신성함”과 “개인 자유의 수호”를 신봉하였으며, 인민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해혁명 실패 후 당권 투쟁과 불안한 정

19) 李澤厚, 『中國近代思想史論』(合肥:安徽文藝出版社 1994)

20) 김창규, “인권개념의 중국적 수용과 변용”,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3호, pp. 46~50.

21) 陳獨秀, 『青年雜誌』第一卷 五号; 羅玉中, 万其刚(2001), p. 184.

22) 鄭杭生(1993), pp. 275-276.

23) 羅玉中, 万其刚(2001), p. 224.

국 속에서 인권에 대한 그의 이해와 인식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중심의 인권관에서 국가(혹은 집단)의 이익과 질서 수호를 전제로 하는 인권관으로 바뀌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다만 민주혁명과 국가부강을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유와 독립이며…중국 혁명은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줌의 모래”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sup>24)</sup>

쑨중산의 국가와 민족, 개인에 대한 사상이 그의 사후에 후계자들에 의해 상당히 변질되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친족의 유대를 확장하여 혈통에 기반을 둔 국가 정치를 구상했다. 그에 있어 국가는 수백만 가족으로 구성된 인민대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화 운동과 5.4 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은 마오쩌둥 사상에서도 자유는 개인(individual)보다는 인민(people)의 자유로서 관념화된다.<sup>25)</sup>

이와 같이 근대 중국의 인권에 대한 수용에서는 “국권우위, 민권하위”(強國權, 輕民權)적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결국 근대 중국이 찾고자 했던 것은 민족적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하고 부강하게 만들 수단으로서의 인권이었기 때문이다. 초기 연안의 개혁파 관료들로부터 양무운동, 유신파의 무술변법과 입헌군주제 주장, 그리고 신민주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서구 천부인권사상의 수용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령과 변법,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서방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민족적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근대 중국의 인권에 대한 수용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존망에 책임을 지는 국민이 되기 위한 권리로서의 ‘민권’ 개념으로, 궁극적 목표는 ‘국가 주권’의 수호였기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득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인식보다는 국가와 민족 범주하에서 ‘집체의 권리’로 인식되는 면이 컸다 하겠다.

24) 孫中山, 『孫中山全集』第11卷(中華書局, 1981), p. 267.

25) 조경란, “유교, 민족, 인권-중국의 근대성 문제: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철학연구』 제53집, pp. 60-61.

## 2. 현대 중국의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입장

현대 중국<sup>26)</sup>의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입장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가지는 입장과 인식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인권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는 궁극적으로 법적 보장 장치를 전제로 하기에 필연적으로 국가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sup>27)</sup> 따라서 특정 사회 유형(예를 들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국가란 피지배 계급에 대한 억압의 도구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국가와 정부가 규정하는 권리로서의 인권이란 결국 통치계급의 이익을 반영할 뿐이다. 결국 진정한 계급해방이 이뤄진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모든 계급의 권리가 비로소 법에 의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 후 구축된 법률과 법제는 모두 사회주의 생산양식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국민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인권에 대한 논의가 잠시 활성화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관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여전히 “자산계급의 구호”이며 “자산계급의 사유화된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무산계급 혁명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허위의식”이다.<sup>28)</sup> 즉 자연권에 기초한 생득적 권리로서 인권은 자본주의하에서 파생된 부르주아적 개념으로, 그것이 당과 국가의 권한과 권위에 제한을 가하게 될 때 새로운 사회주의 중국 건설을 위협하는 반혁명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오로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때만이 이에 상응하는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 행사는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에 해

26) 이 글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중국을 의미한다.

27) 서구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본적 인권개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H. Gros Espiell, “The Evolving Concept of Human Rights: Western, Socialist and Third World Approaches,” B. G. Ramcharan ed. *Human Rights: Thirty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Martinus Nijhoff: 1979); Richard P. Claude and Burns H. Western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s*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89).

28) 叶立煌, 李似珍 『人权论』 (福建人民出版社, 1991年), pp. 185~192.

29) John F. Copper, *Defining Human Righ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8, pp. 10~13



가 돼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계급해방이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았기에, 국민들의 인권요구와 인권상황 개선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였다. 무엇보다 건국 초기, 국내적으로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 극좌의 사상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인권은 무산계급혁명의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더욱 교조주의적으로 해석되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sup>30)</sup> 따라서 2002년 16차 당대회와 2004년 10기 전인대 2차 회의를 거치면서 ‘국가의 인권보장’ 문구가 비로소 헌법에 삽입되었다는 것은 중국적 상황에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sup>31)</sup>

물론 개혁개방이 상당히 진행된 오늘날에는 “착취 계급 소멸을 위한 투쟁”이 인권해방을 위한 궁극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점차 구시대의 관념으로 취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보장에 대한 구호 그 자체를 사회주의 사회의 퇴보로 인식하거나, 국가나 정부에 대한 우회의 불만표출로 우려하는 인식은 여전히 뿌리 깊다 하겠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나 주요 지도자, 학자들이 인권에 대해 표명하는 입장과 그 속에 드러난 상대주의적 인식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입장을 정리한 이는 덩샤오핑이다.<sup>32)</sup> 덩샤오핑은 이를 중국 특색의 인권관으로 정립하였는데, 현재 중국 정부와 대다수 학자들의 인권에 대

30) 그러나 “모든 계급의 해방을 이룬 국가” 속에서 “법에 의한 인간 권리의 보장”은 그 실질적 내용에서 자체 논리만큼 이상적이지 못했는데, 수십 차례에 걸친 극좌 정치운동 속에서 당 간부로부터 일반 인민에 이르기까지 실정법에 의한 인권보장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정치 투쟁 속에서 수정된 <1975년 헌법>에서는 건국 초기 <공동강령>과 <54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던 “공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의 보장” 장절(章節)까지 삭제되게 된다. 그 후 <78년 헌법>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해 일부 수정이 이뤄졌으나,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공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확보된 것은 개혁개방 이후 <82년 헌법>(제33조)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자유(예를 들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나 주거이전의 자유 등)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는 배치된다는 관념이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며, 권리 또한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기에 그것이 언제나 국가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1) Ann Kent, *Waiting for Rights: China's Human Rights and China's Constitutions, 1949~1999*, *Human Rights Quarterly*, Vol.13, No.2 (May, 1991), pp.170~201.

32) 덩샤오핑은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인권인가 하는 점이다. 다수자들의 인권인가 아니면 소수에 국한된 인권인가? 아니면 전국 인민의 인권인가? 서구에서 말하는 ‘인권’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다르며 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다”라 하여 중국이 인권에 대해 서구와는 다른 인식을 가졌음을 피력한 바 있다. 鄧小平(1993), p.125.

한 입장과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다 하겠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인권 입장과 인식은 1991년부터 거의 매년 발간되는 <인권백서>에 잘 드러나 있으며,<sup>33)</sup> 중국 정부가 개별 국가들과 진행하는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sup>34)</sup> 그리고 북경 및 상해에서 몇 차례 개최된 인권담론 논쟁을 통해서도 현대중국,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식적으로 인권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개념으로 인정한다. 이는 인권을 “자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던 과거와는 분명 다른 차이점이다. 즉 인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자 <UN 헌장>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규약임을 인정하며, <UN 헌장> 및 인권관련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그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중국의 국제사회의 편입에 따라 진행된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은 1990년대 이래 상당수 인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한다.<sup>35)</sup>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인식함에 있어 인권의 보편성이 특수한 시대와 지역이라는 구체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중국의 인식 속의 인권의 보편성이란 각 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사회제도, 정치·경제적 발전 수준, 문화적 전통 등 구체적 맥락 속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인권사(人權史)로 파악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맥락 속의 인권”이라는 전제하에 중국은 자국의 상황(國情)에 맞는 인권을 주장한다. 중국이 가지는 구체성, 즉 ‘국정’(國情)에 대한 덩샤오핑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점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할 듯한데, 우선 중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인구가 많고 경지가 적으며 … 인구 대비 생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36)</sup>

33) 人民网 (中國政府白皮書)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2229>(검색일: 2010-08-22).

34) 중국과 유럽의 인권대화의 내용과 진행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Philip Baker, “Human Rights, Europ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Quarterly*, No.169 (March 2002).

35) 중국의 국제인권규약과 레짐에의 참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中國人權發展基金會 編, 『中國簽署批准的國際人權公約』(新世界出版社, 2002).

등소평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는 많으나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적 인권 즉 생존권이 우선되는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서구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인권이 불가피하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 각 국 및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념과 인식에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경우 중국 국정에 맞는 인권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중국의 인권관이 가지는 독특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간략하게 “인권 수호를 위한 국가주권 수호”라 요약할 수 있다. 중국적 國情(혹은 특수성)과 관련하여 <인권백서>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현대 중국이 처해있는 국내외적 어려움”, 즉 개도국으로서의 발전수요 등을 주요하게 들고 있는데,<sup>37)</sup> 그 중에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우선, 무엇보다 “생존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sup>38)</sup> 다만 중국이 인식하는 생존권은 개체보다는 국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집단의 생존권을 의미하며(集團人權), 개체의 생존은 궁극적으로는 집단의 생존 속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인권은 소수의 혹은 개체 단위의 인권이기 보다는 다수의, 집단 단위의 인권이라 하겠다.<sup>39)</sup>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의 권리(國權)가 인권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난하고, 약한 국가, 제3세계 국가들의 국가의 권리는 언제나 침범당하고 있다. 인권, 자유, 민주 등의 미명하에 강국이 약소국의 내정에 간섭하

36) 鄧小平(1983), pp. 149~150.

37)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人權狀況”, 董云虎, 佟唯眞 主編, 『世界人權叢書: 中國人權白皮書總覽』(新華出版社, 1998), p. 1, pp. 6~7

38)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국가의 독립권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으며 중국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江澤民, <人民日報>(1991-4-15), (1991-5-11)

39) 중국 중앙 지도부는 개체주의적 권리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의 표현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 속에서 전 인민은 더욱 더 인민을 위한 봉사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주의 정신을 드높여야 한다. 인간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애정을 보내며 공익을 생각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 배금주의와 개인주의와 향락주의를 경계한다. <中共中央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1996).

며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도모한다.”<sup>40)</sup>

일국의 국가 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개체의 인권도 확보될 수 없으며 결국 국가 주권의 확보가 인권보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주권 우위적 인식에 의해 인권은 ‘국내 문제’로 그 범위를 제한받게 되고 특히 개체 중심적 인권은 생존권과 발전권의 중시에 의해 집단적 국가이익의 하부에 놓이게 된다. 또한 『백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패권주의(霸權主義)와 강권주의(強權主義, power politics)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근원적 저해 요인이라 보고 있다.<sup>41)</sup> 인권에 대한 위협을 국가 권력이 아닌 타국의 주권으로 보는 것이다. 이 역시 인권을 개체 중심이 아닌 민족 국가 단위로 파악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덩샤오핑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권보다는) 우리의 국가이다...피부가 없는데 털이 있을 수 있는가? 국가의 독립적 주권이 없다면 인민의 생존과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인권 역시 존재할 수 없다.”<sup>42)</sup>

“국가의 주권과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서구 몇몇 국가들은 인권이네 사회주의 제도의 불합리성이네 하는 등의 근거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국권에 대한 침탈이다. 강권정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세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sup>43)</sup>

결국 중국에게 있어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인권 보장의 기본 전제가 된

40) 鄧小平(1993), p. 345.

41) 李云龍(1999), pp. 122~123.

42) 鄧小平, <人民日報>(1991-5-11)

43) 鄧小平(1993). p. 348.

다. 따라서 각국이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sup>44)</sup> 이는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일국의 국경(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서구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보편가치로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 타국의 주권 국가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서구 국가들의 인식과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 하겠다.

### Ⅲ. 중국의 인권외교

#### 1.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인권외교

##### 가. 1949년~개혁개방 이전 시기: 소극적 탐색

이 시기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뿐 아니라 티베트 인권 문제 등과 같은 자국 인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적 활동의 장(場)이라 할 수 있는 UN에서도 기능적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등<sup>45)</sup> 인권외교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적 원인에서 연유하였다 볼 수 있다.

우선, 중국 내부의 국내정치적 상황이다.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으로 이 시기 중국 국내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외교를 맡고 있는 주은래조차도 공공연하게 우경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혁명외교가 아닌 국제 외교 무대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44) 중국은 인권을 국내인권과 국제인권으로 분류하고,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국내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제인권은 국제법 규정에 의한 集體人權으로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인권은 국내 사무에 속한다 라는 논리가 도출된다. 卞立暄, 李似珍(1991), pp. 309~321.

45) 이 시기 중국은 UN인권위원회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둘째, 인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UN 등 국제인권 레짐의 운영메커니즘에 대한 중국의 낮설음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건국한 중국은 인권을 자본주의적 유산으로 치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나 외교적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또한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초기 멤버가 아니었기에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서서히 적응해 가는 기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환경 관련, 중국이 인권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별다른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 중국은 서구 인권외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기실 중국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공세에 직면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 이다.

카터 정부(1977~1981)시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외교의 가치를 드높였을 때도 중국은 예외였다.<sup>46)</sup>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프랑스 정부나 런던에 본부를 둔 엠네스티(AI: Amnesty International) 등과 같은 몇몇 국제기구가 개별적으로 중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한 것 외에 외교와 연계된 인권이슈로 중국을 압박하지는 않았었다. 이는 당시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제국주의적 과거에 대한 죄의식, 중국문명에 대한 우호적 감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sup>47)</sup> 무엇보다 냉전 시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소련 봉쇄에 중국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혁명수출을 자제하는 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한 1972년 미·중 간 <상하이 코뮌iqué>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바, 소련 봉쇄라는 전략적 이익의 공유로 서구는 중국의 인권상황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외면하였다 할 수 있다.<sup>48)</sup>

46) Robert Cohe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Human Rights Exception," *Human Rights Quarterly*, Vol.9, No.4 (Nov., 1987), pp. 475~480. 물론 79년 미 국무원의 인권연례 보고서가 중국의 정치적 망명자, 가족계획, 티베트 정책을 거론하기도 하여 미중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시기 인권은 미중간의 중요한 외교적 이슈는 아니었다.

47) 이 시기 중국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중국 문화대혁명을 매우 긍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Federick C. Teiwes, "Before and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no.58, April-June, 1974, pp.332~348.

48) 미국의 예를 들면, 카터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선택적 편리함을 보였는데, 주요하게는 중남미국가가 대상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몇 가지 사건은 중국 인권에 대한 서방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먼저, 1974년 12월 광저우(廣州)에서 발생한 ‘리이져(李一哲) 대자보 사건’이 대표적이다. 리정텐(李正天), 첸이양(陳一陽), 왕시져(王希哲)가 각자의 성(姓)을 딴 리이져(李一哲)라는 가명으로 광저우(廣州)에서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毛주석과 4기 인대에 바침>이라는 대자보를 통해 사인방이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개인숭배를 자행하며, 특권계급으로 인민을 압박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 후 당사자 3인은 체포되거나 도망쳤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상황이 서구 매스컴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사건은 1976년 4월5일 천안문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고(古)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를 애도하기 위해 천안문에 모인 수만 명의 노동자, 학생, 농민, 청년들 집단이 반(反)마오와 4인방 독재에 대한 반발 시위로 확대되었고, 중국 정부에 의해 무력진압을 당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은 일부 외신들의 보도에 의해 알려지고 중국의 인권상황이 다시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된다.<sup>49)</sup>

그러나 그후에도 일부 인권 관련 국제단체(NGO)들이 중국의 인권상황에 관해 지적한 것 외에,<sup>50)</sup>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권이 국제적 의제로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국제인권 레짐에 대한 중국의 참여와 외교는 그 자체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55년 주은래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선언>에 서명하면서 <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그나마 있었던 인권외교 활동이라 하겠다. UN에서도 71년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한 후, 인권상임위 활동, 국제인도법 처리 지지, 인도적 지

였다. 카터의 후임이었던 레이건 또한 전통적 국가이익의 가치 아래 중국의 인권을 양자관계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서유럽의 주요 국가 또한 유사한 양태를 보였는데, 유럽의회 의원이기도 했던 아일랜드의 Ruairi Brugha 대통령은 1979년 유럽의회에서 중국이 마오 이후 4개 현대화라는 막중한 짐을 진 상황에서 인권에서의 실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실언을 하기도 하였다. 辛翠玲, “从中国人权看国际人权团体的影响力”, 『政治科学论丛』, 第19期(2003), p. 193.

49) 辛翠玲(2003), pp. 191~192.

50) 70년대 중국의 인권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국제인권기구는 AI이다. 1978년 AI연도보고서 아시아편은 중국의 반인권상황, 특히 정치범에 대한 탄압을 비교적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London, 1978, 174~179. 또한 낭만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일부 학자들이 중국의 인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Susan J., Shirk, J., “Human Rights: What about China?” *Foreign Policy*, 1977, 29:109~127.

원 참여 등 활동이 있었으나, 소극적 의미에서 기본적 인권 존중에 대한 피상적 보장 의지를 표명 한 것 이외에는 거의 별다른 언급이나 참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sup>51)</sup>

#### 나. 1980년대~1990년대 중반: 제한적이나 주도적인 인권외교로의 선회

이 시기는 인권을 둘러싼 서구,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점진적으로 증폭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또한 인권외교를 개시하게 되는 시점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했던 인권은 80년대 중반 이래 미·중 간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 인권에 대한 정책 변화는 85년 미·소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내 상황이 상당부분 공개되고, 국제사회에 편입된 중국의 인권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미·중 간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다소 증폭되었으나 덩샤오핑과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권문제는 서구와 중국에게 있어 아직까지 주요 현안은 아니었다.<sup>52)</sup> 즉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 인권외교의 주요 대상국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6년 팡리지(方勵之) 사건과 티베트 민중봉기, 1989년의 천안문 사태,<sup>53)</sup>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냉전 종식이라는 일련의 사태

51) UN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능적 참여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Ann Kent,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99), pp.56~60.

52)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중국 테니스 선수 후나의 정치적 망명 승인, 87년 중국 정부의 인권기록(티베트 인권 상황, 낙태 등 가족계획)에 대한 수정법안 통과 등 80년대 중국의 인권은 미국 내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Ming (2001) pp. 41~42

53) 1979년 개혁개방 이후 89년 6.4 까지 중국은 5.4운동과 76년 제1차 천안문 사건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와 자유, 인권을 요구하는 지식인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반체제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현재까지 해외와 국내에서 중국의 민주와 인권의 흐름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주요하게는 79년 <민주인가 독재인가>라는 글로 체포되었던 魏京生, 86년 안후이 허페이과기대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혐의로 부총장직에서 면직처리된 方勵之사건, 그리고 이에 동조하여 당적이 박탈된 王若望, 劉賓雁 등이 있으며 89년 민주화 시기 당시 덩샤오핑에게 공동서한을 보내는 등 공개적 민주화 요구에 동참한 北島, 吳祖光, 冰心, 金觀濤, 蘇紹智, 王若水, 于浩成, 李洪林, 張顯揚 胡績偉, 王炎, 嚴家其 등의 지식인과 베이징대 시위를 주도한 王丹 등이



를 겪으면서 중국의 인권은 미국등 서구 국가들의 인권외교의 침해한 대상으로 부각된다. 이 시기부터 인권문제는 중국 외교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자관계에서 뿐 아니라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 Human Rights Watch(HRW) 등 비정부기구(NGO)에서도 중국의 인권상황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Human Rights in China(中國人權) 등과 같이 중국 인권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NGO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54)</sup>

1989~1994년 미·중간 인권 갈등의 최대 초점은 중국 인권문제와 무역에 있어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이하 MFN) 대우와의 연계문제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천안문 사건 이후 미 의회와 여론이 중국 인권개선을 위해 MFN을 이용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매년 중국의 MFN 지위 갱신은 인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중국이 새롭게 미국과 서유럽 인권외교의 우선순위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 1주년인 1990년에도 중국의 MFN 지위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갱신되었으며, 1992년 선거공약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내걸었던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MFN과 인권의 연계정책은 1년도 안되어 번복되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과 인권상황을 연계시킨다는 1993년 행정명령 No.128590을 철회함으로써 MFN지위를 이용한 미국의 대 중국 인권외교는 일단락을 짓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경제라는 정책적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인권외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sup>55)</sup> 의회와 행정부, 기업계의 로비 등이 교차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하였으며,<sup>56)</sup> MFN과의 연계정책을 포기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중국문제의회, 행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에 대

있다. 周玉山, “兩次天安門事件”, 『中國大陸研究』 第44卷 第3期(2001), pp. 60~69.

54) 中國人權은 1989년 3월 중국의 일련의 학자와 학생들이 조직한 비정부기구로서 중국의 정치법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문어머니운동 등을 진행하며, 6.4 천안문 민주화 운동 과정에 대한 무력진압과 학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http://iso.hrichina.org/>(검색일: 2010-08-25)

55) 韩云川, 『中美人权之争』(银川:宁夏人民出版社, 2003年), pp. 45~51.

56) Robert F. Drinan and Teresa T. Kuo, “The 1991 Battle for Human Rights in China,” *Human Rights Quarterly*, Vol.14, No.1 (Feb., 1992), pp. 37~40.

한 압박은 계속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MFN과 인권의 명시적 연계는 철회되었으나, 미·중간 인권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미국의 인권외교는 계속되었다. 1995년에는 중국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조사하던 중국계 미국인 해리 우(Harry Wu)가 체포되었다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석방되었고, 웨이징성(魏京生)이 체포되어 하루만의 재판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망명이 허용되기도 하였다.<sup>57)</sup> 미국은 경제적 관계와의 연계를 통한 직접적 압박은 해오지 않았지만, 양자 혹은 다자관계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겨냥하였으며, 미·중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 간접적 인권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미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인권외교, 즉 ‘국제관계에서 타국의 인권상황이나 정책에 관여하여 그 정책의 실행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행위’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sup>58)</sup> 동시에 미국이 대외정책으로 인권을 내걸었지만 국가안보나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인권외교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sup>59)</sup> 이와 같이,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인권외교에 수세에 몰렸던 중국은 제한적이나 나름의 대응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제적으로 UN 등 국제 인권 레짐에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과의 이데올로기적 공동전선의 구축이다. 80년대 들어 중국은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인권 레짐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이는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대 중국 인권외교가 양자관계뿐 아니라 UN,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과 압박을 보다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인권이 부수적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는 양자관계보다는 국제레짐의 다자적 압박이 중국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60)</sup>

57) Ming (2001), pp. 42~43.

58) 洪国起, 董国辉, 『透视美国人权外交(内部发行)』, (世界知识出版社, 2003), pp. 193~238; 周琪 主编 『人权与外交』, (时事出版社, 2002); 朱锋, 『人权与国际关系』, (北京大学出版社, 2000). 중국 인권정책 변화의 국내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운영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pp. 213~220

59) Peter Van Ness, “Addressing the Human Rights Issue in Sino-American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49, no.2 (winter 1996), pp. 309~301.

중국은 1978년~81년 UN 인권위에 옹저버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82년부터는 대표단을, 84년이래로는 UN 산하 인권위에 전문가를 추천하고 선출되기도 하는 등 점차 UN 인권레짐에 대한 기능적 참여범위를 확장시켜 왔다.<sup>61)</sup> 1988년 9월 UN 총회에서 첸지천(錢其琛)전 외교부장의 UN 인권레짐에 대한 공개적 지지발언은 중국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 태도의 전환을 나타내는 이정표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서구의 보편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문화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과 연합하기 시작한다. 개인보다 공동체와 집단적 이익이라는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비인권 국가로 간주되어 인권외교의 대상이 되어왔던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1990년대 이후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sup>62)</sup> 이는 다시 아시아적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입장과 결합하여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서구의 인권외교를 제국주의와 정치적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항하는데 이데올로기적 연대의 수단을 제공하였다.

둘째, 국내적으로 인권 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1980년대 말 이후 국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론 개발에 착수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단순히 변호하는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인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1990년 9월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인권이론토론회(人權理論研討會)는 인권연구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 전환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그 후 다수의 인권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물론 대부분이 서구 자본주의의 계급적 인권이론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중국적 대항논리를 구축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할 것이다.<sup>63)</sup> 또한 1991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인권백서>는 자국의 인권정책

60) Ann Kent, "China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 Case Study of Multilateral Monitoring, 1989~1999," *Human Rights Quarterly*, Vol.17, No.1 (Feb., 1995), pp. 44~47.

61) 혹자는 중국이 인권레짐에 참여하면서 평소 주장하는 주권원칙과 달리 자국의 이익증대와 관련하여 타국의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일례로 84년 아프가니스탄, 85년 칠레에 대한 UN 상황조사도 적극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87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시 사면초가에 놓인 크메르루즈(Khmer Rouge)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위에서 적극 개입하였다고 본다. Ming (2001), pp. 109~110.

62) 朱鋒(2000), pp. 231~263; 이재호, "동북아시아의 인권담론-보편인권과 특수인권, 그리고 동북아 인권체제를 위하여-", 『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2007, pp. 60~63.

63) 이 시기 나온 인권이론 관련 서적은 다음과 같다. 中国社会科学研究院法学研究所 编, 『当代人权』(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2); 叶立焯, 李似珍, 『人权论』(福建人民出版社, 1991);

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개화 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에게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시킴으로서 인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서구의 인권 공세에 대응하고, 중국 정부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64)</sup>

이 시기 미국과 서구 유럽 인권외교의 주요 대상이 된 중국은 첨예한 갈등을 겪으면서 국제관계에서 인권외교의 필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서구의 인권압박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반박을 시작하고, 국제적으로도 UN의 인권 레짐을 수용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서구의 인권을 비판하고 국내적으로 정치개혁을 가속화 하는 등 기존과 다르게 제한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다. 1990년대 중반 이후 : 중국적 인권외교 구축

1996년은 천안문 사건 이후 극단의 갈등으로 치달던 미·중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리덩후이(李登輝)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총통 직선제 실시,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대응, 미국의 대만해협에의 두 척의 항공모함 파견 등 해협 양안의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그러나

喻权域, 『人权问题纵横谈』(沈阳: 辽宁出版社, 1994); 夏旭东等主编, 『世界人权纵横』(北京: 时事出版社, 1993); 郑杭生主编, 『人权新论』(北京: 中国青年出版社, 1993); 黄木丹森, 陈志尚, 董云虎主编, 『当代中国人权论』(北京: 当代中国出版社, 1993); 李云龙, 『人权问题概论』(四川人民出版社, 1999); 夏勇, 『人权概念的起源-权利的历史哲学』(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

64) 199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발간한 『인권백서』는 다음과 같다. 『中国人权状况』(1991.11.1), 『中国改造犯罪状况』(1992.8.10), 『西藏主权归属与人权状况』(1992.9), 『中国妇女的状况』(1994.6), 『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1994.6), 『中国的计划生育』(1995.8), 『中国人权事业的进展』(1995.12), 『中国的儿童状况』(1996.4), 『中国的环境保护』(1996.6), 『中国的粮食问题』(1996.10), 『1996年中国人权事业的进展』(1997.3), 『中国的宗教信仰自由状况』(1997.10), 『西藏自治区人权事业的新进展』(1998.2), 『1998年中国人权事业的进展』(1999.4), 『中国人权发展50年』(2000.2), 『西藏文化的发展』(2000.6), 『中国的禁毒』(2000.6), 『中国21世纪的人口与发展』(2000.12), 『2000年人权事业的进展』(2001.4), 『中国的农村扶贫开发』(2001.10), 『西藏的现代化发展』(2001.11), 『中国的劳动和社会保障情况』(2002.4), 『新疆的历史与发展』(2003.5), 『2003年人权世界的进展』(2004.3). 그 외 1999년부터 미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백서 『美国人权记录』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中國政府白皮書(人民网),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2229>(검색일: 2010-08-22).

동시에 미·중 양국 모두 극한적 대립을 피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시기이기도 했다.

1996년 5월 중국은 파키스탄에 핵 관련 물질 판매 중단을 약속하며 미국에 화해의 손짓을 했고, 1996년 11월 크리스토퍼 당시 미국무부 장관의 북경 방문은 클린턴-장쩌민의 상호 국빈방문의 길을 터놓았다. 같은 해 11월 APEC 회의에서 조우한 미중 정상은 1997년 장쩌민의 미국방문과 1998년 클린턴의 중국 방문을 확정지으면서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경색되었던 미중관계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

이에 국내적으로도 미·중 양국간 화해의 분위기를 지지하는 정책이 잇따랐다. 1997년 미 하원이 중국의 MFN 지위를 승인하면서, 인권에 대한 정치, 경제적 조건부 연계 논란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같은 해 미 국무부의 연례보고서에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인권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97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에서 최초로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장쩌민의 미국 방문 직전 중국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가입을 결정한다. 1998년 중국을 답방한 클린턴은 “실용적인 간여정책(pragmatic policy of engagement)”을 표방하고 미·중간 건설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의한다. 같은 해 중국은 웨이징성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 종교계 인사들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였으며, 미국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 인권문제 결의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에도 가입하게 된다. 1998년 클린턴 방중 시 매우 이례적으로 베이징대에서 인권과 민주에 관한 생중계 연설을 허용할 정도로 ‘북경의 봄’이 오는 듯 했다.

그러나 1998년 클린턴의 중국 방문 이후 미·중 관계는 다시 경색되게 된다. 같은 해 중국계 과학자들의 첩보활동을 조사한 콕스 보고서(Cox Report)가 발표되며 미국 내 반중 감정이 거세지고, 중국 또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다시 강화하는 등 실제 인권정책에 질적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1999년 1월11일~12일 미·중 간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공방과 비방으로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9년 5월7일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NATO 전투기에 의한 폭격 사건이 발생하고 반미정서가 증폭되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간여에 대한 중국 내 반발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경색되었던 미중관계는 약 4개월의 냉각기를 거쳐 1999년 9월11일 오클랜드 APEC정상회담에서 클린턴과 장쩌민과의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면서 다시 완화되기 시작한다.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한 미중간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2000년 미국은 중국에 대한 PNTR(항구적정상무역관계)을 승인하고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경제문제 압박을 통한 대 중국 인권외교는 사실상 일단락을 짓게 된다.<sup>65)</sup> 그 후 2001년 부시행정부에서 유엔인권위의 중국 인권문제 결의안을 추진하고 달라이라마와 회동하는 등 중국의 인권문제가 간헐적으로 갈등현안으로 떠올랐으나, 같은 해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중간 관계는 다시 “건설적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로 전환되고,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협력약속과 함께 중국의 인권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와 같이 천안문 사건 이후 약 10여년 간의 일련의 대립과 화해의 반복을 거치면서 미·중 간에는 인권에 관해 일정 정도 게임의 룰에 대한 공동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1998년 클린턴은 중국 방문 직전, 공개적으로 대만에 대한 3불정책(Three No Policy)<sup>66)</sup>을 표방했는데, 이는 주권 범위 내 인권이라는 중국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중국에 대한 PNTR 부여 또한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이며,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것을 보여주었으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경험과 인권을 연계하는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의 견제력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 인권은 더 이상 미국 인권외교의 주요 목표가 아니었으며, 국제사회의 초점에서도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의회는 중국의 정치범 등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sup>67)</sup> 티베트 운동연맹(Free Tibet Campaign, FTC) 등도 중국의 인권상황을 이유로 올

65) WTO에 가입한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조건 없는 PNTR(항구적 정상무역관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미국은 냉전법에 의해 공산국가인 중국의 관세지위를 매년 갱신해왔는데, 중국이 WTO 회원국의 의무를 수용함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PNTR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PNTR 부여는 1980년 이후 매년 갱신해 오던 MFN 지위를 영구 갱신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서재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정책”, 『통일정책연구』, pp. 64~69.

66)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67) <http://usinfo.state.gov/regional/ea/uschina/senolymp.htm> (검색일: 2011-3-28)

림픽 유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받아들여지지도, 베이징 올림픽계획서에 구체적 규범으로 삽입되지도 않았다. 결국 2008년 3월 티베트 대규모 시위와 유래없는 탄압이 진행되었지만, 당해 년도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국제사회는 중국 인권을 더 이상 거론할 수도, 거론하지도 않았다.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인권외교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반면 중국의 인권이론과 정책, 입장은 구체적 틀을 갖추기 시작했고, 공식화되기 시작한다.<sup>68)</sup> 2002년 개최된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는 “인민이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아 인권 문구의 헌법 삽입을 결정한다. 그 결과 2004년 3월의 10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 제33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인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로 공식화된다. 중국적 인권이론과 관련해서도, 2002년 중국인권발전기금회(中國人權發展基金會)는 중국 인권에 관한 총괄적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중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중국인권법률문건, 중국인권사업의 진전, 중국의 인권에 관한 기본입장과 관점, 서구의 인권관과 인권외교, 인권과 주권으로 나누어 그동안 논의되었던 중국의 인권입장을 최종 정리하였다.<sup>69)</sup> 인권외교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름의 양태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중국의 인권외교의 특징과 함의

앞서 살펴본 중국과 서구, 특히 미국과의 인권 갈등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인권외교의 양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인권외교는 기본적으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권외교라는 개념자체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68) 王立行, 『人权论』(山东人民出版社, 2003); 徐显明 主编, 『人权研究』(山东人民出版社, 2002).

69) 中国人权发展基金会 编, 『中国人权文库之一~六』(北京:新世界出版社, 2002). 이는 다음과 같다. 『中国签署批准的国际人权公约』, 『中国人权法律文献』, 『中国人权事业的进展』, 『中国人权的基本立场和观点』, 『西方人权观与人权外交』, 『人权与主权』.

이데올로기(혹은 관념)에 바탕을 둔 개념이고,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인권외교라는 개념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인권관념 자체가 서구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발전되어 온 면이 크기 때문에 수동성이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인권외교는 서구 무엇보다 미국의 인권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온 면이 크다 하겠다.

둘째, 중국은 인권외교를 전통적인 서구열강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일부 혹은 도구로 파악하고 있다. 즉 미국 등 서구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즉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수단적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서유럽, UN 등에서 중국 인권에 대해 보이는 기존 태도에서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서구의 인권외교로 갈등과 마찰을 빚는 과정이 중국의 인권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러한 서구 국가들의 압박을 어떻게 방어하는가에 기술적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중국의 인권 상황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서구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자국의 인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을 발전해 오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인권외교는 실제 정책 운용에서는 정부의 발언수위보다는 '타협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70)</sup> 두 차례의 천안문 사건을 겪은 후 인권에 대한 서구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단순히 자국의 인권 상황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권에 대한 각종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반체제인사들을 석방하며,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하여 국제인권레짐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등 보다 타협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비엔나 인권선언> 서명(1993),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서명(1997),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 서명(1998) 등 주권 및 내정간섭과 관련하여 일부 유보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인권규약에 속속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형사소송법, 국가배상법, 감옥법, 인민경찰법 등 공민권 보장을 강화해 나갔다.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인권백서』는 개선되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70) Ming (2001), p. 23.



천안문 사건 이후 서구의 인권압박을 무난히 버텨내고 대부분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1998년 클린턴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인권과 민주에 관한 연설의 생중계 허용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줌과 동시에 서구의 인권공세가 중국의 주요 이익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하겠다.

넷째, 중국은 양자, 다자간 관계에서 인권외교를 일정하게 구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권갈등을 점차 주변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인권외교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서유럽과의 인권관계에서는 미국 보다 더욱 유연하고 많은 양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양자관계보다는 국제인권기구 등 다자관계에서 훨씬 유연하고 타협적이라는 것이다.<sup>71)</sup> 또한 이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점차 부수적 사안으로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대화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서구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일정 정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 등이다. 즉 인권대화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인권문제는 양자, 다자관계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심분 활용하여 양자, 다자 관계에서 유연한 자세와 대화창구 유지 등을 통해 인권갈등을 점차 주변화 시키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인권외교는 수동적 대응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이며 연합적 성격을 보여가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상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차별화시킴으로써 통일된 전선의 형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UN에서의 활동도 초기의 소극적, 제한적 참여에서 벗어나 비(非)서구 국가들과 아시아적 인권이데올로기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제인권 레짐의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1993년 유엔인권회의에서 등장한 인권에 대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이 좋은 예이다. 이는 서구 국가들의 연합적 인권외교에 대해 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하게 맞서고, 조직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71) Ming (2001), pp. 6~7.

#### IV. 글을 맺으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인권은 사실상 중요한 외교적 이슈는 아니었다. 중국의 인권에 대한 서구의 정책적 접근 또한 기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강력하게 진행된 적은 없었다 할 수 있다.

냉전 시기에는 서방 진영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소련 붕괴라는 전략적 이익의 공유에 따라 주권 범위를 넘어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 할 수 있다. 개혁 개방 직후에는 중국에 대한 잠재적 기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외교는 레토릭과는 달리 실효성 있게 관철되지는 않았다. MFN 등 경제 문제와 조건부 연계를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도 결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 중국 인권 공세는 양자관계를 고려하여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관계를 통해 보다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인권에 대해서는 미국 또한 더 이상 적극적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인권을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제 인권은 중국과 미국 등 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 외교적 이슈 중의 하나로 전략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국내 인권에 대한 요구를 민족주의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대체하면서 성공적으로 여론을 조정할 수 있게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자기 목적적 인권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세기 미국 등 서구와의 인권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념,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더 세련되고 공고해졌다 할 수 있다. 정치적 이견(異見)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의 신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겠다. 이에 중국의 인권외교는 초기의 수동적·반응적 접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서구 유럽, 일본 등을 분리 시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가하면,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의 반(反) 서구 인권 연대를 통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기도 한다. 인권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보다 유연하고 타협적이다. 인권문

제로 인한 갈등이 불거질 경우, 중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하나, 동시에 국내의 반체제 인사들을 풀어주고, 국내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의 인권외교를 국제관계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일환으로 인식하기에, 일정정도 기간이 경과하여 마찰이 누그러질 무렵에는 다시 원래의 정책을 고수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 인권 마찰에 따른 중국 국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풀어주기-조이기’(放一抓政策) 정책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지난 수 십 년간 서구의 대중국 인권외교는 실제 중국의 국내 인권 상황 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인권 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면, 이는 서구의 인권외교의 직접적 결과라기 보다는 중국 자체의 국내 정치 개혁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서구의 대중국 인권외교의 효과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서구의 인권외교가 중국의 인권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은 어떠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크게 국내외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가지는 함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위상이 약화된 미국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서구와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인권의 중요성도 더욱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권은 그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도 있지만 다른 현안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이익의 공유 하에 관계 정립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인권문제로 인해 그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sup>72)</sup> 또한 일정 기간 양국간 전략적 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1999년 NATO의 오폭 사건이나 2001년 미 정찰기 추락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쉽사리 깨지기 쉬운 관계(fragile relationship)일 뿐이다. 인권에 대한 시각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서방국가 입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비(非)민주적 체제일 것이며,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잠재적 위

72) 상하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고위급 관료의 상호방문은 자제하는 상황이었으며, 정상회담은 98년에서야 재개되었다.

협이라는 전략적 불신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렴한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한 무역마찰도 언제든지 최수·어린이 노동력 착취라는 명목으로 서구 인권외교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것도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사회제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sup>73)</sup> 인신구속, 사형제도의 남발, 인터넷과 언론 등 표현, 거주이전, 학문적 자유 등에 대한 억압, 종교 탄압 등<sup>74)</sup> 중국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비인권적 행위는 언제든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며 양자, 다자관계에서 폭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은 또한 중국이 전략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두는 현안 중 하나인 대만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대만의 민주화와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존중은 미 의회와 미디어, 대중들 사이에서 대만 인권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대만은 미국과 서구가 지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의 표상으로 국제적으로 인권문제화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의 인권이 서구 인권외교의 직접적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여러 사안과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중국의 외교에 최대부담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국내적으로 가지는 함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서구 국가들의 집단적 대중국 인권외교는 오히려 중국 국내의 인권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고 민족주의적 단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무원칙이던 서구의 인권정책은 중국 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였고, 이에 지식인들조차 보수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정서의 결합을 가져와, 이제 중국의 대다수 민중은 자유보다는 사회질서와 안녕을,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발전을 더 선호하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의 펍박을 목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부자 되기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인민의 정서는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가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잘 수행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73) “中 선진, 어린이 노동 눈감은 비정한 경제특구”, <한겨레신문>(2011. 3. 28).

74) 박기철, pp. 424~429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하며, 중국은 대외적으로 계속 굴기(崛起)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성장하는 국가규모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비해 반부패 및 인권보장 수준은 실제로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한 국가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FR은 2008년 6.5로 세계 평균 3.26에도 한참 떨어진다.<sup>75)</sup> 2010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劉曉波)<sup>76)</sup>를 2011년에는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sup>77)</sup>를 체포·구금하는 등 지나친 사상관리와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sup>78)</sup> 그러나 1999년 파룬공 사건이나 2008년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08헌장'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욕구와는 별도로 신앙과 종교의 자유, 민주와 인권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는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79)</sup> 높아지는 교육열은 더 많은 식자층을 생산하고, 정치적 권리에 대해 눈을 뜨게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의 고속 성장과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계층별, 지역별, 민족별 격차가 심화되하고 소외계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을 휩쓴 '우리 아버지가 리강이다(我爸是李剛)' 사건이나 중국의 부(富)와 관(官)의 세습을

75) FR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자유도(Freedom Ratings, FR)로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여 인권 수준을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수치라 할 수 있다. 중국의 FR은 1995년 '7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했으며, 2008년 '6.5'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상환, "연성권력론에서 본 중국의 국제적 위상: 국제적 반부패 및 인권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44권, pp. 269~273.

76) 중국 정부가 분류한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발표 60주년 기념일,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08헌장' 발표를 주도하였으며, 2009년 11년 형을 받아 구금된 상태에서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민자, "중국 민주화와 류샤오보", 『중소연구』 제34권제4호(2010/2011) pp. 61~65.

77) 아이웨이웨이는 쓰촨대지진 당시 희생된 학생의 수를 상징하는 책가방 9000개를 화폭에 그려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의 부실건축을 고발하였고, 2010년 11월 발생한 상하이 화재사건에 대해 시민적 조사를 전개하기도 하는 등 대중예술을 통한 사회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이다. 2011년 4월 경제범으로 공안에 체포된다. "예술가 잡아둔 중정부의 험량", <경향신문>(2011. 4. 12).

78) "중국 대학생들 기습 재스민 시위", <한겨레>(2011. 3. 23); "베이징대 극단적 사상관리 논란", <한겨레>(2011.3. 23)

79) 이동운, 천자현, "중국의 인권과 종교, 그리고 파룬궁 탄압",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1호, pp. 102~109; 정재호, "파룬궁, 인터넷과 중국 내부 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pp. 310~312.

꼬집는 ‘富二代, 官二代, 貧(窮)二代’ 등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sup>80)</sup> 현재는 경제발전과 부국강병의 ‘강국몽’(強國夢)에 가려져 있다 해도 빈부격차 등 국내적 불만이 더 이상 경제발전과 민족주의에 의해 잠재워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인권문제는 국가의 안녕과 발전, 통합, 나아가 체제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문제이기에 단순히 미국 등 서구의 인권외교에 대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중국은 2002년 WTO 가입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 굵직굵직한 세계대회를 치러내며 국제사회에 훌륭하게 안착하였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G2라 불릴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서구의 인권외교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상하는 세계의 주요국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걸 맞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자국의 인권과 인권정책에 대한 더욱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80) <http://pinglun.eastday.com/p/20110401/u1a5818762.html> (검색일: 2011-01-23).

## [참고문헌]

- 김창규. “인권개념의 중국적 수용과 변용.”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3호.
- 박기철. “세계화 시대의 중국 인권의 미래에 대한 담론.” 『중국학연구』 제36집.
- 박종귀. 『중미인권분쟁』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1.
- 이재호. “동북아시아의 인권담론.” 『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2007).
- 윤영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관과 인권정책-저항과 개입에 대한 국가의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2호.
- 서재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정책.” 『통일정책연구』.
- 이동윤, 천자연. “중국의 인권과 종교, 그리고 파룬궁 탄압.”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1호.
- 이민자. “중국 민주화의 류사오보.” 『중소연구』 제34권 제4호, (2010/2011).
- 이상환. “연성권력론에서 본 중국의 국제적 위상: 국제적 반부패 및 인권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44권.
- 이재호. “동북아시아의 인권담론-보편인권과 특수인권, 그리고 동북아 인권체제를 위하여-.” 『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2007).
- 전성홍.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외교정책: 지도부의 상황인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15권2호, (1991).
- 정재호. “파룬공, 인터넷과 중국 내부 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3호.
- 조경란. “유교, 민족, 인권-중국의 근대성 문제: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철학연구』 제53집
- 최지영. “주권과 인권: 인권 담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중소연구』 제104호, (2004/2005).
- 鄧小平.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人權狀況.” 董云虎, 佟唯眞 主編. 『世界人權叢書: 中國人權白皮書總覽』 新華出版社, 1998.
- 韩云川. 『中美人权之争』 银川: 宁夏人民出版社, 2003.
- 洪国起, 董国辉. 『透视美国人权外交(内部发行)』 世界知识出版社, 2003.
- 黃東治, 丘思慈. “運動, 人權和北京2008年奧運會.” 『國立體育學院論叢』 18卷3期 (2007).

- 黃木丹森, 陈志尚, 董云虎 主编. 『当代中国人权论』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1993.
- 李云龙. 『人权问题概论』 四川人民出版社, 1999.
- 李澤厚. 『中國近代思想史論』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94.
- 梁啓超. “西學數目表后序.” 夏曉虹 編. 『梁啓超文選』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2.
- 劉禾. “跨語際的實踐: 往來中西之間的个人主義話語.” 許紀霜 編. 『二十世紀中國思想史論』 東方出版社, 2000.
- 羅玉中, 万其剛. 『人權与法制』 北京大學出版社, 2001.
- 孫中山. 『孫中山全集(第11卷)』 中華書局, 1981.
- 石之瑜, 周嘉辰. “超越普遍主義与相對主義人權觀有關辯論的省思.” 『中國大陸研究』 第44卷 第11期(2001).
- 王立行. 『人权论』 山东人民出版社, 2003.
- 夏旭东 等 主编. 『世界人权纵横』 北京: 时事出版社, 1993.
- 夏勇. 『人权概念的起源-权利的历史哲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
- 辛翠玲. “從中國人權問題看國際人權團體的影響力.” 『政治科學論叢』 第19期 (2003).
- 徐显明 主编. 『人权研究』 山东人民出版社, 2002.
- 叶立煊, 李似珍. 『人权论』 福建人民出版社, 1991.
- 喻权域. 『人权问题纵横谈』 沈阳: 辽宁出版社, 1994.
- 張灝, 崔志海, 葛夫平 譯. 『梁啓超与中国思想的过渡(1890-1907)』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7.
- 鄭杭生. 『人權新論』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3.
- 中國人權發展基金會 編. 『中國簽署批准的國際人權公約』 新世界出版社, 2002.
- \_\_\_\_\_. 『中国人权文库之一~六』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2.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编. 『当代人权』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2.
- 周琪 主编. 『人权与外交』 时事出版社, 2002.
- 周玉山. “兩次天安門事件.” 『中國大陸研究』 第44卷 第3期(2001).
- 朱鋒. 『人权与国际关系』 北京大学出版社, 2000.

Baker, Philip. “Human Rights, Europ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Quarterly* 171 (2002).



- Bauer, Joanne R. and Daniel A. Bell, eds.,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Biersteker, J. Thomas and Weber, Cynthia eds.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Chen, Dingding. "Explaining China's Changing Discourse on Human Rights, 1978~2004.", *Asian Perspective* 29-3 (2005).
- Chen, Jie "Human Rights: ASEAN's New Importance to China." *Pacific Review* 6-3 (1993).
- Claude, P. Richard and H. Burns. *Western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s*.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89.
- Cohen, Robert.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Human Rights Exception." *Human Rights Quarterly* 9-4 (November, 1987).
- Copper, F. John. "Defending Human Righ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Yuan-li, Wu (eds), *Human Righ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stview Press, 1988.
- Davis, Michael C., ed. *Human Rights and Chinese Values: Leg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lorado: Westview Press, 1998.
- \_\_\_\_\_.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Douzinas, Costas. *The End of Human Rights: Critical Legal Thought at the turn of the Century*. Oxford: Hart Publishing, 2000
- Drinan, Robert F. and Teresa T. Kuo. "The 1991 Battle for Human Rights in China." *Human Rights Quarterly* 14,1 (February, 1992).
- Edwards, R. Randle, Louis Henkin, and Andrew J. Nathan. *Human Rights i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Espiell, H. Gros. "The Evolving Concept of Human Rights: Western, Socialist and Third World Approaches," in B. G. Ramcharan (ed), *Human Rights: Thirty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Martinus Nijhoff, 1979.

- Federick, C. Teiwes. "Before and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58 (April-June, 1974).
- Goldman, Merle. "Politically-Engaged Intellectuals in the 1990s." *The China Quarterly* 159 (1999).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2.
- Henry, Rosemont. "Why Take Rights Seriously?" in Leroy S. Rouner (ed.), *Human Rights and the World's Religion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 kent, Ann.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The Limits of Complia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 \_\_\_\_\_. "China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 Case Study of Multilateral Monitoring, 1989~1994.", *Human Rights Quarterly* 17-1 (February, 1995).
- \_\_\_\_\_. "Waiting for Rights: China's Human Rights and China's Constitutions, 1949~1989." *Human Rights Quarterly* 13-2 (May, 1991).
- Kolodner, Eric. "Religious Rights in China: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Human Rights Quarterly* 16-3 (August, 1994).
- Kim, S. Samuel. "Human Rights i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Edward Friedman and Barrett L. McCormick (eds.), *What If China Doesn't Democratize?: Implications for War and Peace*. Armonk: M. E. Sharpe, 2000.
- Nathan, Andrew J.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Quarterly* 139 (September 1994).
- R. J. Vincen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Seymour, James D.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Samuel S. Kim.(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Policy Faces the New Millennium*. Boulder: Westview Press, 1998.
- Shih, Chih-yu. "Contending Theories of Human Rights with Chinese

- Characteristics." *Issues and Studies* 29-11 (November, 1993).
- Shirk, Susan J., "Human Rights: What about China?" *Foreign Policy* (1977).
- Van Ness, Peter. "Addressing the Human Rights Issue in Sino-American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9-2 (Winter 1996).
- Wan, Ming. "Human Rights and Sino-U.S. Relations: Policies and Changing Realities." *Pacific Review* 10-2 (1997).
- \_\_\_\_\_.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Relations: Defining and Defending National Interes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1.
- Zhong, Wenhui, "China's Human Rights Development in the 1990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4-8 (1995).





# 15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





#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

유현정 | 세종연구소

## I. 서론

## II. 중국에 있어서 국경지역 안보가 가지는 함의

1. 변경지역 안보 : 낙후지역과 소수민족 문제
2. 국경 안보 : 안보위협 요인의 유입방지와 지역개발을 통한 인접국가와의 선린관계 구축

## III. 지역개발을 통한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유지:

서부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변천
2. 서부개발사업 사례
3.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안보 사례 : 미얀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4. 서부대개발-미얀마와의 국경안보 연계정책에 대한 평가

## IV. 동북지역개발의 본질과 중국의 의도

1. 두만강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
2.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3. 개발과제와 평가

## V. 결론

[참고 문헌]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본질과 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중국측의 의도를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차원에서 규명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지역투자의 측면에서 강구하는데 있다.

중국의 국무원은 2009년 7월과 8월에 각각 랴오닝성과 창지투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국가급 개발사업으로 비준<sup>1)</sup>하면서 동북지역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동북지역 개발사업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 2050년 '현대화(modernization) 완성'을 위한 중요한 행보로서 2003년 10월에 제시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中发[2003]11号))'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돌이켜보면 동북지역개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1990년대 초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PD: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을 주도하면서 중국·북한·러시아는 훈춘-나진/선봉-나호드카 등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후 약 20년간 중국의 주도적 역할과 열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개발사업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에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경제적 접근방법과 외교정책적 접근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 기초한 연구에서는 동북지역개발이 주변국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경제권 형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윤승현 2009; 강영훈 外 2009). 중국의 외교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도 중국의 동북3성 개발 의도에

1)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성의 6개시 관할지역을 연해경제벨트로 개발한다는 구상으로서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을 2009년 7월 1일에, 지린성과 흑룡강성의 두만강 유역지역을 개발의 선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을 2009년 8월 30일에 비준하였다.



대하여 견해가 분분하다. 일부 학자들은 동북3성 개발의도를 북한의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파악하면서 남북경협을 확대와 우리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사업 참여를 주장(주장환 2006; 양문수 2006)하고 있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동북지역개발이 영향력 확대 차원을 넘어 북한의 예측화·종속화를 의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유석렬 2007; 배종렬 2006; 김창순 2006; 남성욱 2006)<sup>2)</sup>. 이처럼 상반된 주장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지역개발의 본질과 주된 의도에 대한 견해가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우리정부의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투자 여부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3성 지역개발에 대한 의도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분석보다는 중국의 안보문제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후자의 연구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방법과 시각을 달리하였다. 첫째, 후자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계획이 중국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임을 도외시한 채 동북지역개발 계획자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동북지역개발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서부개발,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안보확보 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동북지역개발계획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에는 주변지역에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 주도권 확보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은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지역개발이 이러한 의도를 넘어서 외교·군사적 차원에서의 공세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IV. 3. 나.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동북지역개발을 공세적 차원에서보다는 방어적인 지역안보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동북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가 중국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연

2) 이들 견해는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북한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의도에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예속론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 견해 중에는 북한을 경제적 식민지화하려고 한다거나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는 동북4성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의 제2장에서는 국경지역 안보가 중국정부에 있어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중국의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국경지역 안보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서부개발사업이 국경지역 안보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사례와 국경지역 안보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쟁점인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을 통한 중국측의 의도를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살펴본 중국측의 의도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동북3성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함과 동시에 우리정부의 지역투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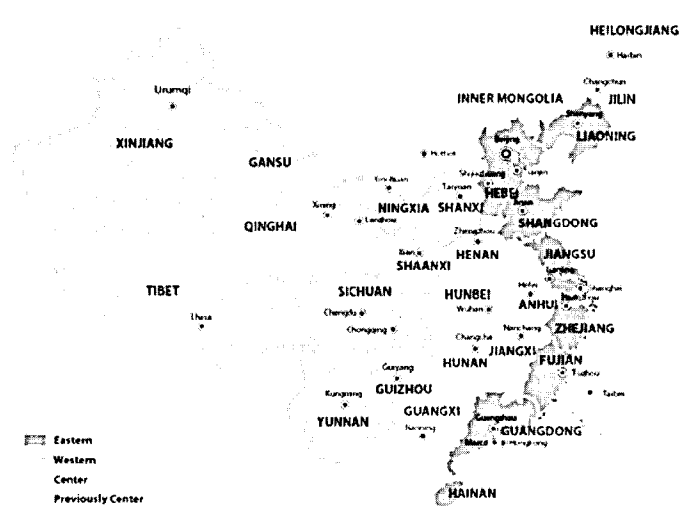
## II. 중국에 있어서 국경지역 안보가 가지는 함의

중국은 총 22,117km의 국경을 가지고 있으며 총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sup>3)</sup>. 세계에서 국경이 가장 긴 국가이며 접경국가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필연적으로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국경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중국정부는 ① 국경 안보를 위한 정책마련, ② 국경지역 인민들의 경제력 향상, ③ 국경지역의 군사력 강화, ④ 인접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정책 수립, ⑤ 과학기술을 통한 국경관리라는 ‘국경 관리 5대 원칙’에 입각하여 국경 안보에 주력해 왔다 (『Jiefangjun Bao Online』, 2009. 1. 16). 5대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국경관리는 국내 ‘변경지역의 경제력 향상을 통한 국내 안보’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자국의 변경지역 안보는 또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변경지역은 저개발의 낙후지역으로서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자치행정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경제적 불평등, 민족차별 등 많은 정치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3) 북동쪽으로는 러시아·북한, 북쪽으로 러시아·몽골,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접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국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자국 내 지방 차원에서의 안보문제(변경지역 안보)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인접 국가와의 선린관계 유지와 국경 안보를 동시에 추구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국경 안보와 변경지역의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경지역 안보(border area security)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표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2003. 『The 2020 Project : POLICY SUPPOR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 4; 다만 중국은 네이멍자치구와 광시자치구를 서부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랴오닝성은 동북지역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人民日报』, 2001. 1. 25일자.

### 1. 변경지역 안보 : 낙후지역과 소수민족 문제

1979년 이래 추진된 개혁과 개방은 동부 연안지역의 5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지역의 경제발전 효과가 다른 저개발 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만을 조장하게 되면서 소득불균형 문제해소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개발문제에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서부개발계획을, 2003년에는 동북지역 개발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sup>4)</sup>.

중국의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특이한 점은 지역개발의 문제를 소수민족 문제와 항상 결부시켜왔다는 점이다. 주룽지 총리가 ‘서부대개발 사업의 수행은 곧 소수민족과 그들 지역의 발전을 가속하는 것을 말한다(Zhou Ping 2002, 49~55)’고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은 소수민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중국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Li Dezhu 2000, 1~8). 바라반체바(Barabantseva)는 중국 정부에 위치한 각 성(省)의 소득수준이 동북부·서부 지역의 성(省)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과 서부지역 개발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지역경제 개발에 대한 중국정부의 실제 목적은 경제문제 보다는 오히려 낙후지역의 소수민족 문제해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Barabantseva 2009, 243~244).

중국은 한족(汉族)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8.1%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자치 행정구역을 형성(Wang Jisi 2010, 11)<sup>5)</sup>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과 동북지역,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접경지역의 소수민족은 인접국가와 민족적·문화적·종교적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최근의 티벳족(2008. 3)과 위구르족(2009. 7)의 독립요구로 인하여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중국사회 내부에서는

4) 현재 국가급 개발사업으로는 동부술선발전(东部率先发展),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동북지구진흥(东北地区振兴), 중부지구굴기(中部地区崛起) 등 4가지 사업이 있다. 동부술선발전사업에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상해포동지구, 주해황금신구 등 동부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중부지구굴기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지역 6개 성(산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후난성, 장시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중부지구굴기 사업은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대개발 사업의 대상지역을 상호 연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난 2009년 9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부지역 굴기촉진 계획(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중부지역 각 성의 발전개혁위원회는 시행세칙을 마련 중에 있다. 랴오닝성 인민정부 홈페이지(<http://www.ln.gov.cn/qmzx/qyjj>) 참조.

5)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자치행정구역은 5개의 자치구(Autonomous regions)와 30개의 자치주(Autonomous prefectures), 117개의 자치현(Autonomous counties), 1,092개의 민족향(Ethnic township)이 존재한다. 5개의 자치구는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닝샤 후이족 자치구, 시장 티벳족 자치구, 광시 좡족 자치구, 네이멍 몽골족 자치구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질화되어 있었다. 이들은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한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왔으며 그들의 반정부 저항운동은 폭력적·비폭력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시위와 폭동(조정남 1988, 89; Finley 2007, 628)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상징적 표현 또는 한족과 소수민족을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묘사하는 민요 등을 통하여 저항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안보와 내적인 결속을 와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신장 위그루자치구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혈연적·언어적·문화적·종교적 유대가 강하고 마약과 아편의 유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HIV/AIDS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sup>6)</sup> 중국 내륙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소수민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들 지역에 대한 관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한족만을 중국 국민으로 인식한 나머지 소수민족들을 ‘외국인(foreign peoples)’, ‘이방인(outsider peoples)’으로 인식하였으나(Baranovitch 2010, 109~110)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되면서 소수민족을 중국 국민의 일부로 포섭(Wang Hongzhi 2000, 192)하고 親소수민족 정책을 실시하였다. 1982년 헌법 제4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 어떤 민족에 대한 경시와 억압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리와 포섭 실패가 구소련이 붕괴된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Christopher 2003, 267)함으로써 정치와 체제 안정을 위하여 소수민족의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포섭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 2. 국경 안보 : 안보위협 요인의 유입방지와 지역개발을 통한 인접국가와의 선린관계 구축

긴 국경과 많은 접경국가로 인하여 중국은 1960년대부터 국경문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196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접경국가와 국경협약을 체결하면서 국토의 90%이상에 대하여 국경선을 확정지으며<sup>7)</sup> 인접국가와의 불필요한 마

6) 2006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신장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HIV/AIDS 감염사례는 총 16,035건에 이르며 실제로는 약 60,0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Bates and Song 2006, 37)

7) 1960년대에는 버어마(現 미얀마), 네팔, 몽골, 북한, 파키스탄, 인도, 소련과 국경분쟁 해결을

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경안보 문제는 국경선 확정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경 안보(border security)라는 개념은 국경을 통한 인적·물적 유출입과 관련되며 유익한 자원의 유입을 촉진하는 반면, 불법적 또는 위협적 자원의 유입을 저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국경안보에 있어서는 접경국가로부터의 군사적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국경안보는 불법 이민, 밀수품의 유입, 전염병의 확산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Nelson 外 2010, 3~4). 인접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인하여 난민의 유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은 인신매매<sup>8)</sup>·매춘·밀수와 관련된 잠재적 범죄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 사이의 관계악화로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반목은 이들 국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Small 2010, 82). 중국의 국경관리가 인접국가와의 연계발전을 통한 난민 유입의 저지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와의 선린관계에도 초점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Ⅲ. 지역개발을 통한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유지: 서부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중국이 국경지역 안보 문제를 지역개발 사업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우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발전하였는지 살펴본 후 서부지역 개발사업과 국경지역 연계개발사업이 국경지역 안보에 작용하는 역학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1990년대에는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 8) 미국 국무성은 「2010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Tier 2 WL' 국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9년 한 해 동안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2,413명을 기소하였고 7,000건 이상의 인신매매사건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통계수집의 부정확성과 기록제출 과정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관찰대상목록(Watch List)에 포함시켰다.(U.S Department of State 2010, 111~115)

##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변천

개혁·개방 이전에 추진된 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은 주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인프라 구축, 국유기업 건설, 재정적 지원, 인적자원의 재배치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 경제회복기를 거치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3개 변경 건설'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정책은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보다는 사상적·안보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Asian Development Bank 2003, 6~7). 이들 지역개발정책은 거시적 계획의 틀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회주의 사상과 국가 안보라는 비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왜곡, 자원배치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말았다.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투자의 활용, 장·단기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 지역개발사업은 개혁·개방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이후의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덩샤오핑의 집권과 1978년 3중전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중국은 동부 연안 지방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论)'을, 현실적으로는 모든 성장동력을 특정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가적 여건을 배경으로 한다. 초기개발사업에서는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민족자본 유치가 지역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경제교류가 상호 신뢰구축으로 이어져 국가안보 측면에 기여하였다.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홍콩과 마카오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될 경우, 잠재적인 정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으며 대만과의 반목관계 유지는 중국의 국론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부 연안의 5대 경제특구 건설에 있어서 양안관계의 안정화가 안보유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지역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역안보'는 하나의 고려요소였을 뿐 지대의 지경학적 여건과 자본유치의 편의 등 경제적 요인이 동부연안 지역을 개발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개발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들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 방식으로 인하여 중국내 지역간·계층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1980년대 초부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들이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현실화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정부는 그동안 개혁·개방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저개발 지역,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991년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사업이었으며 서부지역 개발사업과 동북3성 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들 계획에서는 서부와 동북지역이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을 통하여 국경안보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푸트남(Putnam)은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라는 외교협상 모델을 제시하면서 '중앙의 정책결정자는 국내의 현안과 대외적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한다(Putnam 1988, 434~435; 447~448)'고 주장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서부개발 사업은 경제개발이라는 경제적 차원의 의도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문제·지역간 경제불균형 등 내적 안보의도, 국경안보·인접국가와의 선린관계 유지 등 외적 안보의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최근 중국이 이들 변경지역을 주된 개발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역량을 기울이는 이유도 이들 개발사업이 가지는 다목적성(多目的性)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서부개발사업 사례

### 가. 배경

중국의 서부지역은 686.7만km<sup>2</sup>로 중국 전체의 7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역 대부분이 산악지대, 고원,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작지대가 6.5%에 불과하다. 열악한 지리적 환경, 인프라 미비, 개혁·개방의 지연 등으로 동부 연해지역과는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었다. 2000년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13%에 지나지 않는 동부지역의 총생산량은 중국의 GDP 중 57.3%를 차지는 반면, 서부지역은 17.1%에 불과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도 양 지역 사이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되 서부지역다(Asian Development Bank 2002, 10). 특히 서부 지역엔. 개의 모든 소수민족 자치구를 포함는 경지역으로서 13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족분쟁으



로 인한 지역안보가 위협받자 중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접경지역에 군대를 상주시킴과 동시에 경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경지역 안보를 증진하고 민족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부대개발 사업은, 국내·외의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부 국경지역을 철의 장막(steel and iron wall)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Yang & Li 2004, 27)'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 나. 전개과정

1999년 3월 장쩌민 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하여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9월 제15기 4중전회에서는 서부대개발 실시를 결정하였다. 2000년 10월 국무원은 '서부대개발에 관한 약간의 정책실시에 대한 통지(国务院关于实施西部大开发若干政策措施的通知(国发[2000]33号))'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서부지역 개발을 국가급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하였다. 서부대개발 사업은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 주석은 시장(西藏)지역의 당서기를 역임(1988~1992)한 바 있어 서부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부지역을 자주 방문하여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곤 하였다(「신화넷」 2010. 1. 23; 2006. 7. 3). 서부대개발 사업의 대상지역은 칭하이(青海), 간쑤(甘肃), 산시(陕西), 스촨(四川), 윈난(云南), 구이저우(贵州) 등 6개성과 충칭(重庆)직할시 및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광시[广西], 내이명구[内蒙古], 닝샤[宁夏], 신장[新疆], 시장[西藏])로 총 12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청위경제구(成渝经济区), 광시북부만경제구(广西北部湾经济区), 관중-톈수이경제구(关中—天水经济区)를 차례로 국가개발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점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다.

서부대개발 사업은 인프라 확충, 생태환경 보호, 산업 구조조정, 생활환경 개선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까지 총 120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주로 인프라 관련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부지역은 천연가스, 크롬, 티타늄 등 지하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이들을 동부 연안지방 산업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2000년 국가개발계획위원회에서는 서부대개발에 있어 1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여기에는 서부지역에 20개의 공항 건설, 서부에서 동부로 천연가스

및 전력 수송, 각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수자원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5종7횡(5縱7橫)'의 도로망 건설, '서기동수(西气东输)', '서전동송(西电东送)'으로 불리는 이들 사업<sup>9)</sup>은 서부대개발에 있어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장자치구를 시발점으로 하거나 경유지로 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12개의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윈난성에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잇는 고속도로가 2008년 개통되어 이들 국가와의 변경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4). 중국은 서부지역 개발 초기부터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중점(王士录 2001, 6~7)을 두면서 인접지역과의 무역,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 3.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안보 사례 : 미얀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과 접경해 있는 국가들 가운데에는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요소를 가진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경험한 국가도 있다. 이들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인접국가의 안보 위협요인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이 절에서는 중국이 지역개발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경지역 안보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을 미얀마와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정치·경제적으로 북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중-북 관계에 시사하는 점이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고찰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중국 집권세력의 실용주의 정책, 후진타오의 '조화사회 건설'에 정책적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제정치학상의 '상호의존적 자유주의(Interdependence liberalism)'이론에 의하여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 정치 권력자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기대는 외국과의 실용

9) '5종7횡' 도로망 건설사업은 중국 전역을 관통하는 5개의 종방향, 7개의 횡방향 고속도로 건설사업, '서기동수(西气东输)'란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보내는 사업을, '서전동송(西电东送)'이란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동부지역으로 송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주의적 경제협력을 추동하권과들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국방과 안보차원에 서의 상호 협력에도 기여하권과된다.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권과들을 추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불신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권과된다는 것이다 (Holslag 2009, 41~42). 중국은 이와 같은 안보유지 방식을 동남아시아 국가 들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중앙아시아지역 등 모든 중국의 접경지대 안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부지역 개발을 이들 국가와의 안보협력에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의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가. 중국과 미얀마의 정치외교 관계

중국의 저미얀마 외교는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Nyi 2006)<sup>10)</sup>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은 중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경안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과 2,192km의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시장 자치구와 접경하고 있으나 국경의 대부분이 원난성과 맞닿아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미얀마는 중국이 벵골만을 통하여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동남아시아 무역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Holmes 2007, 2)<sup>11)</sup> 미얀마의 풍부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서부지역 개발 사업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리적인 접근성과 상호보완성으로 말미암아 미얀마의 정치·경제 상황은 중국에게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얀마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 하에

10) 여기서의 군사안보란 미얀마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주변세력(특히, 인도)을 견제하거나 미얀마와 접해있는 벵골만을 통해 인도양에 접근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영해분쟁 해결과 해양안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1)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벵골만에 위치한 차우크퓨(Kyaukpou)시와 원난성의 성도인 쿤밍(昆明)을 연결하는 원유·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각각 2,389km, 2,380km)을 건설중에 있다. 2005년에는 이 두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을 시작한 바 있다.

서 독립한 후 1962년 군부세력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였다. 1988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다. 특히 1988년 민주화 항쟁<sup>12)</sup>, 2007년 반정부 운동<sup>13)</sup>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를 자택에 감금하는 등 군부독재가 점차 강화되면서 그동안 미국, EU,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동결되고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집중되었으며 서방 제공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이를 강력하게 요구(e)가 동(Holiday)감금하는, 480; 491~495). 최근 들어서는 미얀마의 핵보유 의혹이 제기(Lintner 2009. 9. 22)되면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와 경제적 불안정은 많은 난민의 중국 유입을 조장한 바 있으며 변경지역에서는 마약밀수, HIV/AIDS 확산, 도박 등 범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14~16). 접경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철저한 감시를 기울이는 한편 국경무역을 촉진하여 불안요인의 국내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 나. 국경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관계

1990년대 들어오면서 미얀마의 신군부는 국내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표방하여 외자유치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88년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탄압함으로써 서구사회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중단되었고 결국 개방정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같은 해 10월 미얀마의 탄 슈웨(Than Shwe) 장군이 중국을

12) 1988년 8월 8일에 발생한 이 항쟁은 흔히 8-8-88 항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곤(Yangon)의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승려, 가정주부, 교수 등 수십만 명이 동참하였다. 같은 해 9월 18일에 진압되었으나 민주화 항쟁 가운데 적어도 3,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Q&A : Burma's Political Prisoners', 2009. 8. 16.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http://www.hrw.org>) 검색. (검색일 : 2010년 9월 26일)

13) 샤프란 혁명(Saffron Revolution)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주도 세력인 승려들의 복장색깔에서 유래되었다. 군부 정권이 사전 예고 없이 에너지 보급을 중단하면서 석유, 가스 가격이 폭등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였다. 2007년 8월 15일에 발발하여 같은 해 9월 26일까지 지속되었다.

방문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게 되었다(Hong 2008, 180).

공식적인 통계는 보고된 바 없으나 중국은 지난 10년 간 무상원조·저금리 차관제공·부채면제 등 미얀마를 지원해 왔으며 2006년까지 총 825개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4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4)</sup>. 인프라 투자의 대가로 미얀마는 원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특권을 중국에 부여해 왔다.

양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는 국경지역인 카친(Kachin)주와 샨(Shan)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하자원 개발과 교통망 건설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속도로 건설은 쿤밍-만달레이(Mandalay)-차우크퓨(Kyaukpyu)-시뜨웨(Sittwe)를 잇는 1,943km의 도로 건설과 쿤밍-Lashio(산주의 도시)를 잇는 107km 도로 건설을 들 수 있는데 점차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내륙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은 국경 무역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부대개발 사업을 위한 수송로 확보, 자원 수급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윈난성에 국경 관리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한 바 있는데(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19) 이를 통해 윈난성과 미얀마 간의 무역액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sup>15)</sup>.

#### 4. 서부대개발-미얀마와의 국경안보 연계정책에 대한 평가

중국은 체제 안정과 주변지역의 안정을 군사안보에 있어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데(Fravel 2008, 126~129)<sup>16)</sup> 서부지역 개발사업은 이러한 목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이다. 이 계획은 국유기업의 민영화,

14) 개별적인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2006년까지 중국의 대미얀마 무상지원은 1억 6천만 달러, 저금리 차관제공은 6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Nyi 2006)

15) 2008년 윈난성과 미얀마의 무역액은 총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미얀마의 대중국 무역액(약 24억 달러)의 50%에 이르는 수치이다. '2008年云南对东盟贸易回落 贸易额仅为27.6亿美元', 「신화넷」, 2009. 1. 24; '2007/08财年中国贸易额比上年增长60%', 2008. 11. 27([http://mm.mofcom.gov.cn/aarticle/zxhz/tjsj/200811/2008110\\_5878917.html](http://mm.mofcom.gov.cn/aarticle/zxhz/tjsj/200811/2008110_5878917.html)). (검색일 : 2010년 9월 26일)

16) Fravel은 중국의 군사안보의 전략적 목표로 ① 체제의 안정(regime security), ② 영토주권(territorial integrity), ③ 국가의 통일(national unification), ④ 해양 안보(maritime security), ⑤ 지역의 안정(regional stability)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사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International Alert 2009, 4). 사경제 활동은 대외관계에서도 평화구축에 작용한다. 국제 사회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경제 주체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는 분쟁경험지역과 분쟁잠재지역에서 안보분위기를 조성해 왔고(Mats and Nader 2010, 39) 사경제 주체들은 청원, 중재, 로비 등 직간접적 방식으로 국가 간의 평화관계 형성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Tripathi & Gündüz 2008, 18~24).

인접국가인 미얀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프라 건설과 지하자원 부문 투자를 통하여 서부개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상수송로 확보 및 내륙지역으로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권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미얀마와의 국경지대는 일종의 완충지대적 성격을 가진다. 즉 국경지대를 개발, 발전시킴으로써 난민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저지하고 국경안보 관리대상을 일정한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고려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미얀마 내의 중국계 소수민족을 영향력 행사와 완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11). 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무기를 판매하여 무력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코강(Kokang)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Drew 2009, 14~17)<sup>17)</sup> 소수민족을 국가 간 갈등의 완충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과 미얀마의 정부차원에서의 갈등을 소수민족과 미얀마 정부의 충돌로 국지화하기도 하였다.

17) 미얀마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국경지역의 중국계 소수민족에 대하여 암암리에 무기지원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09년 8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국경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코강지역의 중국계 민병대를 미얀마 정규군에 합류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의도는 민병대 측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를 기화로 민병대와 정규군 사이에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37,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원난성으로 넘어온 바 있다.

#### IV. 동북지역개발의 본질과 중국의 의도

현재까지 중국의 동북지역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으로는 TRADP, 동북진흥 전략,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과 창지투 개발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동북지역개발의 대상지역과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프로젝트 간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 1> 중국의 동북지역개발사업의 대상지역과 개발목표

		대상지역	개발목표
장기적 궁극적 개발목표	TRADP	동북3성과 내몽고(중국), 몽골 동부, 연해주 일부(러시아), 동해안 항구도시(남한), 나선특별시(북한)	두만강 지역에서의 교통·에너지·관광·환경 등 분야 개발
	동북진흥전략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2020년까지 세계적인 자본재 생산기지화
단기적 선도적 개발목표	랴오닝 개발계획	랴오닝성의 후루다오, 진저우, 판진, 잉커우, 다렌, 단동의 6개시 관할지역	2020년까지 연평균 15% 경제성장, 다렌을 동북아국제해운센터와 국제물류센터로 육성
	창지투 개발계획	지린성의 장춘·지린의 일부, 연변조선족자치주 전부 및 두만강 유역	2020년까지 현재의 GDP 4배 이상 증가

중국 국무원은 ‘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을 통해 장춘-길림-두만강지역의 개발은 두만강지역국제합작개발을 위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계획과 TRADP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TRADP가 동북아시아 5개국(중·러·북·한·몽)의 지역개발 사업이라면<sup>18)</sup> 동북지역개발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측 지역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TRADP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약 20년간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8) 1991년에 계획된 TRADP는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선·선봉, 러시아의 나드호카를 잇는 소삼각지대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1995년에는 주변 5개국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전환되었고 1999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개발대상지역으로 포함되었다. 2005년 제8차 Commission 회의에서는 대두만강개발체제(GTI : Great Tumen Initiative)로 전환하면서 개발대상지역을 중국의 동북3성, 내몽고, 북한의 나선특별시, 몽골 동부, 러시아의 연해주 일부, 한국의 동해안 항구도시로 확장하였다.

까지 괄목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원칙에 따라 주변국과의 공동개발보다는 자국의 동북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동북진흥전략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북지역개발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선도적 거점을 개발하려는 사업이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과 '창지투 개발계획'이다. 요컨대 중국의 입장에서 TRADP는 동북개발사업의 장기적·궁극적 발전목표이며 동북3성 개발계획은 단기적·선도적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변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협력공동체 형성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두만강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

두만강 지역은 중국·북한·러시아 3개국이 접하는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각 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사회주의적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산업구조의 왜곡과 경제적 낙후를 경험하고 있다(Davies, 년도없음 1). 또한 이 지역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30년대 일본의 대륙침공 이후로 미-소간의 이념대립, 중-소간의 국경분쟁, 남북한간의 갈등, 북핵문제 등 긴장과 갈등이 상주해 왔다.

두만강 지역은 중국에게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안보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북한정권의 불안정, 러시아와의 경쟁과 협력 등 외적 안보의 측면이다. 둘째, 내이명자치구,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소수민족 문제와 경제적 낙후·불평등을 원인으로 한 내적 안보의 측면이다. 2005년 GTI체제 출범에 따라 내몽고 동부지역이 TRADP의 대상지역 범위에 포함된 것은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셋째, 나선항 확보를 통한 해양 수송로 확보와 해양안보의 측면이다. 중국은 청나라시대에 러시아와 베이징 조약(1860)을 체결함으로써 훈춘의 동부지역을 러시아에 할양하였는데 그 이후 동북지역에서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상실하고 말았다. TRADP은 동북지역의 해상로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영역 확대와 함께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러시아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가치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여건은 중국의 서부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앞장에서 살펴본 경제협력을 통한 국경지역 안보유지 체제는 동북지역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 2.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TRADP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극동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중국의 노동력, 북한의 천연항구, 몽골의 축산물,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을 연계함으로써 환동해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윤승현 2009, 8~9; 13). UNDP가 1991년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는 자체적인 개발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이미 1988년부터 중앙정부가 훈춘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개발을 위하여 약 7억 달러의 재정을 투자하였고 1992년에는 훈춘(珲春)을 변경경제합작구로, 연변자치주의 연길(延吉)을 개방선도구로 지정하는 등 이 지역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Lee 2003, 7; [http://www.ecdc.net.cn/regions/english/tumen/huncun\\_e01.htm](http://www.ecdc.net.cn/regions/english/tumen/huncun_e01.htm) 참조). 중앙정부의 지도자급 인사들도 수시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개발 지원을 약속함과 아울러 개발사업을 독려하곤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동북아시아의 금융위기, 참여국가들의 내부사정, 참여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말미암아 무역과 투자의 양이 기대치를 훨씬 하회하였고 동북지역의 물가상승과 저개발 지역에서의 잦은 소요사태 등 사회불안이 조성되면서 국가차원에서의 경제부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위 ‘암흑지대(shadow belt)’라고 불리는 변방지역들이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경제를 재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Lu 1993, 9)하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참여국들과의 두만강유역 공동개발에 노력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동북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03년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동북3성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기술혁신·산업구조 조정 및 민간경제 육성과 개혁·개방을 통해 이 지역을 ‘국가발전의 제4의 엔진’으로 개발할 계획을 마련하였다(Li Jingyu 2004, 31~32). 동 계획에는 동해 해상수송로 건설의 필요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 발표된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东北老工业基地进一步扩大对外开放实施意见)(国  
 辦[2005]第36号 : 이하 '36호 문건')에서는 변경국가들과의 무역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통망 확장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는 북  
 한과의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러시아와의 '육로·항만·세관 일체화' 프로젝  
 트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북간 교통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변도 철도는 통화(通化)-관수이(灌水), 장허(庄河)-단동  
 (丹东)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개통된 상태이며 훈춘과 원정리를 잇는 교  
 량은 2010년 6월에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단동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의 경우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양국 간 건설합의가 이루  
 어진 바 있다.

<표 2> 1990년대 TRADP 관련국의 개발목표와 개발 장애요인

관련국	개발목표	장애요인
중국	훈춘의 자유경제무역지대화 길림성의 동북아 중심공업도시화	가장 적극적 참여
북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화 국제화물중계기지, 가공수출기지, 국제적 관광지 조성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 등으로 개발 여력·의지 약화 북핵문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무역 지대화 국제화물 중계기지화	나선항 개발시 블라디보스토크·나드호카 항 경제침체 우려 중-러 무역축진으로 인한 러시아의 지속 적 적자우려 러시아 지하자원 유출우려 길림성 공업화로 인해 식수원인 아무르강 (黑龍江) 오염 우려 (Kim 2008, 215~216)
한국 일본		북핵문제·일본인 납치문제 등 정치안보 적 원인으로 자본·기술투자 지연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나선항 개발, 나진-하산 간 철도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두만강 지역개발은 중국-북한 간의 교통인프라, 지하자원개  
 발, 나선항 개발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이 중-북 경제  
 협력관계에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3. 개발과제와 평가

#### 가. 동북지역개발의 과제

다자주의에 근거한 경제협력은 본질적으로 그 형성과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지역개발이 학계와 주변국 간에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TRADP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개발계획 성공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동북3성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국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TRADP의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러시아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한과 일본 측의 자본 투자와 기술 이전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현재 훈춘과 연길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합작기업이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동북지역 개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북핵문제·투자가의 신변안전 문제 등 정치·안보적 원인에 의해 남한과 일본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북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동북지역 개발의 성패에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동북지역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중국의 동북개발계획 역시 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지역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목적 개발 프로젝트이다. 먼저 중국의 변경지역 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계획은 낙후된 동북3성의 경제적 회생을 통해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에는 실업·임금체불·소득불균형을 이유로 동북지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한 바 있었는데 이는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과 동시에 동북3성 개발을 추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역은 시장, 신장과는 달리 소수민족 분쟁이 심각한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간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토주권에 중요한 지역이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발현된다면 중국의 변경지역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연변조선족들은 동일언어·민족적 유대를 통해 남한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Freeman 2010, 140)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북지역개발은 북한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국경안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과 북한은 1,343km의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난민의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약 30만 명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월경하여 대부분이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유입되었다(Margesson 외, 2007). 난민 유입의 주요한 루트로는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두만강 지역과 국경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둥지방이 유력하다(Thomson 2009, 17). 그런데 '36호 문건'은 북한과의 지역일체화를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창지투-나선항 지역, 단둥-신의주 지역이 단일경제구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경안보 위협지대에 단일 경제구역 형성을 추진하는데에는 '신 완충지대' 형성을 위한 중국 측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시대에 중국은 북한을 서구 자본주의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탈북자의 중국유입 등은 오히려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Kim and Lee 2002, 184). 구역 일체화 의도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중국 유입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북한 난민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연변지역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의 난민 수용능력이 확대된다면, 북한의 난민 유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치주 이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연변의 조선족자치주를 난민 유입의 완충작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단일경제지역을 형성하여 난민의 국내유입을 저지하고 국경안보의 대상지역을 이들 경제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 완충지대로서의 단일경제구는 중-북간 국경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사업은 중국의 내외적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견해에 따르면 동북3성 개발을 위한 중-북 경제협력이 북한을 식민지화하거나 동북4성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들 견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동북4성론은 기존에 중국이 취해왔던 내정불간섭 원칙과 평

화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Zhao 2008. 5. 10)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을 정치적·경제적 식민지화한다는 것은 중국 변방지역에 2천만이 넘는 대규모의 소수민족 형성을 의미하는데 소수민족 문제해결이 중국정부의 난제임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셋째, 중국은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평화관계를 구축해왔다. 북한의 동북4성화는 중국위협론의 등장과 중국 경계심(sinophobia)(Holslag 2009, 107) 확산을 초래하여 그동안 유지해오던 평화구축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넷째, 동북4성론은 주로 북한과의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 ‘36호 문건’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잠재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며(Mats and Nader 2010, 44~45), 중·러시아, 서부지역과 접경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우에만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역 일체화 사업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팽창주의 야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신 완충지대 건설과 국경안보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 V. 결론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이 추진한 지역개발사업은 경제적 목적과 내·외적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목적 사업으로 구상되었으며 동북지역 개발계획 역시 그 취지를 같이한다. 동북지역 개발사업의 주된 의도가 다자간 경제협력과 지역 내 평화관계 구축에 있으며 이를 통한 경제주도권과 영향력의 확대가 인접지역으로의 공세적 팽창주의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 중국의 경제주도권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동북지역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발계획에의 참여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참여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동북지역개발은 아직까지 교통인프라 구축단계에 머물러 있고 계획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모든 개발사업에서는 초기의 앵커(anchor) 기능을 담당하는 선도기업이 필요한데 이들 기업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의 시기와 규모는 지역개발의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지역에서의 투자는 북한에 대한 지원·원조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통한 최대한의 이익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원조가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혜국 내부의 정책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Haggard & Noland 2009, 123). 각 참여국이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두만강지역개발에 참여하여야만 다자간 경제협력이 장기간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차원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지원은 투자여건 조성 및 행정적 지원 등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자간 공동사업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사경제 활동을 통한 지역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 강영훈 외. 2009. 『환동해경제권의 형성과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 김창순. 2006. 「중국의 대북한 식민지화 정책」. 『북한』, 8월호.
- 남성욱. 2006.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45호.
- 배종렬. 2006.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 신상진. 2006. 「후진타오 집권초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 양문수. 2006.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제12호.
- 유석렬. 2007. 「중국의 북한예속전략: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외교』, 제82·83호.
- 윤승현. 2009. 『두만강 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조정남. 1988. 『중국의 민족문제』. 교양사.
- 주장환. 2006.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상: ‘36호 문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7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12. 24. 「중국 서부대개발 개황과 시사점」.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11. 23. 「중국 서부대개발 주요사업과 진행상황」.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 2. 국외문헌

- 王士录. 2001. 「东南亚形势的发展与中国西部大开发」. 东南亚, 第2期. 云南省社会科学院东南亚研究所.
- Asian Development Bank. 2003. The 2020 Project : Policy Suppor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line]. Available: [http://www.adb.org/Documents/Reports/2020\\_Project/2020\\_Project.pdf](http://www.adb.org/Documents/Reports/2020_Project/2020_Project.pdf). [2010, December 26]
- Barabantseva, Elena V. 2009. "Development as Localization : Ethnic

- Minorities in China's Official Discourse on the Western Development Project." *Critical Asian Studies*, 41:2.
- Bates, Gill·Song, Gang. 2006. "HIV/AIDS in Xinjiang : A Growing Regional Challenge." *Th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4:3.
- Berdal, Mats and Mousavizadeh, Nader. 2010. "Investing for Peace : The Private Sector and the Challenges of Peacebuilding." *Survival*, 52:2.
- Davies, Ian.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1990-2000." *North Pacific Policy Papers*, 4:26.
- Finley, Joanne Smith. 2007. "Chinese Oppression in Xinjiang, Middle Eastern Conflicts and Global Islamic Solidarities among the Uyghur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6:53.
- Fravel, M. Taylor. 2008. "China's Search for Military Power." *The Washington Quarterly* 31:3.
- Freeman, Carla P. 2010. "Neighborly Relations : The Tumen Development Project and China's Security Strateg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63.
- Haggard, Stephan and Noland, Marcus. 2009. "A Security and Peace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 the economic dimension." *The Pacific Review*, 22:2.
- Holliday, Ian. 2009. "Beijing and the Myanmar Problem." *The Pacific Review*, 22:4.
- Holslag, Jonathan. 2009. "Progress, Perceptions and Peace in the Sino-Indian Relationship." *East Asia*, 26:1.
- \_\_\_\_\_. 2009. "Embracing Chinese Global Security Ambi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32:3.
- Hong Zhao. 2008. "China and India : Competing for Good Relations with Myanmar."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2:1.
- International Alert. 2009. *Sustaining Business and Peace : A Resource Pack on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ondon : International Alert.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China's Myanmar Dilemma." *Asia Report*, 177.



- Kim, Samuel S. and Lee, Tai Hwan. 2002.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Kim, Woo-Jun. September 2008.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Province :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The Russian Far East, and Sinuiju, North Korea." *Issues & Studies*, 44:3.
- Lee, Chan-Woo. 2003. "Ten Years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 Evaluation and Issues." *ERINA Booklet*, 2.
- Li, Jingyu. 2004. "Strategic Thinking towards Making the Northeast the Fourth Economic Engine for China." *Economic Research*, 6.
- Lwin, Nyi Nyi. 2006. Economic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Burma [Online]. Available: <http://www.narinjara.com/Reports/breport.asp>. [2010, December 27]
- Margesson, Rhoda·Chanlett-Avery, Emma·Bruno, Andorra. 2007.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Human Rights Issues : International Response and U.S. Policy Op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26).
- Marsh, Christopher. 2003. "Learning from Your Comrade's Mistakes : The Impact of the Soviet Past on China's Futur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6:3.
- Putnam, Robert D.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 Small, Andrew. 2010. "China's Caution on Afghanistan - Pakistan." *The Washington Quarterly*, 33:3.
- Thompson, Drew. 2009. "Border Burdens : China's Response to the Myanmar Refugee Crisis." *China Security*, 5:3.
- Wang, Jisi. 2010. "Inside China : A Note From Guest Editor." *Global Asia*, 5:2.
- Wang, Hongzhi. 2000. *The Reform of History Textbooks and Its Implementation*. Beijing : Renmin Jiaoyu chubanshe.
- Yang, Faren and Li, Yang. 2004. *The Western Development Project and the Minority Question*. Beijing : People's Press.

### 3. 인터넷 검색자료

<http://www.ln.gov.cn/qmzx/qyjj/>

[http://www.ecdc.net.cn/regions/english/tumen/huncun\\_e01.htm](http://www.ecdc.net.cn/regions/english/tumen/huncun_e01.htm).

[http://www.international-alert.org/pdf/Sustaining\\_Business\\_and\\_Peace.pdf](http://www.international-alert.org/pdf/Sustaining_Business_and_Peace.pdf).

<http://igcc.ucsd.edu/pdf/policypapers/pp06.pdf>.

<http://www.fpri.org/enotes/20080510.zhao.chineseforeignpolicyhu.html>.

[http://www.stanleyfoundation.org/publications/pab/Haggard\\_NolanPAB308.pdf](http://www.stanleyfoundation.org/publications/pab/Haggard_NolanPAB308.pdf).

<http://www.press.umich.edu/pdf/0472112899-ch2.pdf>.

<http://mm.mofcom.gov.cn/aarticle/zxhz/tjsj/200811/20081105878917.html>.



16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 발간과  
그 의미



#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 발간과 그 의미

김애경 | 명지전문대학

□ 2011년 4월 21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를 발표함.

- 약 1만 1천 여자에 이르는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는 중국이 건국이후 최초로 처음으로 발행, 공포하였는데, 서언과 총 6개의 장 및 결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대외원조 자금, 대외원조 방식, 대외원조의 분포, 대외원조의 관리, 대외원조 국제협력을 포함.

□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오랫동안 자국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빈곤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

-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시기별로 특징이 있으나

→ 5가지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 5가지 원칙이란 원조수혜국의 자주적 발전능력 제고,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 평등호혜와 공동발전, 능력에 맞는 원조제공과 최선을 다해 원조실행,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고 개혁과 혁신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은 1950년 북한과 베트남에 대한 물자제공이 중국 대외원조의 서막이었으며, 2004년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금액은 급속히 증가, 2004-2009년 기간 동안 그 금액은 연평균 29.4%씩 증가하였다고 주장.

- 중국의 대외원조자금은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및 특혜차관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대외원조는 국가재정지출의 일부분이므로 재정부에서 예산을 관리함, 그 중 무상원조와 무이자차관은 국가재정 항목에서 지출되며 특혜차관은 중국정부가 중국 수출입은행을 지정하여 원조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주장.

- 2009년 말까지 누계 대외원조액은 2,563.9억 위안이며, 그 중 무상원조는 1,062억 위안, 무이자차관은 765.4억 위안, 특혜차관은 735.5억 위안을 제공함.

- 중국의 대외원조 방식은 주로 플랜트항목, 일반물자, 기술협력, 인력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 의료원조,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원조, 지원자 파견

- 및 채무감면 등 8가지 방식을 취함.
- 중국의 대외원조 분포는 지역별 분포와 원조영역별 분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 중국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오세아니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데, 2009년 말까지 총 161개국과 30여 국제 및 지역차원의 조직이 중국의 원조 수혜를 받음, 2009년 중국 의 대외원조 제공지역의 분포를 보면 아시아 32.8%, 아프리카 45.7%,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12.7%, 오세아니아 4.0%, 유럽 0.3%, 기타 4.5%이며, 중국의 원조 수혜국 중 최빈국이 39.7%, 기타 저수입국 23.4%. 중저 수입국 19.9%, 중고 수입국 11%, 기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이 제공한 대외원조의 영역은 농업, 공업, 경제 기반시설, 공공 설비, 교육 및 의료위생 등이 포함되며 주로 해당국의 공·농업의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시설의 증강, 교육과 의료 상태 개선에 중점을 둠.
    -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부분이 중국 대외원조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였다고 주장, 특히 중국은 튀니지, 기니, 바누아투와 쿠바 등 국가와 메탄가스 기술협력을 진행하였고, 카메룬, 부룬디, 기니 등의 국가에 수력발전 시설을 제공하고, 몽고, 레바논, 모로코, 파푸아뉴기니 등의 국가와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 방면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외에도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관련기술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음, 2000-2009년 동안 50차례 양성반을 운영하였고, 1,400여명이 이 양성반 에참여하였다고 주장.
  - 대외원조의 관리에 있어서는 원조에 대한 정책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상무부가 중국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관부서로서 대외원조의 정책과 규정, 총체적인 계획과 년차별 계획을 제정하며 대외원조 항목에 대한 각종 항목의 비준과 심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때문에 상무부 산하 국제경제협력사무국, 국제경제기술교류 센터와 국제상무 관원연수대학이 각각 플랜트설비와 기술협력, 물자 및 훈련에 대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상무부는 또한 외교부, 재정부 및 중국 수출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별 원조방안과

원조자금 계획을 수립, 2008년에는 상무부가 외교부, 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부처 간 대외원조 연락시스템을 만들었고, 2011년 2월에는 상급 부처 간 협조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주장.

- 중국 대외원조의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중국의 원조는 주로 양자적 차원에서 이루어고 있지만 다자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도 실시하고 있고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 예를 들면 1981년 유엔 개발계획본부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 프로그램(TCDC)을 운영하기로 하여 20여 년간 6,000여 명을 훈련시켰고, 1996년부터는 중국이 유엔 식량기구와 협력하여 여러 개발도상국에 중국의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였음, 2009년 말까지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2개 국가에 700여 명의 농업전문가와 기술자를 파견하였고, 그 외에도 세계은행, 유엔 무역발전회의, 유엔 공업발전조직 등 다자기구와 협력을 진행 중임을 표명.

#### □ 총평

-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국은 1950년에 대외원조를 시작하였으나, 백서의 형태로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표한 것은 2011년 4월 21일의 백서가 역사상 처음.
- 물론 금번 백서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중국의 대외원조 역사에 대한 회고 수준으로 원조수혜국과 원조수혜국에 따른 원조액수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그동안 산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정도의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중국의 대외원조가 원조 수혜국의 경제발전 능력을 제고시키고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중국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유엔의 밀레니엄프로젝트 목표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원조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의 일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외부의 평가에 대해 일정 정도 회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백서의 정기적 발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향후 원조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외부의 여러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자료]

《中国的对外援助》 白皮书 (全文)

2011年04月21日 来源：新闻办网站

[http://www.gov.cn/gzdt/2011-04/21/content\\_1849712.htm](http://www.gov.cn/gzdt/2011-04/21/content_1849712.htm)

“China publishes first report on foreign aid policy”

Thursday 28 April 2011, guardian.co.uk

<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2011/apr/28/china-foreign-aid-policy-report>





17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 정책 분석





#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 정책 분석

이상국 | 국방연구원

- I. 서론
- II. 중국 안보·국방정책의 변화
- III. 중국 안보·국방정책 결정의 환경 요인
- IV. 중국 안보·국방정책 결정의 제도적 요인
- V. 중국 안보·국방정책 결정의 엘리트 요인
- VI. 향후 중국 안보정책 전망
- VII. 정책 방향 건의

## I. 서론

### ■ 연구 배경 및 목적

- 공세화하는 중국의 안보·국방정책의 성격과 내용 파악
- 중국 안보·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도모
- 중국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모색

### ■ 연구 방법

- 방법론: causal process-tracing method
- 주요 분석대상: 환경, 제도, 엘리트 요인

## II. 중국 안보·국방정책의 변화

### ■ 기존의 온건한 대외 안보 정책

- 경제성장/ 중국위협론 불식을 위한 의도
- 협력·공동 발전 지향의 안보정책 추구

### ■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의 확대

- 미국의 단극질서에 대한 불만 및 미군의 아태재배치 우려
- 에너지·해양·우주·네트워크 등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 강화

중국의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

	국제 질서 (정치·군사)	강대국 (미국)	한반도	대만	기타 이슈
2002	불공정한 국제정치 경제, 패권주의/강권 주의, 군사력 불균형	일부 국가 아태지역 내 군사배치/군사동 맹 강화	한반도 평 화 진척 북 잡	대만 독 립 기도	테러/분열/극단주의

	국제 질서 (정치·군사)	강대국 (미국)	한반도	대만	기타 이슈
2004	패권주의/일방주의, 전략요충지/전략자원/전략주도권 쟁탈 격화, 정보화요인에 따른 군사력 불균형 심화	아태지역 내 미군 개편, 군사동맹 강화, MD 가속화; 일본 헌법 개정 움직임, 자위대 해외 군사활동 강화	6자 회담 기초 불안정, 북한핵 문제 해결 불안정	대만 헌법개정 통한 독립 추구	테러/해적/밀수/마약 등
2006	패권주의/강권주의, 비전통 안보 위협, 군사력 불균형 여전, WMD 확산	미군 재배치 가속화/아태지역 군사능력 증강, 미일군사동맹 강화/일체화, 일본 평화헌법 수정/집단 자위권 보장 기도	북한 핵실험/동북아 정세 악화	대만 독립 추구	이라핵문제, 이라크/아프카스탄문제, 에너지자원·운송통로상 안보문제 상승, 영토/해양권 문제
2008	전략 자원/요충지/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격화, 패권주의/강권정치, 국제적 군사경쟁 격화, 반MD, 군사우주 등	미국 아태지역 내 전략적 관심 견지, 군사동맹 강화, 군사배치 재조정	6자 회담 단계적 차원의 성과	대만 독립 추구	테러리즘/환경재산/기후변화/초국적 범죄/해적 등, 영토/해양 이익 분쟁, 테러/분열주의
2010	전통대국과 신흥대국간 빈번한 모순 현저, 일부 대국 우주·네트워크 극지 전략·글로벌 신속타격수단 발전·반MD능력, 네트워크 작전 능력	미국 아태 동맹체계 강화,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개입 강화	빈번한 정세 긴장	양안관계 긍정적 진전	테러리즘, 경제안보, 기후변화, 핵확산 정보안보, 공공 위생, 초국적 범죄; 영토·해양 권의 분쟁 빈번, 일부지역 정치 불안, 분열주의, 우주·전자·네트워크

## ■ 후진타오 제2기: 적극적 안보정책의 본격화

### ○ 핵심이익 개념의 확대 및 적극적인 공표

※ 중국의 핵심이익: “(중국의) 기본 제도와 국가안보 보존(維護基本制度和國家安全)”;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國家主權和領土完整)”;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적 발전(經濟社會的持續穩定發展)”

### ○ 타국에 대한 빈번한 강경 발언

○ 다양한 레버리지의 빈번한 동원

사건	중국 주장	정책 레버리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서해 훈련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외교: 정부 및 유관기관 교류·협력에 소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의 지연</li> </ul> </li> <li>○ 군사: 국방부 및 군 기관 군사교류에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및 유관기관 학술 및 인적 교류 연기</li> <li>• 한미훈련 대응 성격의 군사훈련 실시 및 공개</li> </ul> </li> <li>○ 경제: 경제 교류·협력에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협상에 소극적 태도</li> <li>• 한국기업(LG) 현지 공장 인허가 지연</li> </ul> </li> <li>○ 사회: 인적 교류에 대한 장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장학금 지급시 한국유학생 차별 대우</li> </ul> </li> </ul>
센카쿠 열도 부근 중국 어선 단속·선원 구속	“주권·통일·영토의 안정성은 중국의 핵심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 교류 중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료급 교류 중단 선언</li> <li>• 주중 일본 대사에 대한 이례적인 대우</li> </ul> </li> <li>○ 경제: 경제 협력 중단 및 경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토류 수출 금지</li> <li>• 동중국해 유전 독자개발 선언</li> </ul> </li> <li>○ 사회: 교류 중단 추진 및 일본인 신변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체류 일본인 관광객 역류</li> <li>• 항공 증편 논의 중단</li> </ul> </li> </ul>

### Ⅲ. 중국 안보·국방정책 결정의 환경 요인

■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정체

■ 중국군의 비대칭 군사능력 강화

■ 중화민족주의의 부흥과 대중의 영향력 확대

- 경제 성장 및 당국의 애국주의 강조에 의해 추동
- 인터넷 발전으로 일반대중의 정책 이슈화 능력 제고
- 정책결정자 통치의 정당성 확보 위해 여론 반영 노력



#### IV. 중국 안보·국방정책 결정의 제도적 요인

##### ■ 계파간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 중대 사안의 경우 엘리트간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 ■ 위기에 취약한 의견 조정 기제

- 정치국 상무위원회 군 인사 배제
- 중앙외사영도소조: 의사협의기구
  - 군(軍) 핵심 책임자(상무부주석 등) 미참여
- 복잡한 다단계 의사결정 체제

⇒ 결국: 안보 위기 발생시 지연된 반응·불협화음

##### ■ 중국군의 높은 위상

-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무원과 대등한 위치
- 국방·안보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
- 해군력 등 군사력 강화

##### ■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과 외교부의 영향력 약화

- 국제사무의 복잡화, 다양화
-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외교부 영향력 약화
- 북한 관련 이슈, 중국군 및 당(黨) 중련부 영향력 큼

## V. 중국 안보·국방정책 결정의 엘리트 요인

### ■ 중국 리더십의 분화

- 대미정책, 국익실현 방식을 둘러싸고 강온파 존재

### ■ 강경 리더십의 영향력 확대1: 엘리트 집단의 특징

- 정치국상무위원 대립구도
  - 후진타오, 시진핑 VS 원자바오
  - ※ 기타 상무위원의 경우 발언 자제 분위기
- 중앙외사영도소조 강경파 주도
  - 후진타오, 시진핑, 다이빙귀, 량광리에, 마샤오티엔 등
- 중앙군사위원회 핵심이익 관계자 두수 포진
  -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관련 인사 포진

### ■ 강경 리더십의 영향력 확대2: 핵심 엘리트의 성향·영향력·인맥

- 후진타오
  - 보수적 성향; 대중여론에 민감한 반응; 안보정책결정 최고 권한 보유, 당·정·군에 측근 포진
- 시진핑
  - 강경·보수적 성향
- 원자바오
  - 온건한 성향; 국제적 규범 중시; 군부와 이견 표출; 안보 관련 권한 및 인맥 취약
- 다이빙귀
  - 중련부 출신, 지소파, 전임(前任) 국무위원(외교·안보 담당)에 비해 북한 우호적 평가
- 량광리에
  - 강경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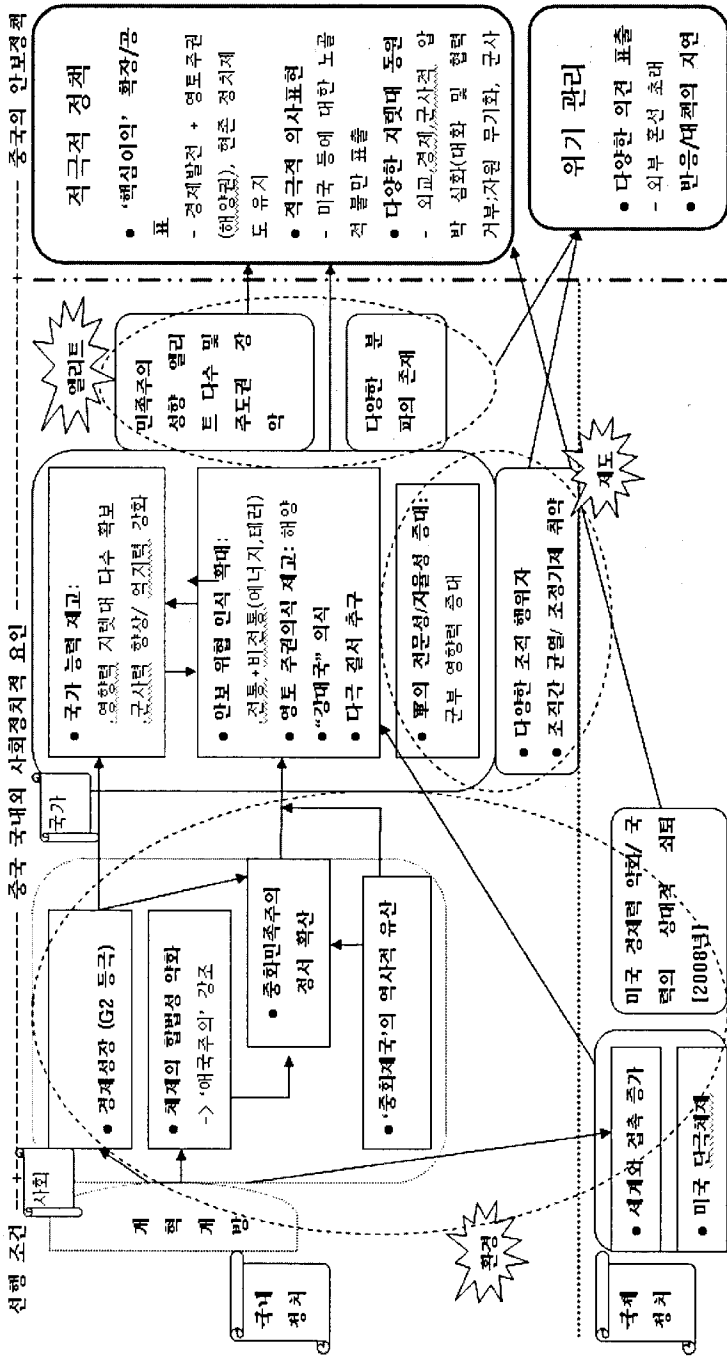
### 대외안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분파

정책: 강경 <-----> 온건  
 성향: 민족주의 글로벌리즘

<-----+-----+-----+-----+-----+----->

조 직	인민해방군	중련부	상무부	외교부
정치국	보시라이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		
고위관료	량광리에	다이빙귀	량지에츠	
	마샤오티엔	승광카이	류웬	
	왕자웨이			
학계[국제]	최즈웬	선딩리	왕지쓰	스인홍
				류사오보
학계[한반]		뤄차오(呂超)	주펑	장렌웨이
사회	신좌파	네티즌	해외유학파	자유주의우파

최근 중국 안보정책의 인과기제



## VI. 향후 중국 안보정책 전망

### ■ 단기 전망: 적극적 안보정책 기조 유지 또는 강화

- 세계·지역 주요 안보 이슈에서 미중간 경쟁 속 협력 지속
- 중국의 해양권 강화 움직임 지속
  - 남중국해 강경 자세 견지, 중국 서태평양 진출 노력 지속
- 북·중간 정치,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 위기관리의 비효율성 지속

### ■ 단기 전망의 근거:

- 중국의 국력 신장 및 미국 경제 조기 회복 어려움
- 중국 안보정책의 합의제적 성격: 2010년 중공중앙 건의
- 시진핑의 성향 및 권력 공고화에 시간 상당 필요
- 중국 군부 지도부 적극적 안보정책 지원 세력으로 구성 전망
  - 대부분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관련 인사
  - 해군, 공군, 우주군(天軍) 관련 인물이 최고 지도부 장악
- 리더십 균열로 핵심이익, 강온 정책 선택시 이견 발생 가능성 큼
  - ※ 불확실 요인: 안보 최고 책임자인 시진핑이 정치적 연합 구성 대상: 온건파 아니면 강경파?

2012년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예측)

예상 직위	성명	현직위	군종	경력 특기사항
주석	習近平	생략	민간	생략
부주석(2명)	常萬全	人航天工程總指揮, 神舟七號任務總指揮部總指揮長	우주군	沈陽軍區司令員
	許其亮	空軍司令員	공군	沈陽軍區副司令員兼 沈陽軍區空軍司令員; 和平使命-2007"聯合反恐軍演中方總導演
	吳勝利	海軍司令員	해군	廣州軍區副司令員兼 海軍南海艦隊司令員

예상 직위	성명	현직위	군종	경력 특기사항
위원; 國務委員, 國防部部長(1명)	吳勝利	생략	생략	생략
	許其亮	생략	생략	생략
위원; 總參謀長	章沁生	第一副總參謀長	육군	廣州軍區司令員
위원; 總政治部主任	張海陽	第二炮兵部隊政治委員	제2 포병	成都軍區政治委員, 黨委書記
위원; 總後勤部部長	劉源	總後勤部政委	-	부친 류샤오치(劉少奇)
위원; 總裝備部部長(1명)	張又俠	沈陽軍區司令員	육군	北京軍區副司令員
	房峰輝	北京軍區司令員	육군	廣州軍區參謀長, 國慶60周年閱兵總指揮
위원; 海軍司令員	孫建國	副總參謀長	해군	“長征3號”核潛艇艇長
위원; 空軍司令員	馬曉天	副總參謀長	공군	廣州軍區空軍參謀長; 南京軍區空軍司令員
위원; 第二炮兵部隊司令員	魏鳳和	副總參謀長	제2 포병	第二炮兵參謀長

2012년 18대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군

성명	현 주요 직위	특기사항
시진핑 (習近平)	정치국상무위원, 국가 부주석, 중앙군위 부주석	강경 성향. 정칭홍, 장쩌민 후원. 부친 쉬중신의 영향으로 후야오방 계열 인사와 일정관계 유지. 보시라이, 덩샤오핑 집안과 긴장관계, 다만 최근 보시라이의 정책을 지지.
리커창 (李克強)	정치국 상무위원, 상무부총리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 후진타오 후원, 최근 원자바오 총리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리원차오 (李源潮)	정치국원, 중앙조직부 부장	후진타오 후원, 정칭홍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왕양 (汪洋)	정치국원, 광둥성 서기	‘과학적 발전관’ 적극 추진으로 광둥성 간부들과 마찰, 공청단 계열 인사로 분류되나 후진타오와 직접적 교류 적은 반면 원자바오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견도 있음
왕치산 (王岐山)	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금융, 상무 등 담당)	장인의 후광으로 고위직 진출, 장인의 보수·강경 성향에 부정적 태도, 당내 권력 투쟁에 상대적으로 무관심
장가오리 (張高麗)	정치국원, 천진시 서기	장쩌민 계열 인사로 분류됨

성명	현 주요 직위	특기사항
장더장 (張德江)	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공업 및 정보화, 교통 운수, 인력자원 등 담당)	장쩌민 계열 인사로 알려져 있으나, 덩샤오핑 가문(덩샤오핑 長者인 덩푸팡)과 밀접한 관계 유지
유정성 (俞正聲)	정치국원, 상하이 서기	덩샤오핑 가문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음, 원자 바오에 대해 부정적. 그의 형 리창성이 CIA에 포섭돼 도미(渡美)함.
보시라이 (薄熙來)	정치국원, 충칭시 서기	강경·보수 성향, 언론학 전공으로 대중 여론전에 강하다는 평가. 부친 보이보의 영향으로 군내 일정한 지지세력 존재. 장쩌민, 리펑과 우호적 관계
류윈산 (劉云山)	정치국원, 중앙선전부 부장	선전(宣傳) 계통, 장쩌민 계열인사로 분류
류윈둥 (劉延東)	정치국원, 국무위원, 홍콩마카오 업무 담당	통전(統戰) 계통, 후진타오 및 정칭홍과 밀접한 관계 유지

■ 중장기 전망을 위한 고려사항

- 경제·군사력 성장, 엘리트 요인
- 제도적 요인

Ⅶ. 정책 방향 건의

■ 적극적 안보정책기조에 대한 대응방향

- 미·중간 경쟁 격화 가능성 주시
- 대중국 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 정책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방향

- 사이버외교 등 공공외교 강화
- 다중 대화 채널의 구축
-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 18

중국의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북중관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중국의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북중관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김흥규 | 성신여자대학교

## I. 서론

## II. 북중관계에 대한 다섯가지 시각

1. 북중 동맹론
2. 북·중 갈등론
3. 대북 영향력 한계론
4. 중국의 대미공조론
5. 현실적 현상유지론

## III. 중국내 전략사고의 분화

1. 국제위기그룹의 이분론
2. 웨핑(袁鵬)의 이분론, 김흥규의 삼분론과 주평(朱峰)의 사분론
3. 샴보(Shambaugh)의 7분론

## IV. 중국 전략사고 분화의 평가와 함의

## I. 서론

최근 중국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왜 최근 국제적 이슈에서 일치되지 않거나, 간혹 모순된 목소리와 행위를 보이고 있는가를 독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명하달식의 이미지로 중국외교를 이해하려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외교정책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최근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북중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또 장차 한국의 대중국정책은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며, 어떻게 한중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주요한 출발선이 된다.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 즉 국제적인 책임·위험·기회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하고 집중적인 토론이 전개되어 왔다. 비록 중국정부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발전도상국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지역강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sup> 다소 속박되고 억제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의 현 국제적 지위는 어떠한가, 부상하는 중국은 어떠한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가운데에는 당연히 경쟁적인 관점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다양하고 그리고 때론 상충적인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내용으로 하는 담론들과 그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것이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이 글은 중국 외교가 이제는 더 이상 상명하달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세계 정치경제에 편입되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은 중국의 대외정책 환경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사안들은 종종 양자간의 문제를 넘어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고, 영역을 넘어 상호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대외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역사적인 편린과 경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넘

1) 2010년 중국 외교실무의 수장인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화발전의 길”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요약하고 있다.

어 보다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관료조직이나 싱크탱크 및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일모델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화하고 있는 중국내 다양한 대외전략사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개방과 국력 증대에 따라 변화한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외전략사고들이 존재한다. 이들 전략사고들은 정책적 영향력의 확대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합의를 지닌다.

이 글은 중국 대외정책의 투입과정에 있는 주요 행위자들 중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관료조직이나 싱크탱크 및 전문가들의 정향을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은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이 제시한 전통주의자들과 전략파들의 이분법, 김홍규가 제시한 전통적 지정학과, 발전도상국론과, 신흥강대국론과의 삼분법, 주펑(Zhu Peng)이 제시한 민족주의자, 정치현실주의자, 국제주의자, 자유주의자의 사분법, 웬펑의 발전중인 대국과 부상하는 대국의 이분법, 그리고 데이빗 샴보가 제시한 배외주의(Nativism), 중국 현실주의, 강대국파, 아시아 우선주의, 개발도상국파, 선택적 다자주의, 세계주의자 등 7개 집단 분류법 등이 존재한다. 이 글은 이들 담론들을 평가하고, 담론 속에 내재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우선 담론들을 분석하기 이전에 현재 드러난 북중관계에 대한 네 가지의 시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의 분류를 통해 현재 중국내 대외정책에 대한 담론 구조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 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 II. 북중관계에 대한 다섯가지 시각

후진타오 체제 등장이후 북중관계를 이해하는 시각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북중 동맹론, 북중 균열론, 대북 영향력 한계론, 대미 공조론, 현상 유지론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해 볼 수 있겠다.

## 1. 북중 동맹론

북중관계를 냉전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북중관계는 외형상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1년 체결한 북중 상호우호원조조약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법적으로 동 조약은 일방의 조치로 폐기가 불가능하여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 조약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호 군사원조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중간 관계는 동맹관계이며, 특수관계 혹은 전통적 관계라는 수사는 동맹관계를 대체한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석한다.

북한 역시 북중관계를 여전히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려한다고 김철 요녕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소장은 지적한 바 있다.<sup>2)</sup> 중국 역시 외교부보다는 사회주의 시기의 전통적인 유대를 상징하는 대외연락부를 통해 주로 북한과 교류를 하고 있다.

## 2. 북·중 갈등론

먼저 북중관계가 동맹관계(혈맹)가 동맹관계라기 보다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북중간 균열은 이미 냉전시기부터 존재해 왔으나 냉전의 여파로 그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관점이다. 2002년 후진타오 주석이 북중간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북중 균열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중간에는 특히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 그 균열이 분명해졌고, 제2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중간 접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시각이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북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북한과의 국경개념을 경제 문화권역의 국경대에서 방위 국경선으로 전환하여 공안병력을 인민해방군으로 대체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북한내 정보수집 활동에 불만을 갖고,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6개월 자동연장규정을 취소하자 중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2006년 1차 북핵실험시 유엔안보리의 1718호 결의안 채택과 2009년 6월 12일 유엔안보리의 1874호 결의안 채

2) 2011년 8월 24일 코리아정책연구원 주최 [한반도와 중국] 정책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

택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북중간의 균열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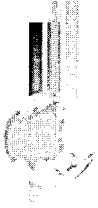
### 3. 대북 영향력 한계론

대북 영향력 한계론은 중국 외교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이는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중국 외교 정책을 인정하고 동시에 북중간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북중 균열론도 일정정도 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는 보다 복잡적이고, 북중관계나 중국의 내부상황들을 고려할 때, 중국이 실제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본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 1,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서도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심적인 전략물자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자국의 핵심적인 이익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중국의 설득이나 압박을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결단을 할 경우,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의 전략적 이해로 결박당해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극단적 처방은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해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서 중국외교가 보여준 태도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는 물론이고, 시비곡직에 따르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유지에 정책우선 순위가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4. 중국의 대미공조론

중국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측이 향후 10년간의 과제가 국내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은 2006년 유엔결의안 1718호 결의와 2009년 유엔결의안 1874호 결의에 만장일치로 참여했다. 또한 2006년 당시 북한에 대한 계좌동결과 미국과 국제범죄 대처 양해사항(MOU)을 체결하였다. 중국 측은 북핵문제에 대처하고 동북아의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중·일 전략대화 채널까지 만들고 있으며,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은 많은 부분에서 마찰들이 존재하지만, 북핵문제는 6자회담 개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중간 협력의 상징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고, 향후에도 협력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쌀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받고, 대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국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지향이라는 슬로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5. 현실적 현상유지론

이는 중국이 처한 전략적 딜레마를 반영하면서 북중관계는 결국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미국과의 협력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세력전이 과정이 함의하는 전략적 경쟁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현상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중국의 국력의 한계 역시 인정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북 관계는 현상유지라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오히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강화한 것은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 현상유지 및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이해와도 맞닿아 미중간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으로 남는다고 본다.

이 시각은 북중간의 관계가 동맹이기 보다는 불신의 관계에 가깝고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 체제 안정을 희망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현상유지적인 북·중간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 Ⅲ. 중국내 전략사고의 분화

#### 1. 국제위기그룹의 이분론

국제위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내 한반도 관련 전략사고의 분화는 북한이 제1차 핵실험한 2006년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제2차 핵실험을 한 2009년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크게 전략파와 전통파로 양분된다.<sup>3)</sup>

전략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재제를 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실험은 “중국의 뺨을 때린 것이다”고 표현한 북경대 주펑 교수는 이들의 사고를 잘 대변해준다.<sup>4)</sup> 중국은 북한의 인접국으로서 북한 핵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중국에 점차 전략적 자선이라기보다는 부담으로 변해가고 있고, 중국은 정상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6자회담체제가 북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로 미국 유학파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 관료체제 내에서는 중국 외교부가 그 주요한 담지자이다.<sup>5)</sup> 학자들로는 중앙당교의 장렌구이, 칭화대 쑨저, 푸단대 런샤오, 인민대 스인홍, 북경대 주펑 교수등이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전통파들은 미국이 중국이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데 가장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한반도 상황을 영합게임(Zero-sum game)으로 평가한다. 북중은 특수관계이며, “순망치한”이라는 개념에서 잘 표현되듯이 북한은 중국의 주요한 완충지역, 즉 전략적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서방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북핵위기의 발단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불안을 가하고 있기 때문

3)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2 November 2009.

4) Zhu Peng, “North Korea Nuclear Test and Connered China,” PacNet, Pacific Forum CSIS, 1 June 2009, <http://csis.org/files/publication/pac0941.pdf>.

5) 물론 중국 외교부 내에서도 북미대양국, 아세아국, 한반도판공실, UN담당 및 군축담당부서 등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이나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북한에 대해 더 비판적이다.



이라고 평가한다. 그들은 북중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데 비판적이며, 북한에 제재는 중국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주장의 제도적 담지자들로 중국 군부 및 대외연락부를 지적하고 있다. 개인별로는 중국의 정책분석가들 및 은퇴한 외교관들이 주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국제위기그룹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략파들보다는 전통파들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6)</sup>

## 2. 웨핑(袁鵬)의 이분론, 김홍규의 삼분론과 주펑(朱峰)의 사분론

북경대 주펑 교수는 중국의 대외정책(대북정책 포함)이 민족주의자, 정치현실주의자, 국제주의자, 자유주의자들 간의 미묘한 균형과 타협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문제는 이들 사이에 가장 논쟁과 분열이 심한 영역이라고 지적하였다.<sup>7)</sup> 주펑 교수에 따르면, 민족주의자들은 중국의 주변 안보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처방을 내 놓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한다. 정치현실주의자들은 동북아 국제정세가 중국 대 한미일간 연합세력의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이 대립구도에서 북한의 국력이나 대외행태는 중국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주의자들은 북한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미국, 중국, 한국의 협력여하에 따라 북한문제의 해결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그리고 외부 관련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이 중국 외교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세계의 보편적 문제들에 더 치중하면서 중국의 외교는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러한 보편적인 규범과 수준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 및 핵확산 등에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주펑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정치현실주의자와 보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흐름이 보다 지배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6) 그러나 중국의 외교부 공식입장은 북중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는 것이다. 2009년 중국 국방부장 량광레는 한국의 이상욱 국방장관의 방중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주 66 참조.

7) 2011년 7월 22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주펑교수가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란 주제로 발제한 내용중 일부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한 중국의 부상과 자신감, 그리고 여전히 이를 다루는 역량이 부족한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흥규는 중국의 국제정치적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중국의 대외전략 사고가 대략 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 외교론, 신흥강대국 외교론 등 세 부류로 분류한다. 개인 전략가들은 이러한 세 정향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봐야 한다.

<표 1> 중국내 전략사고의 분화와 정책정향

	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론	신흥강대국론
국제적 지위인식	(전통) 강대국	발전도상국	신흥강국
미국과 관계	경쟁	협력	전제적 관여(헤징)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전통 강국	지역 강국	세계적 강국
일본과 관계	적대적	협력 → 견제 및 대립	포용 대상
한반도 정책	영향력 회복	현상유지	현상유지 원칙, 변화 가능성도 내포
대 한국 정책정향	비우호적	외교적 견인의 대상	적극 포용 혹은 배제
북한에 대한 인식	전통우방, 전략적 자산	문제아	전략적 자산이자 부담의 이중성
대북 정책수단	정치적 지원과 경제원조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설득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
급변사태 대응	군사적 개입	신중함 속 한미와 양자적 해결 모색	다자주의 선호, 기회주의적
대표 개념	순망치한(唇亡齒寒, 완충지대), 돌돌뽀인(咄咄逼人)	도광양희(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대유작위(大有作爲)

출처: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의 Table 1을 기초로 추가적 내용 포함.

전통적 지정학과는 과거 강한 중국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이의 부활을 희망한다. 미국과 협력이나 조화보다는 구조적 경쟁관계에 더 주

목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세력권과 완충지대의 확보를 중시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인 세력권이면서 미국을 견제할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띤다. 따라서 북한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 개입하여 북한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 지정학과의 핵심개념과 언어는 비록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수사에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노년 세대, 군부, 네티즌 및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 들이 그 주요 담지세력이다.

발전도상국 외교론은 후진타오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외교전략 사고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중국을 강대국이 아니라 발전도상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합당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을 중시한다. 능력을 기르면서 때를 준비한다는 도광양晦(韜光養晦)론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잘 설명한다. 이 전략사고는 중국이 적어도 2020년 중등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북한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과는 물론이고 한국과도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문제야적인 성격이 강하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미국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에 불리한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한다.

발전도상국론은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가장 잘 경험하고, 혼란의 두려움을 강하게 안고 있는 중국의 현 주요정치지도자들을 지식인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최근 중국 총리 원자바오가 UN총회에서 중국이 발전도상국이라는 언명에서부터 연설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2010년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로 인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중국 위협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12월 중국 외교의 수장인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향후 5년간 중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한 “평화적 발전의 길”이란 장문의 글은 이러한 시각을 잘 담고 있다.<sup>8)</sup>

신흥 강대국 외교론은 최근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국력의 신장, 이에

8) Bingguo. Dai, “Stick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December 13, 2010, *China Daily*.

다른 자신감의 증대를 반영하면서 중국 일반인과 엘리트 사이에서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국의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소작위(有所作為)적인 특성을 더 강조하는 사고이다. 제17차 당 대회 보고는 이러한 사고를 반영하는 수사들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일부도 기존의 “발전도상국론”적 사고를 넘어 이러한 사고로 전환했다는 전언도 존재한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관련 정책결정의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주요요인중 하나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유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피하면서도 다자주의나 국제기구들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국익을 개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미국과 일정한 정도의 마찰도 감수할 것을 주장한다. 2010년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을 대외관계에 적용시키면서 미국과 알력을 빚은 것도 이러한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며, 천안함 사태를 통해 한반도 서해지역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북한은 발전도상국 외교론과 마찬가지로 문제아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발전도상국론과의 차이점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필요하다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의지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역으로 더 강력한 제재나 기존 대북전략의 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회의 창이 열리면,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킬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 웬핑교수는 2010년 중국의 전략 사고는 크게 중국을 발전중(發展中)인 대국 혹은 부상하는(崛起中) 대국의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면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 역시 달라진다고 평가한다.<sup>9)</sup> 웬핑의 발전중 대국론은 개혁개방이후의 도광양회적인 외교정책을 위주로 하는 전략이 옳다는 입장으로 금융위기 이후 중국 외교정책 방향에 새로운 대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부상하는 대국론자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는 이에 상응하는 전략과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9) 袁鵬, “中國外交必謹防大戰略失誤,”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11期, pp. 12-14.

다. 즉,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바를 하는(有所作爲) 대외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수사는 ‘발전도상국(발전중인 대국) 외교론’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신흥대국(부상하는 대국) 외교론’적 입장과 절충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지키는 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된다고 믿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 3. 삼보(Shambaugh)의 7분론

미국의 저명한 중국연구자 데이빗 삼보교수는 중국의 국제적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서 7개 관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sup>10)</sup> 한 극단에는 배외주의(Nativism)에서 또 다른 극단에는 글로벌 가버넌스에 완전 참여까지 주장하는 학파(Globalism)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배외주의(Nativism)

배외주의자들은 포퓰리스트, 민족주의자, 마르크시스트 등의 연합체들로 국제제도를 불신하고 있으며, 배타적이며, 중국의 국제적인 책임과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부유한 제국주의 국가들 때문에, 발전도상국은 빈곤을 벗어날 수 없어 세계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北’에서 ‘南’으로 소득과 자원이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판 닝 등은 국가독점 자본주의 때문에 2008년의 금융위기가 도래했고, 이라크 전쟁으로 ‘신 제국주의’시대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대미정책이 너무 유연하다고 공박하고 있으며, 중미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환상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이들의 대북 주장은 국제위 기그룹이 분류하는 ‘전통주의자’, 김홍규의 ‘전통적 지정학파론’, 주평의 ‘민족주의자’들의 분류와 맥을 같이한다.

10) David Shambaugh, “Coping with a Conflicted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2010), Vol.34, No.1, 7-27.

이들 대다수는 당 중앙위 산하 연구기관 및 중국 사회과학 마르크스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배외주의는 신좌파(新左派)의 ‘쌍생아’이기도 하며, 중국의 지난 30년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부정적인 해외문화가 도입되어 나쁜 결과가 양산되었으므로 쇠국을 주장한다. 1990년대에 이미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등으로 이들의 입장이 부각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보씨라이(薄希來) 총칭 시 당서기의 신좌파 열풍과 맥을 같이하면서 세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 중국의 상황은 배외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중국내에 존재하는 민족주의 감정과 더불어 점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나. 중국 특색의 현실주의파

국제문제에 관련, 중국 현실주의자들은 지배적인 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필요에 맞게 타국에게 강제하도록, 군사·경제·외교적 영향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강한 군대를 소유할 필요는 있지만, 공격이나 대만독립 등을 억지하는데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좁고 이기적으로 이해하고, 중국의 외부환경과 양안관계 등을 비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등을 거부한다. 서방은 중국을 세계문제에 더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원을 소진시켜 중국의 성장을 더디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G2에 대한 초기 거부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군, 대학, 싱크탱크 등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학자는 엔쉐통 칭화대 교수 및 장 루이장 난가이대 교수를 들 수 있다. 엔쉐통은 ‘평화적 부상’은 중국이 국가주권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敵에게 주기 때문에 위험한 이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 루이장은 미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등이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상황을 오판하고 정책실패를 초래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대미정책에 좀 더 단호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 다. 강대국 학파

강대국주의자들은 미국·러시아·EU 등 주요 강대국·블릭과의 관계증진에 외교력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충실하게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현대화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등의 도입에 보다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주요 강대국학파는 현재 후진타오 등 정부관료들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을 불신하고 있지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내 및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전문가들이 이 학파에 속하며, 미중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고, 미국 중시정책을 전개했던 장쩌민 시대에 득세하였다. 러시아 중시자들은 자원과 안보상의 이유를 거론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 쇠퇴로 점차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EU 중시자들은 EU의 외교안보정책의 무능에 실망하여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종적을 감추었다.

후진타오 시대 주요 강대국 정책이 조정되고 있을지라도,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강대국학파의 주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 강대국과 긴장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문혁시 저지른 두개 이상의 강대국과 동시에 적대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sup>11)</sup>

## 라. 아시아 우선주의

아시아 우선주의는 주변부와의 관계수립과 안정적 환경조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그룹이다. 중국 이웃들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중국의 발전과 안보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주장으로 이를 위해 남북한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수립을 지지한다. 주로 아시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 다자 지역구조, 미국·인도·ASEAN의 역할, 북한문제, 비전통적 안보문제 등 다양한 지역문제가 대상이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협력강화를 중시한다. 중국 특성의 구성주의를 구축하면서, 국제법보다는 규범적 행동을 강조하고, 협동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11) 宮力, “美國的‘霸權焦慮’與中國的應對方略”,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11期, pp. 14-15.



아시아 우선주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이웃에 대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중국은 아시아제국들과의 각종 분쟁으로 지난 10여년 축적해왔던 긍정적인 중국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남중국해 문제, 지역다자기구 설립(ASEAN), 영토분쟁(인도), 분쟁수역 어선침입(일본), 천안함 사건(한국) 등과 관련 상호 마찰을 빚은 중국 외교는 아시아주의자들에게는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 마. 글로벌 발전도상국 학파

글로벌한 발전도상국학파는 중국의 국제적 정체성과 책임을 발전도상국과 같이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UN 밀레니엄 발전목표,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국제금융기구개혁, G-20에서 발전도상국의 이익, 조건 없는 지원계획 등에 대해 중국이 강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학파는 발전도상국들도 다양하여, 이들을 구분하여 각 그룹에 맞는 목표지향적인 외교정책추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중국으로선 자국을 계속 발전도상국으로 간주해야 하며, 공동 발전과 공동 국제적 지위를 위해선 발전도상국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티벳, 대만, 인권, 기후변화 등에 대한 서방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자기 정체성 및 남-남 연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바. 선택적 다자주의

선택적 다자주의자들은 중국이 국제적 개입을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하나, 중국의 안보이익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이슈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의 선택적 다자주의자들은 전술적이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국제적으로 개입하고, 글로벌 가버넌스에 선택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가버넌스에 전반적인 참여는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서방측의 함정이며, 미국과 EU가 촉구하고 있는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international stakeholder)”라는 개념은 중국을 다양한 대외관계에 연루시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계략이라고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힘에 걸맞게 글로벌 가버넌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대신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1989년의 등소평 지시 ‘도광양회’의 개념이 오래되고 중국의 현 국제적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鄧의 “도광양회, 유소작위”는 계속 지도전략 원칙으로 고수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sup>12)</sup>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양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 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그 자체를 선호하기보다는 국제제도나 체제 내에서 중국이 보다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전술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라기보다 현실주의자들의 국제 버전이라 볼 수 있다.

#### 사. 글로벌리즘

세계주의자들은 국제분야에서 중국은 그 규모, 힘 및 영향력 등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하며, 글로벌 가버넌스에 좀 더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국가적 동반자관계, soft power 등을 강조하고, 선택적 다자주의자들보다 다자적 제도를 더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는 테러·조직범죄·인간안보·공중보건 등 다양한 비전통적 도전 때문에 국가주권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자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UN안보리에서 중국의 활발한 역할, 전세계 다양한 지역 협력체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주평 교수가 지적한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중국내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불신 등으로, 세계주의자들의 목소리는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 샴보 교수의 분석이다.

### IV. 중국 전략사고 분화의 평가와 함의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과거와 같이 일부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증해준다. 중국의 국제관계

12) 2010년 중국 국제관계협회 란조우 연례회의에서 이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중국 외교의 지도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할 바 있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향의 전략사고는 중국내 다양한 관료조직 및 이해집단들의 이익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보다 국제적인 업무나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들과 전문가들은 보다 미국 및 국제적 협력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군이나 대외연락부와 같이 보다 특수한 업무의 속성을 지닌 부처들은 이러한 속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적인 이익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의 다양화와 담론의 분화는 대북 관계에 있어 왜, 북중 동맹론, 북중 균열론, 대북 영향력 한계론, 대미 공조론, 현상 유지론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지를 설명해주는 단초가 된다.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상충하는 이익관계를 절충하는 제도적 장치인 외사영도소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영역을 넘어서 중국의 전략가들과 지식인사회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의 정향에 대한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담론들의 경향이 구별되어도,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때론 모순되기도 하나 보완적이기도 하다. 개인들 역시 하나의 담론체계에 머물지 않고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중국외교는 이러한 다양한 담론 체계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주요 대외정책의 최종 결정은 한 개인의 독단적 판단과 지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련 핵심 지도자들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이뤄진다.

그 결과로 중국의 대외정책은 종종 모호하게 나타난다. 한 예로, 주요 대외정책 정향에 대한 표현을 보자면 강대국 외교는 관건, 주변국 외교는 최우선, 발전도상국 외교는 기본, 다자주의 포럼은 중요하다는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에는 거리가 멀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응적이며, 위협을 회피하는 정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외교는 완벽한 고려와 계산에 의해 이뤄지기 보다는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모순적인 정향이 동시에 노정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0년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중국 외교부와 군부의 입장차이도 이러한 혼선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중국 외교정책 정향의 변화는 공식적인 차원의 발표로 독해하기는 어렵다. 이는 이미 오랜 시절 내부의 논쟁과 경험의 축적 및 외부환경의 변화가 결합되어 서서히 변해가면서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를 독해하는 방법은 바로 중국내 담론의 변화 추이를 읽어내는 것이다.

<표 2> 중국내 대외전략사고 담론의 스펙트럼과 대북정책정향

	대북우호			대북압력	
ICG	전통파		전략파		
김홍규	전통적 지정학과		발전 도상국파	신흥 강대국파	
웬핑			발전중 대국파	부상하는 대국파	
주평	민족주의파	현실주의파		국제주의파	자유주의파
삼보	배외주의자	현실주의파 발전도상국파 아시아 우선주의파 선택적 다자주의파 강대국 학파			세계주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담론은 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한 정책에 대한 정향을 놓고 평가할 때, 그 스펙트럼은 배타적인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까지 다양하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지정학과(국제위기그룹, 김홍규), 배타적 민족주의(주평, 삼보)등의 그룹에서부터, 보다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파(국제위기그룹), 발전도상국론(김홍규, 웬핑), 국제주의자 및 자유주의자(주평), 강대국론 및 선택적 다자주의파, 세계주의파(삼보)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담론들은 대외정책에서는 비록 그 사용하는 용어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ICG의 전통파, 주평의 민족주의와 정치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김홍규의 전통지정학파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리고 ICG의 전략파를 주평, 웬핑, 김홍규는 보다 세분된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웬핑의 발전중 대국파와 김홍규 교수의 발전도상국론은 유사하며, 웬핑의 부상하는 대국론은 김홍규의 신흥강대국론과 대동소이하다. 삼보의 7개 스펙트럼 역시 대북한 정향을 놓고 평가할 때, 크게 주평 교수가 분류한 4단계의 정향과 유사하지만, 주평의 현실주의자와 국제주의자 사이에 보다 다양한 정향들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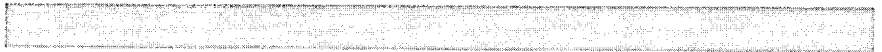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향후 담론의 대체적인 정향은 북한에게는 그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담론 토론의 추세는 향후 북중 동맹론은 점차 약화되고, 대미공조론도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중국의 국제적 위

상이 강화되면서 점차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의 대북 전략적 이해를 어떻게 형성해가는냐에 따라 북중 균열론이나 현상유지론이 어떻게 진화해갈지는 아직 알수가 없다. 이는 미중관계, 한중관계 및 다양한 새로운 (돌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 주는 교훈 역시 크다. 중국의 주요 흐름은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합당한 전략적 자산의 재배치 및 정책들을 재구상할 가능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과는 다른 국제적 지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강대국 외교를 구사할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중국의 국제적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국 외교의 정향을 정하는 담론의 토론이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외교가 반응적이란 측면이 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외부요인이 이 과정에 주는 영향력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중관계 역시 이 과정에 긍정적인 투입요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9

중국 새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및 한반도:  
한국에 대한 함의 및 정책제언







# 중국 새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및 한반도: 한국에 대한 함의 및 정책제언

김흥규 | 성신여자대학교

- I.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
- II.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추세 전망
- III. 시진핑(習近平)의 대외관
- IV. 한중관계 전망
- V. 한국의 정책
- VI. 정책 제언

## I.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

- ◆ 2012년 가을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 이는 비민주적인 국가들의 위기는 종종 계승문제와 더불어 발생하는 일반 이론이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투명한 제도적 정치가 부재하지만 계승문제가 정치적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부기제(민주 집중제의 적용)를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
- ◆ 권력승계와 관련한 인사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놓고 평가할 때, 제18차 당대회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특히 정치국 상무위에는 기존의 9인중 제5세대 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強)만이 잔류할 것으로 보임.
- ◆ 제5세대 집권 (2012~2017년) 1기시기에는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특성, 정책결정의 복합화, 사회의 영향력 강화, 그리고 당 원로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5세대의 최고지도자가 된다고 할 지라도 그 권력은 과거보다 더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대외정책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강조되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 것으로 보임.
- ◆ 제5세대 집권 (2017~2022년) 2기시기에는 사회의 압력에 더 노출될 것이며, 최고지도부내의 균열 가능성, 대규모의 정치개혁을 위한 실험이 행해질 가능성이 큼. 정치개혁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으나, 제5세대 지도자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일정수준의 정치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감이 주어짐.

## II.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추세 전망

- ◆ 중국의 제5세대의 대외정책은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구성되는 세력관계에 따라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중국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의 영향
  - 5세대 지도부 내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인 상호 합의 추구

- 12·5 계획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4세대 지도부가 5세대 지도부의 동의 아래 향후 5년의 정책방향을 이미 설정하였음.
- 4세대 지도부와 5세대 지도부가 서로 얽혀 복잡한 견제와 균형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음.
- ◆ 지도자들을 각자의 역할배분에 따라 권력을 분점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할 것이고, 이러한 특징은 대외정책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물론 중국정치와 각 세력 분파들의 정책적 정향성은 대외정책에 일정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임.
  - 투안파이 계열의 후계자가 등장할 경우, 주변국 외교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대미 헤징전략을 적극 전개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적으로는 내수 진작과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타이즈당 혹은 상하이방 계열의 정책적 지향성을 가진 후계자가 등장할 경우, 중국은 외교관계에서는 강대국 관계를 더 중시하고, 경제부문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정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상황은 권력정치적 필요로 오히려 상기와는 반대의 정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파벌간 경험과 이해의 각도에서 볼 때, 상기와 같은 정향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집단 지도체제 정책결정 구조의 특성상, 차세대 지도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호 정책경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의와 협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자체가 일순간에 급변하지는 않을 것임.
- ◆ 제5세대 젊은 지도자들 중 일부는 대외경제협력의 경험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대외정책 및 군사와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외 및 군사정책은 보다 전문화된 집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이는 당분간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중국 군부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동시에 대외정책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예시함.
- ◆ 제4세대 지도부의 뒤를 이어 제5세대 지도부 역시 국가역량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군사 강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단기간에 온전하게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대외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화평발전론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임.
- 주권, 영토·영해 분쟁 등과 같이 핵심적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큼.
- ◆ 군사력 강화와 대중주의 및 국내정치상 민족주의 성향의 강화는 포퓰리스트(populist)의 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간의 긴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적지 않음. 이 과정에서 제5세대 지도부는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다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능력을 궁극적으로 시험 받는 세대가 될 것임.
- ◆ 중국의 제5-6세대 지도부는 전임지도자(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와 달리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념이나 유훈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초기의 보수주의적 단계를 지나면 점차 국제주의의 강화, 강대국화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의 강화, 대내 정치개혁 가능성의 증대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 특히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중국의 자세대 지도부들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부응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음. 대신 중국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민족 자존심에 근거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추정됨.<sup>1)</sup>
- ◆ 대한반도 정책은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비핵화는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임. 남북한과도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임. 대북정책은 현재의 후진타오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추진해 나간다는 기초아래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면서 교류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임. 한국과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군사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려 할 것임.

1)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2009년 2월 11일 멕시코 순방 중 발언(“서방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중국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고 있다”)에서 잘 드러난다.

### Ⅲ. 시진핑(習近平)의 대외관

- ◆ 중국정치의 전통으로 볼 때, 시진핑이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자 직위에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임. 다만 시진핑(習近平)의 대외활동 과정에서 발언 등을 통해 그의 통치이념 혹은 대내외 정책사조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2010년 11월 14~16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중국의 내정과 외교정책에 대한 발언은 매우 주목할 만 한 것임.
  - 시진핑(習近平)이 싱가포르 방문과정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평화발전, 개방발전, 협력발전임.<sup>2)</sup> 먼저 시진핑(習近平)은 “중국이 강하면 패권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중국의 외교노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평화 외교 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밝혔음.
  - 아울러 시진핑(習近平)은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는 세계 2위이지만 개인당 소득에서는 100위 정도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이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강조함. 그는 “‘발전이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발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함.
- ◆ 시진핑(習近平)이 싱가포르 방문시 밝힌 국정 방향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추구해온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첫 임기 5년의 국가 발전 전략에서는 대체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을, 대내 정책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단, 점차 강대국 외교를 추구하고 민족주의적 감성을 강화하고 있는 현 추세로부터 시진핑은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2010년 11월 14일 덩샤오핑(鄧小平)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리관유 싱가포르 전 총리와 만나 “중국 국력의 부단한 상승은 싱가포르에 광활한 시장과 거대한 공간을 제공했다”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발전은 과학적이고 조화로우며 협력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5일 중국-싱가포르 수교 2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번영하고 안정적인 중국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외국에 대해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경향신문』 2010년 11월 16일자)

#### IV. 한중관계 전망

- ◆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임. 관건은 향후 5년간 갈등과 충돌이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발전의 기초가 되게 하느냐 임.
- ◆ 북한문제
  - 북한 핵 위기의 근본원인은 대외적인 위협이 아니라 내부적인 정권의 무능함과 불안감이며,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 외부적인 긴장과 갈등, 냉전체계의 회귀 등은 필요요소임. 특히 정권 교체기에 북한은 이러한 요소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 지속적인 도발이 예상된다.
  - 북한이 도발하면, 한중 및 미중관계는 악화되고, 북중관계는 강화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 및 현 국제정세는 북한이 중국의 외교를 견인(hijack)할 개연성이 크고, 한중관계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한중이 과연 북한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낼 역량이 존재할까?
- ◆ 역사문제 재발 - 명청공정 결과는 아마 국제적으로 중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큼 - 지역사 차원의 역사연구 필요.
- ◆ 영해분쟁 - 일단 수면위로 올라오면 민족주의 감정 및 민족국가의 속성상 양국정부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 수면하래서 관리할 능력이 중요함.

#### V. 한국의 정책

- ◆ 한국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한다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큰 흐름이 존재할 것임.
  -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개선해 나가려 노력할 것임.
  - 북한에 대해서는 (연평도 사태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을 중시 하되, 더 협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추구할 것
  -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준비를 강화해 나갈 것
- ◆ 현 단계에서 우리가 추진할 정책 방향은 “연미화중(聯美和中)” 임.
  -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중간의 경쟁과 협력이 혼재된 상황 가정. 동북

아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강화되는 추세. 하지만 어느 일방이 타방을 압도할 수 없는 미중 Condominium체제가 가장 현실성이 큼.

-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임.
  - 중국과는 주요 사안에 있어 대립보다는 공통의 이익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략방향이 필요함.
  - 이는 미·중이 상호 제약을 받아 극단적인 갈등은 억제되고, 균형조정 및 전략적 협조관계로 운용될 개연성이 더 크다는 전제아래, 미국과 연대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하는 전략임.
  - 이 전략 속에는 중국에 대한 협력과 해징의 요소가 다 존재하지만, 해징보다는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관계임.
  - 상호 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높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통일외교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화합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외교를 추진하는 것임.
- ◆ 한국의 대중 및 대북정책은 Tit-for-Tat의 원칙에 따라야 함.
- 한중이 향후 추정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을 까?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까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옴.
  -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전략은 Tit-for-Tat임. 이는 대응적이고, 합당하면서, 신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임.

## VI. 정책 제언

- ◆ 전략대화의 활성화와 세심한 조율.
- 한중 양국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할 것임. 신뢰가 부족해도 양국은 지속적으로 서로에 대해, 각기의 전략적 의도와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대화가 중요함.
  -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존의 해법을 찾는 작업은 필수적임. 상대를 존중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확인해내고, 이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에 합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합의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

- ◆ 대북 위기관리에 대한 한중 비공개 대화 신중 모색
  - 최근 공개된 중국의 향후 주변정세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서 돌발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대북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우려도 크다는 것을 말해줌. 따라서 중국과 북한 관련 위기관리 대화를 1.5 Track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문제는 중국도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
- ◆ 중국과 지전략적 인식의 공유 노력.
  -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임. 지리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선 공간에서 협력의 경험을 확대해야 함.
  - 지정학적인 고려에 머물지 말고, 지정학과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합치하려는 지인식론적 공간을 결합하는 지전략적 비전의 공유가 필요함.
- ◆ 중국 포함한 4자가 같이하는 대북 억제 및 안정 전략 수립
  -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도 6자회담의 남은 당사국들인 4자와 함께 공동의 대응책 모색과 협력강화가 필요함. 6자회담의 틀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권고. 한미 혹은 한미일 중심의 대응은 불가피하게 북중 혹은 북중러 대응을 초래. 이러한 신냉전구도의 형성은 북한 정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 ◆ 전문가들의 협력지향적인 긍정적 사고 및 역할 요구
  -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갈등조장하고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전문가와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고 협력을 지향하는 두 종류의 전문가 존재.
  - 자기중심적인 합리성(rationality)보다는 상대방의 이해도 동시에 고려하는 합당성(reasonability) 추구
  -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 못지않게, 최선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환기의 시점에서 갈등 전문가가 아니라 협력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임.





# 20

##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신종호 | 경기개발연구원

- I. 제5세대 지도부 분석
- II.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 1. 제1~4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 2.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 III. 제5세대 지도부의 한반도정책 및 대북정책

## I. 제5세대 지도부 분석

2007년 10월 중국공산당 '17기 1중전회'에서 25인의 정치국 위원,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를 선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5세대 지도부의 핵심인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強)이 새롭게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2010년 10월 18일 '17기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黨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됨으로써, 2012년 말에 열리는 제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로부터 당 총서기를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그동안 덩샤오핑(鄧小平) 시기부터 당·정·군 간부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적용해 온 제도화(종신제 폐지와 임기제 도입, 당내 연령 규정 마련 등)와 비제도적 요인(판시, 파벌, 원로의 영향력,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정치의 전면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제 5세대 지도자 그룹에 포함된 후보群은 다음과 같다. 즉, 시진핑, 리커창, 왕치산(王岐山), 장더장(張德江), 리우옌둥(劉延東), 리우윈산(劉云山), 왕양(汪洋), 리위엔차오(李源朝), 멩지엔주(孟建柱), 보시라이(薄熙來), 장까오리(張高麗), 위정성(俞正聲), 그리고 '제6세대' 지도자 후보군 1~2명(胡春華, 周強 등) 중에서 구성된 것이다. <부록 1> 참조

중국의 최고권력기구는 당 중앙정치국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책은 9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외정책은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여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 및 위원 등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제5세대 지도부의 정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를 주목해야 한다.

외사영도소조는 외사업무 및 국가안보 업무 영역의 중대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외사업무를 주관하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외사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정치국위원 및 외사와 국가안보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련 기구의 부장(部長)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인적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외정책결정 측면에서 외사영도소조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해서 강화된다.

〈표 1〉 중국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 인적구성(2011년 현재)

직 위	인 원
조장	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부조장	習近平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가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서기처 서기)
조원	劉云山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 梁光烈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국방부 부장) 孟建柱 (국무위원, 공안부 부장) 戴秉國 (국무위원) 王光亞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 楊洁篪 (외교부 부장) 王 毅 (중공중앙 대만공작판공실 주임) 喬宗淮 (외교부 부부장, 중앙기율위원회 위원) 王家瑞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부장) 王 晨 (중앙대외선전판공실, 국무원신문판공실 주임) 耿惠昌 (국가안전부 부장) 陳德銘 (상무부 부장) 李海峰 (국무원 화교사무판공실 주임) 馬曉天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비서장 겸 판공실주임	戴秉國 (국무위원)
외사판공실 부주임	裘援平(여), 杜起文

현재의 외사영도소조 구성원 중에서 외교관 출신으로는 다이빙궈, 양제츠, 왕이, 차오중화이, 왕광야, 왕자루이 등 6명이다. 이중에서도 해외유학과는 양제츠 외교부장 뿐이다. 오히려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과 군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전문가들의 자율성이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외사영도소조에는 국방부장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함으로써 외교사안과 관련하여 최고지도부와의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직접 군부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사영도소조의 대외정책 정향성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많이 알려진대로 2009년 외사영도소조 회의에서 군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대외정책기조를 미국의 중국봉쇄에 대응함은 물론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복원하여 미국 주도의 동북아질서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제5세대 지도부 출범과 함께 외사관련 수장이 교체되면 외사영도소조가 재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정책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주석과 국무원총리는 물론 외교담당국무위원,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 외교부장 및 부부장, 대만공작판공실 주임, 중앙 대외연락부장 등에 대한 인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의 대외활동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그의 통치이념 혹은 대내외 정책사조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2010년 11월 14~16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중국의 내정과 외교정책에 대한 발언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시진핑이 싱가포르 방문과정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평화발전, 개방발전, 협력발전이다. 시진핑은 “중국이 강하면 패권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중국의 외교노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평화 외교 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는 세계 2위이지만 개인당 소득에서는 100위 정도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이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발전이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덩샤오핑의 발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시진핑이 싱가포르 방문시 밝힌 국정 방향은 덩샤오핑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추구해온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대내 정책에서는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의 대외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바 가 없지만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될 경우 최근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과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여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했고 2010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규모 제2위의 대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공청단을 매개로 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하여 후진타오체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과의 FTA 체결 논의과정에서 부총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전문가가 차기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담당 국무위원(현재 타이빙귀)으로는 왕자루이(王家瑞), 양제츠(楊潔篪), 왕이(王毅), 왕광야(王光亞)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왕자루이는 대외연

락부장으로서 오랫동안 당 차원의 대외업무를 담당해왔다는 차원에서 외교분야에서 黨의 영향력이 높아질 경우 국무위원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높고, 양제츠는 외교부장으로서 오랫동안 대미업무를 담당해왔고, 왕이는 일본전문가이자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는데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각각 장점을 지니고 있다.

## II.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 1. 제1~4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개혁이전(제1세대) 시기 중국의 정책결정은 최고지도부의 개인적 권위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보였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정향성(定向性)은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나 기구의 중요성은 덜 강조되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최고지도부는 자신들이 경험한 혁명의 경험과 이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외교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개혁이후 시기(제2-4세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차지하는 개인적 변수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점차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개혁이전 시기와는 달리 전문가와 싱크탱크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장쩌민(江澤民) 중심의 제3세대 지도부는 덩샤오핑이 제기한 도광양희(韜光養晦)의 외교전략에 따라 미국 우선의 대외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중국이 세계적인 군사·경제 강국인 미국과 경쟁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현존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편입하여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4세대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의 대외정책은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쩌민 체제의 대외정책과 유사하지만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그간 이룩한 경제성장과 국력에 대한 일정한 자신감과 점증하는 민족주의라는 국내적 압력에 더 취약한 후진타오(胡錦濤)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이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3대원칙(비핵화, 안정 유지 및 평

화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 중에서 갈수록 ‘안정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 2.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중국의 제5세대의 정치·경제·외교정책은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구성되는 세력관계에 따라 일정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5세대 지도자들은 그동안의 중국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로의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또한 과거 전통으로 봤을 때 이들은 후진타오(胡錦濤)가 현실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급격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새로운 제5세대 지도부가 자신들의 지도력 과시와 새로운 권위 형성을 위해 전임 지도부와 차별되는 새로운 정책과 기치를 드러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할 경우 한 개인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도자들을 각자의 역할배분에 따라 권력을 분점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할 것이고, 이러한 특징은 대외정책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정치의 각 세력 분파들(공청단 계열, 태자당 계열, 상하이방 등)의 정책적 정향성은 대외정책에 일정한 합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인 우위의 집단 지도체제이며, 중국에서 권력승계는 개인이 아닌 세대 혹은 집단에 대한 승계이기 때문에 정책결정 구조의 특성상 차세대 지도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호 정책경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의와 협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자체가 일순간에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제5세대 지도자들 중 일부는 대외경제협력의 경험이 존재하지만, 시진핑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외정책 및 군사와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외 및 군사정책은 보다 전문화된 집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보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예시한다.

셋째, 제4세대 지도부의 뒤를 이어 제5세대 지도부 역시 중국의 군사 강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단기간에 온전하게 갖추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역량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외정책은 당분간 현



제의 '평화적발전(和平發展)'론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인 영토분쟁과 자원 문제 등과 같은 핵심국가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제5세대 집권 시기에는 대중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정 정도의 정치적 개혁을 위한 실험이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새로운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거부할 경우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특색의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군사력 강화와 대중주의 및 국내정치상 민족주의 성향의 강화는 포퓰리스트(populist)의 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간의 긴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제5세대 지도부는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다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능력을 시험 받는 세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전임지도자(장쩌민, 후진타오)와는 달리 덩샤오핑이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덩샤오핑의 이념이나 유훈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주의의 강화, 강대국화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의 강화, 대내 경제개혁 및 정치개혁 가능성의 증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III. 제5세대 지도부의 한반도정책 및 대북정책

중국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주변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지는 의미는 기타 주변국정책과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주변국으로서 한반도가 갖는 전통적인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핵 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한·중 경제관계는 갈수록 밀접해질 것이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양국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5세대 지도부 구성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투안파이가 장악하든, 타이즈당이나 상하이방이 장악하든 한국에 대한 정책은 변화보다 지속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부 교체나 그 내부의 성격과 출신에 따라 한·중관

계의 기저를 흔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5세대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의 안정적 국제환경 확보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증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한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북·중관계의 강화에 대한 균형외교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이유로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더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북·중관계 및 중·미관계의 변화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의 북·중관계 강화 추세는 양국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전략적 고려에 따른 선택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중 협력관계의 강화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지도부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즉 중국은 소위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붕괴는 중국의 대북영향력 상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북한체제의 존속을 자국의 핵심국가 이익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대북영향력 유지·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대외 적대 강경정책에 활용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제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중관계의 변화 역시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중은 2010년의 갈등 상황에서도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와 협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모두 북한의 체제붕괴에 이르는 불안정성을 바라지 않고 북한의 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결국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갈등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지도부는 북한 비핵화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등 보다 현상유지적인 대북정책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이나 의지와 괴리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1-4세대 지도부를 거치면서 최고정책결정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제5세대 지도부의 출범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중앙외사영도소조를 통해 입안되고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외사영도소조 조장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변화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동안 국가간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대외 창구였지만,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당對당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외교부보다는 중국공산당내 조직인 대외연락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 북중관계 강화 추세 속에서 여전히 당 대외연락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에 어떤 차세대 지도자가 인선되느냐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된 핵심정책은 중앙(국무원)외사판공실을 거쳐 결정되고, 특히 외사판공실 주임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나 정책건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외사영도소조의 조장인 당 총서기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외사판공실 주임에 대한 인선 역시 중국의 한반도정책결정 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였을 때, 중앙외사판공실은 당과 국가의 모든 관련 행정부처 및 싱크탱크에 정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회의를 소집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 외교부 당위원회 서기이자 수석부부장인 파이빙귀가 외사판공실 주임의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는 유엔 대사 출신인 왕광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차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외교부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의 출범과 2003년 2차 북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가간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원의 외교담당 국무위원(파이빙귀)은 외교부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이고,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역시 외교부의 현직 부부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강해졌다. 따라서 비록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적 기류 및 북중관계의 강화 등으로 인해 중국 외교부의 역할이 수세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5세대 지도부 출범을 계기

로 하여 다시 중국 외교부의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의 큰 흐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외교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외교관련 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부는 북핵문제나 중미관계 등의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관련 정책부처 내지는 싱크탱크들과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중국의 북한정책과 한국정책을 주관하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부서는 당 부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부문의 전문화된 관료들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5세대 지도부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 협상 및 한·중 경제관계의 확대 과정에서 외교부는 물론 상무부와 같은 경제부서의 위상이 더욱 증대되는 등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구조가 점차 다원화될 것이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는 2012년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북한 역시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군사대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는 중국의 총체적인 영향 하에 놓이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한국의 민감도 역시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각 부서별,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은 과거 극소수의 전문가와 정치지도자에 의해 독점되었던 경향성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여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참여가 보장되는 전문화와 다양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싱크탱크 간의 회의를 통해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견해를 교환함으로써 수준높은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싱크탱크와의 연계는 미래의 중국의 최고지도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시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부록 1>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중 제5세대 유력 후보군

성명	현직(주요경력)	출생 년도	본적	학력	비고(전직, 경력)
習近平	- 국가부주석 - 중앙군사위원회 부 주석 - 중앙서기처 서기 - 중앙당교 교장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953	陝西 富平 (北京 출생)	- 청화대학 공정화학부 - 청화대학 인문사회학원 법학박사	- 푸젠성 성장 -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 -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 16대 중앙위원
李克強	- 국무원 부총리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955	安徽 定遠	- 베이징대학 법학과 - 베이징대학 경제학박사	-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 허난성 성장, 당위원회 서기 - 라오닝성 당위원회 서기 - 15- 16대 중앙위원 - 8대 전인대 상무위원
李源朝	- 중앙서기처 서기 - 중앙조직부 부장 - 중앙정치국 위원	1950	江蘇 鹽水	- 푸단대학 수학과 - 베이징대학 경제경영센 터 석사 - 중앙당교 법학박사	- 공청단 상하이시 서기 -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 문화부 부부장 - 장쑤성 당위원회 서기 - 16대 중앙후보위원
王岐山	- 국무원 부총리 - 중앙정치국 위원	1948	山西 天鎮	- 시베이대학 역사학과	- 중국건설은행장 - 광둥성 부성장 - 하이난성 당위원회 서기 - 베이징시 시장, 올림픽조직 위원회 집행주석 - 16대 중앙위원
張德江	- 국무원 부총리 - 중앙정치국 위원	1946	遼寧 台安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경 제학과	- 지린성 당위원회 서기 -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 -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 - 16대 중앙정치국 위원
劉延東	- 중앙정치국 위원 - 국무위원 - 올림픽조직위원회 부주석	1945	江蘇 南通	- 법학박사	-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 중앙통전부 부장 - 10대 전국정협주석 - 16대 중앙위원
劉云山	- 중앙정치국 위원 - 중앙서기처 서기 - 중앙선전부 부장	1947	山西 忻州	- 중앙당교	- 공청단 네이멍구자치구 부 서기 - 16대 중앙정치국 위원

성명	현직(주요경력)	출생 년도	본적	학력	비고(전직, 경력)
孟建柱	- 공안부 부장 - 중앙위원	1947	江蘇 蘇州	- 상하이 기계학원 시스템공정학과 - 공학석사	- 상하이시 당위원회 부서기 - 장시성 당위원회 서기 - 16대 당중앙위원
汪 洋	-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 - 중앙정치국 위원	1955	安徽 宿州	- 중앙당교	- 공청단 안후이성 부서기 - 안후이성 부성장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 주임 -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 16대 중앙후보위원
薄熙來	-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 중앙정치국 위원	1949	山西 定襄	-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 문학석사	- 랴오닝성 성장 - 상무부 부장 - 16대 중앙위원
俞正聲	-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 중앙정치국 위원	1945	浙江 紹興	- 하얼빈 군사공정학원 유 도탄공정학과	- 건설부 부장 - 후베이성 당위원회 서기 - 16대 중앙정치국 위원
張高麗	- 텐진시 당위원회 서기 - 중앙정치국 위원	1946	福建 晉江	- 사면대학 경제학과	- 광둥성 부성장 - 선전시 당위원회 서기 - 산둥성 당위원회 서기, 성장 - 16대 중앙위원
袁純清	- 산시성 당위원회 서기 - 중앙위원	1952	湖南 漢壽	- 베이징대학 법학과 - 중국정법대학 법학 석사 - 후난대학 경영학 박사	-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 산시성 성장, 당위원회 부 서기 - 16대 중앙후보위원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장 - 중앙위원	1948	江蘇 宜興	- 칭화대학 공학박사	-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 중국건설은행장 - 16대 중앙위원
劉 鵬	- 국가체육총국 국장 - 중앙위원	1951	重慶	- 충칭대 기계공학과 - 공학석사	- 공청단 쓰촨성 서기 -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 중앙선전부 부부장 - 쓰촨성 당위원회 부서기 - 16대 중앙후보위원



# 21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 국내외 정치 전망





#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 국내외 정치 전망

이기현 | 통일연구원

## I. 5세대 지도부의 등장

1. 5세대의 특징
2. 파벌간 정책 지향
3. 시진핑은 대세인가?

## II. 5세대 지도부의 국내외 정치 전망

1. 국내정치 전망
2. 대외정책 전망

## I. 5세대 지도부의 등장

- 2012년 제 18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원자바오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고, 5세대 지도부의 등장이 예상됨.
  - 공산당 엘리트 순환의 흐름상 권위주의 정권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
  - 이미 중국 엘리트 순환에서 일정정도 제도화의 특징이 나타났고 이는 각 파벌간의 공존과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틀로서 작용.
  - 시진핑, 리커창 등이 이미 5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이변이 없는 한 평화적인 세대,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체적 분석.

### 1. 5세대의 특징

- 잃어버린 세대와 하방청년이라는 세대적 특성
  - 1966년 문화대혁명 발발 이후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세대로, 농촌으로 하방당해 노동과 봉사활동을 경험함
- 5세대 지도부는 각 성의 성장, 당서기 등 지방 및 중앙 부처에서의 간부 경험과 검증된 정치능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될 것임.
  - 중국 국내외 이슈에 대한 이해 및 현장 경험, 전문성과 행정성을 겸비.
  - 기술관료 보다는 인문 혹은 사회과학 전공의 관료가 다수.
  - 기술적 성장보다는 인문적 성장에 대한 관심 증대 가능성.
- 공청단파(團派), 상하이방, 태자당 등 정치파벌의 중첩성
  - 혈연, 경험 및 특정 정책 및 노선에 따른 정치 엘리트 간 파벌이 존재하지만, 한 개인이 여러 파벌에 동시에 속하는 등 중첩적 특징이 있으며, 파벌간 연대 내지 연합도 가능.

### 2. 파벌간 정책 지향

- 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청단파가 국내적으로 균형발전, 대외적으로 평화

발전을 선호하고, 상하이방이나 태자당의 경우 불균형발전, 적극적인 개입(engagement)을 선호한다고 하나, 파벌 간 정책적 지향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대표적으로 태자당인 보시라이가 홍색 운동(唱紅)등 신좌파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공청단파로 분류되는 왕양이 자유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 외교정책에 대한 논쟁 역시도 현재 중국학파와 전통주의학파간의 논쟁이 시작단계이지, 엘리트의 특정 성향이 분석되지는 않은 상황.

○ 대내외적으로 발전전략과 대외정책을 두고 노선 대립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시 되나, 엘리트의 파벌적 성향으로 구분하기는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오히려 노선 대립과정에서 각 파벌간의 이합집산 혹은 합종연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과정에서 파벌이익 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택하는 엘리트들도 등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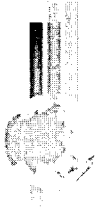
○ 공산당은 파벌간의 견제와 균형이, 신규(新舊) 엘리트의 중첩성이 존재하는 집단지도체제이기 때문에 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다하더라도, 18대 공산당 전반기에 당장 노선갈등이 심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3. 시진핑은 대세인가?

○ 5세대의 리더로 시진핑과 리커창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최초로 도입한 중앙위원회 내부 투표(민주추천회)에서 시진핑이 1위로 낙점되기도 했음.

○ 그러나 시와 리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 비해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평가임

- 후진타오는 낙후지역에 대한 경험, 10년의 정치국 상무위원, 공청단 인맥을 가지고 최고 권자에 입성한 반면에 시진핑은 그 경험의 다양성과 인맥이 약함.



- 원자바오가 다양한 행정경험(농업, 재정, 은행개혁, 반홍수 정책)을 통해 빠른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 반면, 리커창은 허난성 당서기 시절 AIDS 마을, 탄광사고 등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한 약점을 드러냄.
  - 전 지도자에 비해 소프트한 이미지의 새 지도자들이 과연 중국의 복잡한 현실을 잘 경영할 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됨.
-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 스타들이 그들에게 위협적임.
    - 보시라이나 왕양 등은 중국 정치계의 새로운 프로모션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있음. (일종의 중국식 대중주의 정치전략)
    - 왕치산은 세계 금융위기의 시대에 경제 및 금융전문가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리위엔차오는 최근까지도 중국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음.
- 최근 신해혁명 기념식장에 장쩌민 전주석이 건재를 과시하면서 태자당의 만형인 위정성 (상하이 당서기), 왕치산 등이 다시 5세대 리더 자리 굳히기에 탄력을 받음
- 17기6중전회의 의제가 문화개혁임을 감안할 때, 리우원산(선전 담당)이 리창춘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짐.
- 후진타오가 장쩌민처럼 군권을 장악하는 군사위 주석직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
-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하더라도 그 권력은 과거보다 더 제약을 받을 것이고, 파벌간의 정책지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나 일개 파벌에 의한 획기적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II. 5세대 지도부의 국내외 정치 전망

### 1. 국내정치 전망

- 분배와 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의 논쟁
  - 대중주의 노선과 엘리트 노선간의 대립과 파벌 간 이합집산 가능
- 통치이데올로기 및 사상 갈등
  - 신좌파, 신우파, 전통주의 그룹간의 갈등 지속.
  - 17기 6중 전회를 통해 문화강국의 길을 제시했으나,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함.
  - 단 과도한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와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산층과 농민 사이의 딜레마
  - 기존 지도부에서는 기업가와 중산층에 대한 포섭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차기 지도부에서는 이들의 정책적 요구와 불만들이 더욱 증대할 것임. (도시 내 시위 증가추세)
  - 발전과 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농민 시위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경제위기의 심화 등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뚜렷한 정책 수단은 미비한 상황.
- 소수민족
  - 티베트 보다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가 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 그러나 간헐적인 테러나 시위는 계속될 것임.
- 체제개혁의 방향성 논란
  -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부분적으로 당내 민주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층에서의 선거 확

대 및 탄원제도 강화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임.

- 단 급격한 정치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혹은 중국식 민주를 추구할 것이라는 현상유지 전략이 지속될 것임.
- 오히려 사회 불안정 요소 증가에 대해 사회 감시 및 통제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 대외정책 전망

- 공청단파는 조화세계 및 다극화에 정책 선호를 드러내기 때문에 주변국 및 다자외교를 중시하고, 태자당 및 상하이 방은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 때문에 강대국 중심외교를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
- 파벌간의 대외정책에 대한 중점 성향이 구분된다고는 하나, 집단지도체제의 성격 상 파벌간의 정책적 타협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대외정책을 두고 단기간에 대립적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음.
- 5세대 지도부 역시 이미 17대를 통해 대외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참여해 온 바, 4세대 지도부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임.
  - 당분간은 국내 발전 및 사회 안정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현재의 평화발전론적 기조를 유지할 것임.
  - 문화강국의 길을 선포한 이상, 대외외교의 성격도 보다 소프트한 방향을 지향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시도할 것임.
  - 단, 군사력 강화 등 국가역량 강화는 지속될 것이고, 주권, 영토, 영해 분쟁 등과 같이 핵심적 국가이익에 관한 사안들은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현재의 후진타오 노선을 계승할 것임. 동북아에서 미중관계의 구도가 현재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5세대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지경학적 접근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될 것임.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정치,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영향력 줄이기 전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중국의 정치 · 대외관계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





#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

김애경 | 명지전문대

## I. 서론

## II. 중국의 강대국화와 소프트파워 전략

1. 중국의 강대국화
2.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 III.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 IV. 결론

[참고문헌]

---

\* 대표적 예로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2003년 보고서에서는 2041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Dominic Wilson and Roopa Purushothaman 2003).

## I. 서론

이미 세계적 화두가 된 ‘중국의 부상’ 혹은 ‘중국의 강대국화’는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때문이며 향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가 뒤따른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지만,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sup>1)</sup> 중국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중국경제 분야에 치우쳐 있고, 군사력에 대한 전망도 일부 있다. 이렇게 중국의 부상은 하드파워(hard power)를 중심으로 전망되어져 왔다.

그러나 정보화시대, 세계화 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만으로는 한 국가의 완전한 국제적 위상을 결정할 수는 없다. 러시아와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한 나라가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거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계량화할 수 없는 힘들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현 세계질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길러야 한다”는 나이(Joseph S. Nye)의 조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근 30년 동안 연평균 9%대의 고속성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이 이처럼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모든 대내외적 환경을 국내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경제발전에 매진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문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자국의 생존(survival)과 사활적(vital)이익에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매우 소극적이고 대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태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중국 외부의 평가가 변화되고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후 중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sup>2)</sup>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공공연히 ‘중화민족의 부흥’

1) 대표적 예로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2003년 보고서에서는 2041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Dominic Wilson and Roopa Purushothaman 2003).

2)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력 강화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김애경 2002, 33-60).

을 외치고 있으며, 학계차원에서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세계질서 전환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중국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時殷弘 1995; 楊錚, 1995; 閻學通, 1995; 任東來 1995) 또 2006년 11월 중국 중앙티비(CCTV) 경제 채널에서는 ‘대국굴기’라는 제목으로 12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는데, 15세기 이후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 역사와 그 국가들이 흥성할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에 대한 내용을 집중분석 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일련의 모습들은 중국이 현재의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에서 세력전이의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sup>4)</sup> 최근 중국은 강대국화의 일환으로 소프트파워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즉 진정한 강대국이 되고 싶고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과 같은 하드파워의 증대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증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馬建英 2006, 55-59)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고대문헌을 인용하여 중국문화를 강조하는 공식발언이나 학자들의 국력연구에서 있어 소프트파워에 대한 강조,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대외행태들은 중국 내부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최근 소프트파워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조지프 나이(Nye)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국은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확대되는 소프트파워가 현 국제질서에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Joseph S. Nye 2005)

학계의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대에 대한 관심 또한 적지 않다. 중국학계의

3)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finance.cctv.com/special/C16860/01/>(검색일자: 2007년 11월 13일).

4) 세력전이이론의 가설에 따르면 기존질서의 지배국과 도전국의 국력이 비슷해졌을 때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전쟁을 통해 세력전이가 이루어진다. 또 국제질서에서 재화분배방식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따라 세력전이의 방식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가정하는 국력이란 해군력을 포함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한다. 보다 중요하게는 군사력 증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내경제발전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나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국이 전쟁을 통한 세력전이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주장이 곧 중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세력전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그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Jack Kugler & A. F. K. Organski 1989; Jacek Kugler & Douglas Lemke 2000; 김우상 2007)

연구를 분석의 초점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소프트파워 개념의 선구자인 나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들의 연구는 비교적 초기에 진행된 것으로 나이의 개념을 소개하며 중국도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王滬寧 1993; 龐中英 1997; 沈驥如 1999) 다음으로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소프트파워를 분석한다. 이들은 현재 중국이 지역차원의 강대국에서 세계차원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력, 군사력 등과 같은 하드파워 강화와 함께 문화·이념정책 등 소프트파워 증진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龐中英 2006; 胡鞍綱 2005; 門洪華 2005; 閻學通·孫學峰 2005; 黃碩風 1999) 위 두 부류의 연구자들은 모두 나이의 개념은 미국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중국의 상황에 맞는 개념 재구성을 주장한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부상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을 건의하지만, 동시에 ‘중국 특색’을 항상 강조하면서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중국 내 논의, 인식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연구자들의 소프트파워 논의를 소개하고, 중국은 어떻게 서구와 다른 중국적 가치와 비전을 수립하고 또한 이를 어떻게 아시아와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냉전종식 전후로 제기했던 ‘국제정치경제신질서國際政治經濟新秩序’ 재건, 1990년대 중후반 제기되었던 ‘신안보관(新安全觀)’, 이후 제기된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 ‘화평굴기(和平崛起)’, ‘화평발전(和平發展)’론과 ‘베이징 컨센서스(北京共識)’ 등은 실제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라고 분석한다.(조영남 2007; 劉慶, 王利濤 2007; 鄭永年, 張弛 2007) 네 번째는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증대되었고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다. 이들은 최근 아시아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군사력 증강과 함께 소프트파워가 증대되었고 유교문화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현재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증대되었음을 인정한다.(David Shambaugh 2006; Joseph S. Nye 2005; Joshua Kurlantzick 2007; 鄧顯超 2005) 이러한 기존연구는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증강전략과 의도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이 강대국화의 일환으로 소프트파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소프트파워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중국의 강대국화와 소프트파워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공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중국학자들의 소프트파워의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중국이 전략으로서의 소프트파워를 대외정책에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사례로 중국의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정책을 분석한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산전략이 성공을 거두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발전 경험과 정치적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경제원조 및 기타원조 등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확대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 II. 중국의 강대국화와 소프트파워 전략

### 1. 중국의 강대국화

중국의 강대국화 의지는 매우 강하다. 중국이 제3세계임을 자처하던 마오쩌둥(毛澤東) 집권시기 때도, 도광양희(韜光養晦)원칙을 주장하며 매우 조심하게 국내경제발전에 집중하던 덩샤오핑(鄧小平) 집권시기 때도 중국은 강대국이 되고 싶어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생긴 자신감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으로 하여금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을 외치도록 하였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중국의 '평화적 부상(和平崛起)'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 건설을 선언토록 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각기 그 방식을 달리하고 있을 뿐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강대국이 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때는 1990년대 중·후반이후 시기이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중국의 향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망도 적지 않

았다. 게다가 중국은 국내적으로 천안문사태까지 겪으면서 국제적 고립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자신감을 얻어 갔다. 199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당시 중국은 위엔화(元) 가치를 평가절하시켜 수출이익을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엔화 가치를 유지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국 중국은 이를 계기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기 시작했으며 스스로도 '책임감 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의 역할을 표방하였다.(Avery Goldstein 2001, 845)<sup>5)</sup> 이후 2000년대 초 발생한 '9·11'테러와 '북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었다.

중국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부상을 개념화하고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를 보는 외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중국위협론'은 대표적으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환영하지 않는 부류의 시각인데, 중국은 외부의 이러한 시각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미지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론을 제창하여 중국의 부상은 평화로울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발전에 공헌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sup>6)</sup> 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확보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중국의 강대국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또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으로 중국의 경제력과 국가경제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이는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경제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006년 말 현재 2조 6,68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제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GDP의 5.5% 수준이다.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7*) 중국의 국방비 지출 총액은 여전히 미국과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매년 10%를 훨씬 상회

5) 중국의 '책임대국론'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한석희 2004).

6) '화평굴기론'은 중국 국내적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평발전(和平發展)론'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평굴기론'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강대국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Robert L. Suettinger 2004; Bates Gill 2001, 27-32; 김애경 2005).

하고 있다.<sup>7)</sup> 중국 스스로는 방어를 위한 안보강화가 목적이며 인구와 국토의 면적, 국경 길이로 계산해 보면 중국의 국방비는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도 적은편이라고 주장하지만,<sup>8)</sup> 중국의 국방비 지출증가세는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낼 정도이다. 또 중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와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중국의 강대국화 실현의 기반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는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그 전제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全面的小康社會)' 건설, 2050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종 자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는 중국의 강대국화 실현을 촉구할 것이며, 중국은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자원의 공급선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2.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특정국가의 대외전략으로서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전략이란 그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the country's ability to influence indirectly the actions of other states)"을 배양하는 것이다.(Wang, Jisi 2005) 따라서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와 함께 그 국가의 대외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이어진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파워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중국의 부상은 대외영향력 증대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며 이는 일정정도 현 패권국인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 왔던 "중국위협론"은 이러한 논리를 반영한다.

7) 중국 정부는 2007년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년에 비해 17.8% 증가한 US4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 국방정보국(DIA)국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은 850-1,25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7, 25).

8) "溫家宝：中國軍費透明，在世界上居于后位," <http://news.qq.com/a/20070316/002118.htm> (검색일: 2007년 5월 23일).

소프트파위의 중요성은 내내 강조되어 왔다. 국제정치이론의 맹아기라고 할 수 있던 1939년 영국의 현실주의 이론가였던 E. H. 카(E. H. Carr)는 이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군사력, 경제력과 함께 국제적 파워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E. H. Carr 1964, 108) 이렇게 지금처럼 소프트파워란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토론되어지기 전이었던 때에도 소프트파위는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이가 “소프트파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듯이, 정보화 시대인 현재 소프트파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강대국일수록 소프트파위는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하게 해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소프트파워’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1990년에 그의 저술에서 최초로 제기하였다.(Joseph S. Nye, Jr. 1990a, 153-171; Joseph S. Nye, Jr., 1990b) 이후 ‘소프트파워’는 국제관계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대상이 되었다. 특히 중국은 나이의 이러한 소프트파워 개념을 매우 주시하였다.<sup>9)</sup> 강대국의 경험이 있고 향후 진정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국제관계연구자들은 나이의 개념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쏟아냈다. 문화와 연결하여 소프트파워 개념을 설명하거나, 나이의 개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개념을 재정의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나이가 정의한 소프트파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는 파워를 계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사랑과 날씨에 비유하였다. 즉 파워는 사랑과 같아서 체험하기는 쉬워도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거나 계량하기는 어려우며, 모두가 날씨(파워)에 의존하고 화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관계 연구자들은 파워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는 이렇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파워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이라고 종합적으로 정의하였다.(Joseph S. Nye, Jr. 1990b, 25; 조지프 S. 나이 지음\_ 양준희 옮김 2000, 55; 조지프 S. 나이 지음\_ 홍수원 옮김 2004, 2)

나이는 또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기준으로 파워를 하드파워

9) 중국의 소프트파워 개념에 대한 수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조.(張小明 2006, 20-36; 張小明 2004年; 劉德斌 2004年, 55-62; 馬建英 2006, 55-59; 劉慶, 王利濤 2007, 38-43; 鄭永年, 張弛 2007).

와 소프트파워로 구분하였다. 즉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는 위협이나 보상수단을 동원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위협이나 보상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하드파워이며 후자는 소프트파워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는 구체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한 힘이 하드파워이고 문화, 이데올로기 및 제도 등과 같은 추상적인 자원과 관련되어 타인의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소프트파워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파워는 ‘파워의 제2의 얼굴’이라고 규정하였다.

한마디로 소프트파워는 ‘매력적인 파워’로 단순히 영향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나이는 주장한다. 영향력이란 위협이나 보상과 같은 하드 파워에 의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유경쟁시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다고 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언급처럼, 아이디어 시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소프트파워, 즉 명백한 위협이나 보상이 없이 타국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따르게끔 설득하는 보이지 않는 매력에 좌우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위적인 측면에서 소프트파워는 매력적인 파워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정책이라는 세 가지 자원에 의해 소프트파워가 만들어진다. 즉 문화자원으로 미국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미국의 정치적 가치관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미국의 대외정책의 내용과 스타일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반감을 사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파워의 특징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 강조하였다. 과거에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 자원이 한 국가의 파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소프트파워 자원과 이것이 창출하는 매력적인 파워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학자들의 ‘소프트파워’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컸다. 중국의 경우 초강대국 지위에 있으면서 이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소프트파워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 소프트파워 증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학자들은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비판 및 보완을 통해 중국의 소프트파워 개념, 자원 및 소프트파워 증강과 중국의 부상과의 관계 등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 대외전략 전문가 왕홍잉(Wang, Hongying)

은 이러한 중국의 소프트파워론 연구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개념에 있어 중국학계는 나이보다 넓은 범위를 취하고 있으며, 소프트파워 자원에 있어 나이는 미국의 문화와 정치제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경제발전 모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鄭永年, 張弛 2007, 6-7)<sup>10)</sup>

이 글은 중국학계의 소프트파워 연구 중 다음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한다. 첫째, 개념에 대한 것이다. 중국학계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통일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한 국가의 대외 영향력과 연계시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5년 12월 “중국 소프트파워 건설”이라는 주제로 상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연구소가 주최한 전문가좌담회를 정리하는 글에서도 중국학자들이 인식하는 소프트파워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소프트파워는 두 가지, 즉 하나는 무형적인 힘, 문화 및 정신적인 힘을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한 나라의 경제·외교의 대외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方長平 2007, 21-27; 王艷紅 2006, 136)

둘째, 하드파워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매우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학자들은 하드파워가 소프트파워의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王艷紅 2006, 140) “소프트파워는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하드파워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나라 소프트파워의 효과적인 대외적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관점”은 필자의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예를 들면 소프트파워를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대외원조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중국은 소프트파워 증강에 있어 경제력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중국이 경제발전에서 성공한 결과물이며, 중국의 경제발전 성공경험은 기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경제력은 보유국의 운용여부에 따라 하드하게도 혹은 소프트하게도 변할 수 있다. 경제력이 보상과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적어도 중국이 취하고 있는 소프트파워로서 경제력 개념과는 다른 상황이다.

10) Hongying Wang forthcoming.

### Ⅲ.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중국에게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56년 이집트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차례로 51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 하였는데, 현재는 47개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11)</sup> 1971년 알바니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장서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회복을 위한 안전을 회부하여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중국인권상황’을 11차례 부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주었다. 이외에도 13차례나 대만의 유엔 가입문제를 의사일정에 회부시키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sup>12)</sup>

게다가 아프리카는 에너지와 기타 자원의 보고로서 중국의 에너지 수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1993년 이후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략한 중국에게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에 필요한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중국은 전체 석유소비량 가운데 30%정도를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게 국제적 영향력과 자원접근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상당히 공세적으로 아프리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차원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국과 아프리카는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中非合作論壇)’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제도화해 가고 있다. 2000년 북경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한 후 2006년까지 3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2006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에는 48개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부처 관리들이 참석하는 등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8가지 정책계획을 공표하였다. 또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북경정상

11) 아프리카에는 총 53개 국가가 있다.

12) 당시 중국은 76석의 찬성표를 얻었는데 그중 26석을 아프리카국가로부터 얻었다.(賀文萍 2006a, 20).

회담선언(中非合作論壇北京峰會宣言)과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북경행동계획(2007-2009)’을 통과시켜 양자간 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둘째 중국 지도부의 빈번한 아프리카 방문외교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취임 후 이미 3번이나 14개국을 순방하고, 윈자바오(溫家寶) 총리는 7개국,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은 20개국을 방문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중국 외교부 장관이 매년 첫 번째로 방문하는 국가는 16년째 아프리카지역 국가라는 것이다.(環球時報 2007年 2月 6日)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아프리카 국가 방문은 중국이 대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지도부의 방문횟수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지도부 차원의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정치적 연대감을 호소한다. 우선 중국은 정치적 주권에 대한 ‘암상자(black box)’ 개념을 고집하며 ‘내정불간섭’원칙을 주장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수단(Sudan)의 다르푸르(Darfur)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은 ‘수단 스스로 해결해야 할 국내문제임’을 강조하면서 2004년 유엔의 경제제재안 상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수단의 남부지역 유전 개발과 정유산업 및 송유관 건설 등 석유산업 전반의 이익을 중국이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일한 정체성 강조한다. 중국은 자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므로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가 겪었던 근대 시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통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중국침략 역사를 미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의 아프리카 노예무역과 점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정치적 연대감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Moreblessing Chidaushe 2007, 113; Horace Campbell 2007, 134-135; Jacques de Lisle <http://www.fpri.org/enote/200702.delise.intoafricachina.quest.html>) 이렇게 중국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피해심리(victim mentality)를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넷째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Joshua Kurlantzick 2007, 100-102 참조) 우선 양자간 무역액은 1950년



대 초 1,211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0년 10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2004년 294억 달러, 2005년 397억 달러, 2006년 55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에 들어 양자간 무역액은 30-40%라는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헤럴드 경제신문 2006년 5월 23일; 매일경제신문 2007년 1월 17일; 賀文萍 2006b) 중국은 특히 2005년부터 2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190여 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역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요소이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역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요소이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2006년 말 5.2억 달러로 중국의 전체해외직접투자(비금융부문)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 말 누계금액인 26.6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sup>13)</sup> 현재 약 800개의 중국기업이 49개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조우추취(走出去)'전략과 아프리카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및 외화 규제완화 등의 우대혜택을 주는 등 제반 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외채탕감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개발에 대한 원조제공, 말라리아 예방프로젝트와 같은 보건외교를 약속하면서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뿐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의 무역파트너이자 원조제공자로서 미국과 같은 규모인데,(Jacques de Lisle 2007) 2006년 중국·아프리카협력 포럼에서 2009년까지 실행할 다음 몇 가지 정책을 약속하였다.

- 중국은 대아프리카 원조를 2009년까지 2006년의 배로 증가시킨다.
- 향후 3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30억 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수입 상에게 20억 달러의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을 설립하고 기금 50억 달러를 조성한다.

13) 2006년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주로 알제리, 잠비아, 나이지리아,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등의 국가에 투자되고 있다. 그 중 알제리는 990만 달러가 투자되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9위 국가이다. 2006년 말 누계금액으로는 수단이 4.97억 달러, 잠비아 2.68억 달러, 알제리 2.4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9위, 15위, 17위를 차지하였다. (『2006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2007年 9月 14日)

-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이 중국에게 2005년말 까지 갚아야 할 채무를 탕감한다.
- 아프리카 시장을 한층 더 개방시키기 위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 최빈국의 대중국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품목을 190개에서 440여개로 확대한다.
- 향후 3년 이내로 아프리카에 3-5개 경제무역협력지대 건립한다.
- 향후 3년 동안 15,000명의 아프리카 인재를 육성한다; 아프리카에 100명의 농업전문가를 파견한다; 10개의 특색있는 농업기술 시범센타를 조성한다; 아프리카의 병원 30개를 원조하고 3억위안(元)을 투자하여 30개의 말라리아 예방센타를 설립한다; 300명의 청년지원자를 파견하여 농촌학교 100개를 원조한다; 2009년 전까지 중국정부 장학금을 받는 아프리카 유학생의 수를 현재 연인원 2,000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sup>14)</sup>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이다. 현재 9%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중국으로서는 에너지 공급선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만 고립화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고립화는 중국 대외정책의 일부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이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프로젝트 또한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세계적 차원의 권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sup>15)</sup> 이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 또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강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중국의 권위가 증대되면 앞의 두 가지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14) “中非合作論壇北京峰會隆重開幕,” <http://xyf.mofcom.gov.cn/aarticle/j/200710/20071005153668.html>(검색일: 2007년 12월 10일).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 8개 항목의 시행을 위해 실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내용은 상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吳儀副總理 薄熙來部長爲中國援非專家和青年志願者送行,” <http://yws.mofcom.gov.cn/aarticle/tpxw/200706/20070604837280.html>(검색일: 2008년 1월 5일); “魏建國副部長開會研究農業援非項目,” <http://yws.mofcom.gov.cn/aarticle/j/c/200801/20080105320142.html>(검색일: 2008년 1월 5일).

15) Sanou Mbaye, “China’s Grand Africa Strategy,” <http://www.namibian.com.na/2006/October/columns/0651DED27F.html>(검색일: 2007년 12월 5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목표가 위와 같다면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책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우선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발전 경험은 현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념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베이징컨센서스’, ‘중국모델(中國模式)’, ‘중국의 경험(中國經驗)’, ‘중국의 길(中國道路)’ 등이 그 예이다.

물론 ‘베이징컨센서스’나 ‘중국모델’ 등등이 규정하는 명확하고 일치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경험은 국가주권과 이익을 견지하며, 타국의 모델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쇼크요법이 아닌 시험지역을 정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시도해보며 점진적인 방법(摸着石頭過河)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賀文萍 2006a, 19.) 중국의 발전경험은 발전도상국으로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화를 이루어 냈으며, ‘중속론’처럼 세계경제질서와 관계를 단절하거나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처럼 전면적 서구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매우 흥미로워한다.(門洪華 2007, 37-38)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찍이 서구의 모델을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정치민주화와 경제자유화 및 시장화를 목표로 경제구조 조정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치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낙후를 초래할 뿐이었다고 한다.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게 맞는 모델을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식 발전을 통해 현재 세계에서 4대 경제실체가 되었고 세계무역의 10%이상을 통제하고 있어,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대상이다.(Marcel Kitissou 2007, chap.13)

많은 아프리카의 여론 주도자(opinion leader)들은 중국모델이 개발도상국들의 해답이라고 선전하고 있다.(Joshua Kurlantzick 2007, 135) 나이지리아의 경우 중국의 비약적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는 “중국의 오늘은 바로 나이지리아의 내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이지리아의 언론매체에서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중국이 되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나이지리아 국

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 또한 ‘중국현상’에 매우 주목하며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아프리카국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발전특구와 향진기업의 발전 및 빈곤구제경험 등에 탄복할 만큼 중국의 발전에 심취되어 있다.(賀文萍 2006a, 19-20) 따라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천연자원 요인이 결합되었지만, 중국의 변화 경험은 일정정도 아프리카국가들이 배워야 할 많은 긍정적 교훈이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정치적 조건이 없는 중국의 원조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대표적 외교원칙으로 ‘내정불간섭’을 주장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되는 증여(grant), 차관(loan), 기술 원조 등의 형식은 서구와 다를 바가 없지만 중국의 그것들은 정치적 조건이 덜 붙는 다는 것이다. 중국은 오로지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원칙만은 고집한다. 물론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 이윤의 본국송환 및 중국 근로자 고용 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은 붙인다.(Chris Alden 2007, 21; Moreblessing Chidaushe 2007, 116) 따라서 아프리카의 비동맹 국가들은 종종 중국을 진보적인 맹방, 서구에 대한 균형세력으로 본다.(Howard W. French August 8, 2004) 결국 중국은 여타의 정치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에 대해 서구는 불만스러움을 표명한다.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대변인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조건 없는 차관을 제공함에 따라 서구국가와 국제기구가 조건부로 채무감면을 처리하면서 공들인 몇 년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표명하여 미국의 중대한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Horace Campbell 2007 123)<sup>16)</sup> 그러나 중국은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를 사용하고 있지만 위협이나 제재없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얻는 등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보건외교(health diplomacy)’ 및 인프라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아프리카 보건외교는 1964년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후 47개 국가에 15,000명이 넘는 의사들을 보내 1,800만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국가와 각 성(省)의 의료팀간의 협력

16) 물론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진심으로 아프리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면 부채와 통치(governance)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Moreblessing Chidaushe 2007, 107-108)

을 추진하고 있다.(Drew Thompson 2005, 2-3) 따라서 중국의 보건외교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와 함께 소프트파워를 증강시켜주고 있다.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에서 새로운 교통기반구조시설의 토대를 놓고 있는 중국 노동자는 테러주의와 싸우기 위해 배치된 미국 특수부대와 매우 차별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켜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호의적인(soften) 접근은 아프리카에게 더 매력적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의 의지는 2006년 1월 「중국의 대아프리카정책 문건(中國對非洲政策文件)」에서 드러나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정책문건을 발표한 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책문건에서도 중국은 양자간 우의, 상호이익, 평등호혜와 같은 윈-윈(win-win) 시나리오를 강조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 IV. 결론

이상으로 중국의 강대국화와 소프트파워전략 및 대아프리카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의 지지와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대변되는 소프트파워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대 정책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만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대정책이 의미를 갖는 것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자국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왔지만, 최근 중국이 글로벌파워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로서 아프리카지역 외교를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는 무엇보다도 자원에 대한 접근 때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연(再燃)시키고 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일정정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중국이 강대국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의 슈퍼파워를 향한 야망이 중국을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강화에 더욱 힘쓰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 또한 중국과 관계가 재연되는 것을 서구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증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중국은 불명예스러운 대서양횡단(trans-Atlantic) 노예무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에서 식민정책, 대항학살 및 점령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또 외교적, 정치적, 물질적, 군사적 후원으로 아프리카 해방운동을 지지하였다. 둘째 중국과 아프리카연합(AU)은 남남블록으로서 국제질서에서의 협력의 동인이 존재한다. 셋째 중국은 과거 30여 년 동안 가난했던 아프리카를 구조조정정책으로 관여하지 않았다.(Horace Campbell 2007, 130 참조)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원조에 대해서는 정치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넷째 중국의 발전 경험은 전쟁과 약탈의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중국과 접촉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보건외교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외교는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의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소프트파워는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경험과 정치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경제원조, 보건외교 및 기반시설 확충지원외교가 어우러져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관계강화는 그동안 '누가 아프리카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매력력을 한층 증강시켜 서서히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세우고 있는 셈이다. 즉 그동안 중국은 지역세력(regional power)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그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외교정책을 취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우상. 2007. 『신한국책략Ⅱ』. 서울: 나남.
- 김애경. 2002. “중국의 대외정책성 인식 변화: 제1,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분석을 사례로.” 『국가전략』 제10권 4호.
- \_\_\_\_\_. 2005.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합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권 4호.
- 서진영. 2006.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 정재호 편. 2006.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서울: 도서출판 길.
- 조영남. 2007.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외교적 합의.”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컨센서스』. 서울: 지식마당.
- 조지프 S. 나이 지음\_ 양준희 옮김. 2000. 『국제분쟁의 이해』. 서울: 한울.
- \_\_\_\_\_. 홍수원 옮김. 2004.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서구와 중국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권 1호.
- Alden, Chris. 2007. *China in Africa*. London: Zed Books.
- Berkofsky, Axel. 2007. “The Hard Facts on ‘Soft Power,’” *Asia Times*(May 25).
- Chidaushe, Moreblessing. 2007. “China’s Grand Re-Entrance into Africa—Mirage or Oasis?,” in Firoze Manji & Stephen Marks, ed. *African Perspective on China in Africa*. Oxford: Fahamu.
- Campbell, Horace. 2007. “China in Africa: Challenging US Global Hegemony,” in Firoze Manji & Stephen Marks, ed. *African Perspective on China in Africa*. Oxford: Fahamu.
- Carr, E. H.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 Downs, Erica S. 2007. “The Fact and fiction of Sino-African Energy Relations,” *China Security* 3, 3(Summer).
- French, Howard W. 2005. “China Wages Classroom Struggle to Win Friends in Africa,” *The New York Times*(November 20).

- \_\_\_\_\_. 2004. "China in Africa: All Trade and No Political Baggage," *The New York Times*(August 8).
- Gill, Bates. 2001. "Discussion of 'China: a responsible great powe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26(June).
- Gill, Bate, Huang, Chin-hao & Morrison, J. Stephen. 2006. "China's Expanding Role in Afric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 Report of the CSIS Delegation to China on China-Africa-U.S. Relations* (November 28-December 1). <http://www.csis.org>(검색일: 2007년 11월 19일).
- Goldstein, Avery. 2001. "The Diplomacy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168.
- Johnston, Alastair Iain.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27, 4(Spring).
- Kitissou, Marcel. 2007. *Africa in Chinal's Global Strategy*. London: Adonis Abbey Publishers Ltd.
- Kim, Samuel S. 2003. "China's Path to Great Power Status in the Globalization Era," *Asian Perspective* 27, 1.
- Kugler, Jack & A. F. K. Organski. 1989. "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 Kugler, Jacek & Douglas Lemke. 2000. "Power Transition The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Ronald L.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emke, Douglas & Tammen, Ronald L. 2003.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nternational Interaction*, 29(March).
- Lisle, Jacques de. 2007. "Into Africa: China's Quest For Resources And Influence," (February). <http://www.fpri.org/enotes/200702.delisle.intoafricachinasquest.html>(검색일: 2007년 11월 12일)
- Sanou Mbaye. 2006. "China's Grand Africa Strategy," <http://www.namibian.com.na/2006/October/columns/0651DED27F.html>(검색일: 2007년 12월 5일)



- Meidan, Michal. 2006. "China's Africa Policy: Business Now, Politics Later," *Asian Perspective* 30, 4.
- Nye, Joseph S. 1990a. "Soft Power," *Foreign Policy*(Fall).
- \_\_\_\_\_. 1990b.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
- \_\_\_\_\_. 2005.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Wall Street Journal Asia*(December 29).
- Nolan, Peter. 2004a. *China at the Crossroads*. Oxford: UK, Polity Press.
- \_\_\_\_\_. 2004b. *Transforming China : Globalization, Transition, and Development*. London: Anthem Press.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7.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 Rapkin, David. 2003. "Power Transition, Challenge and the (Re)Emergence of China," *International Interaction* 29(March).
- Thompson, Drew. 2005. "China's Soft Power in Africa: From the 'Beijing Consensus' to Health Diplomacy," *China Brief* V(October).
- Shambaugh, David. 2006. *Power Shi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ettinger, Robert L. 2004.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China Leadership Monitor 12(Fall). [http://171.66.112.62/cgi-bin/MsmGo.exe?grab\\_id=121486428&EXTRA\\_ARG=&CFGNAME=MssFindEN%2Ecfg&host\\_id=3&page\\_id=237&query=peaceful+rise&PV=1](http://171.66.112.62/cgi-bin/MsmGo.exe?grab_id=121486428&EXTRA_ARG=&CFGNAME=MssFindEN%2Ecfg&host_id=3&page_id=237&query=peaceful+rise&PV=1)(검색일: 2005년 6월 15일)
- Wang, Hongying. 2003. "National Image Building and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1, 1 (March).
- \_\_\_\_\_. Forthcoming. "Chinese Conception of Soft power and Its Policy Impactions," in Wang Gungwu and Zheng Yongnian(eds), *China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London: Routledge, Forthcoming.
- Wang, jisi. 2005. "China's Search For Stability With America," *Foreign Affairs*(september/October).
- Wilson, Dominic and Roopa Purushothaman. 2003.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 Paper No. 99*, Goldman Sachs (October).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7.* World Bank(July 1).

Yan, Xuetong. 2006. "The Rise of China and its Power Statu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

- 龔鐵鷹. 2007. "論軟權力的緯度."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 鞠殿明. 2005. "漢語熱彰顯中國軟力量." 『參考消息特刊』. 3月 24日.
- 鄧顯超. 2005. "悄然崛起的中國軟實力." 『攀登』. 第124券, 6號(December).
- 馬建英. 2006. "國家崛起不可忽視的力量:軟權力." 『沈陽大學學報』. 第18卷, 5號.
- 門洪華. 2007. "中國軟實力評估報告(下)." 『國際觀察』. 第3期.
- 方長平. 2007. "中美軟實力比較及其對中國的啓示." 『中國經濟與政治』. 第7期.
- 龐中英. 1997. "國際體系的軟力量及其他." 『戰略與管理』. 第2期.
- \_\_\_\_\_. 2005. "中國軟力量的內涵." 『瞭望新聞周刊』. 第45期.
- \_\_\_\_\_. 2006. "發展中國軟力量." 『瞭望新聞周刊』. 第1期.
- 斯維. 2006. "中國需促進真正的民間軟權力建設." 『多維新聞』. 3月 22日. <http://www7chinesenewsnet.com/gb/Mainnews/Mainlan>(검색일: 2007년 2월 20일).
- 徐偉忠. 2000. "攜手合作 共迎新世紀." 『現代國際關係』. 第11期.
- 時殷弘. 1995. "國際政治的世紀性規律及其對中國的啓示." 『戰略與管理』. 第5期.
- 沈驥如. 1999. "不能忽視增強我國的軟力量." 『瞭望新聞週刊』. 第41期.
- 楊錚. 1995. "世界政治進程的周期性與中國的機遇." 『戰略與管理』. 第6期.
- 閻學通. 1995. "中國崛起的可能選擇." 『戰略與管理』. 第6期.
- 任東來. 1995. "國際政治經濟學霸權穩定理論." 『戰略與管理』. 第6期.
- "吳儀副總理, 薄熙來部長爲中國援非專家和青年志愿者送行." <http://yws.mofcom.gov.cn/aarticle/tpxw/200706/20070604837280.html>(검색일: 2008년 1월 5일).
- "溫家宝: 中國軍費透明, 在世界上居于后位." <http://news.qq.com/a/20070316/002118.htm>(검색일: 2007년 5월 23일).
- 王艷紅. 2006. "中國的軟力量建設專家座談會綜述." 『國際體系與中國的軟力量』. 北京: 時事出版社.
- 王雨辰. 2005. "略論"北京共識"對提升中國軟實力的啓迪." 『中南財經政法大學學報』. 第1期.

- 王在邦. 1995. “世界領導者地位交替的歷史反思.” 『戰略与管理』, 第6期.
- 王洪一. 2006. “中國非洲同迎新合作高潮.” 『瞭望新聞周刊』, 6月 19日.
- \_\_\_\_\_. 2006. “試論中國威脅論.” 『西亞非洲』, 第8期.
- \_\_\_\_\_. 2007. “中非關係進入新階段.” 『理論參考』, 第5期.
- 王滬寧. 1993. “作為國家實力的文化: 軟權力.” 『復旦學報(社會科學版)』, 第13期.
- 劉杰. 2006. “中國軟力量建設的幾個基本問題.” 『國際體系與中國的軟力量』. 北京: 時事出版社.
- 劉慶, 王利濤. 2007. “近年國內軟力量理論研究綜述.” 『國際論壇』, 第9卷, 3號.
- 劉德斌. 2004. ““軟權力”說的由來與發展.”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4期.
- 劉渝梅. 2007. “軟實力與中非關係的發展.” 『國際問題研究』, 第3期.
- “魏建國副部長開會研究農業援非項目.” <http://yws.mofcom.gov.cn/aarticle/j/c/200801/20080105320142.html>(검색일: 2008년 1월 5일).
- 李安山, 許亮. 2007. “中國的非洲戰略.” 『國際戰略研究簡報』, 10月 9日.
- 張小明. 2005. “約瑟夫·奈的“軟權力”思想分析.” 『美國研究』, 第1期.
- \_\_\_\_\_. 2004. “重視“軟權力”因素.” 『現代國際關係』, 第3期. <http://www.irchina.org> (검색일: 2007년 9월 12일)
- 張劍莉. 2004. ““北京共識”與中國軟實力的提升.” 『當代世界與社會主義』, 第5期.
- 張喻芳. 2006. “從中非關係透視中國的影響力.” 『中國對非洲政策文件』, 1月.
- 鄭永年, 張弛. 2007. “國際政治中的軟力量以及對中國軟力量的觀察.” 『世界經濟與政治』, 第7期. <http://www.irchina.org>(검색일: 2007년 9월 12일).
- “中非合作論壇北京峰會隆重開幕.” <http://xyf.mofcom.gov.cn/aarticle/j/200710/20071005153668.html>(검색일: 2007년 12월 10일).
- 賀文萍. 2006a. “構建中非歷史進程的新平台-胡錦濤主席訪問非洲的戰略意義.” 『中國報道』, 第6期.
- \_\_\_\_\_. 2006b. “聚焦中非關係發展.” 『瞭望新聞周刊』, 11月 6日.
- 侯勝利. 2006. “試論中國軟力量的构建.” 『視點』, 第12期.
- 『環球時報』, 2007年 2月 6日.
- 『2006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2007年 9月 14日.





# 23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협력 방안:  
한국의 입장





#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협력 방안: 한국의 입장

신범철 | 국방연구원

- I. 서론
- II. 중국의 부상
- III.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그 파급효과
  - 1. 중국의 대북정책
  - 2. 중국의 대한정책
  - 3. 미래 한중관계에의 정책적 시사점
- IV. 한미일 협력에의 시사점
  - 1. 한미일의 대중인식
  - 2. 한미일 협력 영역
  - 3. 협력 메커니즘의 확대
- V. 맺음말

## I. 서론

중국의 부상은 이미 1990년대부터 회자되어 왔으며,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sup>1)</sup> 그 결과 일부에서는 중국을 언제까지 부상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된 지 오래되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중국은 종전에 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과 시간표대로 행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은 한국 외교, 안보, 경제에 수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해도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동북아 위계질서가 형성될 우려는 없을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철저히 유지한다 해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현 동북아 질서에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이처럼 답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이 글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덧붙인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본고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그 파급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미래 한중관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제4장에서 한미일 협력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중국 연구에 대해서는 김태호 외,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나남, 2008); 이창형 외, 『중국이나 미국이나』 (KIDA Press, 2008) 참조.



## II. 중국의 부상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힘은 균형은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의 유일초강대국 체제로 변해왔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중국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sup>2)</sup> 이미 199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의 등장(rise of China)이 국제정치에 핵심 키워드가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을 G2라고 성급히 부르고 있다.

경제부문에서의 눈부신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은 금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많은 학자들은 20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마저도 제치고 세계 1위의 GDP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2조 4천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이미 세계 1위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전망은 더욱 밝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2050년경 중국의 경제는 일본 경제의 7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카네기재단은 중국이 3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sup>3)</sup> 물론 이러한 양적 성장은 중국에게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미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발전 지역과 후진 지역 간의 격차를 좁혀야 하며, 정부와 인민들간의 관계 악화를 개선해야 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고민에 노출되어 있다.<sup>4)</sup>

중국의 부상과 함께 군사적 역량 강화 역시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군사력 성장 과정을 볼 때, 경제력 발전이 군사력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질적으로도 군사 현대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은 2020년경이면 세계 제2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전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sup>5)</sup>

2) 마이클 하워드(차하순 외 역), 『20세기의 역사』 (2000) 참조.

3) 이창형 외, 앞의 각주 1, 27-28쪽.

4) Fei-Ling Wang, "self-Image and Intentions: National Confidence and Political Insecurity," in Yong Deng and Fei-Ling, Wang (eds.),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Lanham, Maryland: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p.26.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외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외교의 기본방침은 도광양희(稻光養晦)와 조화세계(調和世界)로 대표된다. 특히 도광양희는 2020년까지 중국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미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조화세계는 중국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변국은 물론 여타 국가들과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각 이슈별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중국의 모습은 이미 도광양희의 시대를 넘어선 듯하다. 금년만 해도 천안함 폭침 사건, 일본 중국어선 나포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인 연평도 공격에 대해서도 양비론적인 접근을 하며, 미국 항모의 서해진출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정치적·군사적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중국은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외교적으로도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는 물론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Ⅲ.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그 파급효과

#### 1. 중국의 대북정책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와 같이 혈맹관계이다.<sup>5)</sup> 한국전쟁에서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위해 싸웠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냈다. 현재

5) 이창형 외, 앞의 각주 1. 36쪽.

6) 1994년 6월 북한의 군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북한이 한미 양국으로부터 군사침략을 받으면 절대로 좌시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필요할 때는 재차 한반도에 들어가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동아일보』(1994.10.3.), 이창형, 위의 각주, 142쪽 재인용.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앓는 이와 같다. 뽑아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치료를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형국이다. 따라서 중국은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북한을 치유하려는 듯 하다. 그러기 위해 북한에 대해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천천히 개선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기조는 2001년 장쩌민 당시 중국 주석이 밝힌 16자 방침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전통계승(繼承傳統), 미래지향(面向未來), 선린우호(睦隣友好), 협력강화(加強合作)이다.<sup>7)</sup> 이러한 원칙하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중적이라고 보이는데, 먼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현상유지에 기반을 두고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기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날의 북중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의 갈등을 먼저 보아야 한다. 물론 과거 냉전기에도 북중관계는 악화된 적이 있다. 김일성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1956년 친중세력이라 할 수 있는 연안파를 제거하였고, 1970년대 미중 수교를 비난한 적도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북중간의 갈등은 탈냉전기 이후에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국과의 국교수립은 북중관계 악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92년 한중수교 직후 중국을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이자 배신자”로 부르며 격렬히 비판하였다. 또한 1997년 황장엽씨 망명 당시 북한의 송환요구를 중국이 묵살한 것과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지명한 양빈을 중국이 구속한 사례 등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왔다. 탈냉전기 들어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주의를 본격 도입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북한은 소외감을 느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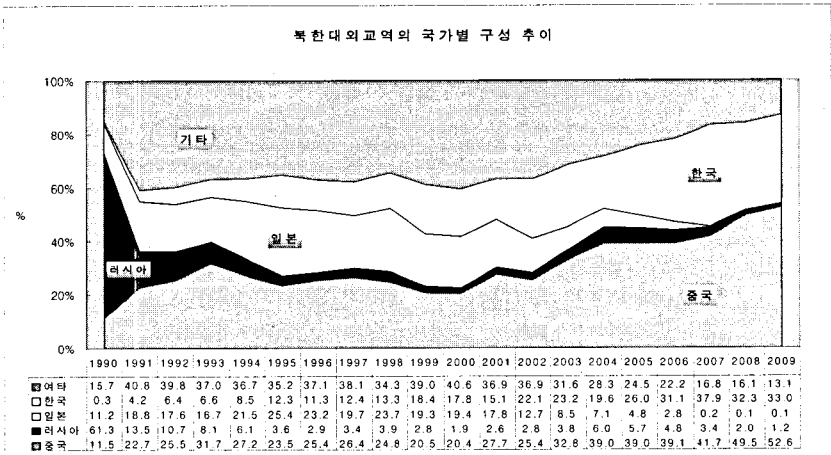
7)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62주년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에게 보낸 축전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계속되며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게 되고, 북한의 유용성을 다시 인식한 듯하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동참하였으나, 중국은 끝까지 북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에는 반대하였다. 오늘날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1718과 1874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점차 활발히 하며, 북한이 급변사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sup>8)</sup> 그 결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북한 총교역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sup>9)</sup>

최근 중국은 동북진흥을 위해 동북3성과 북한을 연계하여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국가차원에서 동북3성 지역의 경제개발 전략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동북진흥계획(2007년 8월)」과 그 하부의 「요녕성 연해경제벨트(2009년 7월)」 및 길림성 「장길도 선도구 계획(2009년 8월)」 등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sup>10)</sup>

8) 북중무역의 급신장과 대중의존도 심화에 대해서는 유승경,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2010.9.29), 22-32쪽 참조.

9) 참고로 2009년 현재 남한과의 교역비중 33%이며, 한, 중이 북한 교역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대중 무역비중 급속증가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발동에 기인하고 있으며, 대 일본 무역의 중국전환에 기인한다. 최근 북한 대외교역의 국가별 구성 추이는 다음과 같다. 김진무 외, 『북중관계 현황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0)에서 재인용.



10) *Id.*

전자의 계획은 주로 압록강 하구의 단동~신의주 연계개발 구상으로, 후자는 동해 출해를 지향한 훈춘~라선, 토문~청진을 잇는 두만강 유역의 연계개발로 구상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는 북한을 예측화시키기보다 단동~신의주 지역과 같이 북한과의 연계개발이 훨씬 효과적이거나, 또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관건인 동해로의 출해권 확보와 같이 북한 측의 협조가 꼭 필수적인 지역에서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핵무기 개발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북한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군사분야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비록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중국이 북한의 군사원조 요청을 거절했다는 견해가 있다.<sup>12)</sup> 즉, 냉전기에는 중국의 안보이익과 친소련화 방지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지원을 지속하였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대북한 군사지원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2003년 이라크전 직후와 2010년 5월 방중 시 김정일의 전투기 지원 요청을 중국측이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전통적 시각에는 다른 견해도 제기된다.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해도 간접적으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즉, 무기체계의 직접 제공은 없을지라도 군 피복류나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은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되는데, 미국의 핵관련 연구소인 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통해 농축우라늄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sup>13)</sup>

## 2. 중국의 대한정책

종전과 달리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다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를 중시하며 남북한 간의 균형외교에 힘을

11) *Id.*

12) *Id.*

13)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 *Taking Stock: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 [http://www.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documents/ISIS\\_DRPK-UEP.pdf](http://www.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documents/ISIS_DRPK-UEP.pdf) 참조.

기울어 왔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변화된 대미관계와 변화된 대한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북중과 한미의 균형을 찾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경제적 교류협력과는 별개로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한중관계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한정책 기조 역시 1995년 장쩌민 전 주석이 밝힌 16자 방침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호혜평등(互惠平等), 상호보완(相互補完), 성심협력(誠心協力), 공동발전(共同發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발전을 위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지속해왔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경제교류 국가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비록 말로는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경제제재 철회 및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문제에 관한 중국의 의견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양시유(楊希雨)의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sup>14)</sup> 먼저 한국전쟁의 본질과 UN군의 성격과 관련하여 UN군은 한반도 내전에 개입한 다국적 연합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UN군의 군사목표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와 회복’이 아닌 ‘한국 일변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UN 현장과 상치된다고 보고 있다.<sup>15)</sup> 또한 UN은 미군부대를 통제하거나 지휘한 적이 없고, 주한미군도 UN의 지휘나 통제를 받은 적이 없기에, UN군 사령부는 미국 지휘 하의 통합사령부일 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안보이익과 연계되므로, 주한미군의 역

14) 2009년 가을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양시유(Yang Xiyu, 楊希雨)는 연구소 발행지인 「국제문제연구」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관련 몇 가지 법률문제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개한 바 있다. 그는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관공실 주임 및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이다.

15) 북한의 침략행위로 인해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UN군사령부가 구성된 것은 강조하지 않고 있다.

할 범위,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주요 참전국으로서 평화체제 수립의 직접 당사국이 되는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어느 일방이 비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4자 형식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 보고 있다.

그밖에도 중국은 EEZ문제, 해상불법조업, 탈북자문제, 역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갈등 요인을 지니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영역의 갈등은 단지 일 내에 한중관계를 직접 해치는 문제로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되, 북한의 입장과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핵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하고, 평화체제 논의에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북한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오로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일 뿐이다.

한편, 군사적 교류의 관점에서 한중은 수교이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공동훈련이나 상호방문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나,<sup>17)</sup> 국방부문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학술적 차원의 교류는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 당국간 교류는 제한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교류 확대 요구에도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폭을 넓히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제부문과 달리 안보부문

16) 이창형, 앞의 각주 1, 155-158쪽.

17)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관계로 격상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 통상, 인적, 문화 교류 강화를 추진하며, 국제무대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1996년부터 중국은 외교관계의 친소에 따라 단순수교, 선린우호, 동반자, 전통적 우호협력, 혈맹의 다섯 단계로 구분해 왔다. 이 중 동반자 관계는 협력 동반자, 건설적 협력동반자, 전면적 협력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당시 정상회담 이전에 한중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으나, 이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급을 올린 것이다. 이창형·배재홍,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안보협력 과제,” 『주간국방논단』 (2008. 6.), 2-3쪽.

에 있어 양국관계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미래 한중관계에의 정책적 시사점

중국은 경제적 성장 이후 더 이상 1990년대의 중국이 아닌 입장에서 대(對) 한반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봉쇄망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중국은 한반도에 있어 영향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안보적 측면에서 현상유지 정책으로 투영되고 있다. 즉,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힘의 균형 파괴를 거부하며, 한반도의 조기 통일보다는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김정일 정권의 지속적인 집권을 묵인하고 있다. 중국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는 금년 9월 이후 김정은이 후계구도를 굳히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 중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도 이러한 입장은 잘 반영되어 있다.<sup>18)</sup> 그 결과 중국의 국력이 증대될수록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이해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향후 한반도 정세가 남북관계 외에도 미중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쉽게 목격된다. 중국은 종전과 달리 서해에서의 한미 공동해상훈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향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한국은 대중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 한때 한국이 중국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중국과 미국사이의 힘의 분포가 현재 미국의 우위에서 균형 또는 중국의 우위로 바뀐다는 가정에 기인한 듯하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이며, 한국의 생존전략이다.

18) 이를 반집근전략 또는 대미방어전략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태호, 앞의 각주 1, 94-101쪽.



중국은 멀리할 수 없는 국가이지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치 커다란 자석과 같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이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강한 자석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장의 크기가 중국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강대국의 영향력 행사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중 친교전략이어야 한다. 비록 한미동맹에 비해 그 중요성은 떨어진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한중관계가 평등, 호혜적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치지도자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양국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조건이 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갈등요인보다는 협력요인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일방주의적 행위를 선호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패권주의를<sup>19)</sup> 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동맹의 범위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동맹중 힘이 약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중국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을 동북아시아나 아시아의 다자협력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한중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국민사이가 좋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월드컵이나 올림픽 기간 동안 양국간 국민감정을 상하는 일이 빈번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이 역사에 대한 인식차로 국민들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 점에서선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한류(韓流)의 확산을 통해, 즉 영화, 드라마, 패션 등 다양한 문화적 진출을 통해 중국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9) 이삼성 교수는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인한 갈등 가능지역으로 대만해협, 남중국해, 오키나와, 한반도 서해상을 지목하고 있다.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2007), 5-32쪽.

다. 굳이 소프트파워나 스마트파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다.

#### IV. 한미일 협력에의 시사점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분산시킴으로써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상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부상이 한미일 협력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한국 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으며 동맹국과 협력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협력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에서 중국의 부정적 행동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3국 중 가장 취약한 안보구도를 지닌 한국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친북적 태도가 더욱 강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 1. 한미일의 대중인식

비록 각국의 위상에 따른 전략적 관심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대중인식은 크게 다를 바 없다. 중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3국의 공통된 입장일 것이다. 이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웃에 위치한 제3국이 부상할 경우 이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견제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유사한 반응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미일 3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도 안보적 관점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장기적으로 협력의 대상이다. 3국 모두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인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미 상당수준의 경제적 협력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으며, 일본의 민주당 정

부 역시 센카쿠 열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친중정책을 전개하려 노력한 바 있다. 또한 3국 모두 중국을 포함한 다자협력기구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한미일 3국은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중국의 기여를 끌어내려 노력해 왔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 핵문제나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서 중국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셋째, 한미일 3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중국 역시 취약한 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원자재(원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외 의존도가 심하고, 소수민족분규로 인한 갈등도 우려되며, 해안과 내륙간 빈부격차가 심하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화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취약점은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며, 한미일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각국이 처한 개별적 이유에서 각기 다른 대중인식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하기보다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군사력 현대화, 특히 중국의 핵무기 능력 강화 및 잠수함 능력 강화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로서 국제질서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이끌어 내는 문제로부터 동북아 질서 문제, 군사문제에 이르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미일의 대중인식 차이는 그간 개최해 온 한미일 3자 대화를 통해 잘 나타난다.<sup>20)</sup>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금년 4월 개최한 한미일 전략대화<sup>21)</sup>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 특히 핵위협과 비대칭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

20)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KIDA-IDA-NIDS (한국국방연구원-미국방연구원-일방위연구소) 간의 3자 대화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안보연구원에서는 IFANS-USIP-IIPS (외교안보연구원-미평화연구소-일국제정책연구소) 간의 3자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 중에서도 핵위협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에 포위되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중국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일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해보면 한미일 3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수 있다는 기대가 섞인 것이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3국의 공감대는 향후 3자간 대중 협력의 전망이 밝음을 의미한다.

## 2. 한미일 협력 영역

중국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가깝게는 북한 핵문제 해결부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나 위안화 환율 문제까지 거의 모든 국제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안보문제로 좁혀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국익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 북한 급변사태, 그리고 비전통위협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먼저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 물론 현재에도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事前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북한은 한미일이 북한의 입장변화 없이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6자회담 복귀나 미북 양자회담을 갖겠다는 의도이다.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알면서도 북한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사실상 북한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공동대응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느슨한 대북 압박 상황에서는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21)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ISI) Pacific Forum은 금년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한미일 전략 대화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 중국의 부상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 향상과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여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의 공통된 목소리는 중국에게 부담이 될 것이며, 먼 훗날이라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실제로 발생한다 해도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며 그 결과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개입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에도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대중국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부정적 역할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비전통위협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역시 재해·재난, 전염병, 테러, 해적 등과 같은 다양한 비전통위협을 겪고 있다. 사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비전통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가 중국이다. 매년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사스 등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바 있고, 변방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테러 가능성이 존재하며, 소말리아나 동남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한미일 3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협력 메커니즘의 확대

대중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후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일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과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sup>22)</sup>과 같은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부활시킬 필요

22) TCOG(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일간의 정책조율을 위해 1999년 만들어 졌다. (1993년 이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무부와 한, 일 대사관의 모임이 원형이라고 한다.) 이후 TCOG은 양국 외교부 차관보급의 수시회의로

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미·일·중과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일 3자 협력의 외연 확대를 통해 중국을 보다 다양한 다자기구에 편입시킬 필요성도 존재한다.

먼저 한미일 3자 협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한일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역사문제에서부터 독도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요인을 무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한미일 협력은 모래위의 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중요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나, 주기적인 독도문제 제기로 인해 3자협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sup>23)</sup> 물론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일본에게 있어 사실상 3자 협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과거 사회당 연립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역사문제 사과, 독도문제 침묵--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3자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일간의 정기적인 정책조율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간헐적으로 한미일 대화체는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과거 TCOG에 미치지 못한다. TCOG의 폐기는 참여국간의 의견차 때문이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으나,<sup>24)</sup>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일 3국이 그 유용성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3국간 협력이 보다 긴밀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례 또는 수시회의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소간의 정책적 이견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의체조차 운용할 수 없다면 진정한 3자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미일 3자간의 정책조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단계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에도 중국은 미국과 전략

발전되었다. 그러나 2003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참여국들간의 의견차가 발생하며 개최되지 않고 사실상 폐기되었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qid=0srIa&q=tcog](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qid=0srIa&q=tcog) 참조.

23) 외교통상부, 『21세기 중장기 외교전략 연구』(2003.2.), 155-157쪽.

24) 웹사이트, 앞의 각주 21 참조.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 문제 발생 이전에는 일본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자협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앞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단계로, 한중일이나 미중일 3자 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중일 3자 협의회는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말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외교정책 담당 국장간의 회동으로 출발할 예정에 있었다. 그러나 막판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일간의 협력이 잘 안된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한 미중일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에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협력체를 구성하여 중국을 국제사회에 보다 많이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을 포함한 보다 큰 다자적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아세안안보포럼(ARF)이나 상그릴라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중국과 다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ARF의 눈부신 성장은 주목할만하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에 있는 기구이다. 환태평양 차원에서 논의기구를 만들고, 서남아시아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V. 맺음말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10여년도 더 된 용어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중국의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모르나,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전략적인 한미일 3자 협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한편, 3자 협력을 통한 국익 실현은 필요하나, 3자 체제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차 협력의

초기단계부터 중국에게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즉, 양안관계나 중국 인권문제, 중국 민주화 문제, 티벳 문제 등과 같이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한 협력은 뒤로 미루고, 대북정책이나 비핵화 등과 같은 국제질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즉, 한미일 3자 대 중국이라는 대결구도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한미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량과 의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지양해야 하며, 중국의 대북정책이 철저하게 국가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중간의 경제협력의 심화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한중관계의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도한 친중(親中) 목소리나 중국 경제론을 피하고 보다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든 이후 우리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부정적 행태를 보기 이전에 지난 수년간 우리는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중 정책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자협력의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24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신종호 | 경기개발연구원

- I. 머리말
- II. 중국-대만관계의 역사적 변천
- III. 중국-대만 교류협력 현황
  - 1. 인적교류 분야
  - 2. 사회·문화교류 분야
  - 3. 경제교류 분야
  - 4. 양안 교류협력의 추진주체 및 법제
- IV. 중국-대만 교류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 1. 특징
  - 2.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 V. 결론

## I. 머리말

- 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는 분단의 배경과 시기, 양측의 정치·경제적 상황,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통일정책 방향, 국제무대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등에서 차이점과 유사한 면이 동시에 존재함.
  -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國共內戰)으로 인해 분단되었지만 각각 자발적으로 체제를 선택했고, 남북한 역시 양측이 각각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함.
  -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에, 남북한은 각기 독립적으로 유엔(UN)에 가입한 정치단위체라는 점에서 구분됨.
  - 중국은 대만문제를 자국의 주권과 영토보존 관련 핵심문제이자 순수한 내정문제로 인식하지만, 대만은 자신들이 처한 대내외적인 수세적인 위치로 인해 양안관계를 해석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함(ex: ‘두 개의 중국(兩個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台)’, ‘두 개의 대등한 정치 실체(兩個對等政治實體)’ 등).
  - 남북한과 중국-대만은 각각 이념적·체제적 대립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 중국-대만 간 정치적 대립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적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의 교류협력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
  - 중국과 대만은 잦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 중국과 대만 양측의 공식적인 정부 간 접촉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대화 채널이 항상 유지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장기간의 갈등과 경색국면에 처해 있는 남북한관계를 볼 때, 비록 분단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꾸준하게 교류협력의 경험뿐

만 아니라 갈등의 경험을 축적해가고 있는 중국-대만관계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II. 중국-대만관계의 역사적 변천)

- 1949년 이후 중국-대만관계는 크게 ① 정치·군사적 대치 시기(1949~1978), ② 평화적 대치 시기(1979~1987), ③ 제한적·점진적 개방 시기(1988~2008.2), ④ 경제통합 촉진 시기(2008년 3월 이후)로 구분 가능함.
- 정치·군사적 대치 시기(1949~1978): 중국공산당은 무력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 대만 당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함.
  - 중국공산당은 대만해방을 미완성된 전국 해방전쟁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시도함.
  - 그러나 한국전쟁(1950) 및 미국-대만 공동방위조약 체결(1954)을 거치면서 중국의 무력을 통한 대만 해방정책은 불가능해짐.
  -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UN 복귀 및 대만 축출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추진 천명으로 인해 양안관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 평화적 대치 시기(1979~1987):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추구 및 미중수교(1979)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 방식이 기존의 무력적 해결방식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추진으로 수정됨.
  - 1972년 '상하이코뮤니케', 1978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1979년 1월 1일 역사적인 미중수교 등 국제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짐.
  -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의 천명과 함께 대만과의 평화통일 방침이 확정

1)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대만 관계를 일반적으로 '양안관계(兩岸關係)'로 지칭. 양안관계의 역사는 19세기말 淸日전쟁(1894.6~1895.4)과 1940년대 國共내전,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명의의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 공포, 대만과의 ‘삼통사류’(三通四流)<sup>2)</sup> 제의
  - 1983년 중국 新헌법에 “국가가 필요할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1국가 2체제(一國兩制)<sup>3)</sup> 방식의 중국통일 방침을 제의
  -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이 在美 중국계 학자(楊力宇) 접견시 소위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
  - 대만은 중국 정부의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공세에 대해 평화를 위장한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소위 ‘三不정책(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으로 대응함은 물론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중국 통일의 지도원칙으로 제시
  - 1985년 7월 대만정부는 ‘대륙 교역의 3개 원칙’(직접통상 금지, 직접협상 금지, 간접무역 불간섭)을 발표
  - 대만은 1987년 7월 15일 계엄령을 해제, 1987년 11월 2일부터 현역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륙에 친척을 둔 대만인의 대륙 방문을 허용
- 제한적·점진적 개방 시기(1988~2008.2): 대만의 ‘新대륙 정책’ 채택(1988) 및 ‘반공대륙(反攻大陸) 정책’ 포기, 반관반민 성격의 해기회와 해협회의 설립 등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
- 대만은 1988년 7월 ‘新대륙 정책’ 채택: 對중국 정책의 최종 목표는 중국통일 건설이지만, 現 단계의 목표는 대륙의 민심을 쟁취하는 것으로 설정
  - 대만은 1991년 5월, 헌법에 규정된 「비상시기(動員勦亂) 임시조항」 철폐: 중국공산당을 반란(叛亂)단체로 규정했던 기존의 정책을 전환하고

2) ‘삼통’(三通)이란 중국과 대만과의 직접 교역을 의미하는 통상(通商), 우편물 교환을 의미하는 통우(通郵), 항공기와 선박의 직항을 의미하는 통항(通航)을 지칭. ‘사류’(四流)는 경제 교류·문화 교류·과학기술 교류·체육 교류를 지칭.

3) 일국양제는 중국의 대만통일원칙과 홍콩통치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일국양제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체제가 공존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만의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하되,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함.

- ‘반공대륙(反攻大陸)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무력적 해결방식을 통한 본토 탈환에서 평화적 해결방식을 통한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
- 대만과 중국은 각각 반관반민 성격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1991.2 설립)와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1991.12 설립)를 통해 교류협력의 제도화 추진 및 각종 채널을 통한 정치적 관계 개선 시도
  - 1991년 3월 대만은 對중국 통일정책의 최고 지침으로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고 3단계의 통일 추진 과정을 제시: ① 교류와 호혜 단계, ②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 단계, ③ 통일협상 단계
  - 대만 총통 선거(1996.3)를 앞두고 중국은 대만 독립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근해에서 세 차례(1995. 7, 1995.8, 1996. 3)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행
  - 1995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포기를 천명
  -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미국 방문(1996.6.7~12) 강행과 1999년 7월 리 총통의 ‘양국론’(兩國論) 발언으로 인해 양안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진입
  - 2000년 선출된 민진당(民主進步黨) 천수이벤(陳水扁) 후보는 집권 초기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했으나, 2002년 8월 3일 천 총통이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 발표 이후 양안관계는 다시 경색
  - 대만의 집요한 독립 추구 움직임에 대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정부는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시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저지한다는 내용의 「반국가분열법」(反國家分裂法)을 제정(2005.3.14)
- 경제통합 촉진 시기(2008년 3월 이후): 마잉주(馬英九) 총통시대의 개막과 함께 양안관계는 교류와 협력 우선 및 평화와 안정 분위기로 급선회
- 경제 부흥과 함께 양안관계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당 마잉주 총통은 집권 이후 침체된 대만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륙과의 경제 교류 확대 및 관계 개선을 모색
  - 마잉주 정부는 중국과 통일도, 대만의 독립도, 양안 간 무력충돌도 하

지 않겠다는 ‘三不정책’ 아래, 중국인의 직항과 관광 및 환전을 허용하는 ‘신삼통’(新三通) 실현이라는 경제 우선 정책을 추진

- 중국 역시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대만 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편입 내지는 양안 단일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만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의지를 표명
- 2008년 이후 총7차례의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 대화 재개와 경제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노력

<표 1> 2008년 이후 양안 간 고위급 회담 추진 경과

시기		주요 협의내용
제1차	20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안 항공 직항(전세기) 개설(주말 36편)</li> <li>○ 중국인의 대만 단체관광 조건부 허용</li> </ul>
제2차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삼통’(大三通)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 및 항공 직항편 개설</li> <li>- 식품안전관련 상호 협의시스템 구축</li> <li>- 우편업무 협력 강화</li> </ul> </li> </ul>
제3차	20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직항편 및 정기 운항편 확대</li> <li>○ 공동 범죄퇴치 및 사법 공조</li> <li>○ 금융 분야의 협력 강화</li> </ul>
제4차	20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품 검역 협력</li> <li>○ 표준검사·인증 협력</li> <li>○ 어선 선원 노무 협력</li> </ul>
제5차	20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합의</li> </ul>
제6차	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위생 협력</li> <li>○ 여행 자유화 문제 협의</li> <li>○ 기체결된 합의의 효력에 대한 분석 시스템 마련 논의</li> </ul>
제7차	2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 안전 협력협정 서명</li> <li>○ 5대 신홍산업(LED 조명, TFT-LCD, 무선(無線)도시, 저온물류, 전기자동차) 분야 상호협력 강화</li> <li>○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합의 및 공동성명 발표</li> </ul>



### Ⅲ. 중국-대만 교류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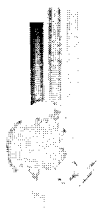
#### 1. 인적교류 분야

- 중국과 대만의 인적 교류는 1987년 10월 대만에 거주하는 대륙 출신자들의 대륙 친척 방문 허용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

<표 2> 중국과 대만의 역대 인원 왕래 통계

년도	대만인의 대륙방문자수	증가율(%)	대륙주민의 대만방문자수	증가율(%)
1987	46,679	-	-	-
1988	446,000	855.46	-	-
1989	551,800	23.72	-	-
1990	890,500	61.38	8,545	-
1991	946,632	6.30	9,005	5.38
1992	1,317,770	39.21	10,904	21.09
1993	1,526,969	15.88	14,615	34.03
1994	1,390,215	-8.96	17,583	20.31
1995	1,532,309	10.22	42,180	139.89
1996	1,733,897	13.16	65,205	54.59
1997	2,117,576	22.13	56,570	-13.24
1998	2,174,602	2.69	78,423	38.63
1999	2,584,648	18.86	103,977	32.58
2000	3,108,643	20.27	102,933	-1.00
2001	3,440,306	10.67	122,198	18.72
2002	3,660,565	6.40	138,981	13.73
2003	2,730,891	-25.40	124,616	-10.34
2004	3,685,250	34.95	144,526	15.98
2005	4,109,188	11.50	159,938	10.66
2006	4,413,238	7.40	207,650	29.84
2007	4,627,881	4.86	229,877	10.70
2008	4,367,594	-5.60	278,712	21.20
2009	4,484,100	2.66	956,121	243.05
2010	5,140,600	14.64	1,580,099	65.26

자료: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 중국 정부 역시 '대만 동포의 중국 방문에 관한 통지'(1987) 및 '중국인의 대만지역 왕래 관리 규정'(1992) 등을 발표
- 중국 정부는 1988년 11월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문병·문상 목적의 대만 방문을 허용, 1990년 8월에는 공산당원을 제외한 중국인의 대만 방문을 허용
- 2000년대 이후 양안 간 인적교류의 범위 확대와 수적 증대
  - 2002년 2월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 기업인의 명절 귀향을 위한 편의 제공
  - 대만은 중국 과학기술전문가의 대만 체류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복수 여행허가증도 발급
- 양안관계 개선과 함께 지난 2008년 7월 본토인의 전면적인 여행자유화가 단행
  - 여행자유화 첫 해(2009년) 동안 대만을 다녀간 중국관광객은 60만여 명
  - 2010년 한 해 동안 여행을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1,188,987명(전년대비 97.8% 급증),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약5,140,000명(전년대비 14.6%증가) (자료: 대만행정원대륙위원회)
- 2011년부터 중국인이 개인자격으로 자유롭게 대만을 방문할 수 있고, 중국 역시 2개 도시를 자유관광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으로써 개방의 폭 확대 전망

## 2. 사회·문화교류 분야

- 학술교류: 1988년 7월 대만정부의 '現 단계 대륙정책안'을 통해 양안의 사회·문화 교류 지침을 마련하면서 학술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 양안의 학술교류 확대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우려한 대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잠시 정체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안의 학술교류는 양적인 증가는 물론 범위와 내용에서도 에너지와 농업 등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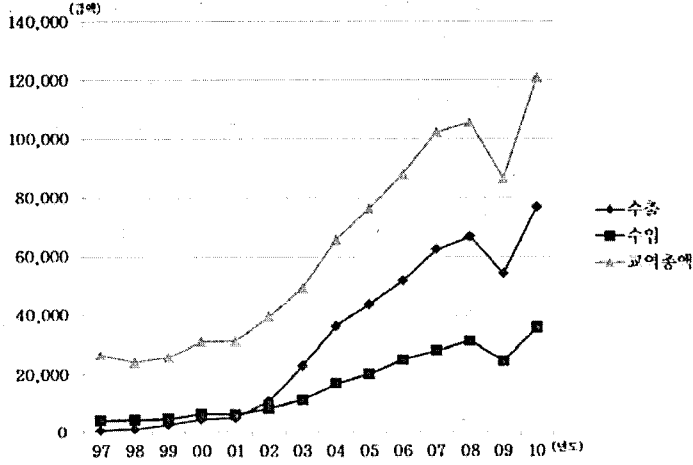
- 언론교류: 1980년대까지는 홍콩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중국의 평화통일 기조로의 전환 및 대만의 계엄해제 등으로 인해 양안 간 언론교류가 본격화
  - 교류 초기 기자들이 친척방문 형식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취재하는 단계를 거쳐 공식적인 취재 방문 및 언론사 간 협력 지사의 상호 설치 추진단계까지 발전
  - 비록 양안 간 상이한 정치·사회 체제 및 언론의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제약이 존재하지만, 최근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의 해빙 분위기 속에서 방송 사업의 투자와 합자, 방송인들의 교류 등으로 확대
- 문화·체육 교류: 정치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면 양안 주민의 상호이해 증진과 이질감 해소라는 평화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교류 분야
  - 1988년 중국내 예술작품의 유입 허용을 시작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대륙의 풍물이 소개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영화와 드라마의 공동 제작까지 확대 추진 중
  - 중국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만과의 문화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

### 3. 경제교류 분야

- 양안 경제교류는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 초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87년 대만당국의 계엄령 해제 및 대만인의 중국방문 허용 이후 중국의 대만 기업 우대정책이 실시되면서 크게 확대
- 1990년대 중반이후 양안 간 정치적 긴장 및 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교역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교류 심화·확대
  -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총액 및 대만의 對중국 투자가 급증
- 2008년 마잉주 정권의 등장 및 2010년 6월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경제교류 단계에 진입

[그림 1] 대만의 對중국 교역규모

(단위: 백만달러)



자료: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표 3> 대만의 對중국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년도	대외투자 총액(A)	대중국 투자 총액(B)	대중국 투자 비중 (B/A*100)
1997	4,508	1,614	35.8
1998	4,815	1,519	31.5
1999	4,522	1,253	27.7
2000	7,684	2,607	33.9
2001	7,176	2,784	38.8
2002	10,093	6,723	66.6
2003	11,667	7,699	66.0
2004	10,323	6,941	67.2
2005	8,454	6,007	71.1
2006	11,958	7,642	63.9
2007	16,441	9,971	60.6
2008	15,158	10,691	70.5
2009	10,148	7,143	70.4
2010	17,441	14,618	83.8

자료: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 이와 같은 양안 간 경제교류 확대·심화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 투자를 허용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였고, 대만은 대중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함.
  - 중국은 해외자본 유입 과정에서 외자도입, 화교 투자 및 대만기업을 우대함.
  - 대만은 2001년에 小三通<sup>4)</sup>을 허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대만 기업의 대중 직접 투자를 2002년 8월부터 허용하기 시작함.<sup>5)</sup>
- 특히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년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대만의 경제적 실익 추구와 통일을 염두에 둔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양측의 전략적 고려의 결과물임.
  -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806개 품목을 2년 내,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한 후, 최종적으로 상호 무관세(단계적 관세 감면 포함)를 시행. 중국은 10가지 539개 품목을 개방하고, 대만은 4개 종류 267개 품목을 개방(대만의 취약 산업, 농산품 개방 및 중국 인력 이동에 대한 부분을 협정에서 제외)
  - 2010년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년 대비 10.82% 증가(1986년 이래 24년 만에 최고치)
- 중국과 대만의 접경지역 특구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함.
  - 중국 푸젠성(福建省)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 발전 전략 수립(2009년)
  - 대만은 「리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 제정(2000년 4월)을 통해 낙후된 진먼(金門島), 마주(馬祖島)의 개발 지원

#### 4. 양안 교류협력의 추진주체 및 법제

- 중국과 대만은 교류협력이 확대과정에서 관련 업무 처리 및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강화함.

4) 대만의 진먼(金門島), 마주(馬祖島), 펑후(澎湖列島)와 대륙 간 삼통의 허용을 지칭

5) 대만은 이전에는 홍콩, 마카오, 버지니아 군도 등 제3국을 경유한 간접 투자만 허용

- 중국: 당 중앙위원회 對대만 공작 영도소조(領導小組),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 대만: 총통부 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 행정원 대륙위원회
- 중국과 대만은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 분야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당국 간 공식적인 접촉은 전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관반민 성격의 해기회와 해협회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
- 대만이 1990년 11월 행정원 대륙위원회 산하에 해기회를 설립
  - 중국은 1991년 12월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산하에 해협회 설립
  - 2010년 ECFA 체결 역시 해기회와 해협회 간 협의를 통해 체결
- 중국과 대만의 당국자 간 공식적인 접촉 부재로 인해 공식적인 협상을 통한 구속력 있는 단일한 양안관계법이나 협정체결은 전무함.
-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23개 성(省)의 하나로 인식하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 상호대등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
  - 상대방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승인함으로써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 결국 반관반민의 해협회와 해기회가 정부당국을 대리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양측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

<표 4> 중국과 대만 간 합의서 체결 현황

일 시	합의서 명칭 및 내용
1990. 9.	● 진먼협약(金門協議)
1993. 4.	● 양안 공증서 사용 및 조사증명에 관한 협의(兩岸公證書使用查證協議) ● 양안 등기우편 조사·보상 사무 협의(兩岸掛號函件查詢補償事宜協議) ● 양회의 연계 및 회담의 제도화 관련 협의(兩會聯繫與會談制度協議) ● 왕꾸회담 공동 협의(辜汪會談共同協議)

일 시	합의서 명칭 및 내용
1994.11.	• 우편으로 부칠 수 있는 공증서 복사본 종류 확대(擴大寄送公證書副本種類)
1997. 5.	• 대만·홍콩 해상운송 상담 요록(台港海運商談紀要)
2008. 6.	• 양안 전세기 회담 기요(海峽兩岸包機會談紀要) • 양안 대륙주민의 대만여행에 관한 협의(海峽兩岸關於大陸居民赴台灣旅遊協議)
2008.11.	• 양안 항공운수 협의(海峽兩岸空運協議) • 양안 해상운수 협의(海峽兩岸海運協議) • 양안 우편 협의(海峽兩岸郵政協議) • 양안 식품안전 협의(海峽兩岸食品安全協議)
2009. 4.	• 양안 공동범죄소탕 및 사법공조 협의(海峽兩岸共同打擊犯罪及司法互助協議) • 양안 항공운수 보충협의(海峽兩岸空運補充協議) • 양안 금융협력 협의(海峽兩岸金融合作協議)
2009.12.	• 양안 농산품 검역 검사 협력 협의(海峽兩岸農產品檢疫檢驗合作協議) • 양안 표준 계량 검사 협력 협의(海峽兩岸標準計量檢驗認證合作協議) • 양안 어선 선원 노무 협력 협의(海峽兩岸漁船船員勞務合作協議)
2010. 6.	•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협의(海峽兩岸經濟合作架构協議) • 양안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 협의(海峽兩岸智慧財產權保護合作協議)
2010.12	• 양안 의약·위생 협력 협의(海峽兩岸醫藥衛生合作協議)
2011.10	• 양안 원자력안전 협력 협의(海峽兩岸核電安全合作協議)

주: 1990년의 '진번협의'는 해협회 및 해기회가 설립되기 이전으로서 중국과 대만의 직십자회가 협상의 주체로 나섰으나, 이후부터는 중국과 대만간의 거의 모든 협상에 해협회와 해기회가 협상 주체로 나섰음.

자료: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http://www.gwytb.gov.cn/index.asp>); 해협교류기금회(<http://www.sef.org.tw>); 행정원 대륙위원회(<http://www.mac.gov.tw>)

## IV. 중국-대만 교류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 1. 특징

- 중국과 대만은 엄연히 제도 및 체제적 상이성이 존재하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 역시 비대칭적인 불균형 구조임.

- 최근 중국의 강대국화 및 이로 인한 양안 간 국력 차이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은 정치교류와 경제교류 분리 정책을 통해 강한 자신감을 표출함.
  - 대만은 정치교류의 한계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류협력의 핵심으로 인식함.
- 교류협력의 목적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이념적 효과가 공존함.
    - 중국: 대만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 의도 표출
    - 대만: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해결 및 경제 재도약(光富臺灣)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교류 강화, 그러나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불신과 국제적인 고립 등으로 인해 안보유지 강조
- 지속적인 정치·군사적 갈등 구조에서도 경제·사회교류는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됨.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양측 수뇌들의 공식적인 접촉 없이도 전면적인 삼통 실시 및 ECFA 체결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가능
    -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경제협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인적 교류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측이 자신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교류 형식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배려함.
    - 대만은 인적 교류 초기 자국민의 대륙 방문을 허용하면서도 중국인의 대만 방문을 금지. 이에 대해 중국은 교류의 대등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음.
- 반관반민 기구인 해협회와 해기회가 교류협력을 주도함.
    - 해기회와 해협회는 양안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상징적인 기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양안 업무에 관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양보와 포용의 자세(先易後難, 求同存異) 및 주민들의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태도 견지



- ‘중합국력’에 자신감을 가진 중국이 교류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중국과 대만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및 ‘중합국력’의 격차가 확대될수록 더욱 증대될 것임.
  - 1971년 10월 중국의 유엔 복귀, 1972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1978년 12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천명, 1979년 미중수교 등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문제의 해결 방식을 기존의 무력적 해결방식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환
  - 1979년 1월 ‘3통4류’ 제의, 1981년 9월 ‘평화통일 9개 방침’ 발표, 1982년 12월 ‘일국양제’ 통일방안 제의,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 이에 대해 대만은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중국의 ‘호의’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존재. 즉, 대만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과 흡수 통합을 우려하여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은 대만이 양안 간 교류협력의 속도와 범위를 주도
  
- 양안 간 체결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을 이행함.
  - 중국-대만 간 합의서는 비록 당국자 간 접촉이 아닌 반관반민 기구에 의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모든 합의서는 체결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행
  - 중국 지도부의 교체 혹은 대만의 정권 교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
  
- 경제교류에 편중된 교류협력의 형태를 보임.
  - ECFA 체결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중국-대만이 상호 갈등 국면에서 결국 대화·협력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모멘텀은 바로 경제적 요인임.
  
- 중장기적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함.
  - 양안 간 경제교류 증대가 단기간에 정치통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 당국이 중국과의 공식적인 정치 접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를 활

성화하여 양안 간 정치 교류를 성사시킨다는 장기적 전략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현재의 교류협력은 장기적인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

## 2.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정치·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민간 교류는 지속 필요
  - 정치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교류협력이 쉽게 단절되지 않고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된다면, 이는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교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치적 대화를 가능케 함
  
- ‘종합국력’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일방이 일정정도의 손해 감소
  - ‘종합국력’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한국이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교류협력 접근 필요
  
- 상대적으로 약한 일방의 제한적인 교류협력 운용 가능성 증대
  - 그동안 남한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지원정책을 이끌어 왔으나, 교류협력의 속도 조절은 오히려 북한이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구조 창출
  - 남북한 간에는 그동안의 교류협력이 남한에게 가져다주는 이익보다는 북한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구조.
  - 초기의 남북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남한 측의 대범한 양보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구조 모색 필요
  
-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 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민간 주도형의 경우 정치적인 민감사안에 좀 덜 영향을 받을 것.

- 향후 남북관계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의 교류협력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모색 필요. 남북경협 사업의 경우 한국의 대북 지원이 남북 교역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민간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 중간지대의 설정 및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교류협력
  - 중국과 대만이 홍콩, 마카오를 완충지대로 삼아 정치적 위험을 완화
  - 현재 남북한 간에 개설된 개성공단을 양안간 홍콩과 같은 중간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하고 활용할 필요
  - 북·중 간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한국과 중국의 자본협력을 통한 북한진출 방안을 모색 필요
- 상호간 인식 차이 해소 및 신뢰 구축 필요
  -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는 상대국 주민의 인식 및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필요
  - 남북 교류협력 확대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 필요
  -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신뢰 회복과 함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반·군부 지도자·지휘부 간 핫라인(hot line) 구축,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개발 금지에 대한 서약 이행, 서로를 표적으로 하는 군사훈련 수정, 군사훈련 사전 공지 등을 통한 투명성 회복 등이 필요
- 지방정부 및 접경지역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주도
  - 중국과 대만 간 ‘해협서안경제구’의 경험을 참고하여 남북한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배분 및 분담을 통해 지방외교의 차

원에서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 권한 및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대폭적인 권한 하방(下放)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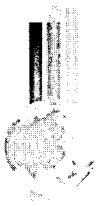
- 교류협력 관련 법률 체계 정비
  -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해서는 쌍방이 합의했던 기본 합의서 준수가 가장 중요
  - 과거에 체결했던 남북한 간 합의서에 대한 준수는 물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법령 제정 고려.
  - ex: 「남북교류협력기본법」(가칭)을 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남북교류협력기본법」으로 개칭, 각 분야별(경제 교류,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로 단행 법규의 형태로 입법 추진 등
- 한국의 '종합국력'의 증대
  - 남한의 종합국력을 증강하는 것이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요소

##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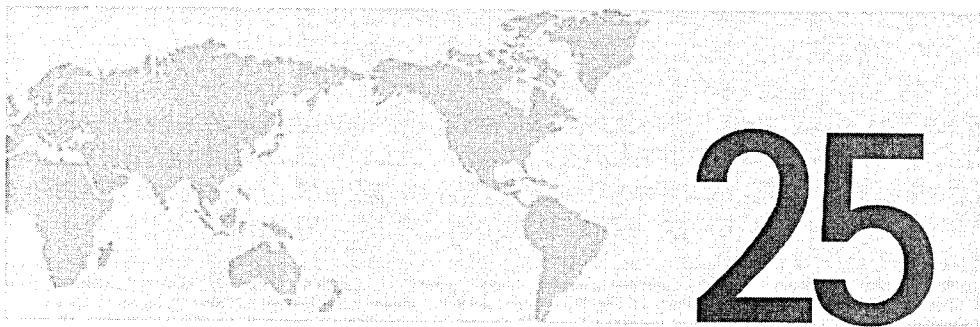
- 2008년 이전 10년간의 남북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교류 역시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의 정치관계의 후퇴에 영향을 받아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
- 양안관계는 2008년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중국과의 정치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보폭을 더욱 넓히다가 최근에는 전면적인 삼통의 실현 및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통해

## 실질적으로 경제적 통합 및 제도화의 단계에 진입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서 ‘모멘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경제·사회분야와 정치·군사 분야를 분리하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사회 영역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특히 중국-대만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인 소위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
- 아래에 제시되는 정책 건의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 장기 경색 국면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 있음.
  - 반관반민의 교류협력 협의기구 운영: 남북한 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반관반민 형태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정부 간 교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교류협력과정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실현
  - 남북 최고위급 회담 및 이의 정례화: 현재와 같은 고도의 남북경색 국면에서는 실무 차원의 대화나 협상보다는 최고위급 회담(정상회담 및 특사교환 포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회담의 정례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남북한 ‘통일경제특구’ 설치: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접경지역에 점진적으로 신설·확대 필요. 이를 위해 정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의 참여 확대 도모 필요
  -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향후 전개될 동북아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에너지, 수송 등 인프라 개발을 진행할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이점 이용 필요
  -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한 남북의 동질성 회복 노력 필요.



- 한·중 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 중국과 협력을 통한 對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모색함으로써 향후 한반도위기 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설득자 내지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남북한 직접교류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ex: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한중 자본협력을 통한 북한진출 모색 등)
- 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정비: 향후 남북한 화해 국면을 대비한 입법 조치 필요.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거나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이명박 시기 한미관계와 전망







# 이명박 시기 한미관계와 전망

김흥규 | 성신여자대학교

## I. 개요

## II. 한미간 주요안보 협력

1.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2. 한미 2015 전략동맹 계획
3. 전략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 III. 한국의 전략

## I. 개요

많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한미관계는 현재 최상의 단계라고 지적한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11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에 국빈 방문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 국빈 초청은 멕시코, 인도, 중국, 독일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이 다섯 번째가 된다. 미국은 그 만큼 한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하고 있으며, 2008년 합의를 본 이후 타결하지 못했던 한미 FTA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격 타결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예상보다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는 기대 이상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국내적으로도 이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대북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전례 없이 공고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CSIS) 아시아담당 국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 관계는 역사상 ‘최고점(highest point)’에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실장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아시아국가 정상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서 “아울러 이 대통령을 ‘가장 믿을만한 파트너(most reliable prtner)’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 양국의 동맹사를 살펴봤을 때 지금이 고점(high point)”이라면서 “두 정상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는데다 기후변화, 국제개발 등 한반도를 벗어난 사안에서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외교협회(CFR)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도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2008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한미관계는 다음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우선, 200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21세기의 전략동맹을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둘째, 한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 제 42차 한미안보협의 회의에서 전략동맹 2015계획에 합의하였다. 북핵문제로 인하여 한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정책에 대해 합의한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신설하였다. 세 번째 한미는 전략권 반환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

하였다. 네 번째, 한미FTA 문제를 타결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향후에도 이와 같이 최상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국의 일부전문가들은 미국이 추후 4500억불에 달하는 국방비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에 더 강력한 군사비 분담 압력을 가할 것이고 한미간 일정한 알력이 예상된다. 미국의 불확실한 경제전망 역시 한국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현재의 한미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후 한미 관계는 한국의 국내정치, 북한 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미중관계 및 북중 관계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II. 한미간 주요안보 협력

### 1.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2008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부시대통령) 정상은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MB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프로그램 및 미사일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6월 한미 제2차 정상회의에서 한미양국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하였으며, 이 비전의 핵심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축”이었다. 이는 동맹을 세계적 차원까지 확대하여 범 세계적 문제에 공동대처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안보분야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지속적인 공약을 명문화하여 한국에 대한 방위보장을 강화하였다.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대북 핵억지를 위한 전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핵우산 개념은 본래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명문화하였다. 확장억지의 개념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도입하였다. 또 하나 확립한 주요

한 원칙은 동맹의 재조정을 통해 한반도에서는 한국주도-미국 지원형의 안보 협력관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2009년 11월 오마바의 방한중 한미 양국은 2010년부터 외교국방장관의 합동회의(2+2)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북한의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미는 이 계획을 실행하였다.

## 2. 한미 2015 전략동맹 계획

2010년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략동맹 2015, 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이라는 세 문서에 조인하였다. 전략동맹 2015는 전작권 전환과 미군의 재배치를 동시에 추진하며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미국이 보완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작전지침은 비대칭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변화를 반영하여 한미 양국의 통합된 단일 전략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현 작계 5027을 대체할 신작계 5015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며, 2015년 전작권 전환이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한미는 또한 확장 억제정책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발전에 따라 미국의 핵억제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지닌다.

## 3.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2010년 3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면서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결국 한국내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한미는 전작권 이양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과 2010년 북한이 보여준 호전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전작권 이양은 단순히 한미간의 사안이 아닌 냉전종식이라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정책인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으로서는 전작권을 한국에게 이양시키는 것은 한반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군대를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이미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의 적용은 주한미군이 해외로 차출될 경우, 일단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개입이 더더질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와 같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작계 5027에 따르면 미국은 90일안에 5개항모 전단을 포함해 160척의 함정, 2500대의 항공기, 육군과 해병대 65만명을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는 이러한 계획이 적시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안겨주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강화는 한국측이 미국을 설득해 전작권 반환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동 기간 한국은 자체방위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Ⅲ. 한국의 전략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일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한국의 안보위협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기제도 한미동맹을 역할을 대체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전작권은 결국 한국이 넘겨받게 될 것이다. 추후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북핵 위협은 지속된다면, 한국은 국내적으로 핵무장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고, 최소한 재래식 전력의 급속한 확충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불신을 고려할 때, 작은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중국요인일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 경제에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것을 잘 인식시켜준다. 한국 외교의 악몽은 미중간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한국외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21세기 시대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와 같은 열강들 간 제로섬 게임의 시대는 아니다. 시대정신은 “협력과 발전”에 있다. 한국은 미중 모두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려 하고 있다.

미래의 한·미·중 관계는 다음과 같은 안보구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표 1>는 특정 안보구도 하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의 옵션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의 대외인식은 미·중간의 전

략적 갈등과 경쟁의 구도라는 전제가 근거에 깔려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현실은 미·중 협의구도 속에 북핵문제 및 북한문제가 논의되고 타결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이해와 중장기적 이해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할 때 우리가 취할 대중국 전략의 옵션은 크게 연미통중(聯美通中), 연미화중(聯美和中), 연미연중(聯美聯中)의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외교는 미중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의 채택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데 커다란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표 1> 특정 미중관계를 전제한 주요 변수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구성<sup>6)</sup>

변수	미중 관계	주기적 협력 갈등의 복합구도	미중 제후시대	Pax Chimerica	신냉전시대
국제체제내 중국의 부상		聯美和中 전략 일변도 외교 지양	聯美和中에서 聯美聯中 전략 으로 진화	聯美聯中 전략	한미동맹 기반위 역내 우호증진 노 력. 聯美通中 전 략모색
중국내 정치변혁과 공세적 대외행태		한미동맹 공고화 및 중국과 소통/ 협력 강화	한미동맹의 유 지 및 중국과 소통/협력 강화	한중 전략대화 강 화 및 미국과 협 력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주변국과 대 중견제 협력
북한체제 위기		한미동맹 유지 및 대중 협력외교 강 화	미국 및 중국과 양자협력 기반 으로 삼자협력 추진. 대북 해 결책 모색	미중과 전략대화 심화로 소외방지. 한미중 삼자협력 의 실현	한미동맹 공고화 및 대중/대러외 교 강화

우리의 복합적인 이해증진이라는 전제아래,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가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도, 미국과는 연대하고 중국과는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과 대립은 피하는 이른바 “연미통중(聯美通中)” 전략<sup>7)</sup>이

6) 이 도표는 그간 필자가 발표한 글들에서 수정을 거쳐 보완한 것이다. 그 출처는 김홍규, “천안함 사태와 한·중 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0. 09. 1).

7) 이는 필자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방향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김홍규, “한·중 관계 평가와 신정부의 대중정책: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2. 27).

필요하다. 이는 적어도 우리가 미중갈등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옵션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문제를 놓고 미중에 대한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에게 더 큰 외교적 도전은 중국으로부터 올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헤징적(hedging) 정책요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중국이 공세적 외교로 전환하거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될 때, 미국과의 기존 연대는 더 강화될 것이다.

미중이 상호 안정적인 협력체제의 구축보다는 주기적인 갈등과 협력의 복합관계 구조에 처해 있을 때,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일변도 외교보다는 쌍방 네트워크 외교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일변도 외교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강대국 외교의 장으로 더욱 전락하고, 통일문제도 역설적으로 더 멀어질 개연성이 커 보인다. 즉, 이 시기에는 한미동맹 강화 외교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 외교는 더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도 커지는 패러독스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과 주요 사안에 있어 대립보다는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 한국이 추구할 전략이다. 이는 미·중이 상호 제약을 받아 갈등보다는 협의 및 협력적인 관계를 위주로 대외정책을 운용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과 연대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 속에는 중국에 대한 협력과 헤징의 요소가 다 존재하지만, 헤징보다는 협력을 전면에서 내세운 관계이며, 상호 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화합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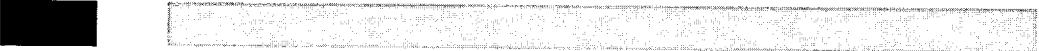
미중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외교가 추구해야 할 바는 미·중과 모두 연대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미·중 관계의 대한 산술적 평균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슈영역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미중관계를 비영합(non-zero sum)적 관계로 인식전환을 하고 적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향후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북한문제와 통일국면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도 이 전략의 추진은 필수적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와 관련한 대전략(grand strategy)적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보이지만, 연미연중의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와 관련

한 대(大) 전략적 결단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을 단지 중립화나 무력화의 대상으로만 취급할 경우, 그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은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중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각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다차원적인 협력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는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은 여전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를 중국이나 다른 다자기구가 안정화하거나 해소해 줄 역량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금 강조할 점은 우리의 대외정책의 방향이 역내 모든 국가와 모든 방면에서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한중관계는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변화 및 핵심주요 정치경제·안보 상황이 결합된 복합국면에 의해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한국의 외교는 이러한 복합국면을 잘 해석하고 지혜롭게(prudent)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대중정책의 선택은 연미통중(聯美通中), 연미화중(聯美和中), 연미연중(聯美聯中)의 전략 선상에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 26

##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



#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이정남 | 고려대학교

## I. 서론

## II. 개혁·개방 30년과 정치개혁 평가

1. 정치개혁의 특징
2. 정치개혁의 성격과 성과

## III. 정치개혁 구상 : 정치개혁의 방향과 돌파구

1. 정치개혁 방향 :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
2. 정치개혁의 돌파구 : 당내 민주화

## IV. 정치개혁의 요인과 전망

1. 점진적 정치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 점진적 정치개혁과 변화에 대한 전망

## V.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 I. 서론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중국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 성장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각종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빠른 속도로 증대하고 있는 바, 2005년 8만 7천 건, 2006년 연간 9만 건에 이르는 대중시위가 발생하였다(肖文濤 2009, 1-2, 10).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역시 서서히 강화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303인의 지식인들이 “08헌장”(零八憲章)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요구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역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한 정치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05년 10월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민주정치건설백서》(中國的民主政治建設白皮書)나 최고 지도자의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롯한 모든 체제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이며, 인류역사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로 간주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계급적 시각을 탈피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中國的主政治建設白皮書》 2005; 《新華網》 2006; 《中國新聞網》 2006; 《新華網》 2007; 《人民網》 2007). 또한 공산당대회의 각종 연설에서도 민주주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10월에 개최된 17차 당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胡錦濤)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무려 60여 차례나 언급하였고, 16차 당대회의 주요 노선인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 건설을 통해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낸다”는 민주화 방식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도 다시 언급하였다.

정치학자들 역시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 및 방식에 대한 열띤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과 세계>(China and the World)라는 인터넷 잡지와 “선거와 거버넌스”(選舉與治理)라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정치학자들이 정치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둘러싸고 수많은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개혁을 둘러싼 당정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최고의 관심 사항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개혁 방식에 관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3권분립, 다당제, 직선을 통한 지도자의 선출 등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시각과,

공산당의 지도하에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민족구역자치제, 기층 민주주의 등의 제도적인 틀에 기초하여 '중국적 특색을 지닌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許忠明 2008, 1-4; 朱學勤 2008; 漢廣 2008, 1-12; 曾世逸 2007; 劉熙瑞 2007; 吳建民 2008). 또한 민주주의보다 법치를 기본 내용으로 한 '자문형 법치정치체제'를 건설해야 하며 이러한 법치주의적 정치개혁을 통하여 중국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과 정치문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Pan Wei 2006, 3-40).

정치개혁 방식에 관해서는, 공산당 주도 하의 위로부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식인과 노동자, 농민 등의 이른바 사회적 주변부 집단이 중심이 되어 밑으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范亞峰 2009; 范亞峰·李凡 외 2009).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엇을 정치개혁의 돌파구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산당 내의 민주화를 통하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거나, 기층 민주주의의 실현이 정치개혁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陳奕敏 2007, 27-30)도 있는 한편 당내 민주화와 기층 민주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俞可平·裴智勇 2008). 다른 쪽에서는, 정당이 아닌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의 개혁을 통하여 중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尹冬華 2008; 尤澤勇 2008), 정치협상회의나 다양한 사회단체를 통해 당정 부문과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는 심의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정치개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陳家剛 2008).

그러나 정치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기본적 입장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의 방식으로 공산당 주도 하에 위로부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돌파구로 공산당 내부의 민주화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반으로 민주주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당내 민주화론을 견지하고 있다(<在中國共產黨十六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

이는 공산당이 당 내부 개혁을 통해 제도적인 정비를 한 후, 개혁과정 전반을 주도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안정에 기초하여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글은 지난 30여 년 간의 중국의 정치개혁의 특징과 성과를 검토한 후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치개혁 방향과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치개혁 의도의 실현 가능한 조건과 한계를 검토한 후, 20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2022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중국 정치발전 및 정치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개혁·개방 30년과 정치개혁 평가

### 1. 정치개혁의 특징

중국의 정치개혁은 1989년 천안문사태를 전후로 하여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천안문사태 이전에 중국 공산당은 권력이 당과 중앙,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 과다하게 집중된 현상을 중국 정치체제의 총체적인 병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분권화를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사태를 거치면서 권력을 지방정부나 기업 등에 보다 넓게 부여하는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은 기본적으로 중단되었다. 대신에 정치개혁의 초점은 주요한 국가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와 법치와 절차에 기초하여 통치과정을 규범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정치개혁 방식에서 볼 때, 그 동안의 정치개혁의 특징은 점진적인 개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다음 3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혁노선에서 “돌다리를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摸着石頭過河)는 원칙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이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방향을 탐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둘째, 각종 실험을 통해서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을 수정하고,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국부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개혁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셋째, 개혁의 진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먼저 추진하고 어려운 것을 뒤에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주변부를 먼저 개혁하고 중심부를 나중에 개혁하고, 미시적인 것을 먼저 개혁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것을 개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이정남 2005, 83-88).

중국 공산당이 이처럼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개혁의 추진자인 공산당이 개혁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개혁의 추진에 대한 장애 요인이 적어 개혁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인 개혁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치문화의 발전 속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徐湘林 2003).

또한 개혁의 내용 측면에서,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개혁·개방정책 시작부터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적 방향에 근거한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서구식의 민주화도 공산당의 영도적인 지위를 침식시키고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서구식의 정치제도에 근거한 정치개혁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주요한 국가기구에 대한 제도개혁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개혁의 방향이 서구식 민주화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중국의 정치개혁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체제의 구성 부문을 개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정치체제를 적응시키기 위한 조정이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역할에 조응한 행정기구 개혁, 재정과 세수체제의 개혁과 정비, 중앙과 지방 관계의 새로운 조정, 인민대표대회의 제도화 수준을 재고하고, 입법기능과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혁, 법치의 구현을 위한 사법체제의 정비 등의 국가제도 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법치원리와 절차원칙에 기초하여 통치과정 전반을 규범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급 이하 단위에서 인민대표대회 대표, 당 간부와 행정수장, 촌민위원회나 도시사구주민위원회 간부 등을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민주주의의 확대를 꾀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들은 자유로운 정책 유세에 기초한 실질적인 경쟁선거로 발전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직선제의 실시 범위를 현급 이하 수준에 한정시키고, 아직 시급이나 성급, 혹은 중앙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정남 2007).<sup>1)</sup>

1)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남(2007)을 참조.

## 2. 정치개혁의 성격과 성과

지난 30여 년 동안의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하여 서방 학자들은 당국가체제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강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민주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Larry and Ramon 2004, 1-23). 뿐만 아니라, 헨리 로엔(Henry Roen)은 랜덤하우스 랭킹순위를 인용하면서 중국은 2015년 경에 겨우 부분적으로 자유화 단계로 진입하여 2020년 정도가 되어야 마침내 자유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민주화 단계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John 2008).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추진한 각종 정치개혁은 ‘조용한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개혁은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개혁보다는, 주요 국가기구에 대한 제도개혁과 법치에 기초한 절차적 합리성의 강화를 통하여 통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새로운 현대적 거버넌스 구조를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요 국가기구에 대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통치제도를 완비해 왔다는 점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시장경제 체제에 조응하는 국가기구 전반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경제가 계획 메커니즘이 아닌 시장에 의해 조절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불필요해진 행정기구의 통합에 초점을 둔 개혁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조세의 종류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세원을 구분하는 소위 분세제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도 새롭게 조정되었다. 또한 그동안 ‘고무도장’으로 간주되어 온 인민대표대의 운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민대표대의 입법기능과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인민대표대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법치주의원칙에 기초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체계 및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주민들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다(이정남 2005, 88-100; 俞可平 2008, 1-4).

둘째, 절차와 규칙을 강조한 지도체제의 제도화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도자 개인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치와 헌법을 강조하면서 집단 지도체제의 규칙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장쩌민(江澤民) 체제 이후 서



서히 시작되어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는 지도체제의 제도화를 위하여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고, 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국에 집단학습회를 도입하였다. 또한 원자바오는 2003년 4월 그동안 법률적 지위도 없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온 총리 판공실회의를 폐지하고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가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3년 7월 비공식적인 중앙공작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를 폐지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이 회의는 마오(毛)시대 이래 존재해 온 회의로, 비록 공식적인 제도로써 당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회의였다. 이러한 지도체제의 제도화로 혁명 1세대와 2세대가 정치일선으로부터 퇴각하고 최고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집단지도체제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정책결정과정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넷째,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해 정부가 더욱 더 반응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래 덩샤오핑(鄧小平)은 공산당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 없는 한 정치체제의 주변적인 것에 대한 개방을 진행해 왔다. 그리하여 기층선거나 사회단체 참여 등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후진타오 정부는 “간부에 대한 문책 및 책임제”를 도입하여 관료들이 상부에 대해 정직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인민에 친숙한 이른바 친민(親民)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효율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인 요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법률개혁과 헌법개혁의 추진이다. 여기에는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에 따른 보다 명확한 거래 규칙, 국가권력의 전횡에 대한 제한, 사적 소유권의 보장,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제도의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제도, 법, 실천행위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이슈인 헌법수정이 개혁·개방이후 4차례 이루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모두 4개의 헌

법체계가 존재해 왔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 1982년에 새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헌법은 1988년 13차 당대회, 1993년 14차 당대회, 1999년 15차 당대회, 2004년 16차 당대회 등 4차례의 당대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수정되었다. 이처럼 헌법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수정한 것은 법에 의해서 개혁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산당의 의도 때문이다.

4차례의 헌법 개정은 3가지 측면에서 중국정치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른바 ‘3개 대표론’(三个代表論)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공산당을 혁명정당에서 통치정당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시민들의 사적 소유권과 유산 상속권을 헌법을 통하여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의 형성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이다. 비록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헌법에 사적 소유권의 보호와 함께 인권에 대해 명기한 것은, 정치지도자의 통치행위나 정책결정과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Zhao 2006, 230-246).

상술한 변화들은 비록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인의 정치적인 삶에 자유화 정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위커핑(俞可平)은 그동안 정치개혁과정을 총괄하면서 그 특징을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善治)로 특징짓고 있다. 즉, 그는 중국의 정치개혁 및 정치변화 과정을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변혁으로 간주하면서, 그 과정을 인민대표대회 제도개혁,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제와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와 기층사회자치제도, 행정기구개혁, 그리고 당내민주화의 실현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혁과 ‘당의 영도’,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 ‘법에 기초한 통치’로 집약되는 통치원칙으로 요약하고 있다(俞可平 2008, 1-4).

결국 그동안의 중국의 정치개혁은 제도개혁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절차화와 규범화, 법치화에 초점을 둔 개혁이었다. 따라서 비록 과거 전체주의 시대와 비교하여 많은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정치변화는 아주 미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자유화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오도넬과 슈미터에 따르면 민주적 전환의 상징적인 시작이 곧 자유화 시기로, 이 시기 현직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개인과 집단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한다. 그 결과 비록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지만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반대파의 정치활동 영역이 생겨난다(O'Donnell et.al. 198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아직 자유화 단계에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비록 시장화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한 분권화가 인정되는 등 과거의 전체주의적인 통치가 권위주의 통치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치활동 영역에서 정치적 반대파의 공개적인 경쟁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Ⅲ. 정치개혁 구상 : 정치개혁의 방향과 돌파구

#### 1. 정치개혁 방향 :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

정치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는 ‘민주사회주의론’, ‘자유주의적 헌정민주론’, ‘자문형법치주의론’,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 등 크게 네 가지의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중국인민대(中國人民大) 셰타오(謝韜) 부총장이 2007년에 제기한 것으로, 그는 북유럽의 사민주주의의 길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謝韜 2006). 자유주의적 헌정민주론은 선거와 다당제, 3권분립 등 서구식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朱學勤 2008), 이는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 기초한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교된다. 다른 한편 서구식 가치체제와 민주정치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보다 법치를 기본방향으로 한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문형법치주의론’도 있다(潘維 2003).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 기초하여 서구와 다른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시각은 2005년에 중국 정부가 출판한 《중국민주주의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백서는 민주주의를 인류문명 발전의 성과이고 세계 각국 인민의 요구라고 지적하면서도, 각국의 특징에 맞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키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주주의 건설은 중국의 국정(國情)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 모델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中國的民主政治建設白皮書》 2005).

19세기 후반 서구로부터 민주주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중국의 정치지도자나 지식인들은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이해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대중들을 조화롭게 단결시킴으로써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사회에서 중국민족의 생존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 당시의 부강한 국가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정치참여를 문명의 상징이고 근대화의 특징이며 부국강병을 위한 길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분리하여 사고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서구적인 민주주의 이해와는 달리, 개인과 국가의 이익의 대립이 아닌 소통을 통한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Zhao 2000, 33-51).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주의적인 인식은 오늘날의 정치지도자나 지식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중국의 정치지도자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가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는 도구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구식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과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배제하고자 한다. 이런 논리에 기초하여, 중국 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개혁의 목표를 공산당의 영도를 존속시키려는데 둔다. 다만 대중의 정치참여의 증가와 감독행위의 강화를 통하여 공산당 일당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趙穗生 2009, 5-14).

이 같은 정부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추진하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중국 특색'이라는 논리를 통해 세계 정치문명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중국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개혁·개방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며, 근대시기에 중체서용(中體西用)의 논리가 실패했듯이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許忠明 2008, 1-4). 그러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중국공산당의 공식적 입장이고, 또한 현재 중국내 정치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

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0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민주정치건설백서>와 17차 당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식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으로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 법치주의 등 세 가지 요소의 유기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제도적 구성 요소로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제와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등을 간주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중국 민주주의 실현의 주요한 형식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단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제도로 간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각종 정치제도의 정비와 완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민주주의 원칙의 강화, 정부와 관료에 대한 감독의 강화, 알권리·표현권·참여권·감독권 등의 민주적 제 권리의 보장, 기층사회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발전, 시민의식의 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공산당의 영도와 법치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다당제나 경쟁선거, 3권분립에 기초한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주요한 제도적인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제도에 기초하여 향후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제도적 완비와 보다 민주화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이행, 그리고 민주적인 감독 및 제반 권리의 보장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는 일정 수준의 정치적 자유화를 통해 보다 대중 순응적인 통치방식으로 전환을 꾀함으로써 통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공산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결국 서구식 대의민주주의나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모델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모색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치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의 결과 나타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도록 공산당의 통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내의 한 연구자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의 목표는 거버넌스 모델의 전환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燕繼榮 2008, 15).

## 2. 정치개혁의 돌파구 : 당내 민주화

그렇다면 정치개혁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정치개혁의 돌파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는 기층 민주주의의 실현,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개혁, 심의민주주의의 실현, 대중의 권리운동, 그리고 당민 민주화 등 다양하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다양한 시각 가운데서 “당내 민주화를 통한 사회 민주화의 추진”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다. 이 시각은 중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소질이 높고 조직화 수준이 높은 엘리트 집단인 공산당 내부의 민주적인 개혁을 통하여 공산당의 통치 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하는데 모범이 되도록 하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산당의 개혁을 통하여 공산당이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정치개혁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남 2009, 43-69).

당내 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당내 파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다원적 경쟁 메커니즘을 당내로 도입하자는 시각과 혁명정당에서 집권당으로의 당의 성격 전환 및 당내의 민주적인 절차를 제도화하자는 주장 등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정치노선에 따라 당내 엘리트 간의 파벌이 경쟁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선거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다면, 당내의 다양한 이익 갈등의 통합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당제를 통한 경쟁을 대체할 수 있어 공산당 주도하의 안정적인 정치적 민주화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각은 정작 공산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공산당은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당내로 끌어들이 공산당 영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당내 민주화의 방향을 잡고 있다(이정남 2009, 52-53). 이를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당무공개제도의 추진, 당대표대회제도와 당내 표결제의 도입, 당 상임위의 당위원회회를 향한 업무보고의 제도화, 당내 선거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다(이정남 2009, 55-59).

그러나 당내 민주화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당내의 민주화는 당내의 민주화에 한정될 뿐 중국 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의 민주주의로 확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돌파구로 삼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내 민주화는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민주화이고, 따라서 극소수의 당원만이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고 95% 이상

의 절대 다수의 비공산당원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당내 민주화를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돌파구로 삼을 수 없다는 비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劉軍宁 2008).

결국 중국 공산당이 현재 당내 민주화를 정치개혁의 돌파구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공산당의 개혁을 통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공산당 통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통치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공산당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법치원리에 기초하여 통치방식을 보다 제도화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보다 점진적으로 중국적인 조건에 걸 맞는 민주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권위주의체제를 보다 공평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보다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공산당 통치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각종 정치적인 시도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계가 아니라, 탄력적인 권위주의(resilient authoritarianism)를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봐야한다(Andrew 2008, 25-43).

## IV. 정치개혁의 요인과 전망

### 1. 점진적 정치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은 일당제를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정치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정치개혁과 체제 전환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 방식이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당의 통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로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진된 정치개혁은 서구와 다른 중국 특색을 지닌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趙穗生 2009, 10-14).

이 같은 인식은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도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일정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공산당학교(中央党校) 교수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또한 낮은 수준의 민주적 법제화

정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치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적어도 60년이 걸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첫 단계(1979-2001년)로, 경제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초보적인 완성을 이끌어내는 시기이다. 둘째 단계(2002년-2020년)로, 소강(小康)사회(배고픔의 단계를 벗어나 중등 수준의 생활로 진입하는 단계) 목표가 전면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완성된 후,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정치체제의 구성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현대적 민주주의와 법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건설하는 단계로 분류된다. 셋째 단계(2020-2040)는 20년 동안 민주정치의 제도적 틀을 본격적으로 완성하여 중등 정도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周天勇·王長江·王安峪 2007, 45-46).

또한 현재 중국의 정치개혁 과정이 위치하고 있는 단계로 분류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를, 다시 3시기로 세분화하고 있다. 우선, 2002-2010년 시기로, 행정 관리체제의 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재정과 세수 체제 및 중앙과 지방의 관계조정, 일부 국가권력과 사법기구, 인민대표대회제도, 사법체제의 개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두 번째 2011-2016년 시기로, 그동안의 개혁에 기초하여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사법체제의 완비 등을 통하여 현대적인 권력균형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로, 2017-2020년 시기로, 사회조직 및 종교조직의 건설, 시민들의 소질 제고 등에 기초하여 사회단체, 종교체계를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시기이다(周天勇·王長江·王安峪 2007, 45-46).

상술한 내용에 기초할 때, 중국의 향후 정치개혁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인민대표대회, 사법체계, 국무원 등에 대한 제도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 부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는 권력균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2020년도까지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에, 마침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비록 중국 정부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는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의 정치노선 및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중앙공산당학교의 교수들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당정 부문의 시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과연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술한 바와 같은 민주주의를 추진할 제도적인 조건을 완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향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제도개혁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특색을 지닌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공산당 주도하의 안정적인 정치개혁의 추진에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공산당의 통치 능력과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를 제시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과정에서, 집권 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역학 관계가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張旭昆 2008 1-2, 23). 따라서 중국의 경우 공산당이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 능력을 보유하고, 반면에 시민사회가 전면적인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거나 조직화되고 결집된 역량이 없다면, 상술한 정치 일정은 큰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산당의 통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하위 변수로 엘리트의 단결 및 통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가와 함께 일련의 정치개혁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요구를 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정치참여와 개혁의 요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엘리트 내부의 통합력 확보는 안정적인 통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적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나 시민사회로부터의 저항이 있을 때, 엘리트 내부의 분열은 권위주의체제의 붕괴로 가는 결정적인 변수이다. 엘리트의 분열은 권위주의체제의 사회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공공토론과 반정부운동, 정치체제 비판이 훨씬 수월해지는 자유화 과정을 허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이 더욱 감소되기 때문이다(게오르그 쇠렌센 1994, 77-78). 반면 통치 엘리트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시민사회 내의 정치참여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제도화된 정치참여로 나타나는 폭발적인 정치변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저항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하위 변수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정도 및 저항운동의 성격과 조직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지니게 되고 정치체제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저항운동이 성장하여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인 수준의 조직으로 결집될 때, 공산당이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치개혁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 점진적 정치개혁과 변화에 대한 전망

### ① 공산당의 통치능력

안정적인 통치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조건 중의 하나가 통치엘리트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통치 엘리트는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엘리트 내부의 갈등이나 균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되고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되면서 특정 최고 정치지도자의 권위나 개인적인 인적관계에 기초한 파벌정치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엘리트 내부의 갈등이나 균열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특징으로서는, 첫째, 엘리트 계승의 제도화로 권력 계승을 둘러싸고 결정적인 정치 갈등이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권력계승 과정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등 최고 지도자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을 건 투쟁'이 일어나는 위계적 게임(hierarchical game of life and death struggles)에서, 보다 제도화된 공식적 틀 내에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 속에서도 공존이 가능한 게임'(game of competitive coexistence)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공산당 통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타협적인 절차가 비공식적인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파벌정치를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Huang 2008, 80-81). 장쩌민으로부터 후진타오로의 무사한 권력 승계는 바로 이러한 정치과정이 제도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 지도체제가 정착되면서 엘리트 내부의 이념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장쩌민으로부터 후진타오로의 권력 계승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권력 계승의 제도화는 정책결정 과정과 리더십 관계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당 중앙 엘리트들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내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지도부가 당 내에서 세력을 키우기 위한 파벌의 형성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위기상황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최고 지도부 내에서 심각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자오즈양(趙紫陽)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와 리펑(李鵬), 천윈(陳云)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자오즈양이 실각한 것과는 대조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엘리트들 간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싸고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Miller 2009, 1-10).

결국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은 권력 계승의 제도화, 집단 지도체제의 확립 등으로 파벌정치가 약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치 엘리트 내부의 의견 통합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현재 정치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비교적 강한 통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인 통치 능력에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민사회 내의 정치참여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이 같은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개혁 플랜을 통하여 민사회의 참여 요구를 수렴하면서 정치개혁을 주도할 의지가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공산당이, 비록 중국 특색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공산당은 2020년에 중국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완성하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공산당 영도 하에 현대적인 민주주의와 법치를 실현하는 정치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 2005년 《중국민주정치건설백서》를 발행하여 민주주의를 인류역사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하면서, 민주화를 향한 정치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도 정치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정치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상술한 점들은 중국 공산당이 비록 민주화를 향한 정치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제도화를 통하여 정치개혁의

요구를 수렴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나름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준비 작업은 민주주의 실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은 기층 지역에서의 직선제의 실시를 통한 간부의 선출을 민주주의 실험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종종 언급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층 선거의 상층으로의 확대 실시는 중국 정부가 민주화의 실험을 상층으로 확대하여 정치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 보다 획기적인 민주적 실험을 통하여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과정의 핵심적 항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볼 때, 공산당은 아직까지 직선제의 실시 범위를 현급 이하의 당정 지도자나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출에 한정하고 있어 매우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의 일부 학자들은 2022년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중국의 인민들이 최고 지도자를 직선을 통하여 선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출은 직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의 전인대 대표의 수(2,987명)와 현급 행정단위 수(2,860개)가 유사한 규모이기 때문에, 4개의 현을 묶어서 한 명의 전인대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현재의 전인대 대표 수를 1/4로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약 750명 정도의 전인대 대표를 직선을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전인대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전인대 대표와 전인대의 위상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전인대의 입법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賈西律 2009; 李凡 2005). 그러나 필자가 2009년 7월 중국 공산당중앙당교의 정치학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기초하면, 중국은 20차 당대회까지 현급 이하 당위원회 간부의 선출에 직선제 실시를 도입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민대표대회 대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수장의 선출에 직선제 실시를 확대할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은 결국 중국 공산당이 정치개혁을 통해 통치 방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내의 정치참여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에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 폭의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공산당의 통치 능력에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② 시민사회의 성장과 저항능력

중국의 시민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 및 그 조직화 정도에서 권위주의 통치 엘리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성장 및 국가로부터 자율성의 정도, 시민사회 저항운동의 성격과 조직화 정도에 기초해 볼 때, 중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저항 능력은 여전히 체제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중국의 시민사회는 성장 과정 중에 있는 과도기 시민사회이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정책과 시장 경제체제의 등장은 본격적으로 시민사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시장경제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화와 함께 사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시민사회 형성의 기본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화, 절차화, 규범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진적 정치개혁 역시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시민사회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張騏 2009, 8-9, 12).

시민사회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단체의 본격적 성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65년 중국의 사회단체는 전국적인 수준의 단체가 100개, 지방성단체가 6,000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전국에서 등록된 사회단체는 모두 12만 9천개, 그 중 전국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단체가 1,687개이고, 성급단위에서 형성된 단체가 19,540개이고, 지(地)급 및 현급 이상 수준에서 형성된 단체가 50,633개이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가 협회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인들에 의해 구성된 사회단체가 64개이며, 이들 중 전국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조직이 15개이다. 또한 현급 이하의 사회단체 및 등록되지 않은(인터넷상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단체) 단체가 약 300만개로 추정된다(이정남 2005, 105).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단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민정부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21.2만개에 달한다. 그리고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에 따르면 2009년 6월 30일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3.38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단체의 형성도 가속화되고 있다(熊光淸 2009). 이러한 점들은 중국에서 이익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조직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가치체계나 삶의 방식 등 비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사회는 상당부분 성장하였다. 우선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독립적인 소비 주체로 변화하였다.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소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이나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는 오랫동안 개인주의가 금지되어 왔던 중국에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취미와 기호를 선택하고 이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도 대중문화, 전통문화, 외래문화 등 자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李景鵬 2006, 2-9).

그러나 이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자율적인 시민사회로 규정지을 수 없다. 우선, 중국의 시민사회는 전형적인 정부 주도의 시민사회이고, 명확한 관민이중성(官民二重性)을 띠고 있다. 대다수의 사회단체는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의 주도하에 활동한다. 시민사회가 발전된 국가의 사회단체와는 달리 중국의 사회단체는 자율성, 자원성, 비정부성이 분명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조직적으로도 행정조직과 민간사회단체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俞可平 2007, 15-18).

중국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저항 능력이 체제에 위협이 되기에 부족한 두 번째 이유로, 시민사회의 저항 운동이 반정부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시민사회 내의 저항 운동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대중시위의 증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993년 전국에서 대중시위가 모두 8,709건이 발생하였고, 1999년에 32,000건을 초과하였으며, 2003년에는 60,000건이 되었고, 2004년에 74,000건, 2005년 87,000건, 2006년에는 9만 건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80% 정도를 차지하고(농민의 권리요구가 35%, 노동자가 30%, 도시민들의 권리요구가 15%), 사회분규가 10%, 사회소동이 5%,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5%를 차지하고 있다(于建嵘 2007, 1-18).

이러한 대중시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적 고도 성장의 결과 역설적으로 나타난 이른바 ‘성공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와 농촌, 사회계층 간, 지역 간의 소득 격차의 증대, 관료들의 만성적인 부패, 의료, 교육, 주택부문에서의 사회복지제도의 붕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의 위기'와 그 징후들

	198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실업률 <sup>1</sup>		2.9	3.1	4.0	4.3	4.2	4.2
지니계수	0.28	0.38	0.458			0.5	

출처: <中國信息報> <http://www.stats.gov.cn> 2006/4/15; 肖唐鏢, 2006. “二十余來大陸農村的政治穩定狀況-以農民行動的變化爲視角.” <中國統計局>. 4월 15일; 2. <http://www.stats.gov.cn>. [http://www.usc.cuhk.edu.hk/wk\\_wzdetails.asp?id=2440](http://www.usc.cuhk.edu.hk/wk_wzdetails.asp?id=2440); <http://www1.chinesenewsnet.com> (검색일 : 2006. 3. 10). 주: 1. 공식등록 실업률을 의미함.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중국은 소득 격차가 매우 적은 국가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국가로 변화되었다. 1980년 중국 주민 소득의 지니계수는 0.28에서 2000년에는 1.458를 초과했고, 2004년에는 0.5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국제적인 수준(4.0이 경계선)에서 볼 때 소득 격차가 이미 대단히 불평등한 상황에 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위의 <표 1>에서 보듯 공식적으로 집계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에 기초한 실업률은 8.27%에 달한다(장영석 2005). 이 같은 실업률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단행된 국영기업의 개혁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소득 격차의 양극화의 확대와 실업률의 증가는,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중시위는 정부에 저항하는 체제개혁 운동으로 치달고 있는가? 한 전문가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래 중국에서는 3차례의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의 물결이 있었다, 하나는 1980년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운동이고, 두 번째는 1990년대 후반의 기층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동원식 민주주의의 물결이고, 세 번째가 최근에 분출하고 있는 권익보호 민주주의 운동이다(范亞峰·李凡等 2009, 3-33). 권익보호 민주주의는 대중의 권리와 참여의식을 배양하고 조직적인 능력을 배양시키며, 민주주의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층사회 활동가 집단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인권의 실현과 법치의 구현이라는 진보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민주적 정치문

화의 성장을 이끌어내어 중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范亞峰·李凡等 2009, 4-33).

그러나 현재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중시위가 단기적으로 체제위협 세력으로 발전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선, 대중의 권리운동이 체제저항 운동과 정치개혁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특징으로는, 첫째, 중국의 대중시위는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투쟁이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아니며, 경제적 인 특성이 정치적인 특성보다 강하다. 둘째, 규칙의식이 권리의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안전에 따라 권리보호가 공동의 의제로 전환되면서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반응성이 진취성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서 나온 반응적인 행동이라는 점이다. 넷째, 목표의 합법성과 행위의 불법성이 공존한다. 대중의 권리운동의 목표는 합법적이지만, 구체적인 행위에서는 불법적인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于建嵘 2007, 2-18; Kevin and Li 2006). 따라서 현재 전국적인 수준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중시위는 분명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통치엘리트에게 일정한 위협이 되겠지만, 이 운동은 체제개혁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대중시위를 결집시켜낼 조직화된 역량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해외에서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1998년 민주당을 건설하여 직접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12월에는 중국의 지식인과 전문가들 303인이 “민주장정”(《零八憲章》, 2008年 12月 10日 公布)을 선언한 이후, 서명에 참여한 수가 1,500여 명을 초과할 정도로 과거와 달리 지식인 엘리트 계층에서 집단적인 조직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도들은 공산당의 탄압에 의해 주요 인사가 해외로 망명을 하거나 산발적인 조직화 시도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시민사회 내의 대중시위를 이끌고 지식인들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적인 지도부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는 여전히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인 시



위 및 저항의 형태를 띠는 수준이며,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하나의 결집된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 V. 평가와 전망

개혁·개방정책의 실행이 30여 년을 거치면서, 중국의 개혁정책의 초점은 경제에서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에 따른 다원적 이익 갈등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적 모순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치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산당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와 지식인들 사이에는 중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시민사회, 법치 등은 이제 중국 지식인들의 주류 담론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정치개혁 방향을 민주화로 규정짓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라는 담론을 통하여, 다당제와 경쟁선거, 3권분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서구식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 일당제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라는 기존의 제도적 틀에 기초한 중국식 민주주의의 실행을 강조한다. 경쟁선거의 도입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대는 현급 행정단위 이하의 기층 사회에 한정시키고 있을 뿐이다. 물론 법치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의 제도화, 절차화, 그리고 감독기능의 강화, 민주적인 제권리의 신장 등에 대한 강조는 새로이 변화된 경제와 사회적 조건에 부응한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민주화 단계로 진입하는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국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 이전 단계인 자유화 단계로 서서히 진입하도록 하는 정도의 변화만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의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는 공산당의 주도하에 사회·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산당은 공산당 내의 민주화를 통해 통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를 제고시켜, 정치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주도권을 부정하고, 공산당의 통제 하에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정치변화를 꾀하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모색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보다 공평하고, 절차화되고, 지속 가능한 탄력적인 권위주의체제의 수립이고, 이 과정은 공산당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라는 시각에 기초하여, 서구와 다른 새로운 특색을 가진 민주주의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2020년도까지 중국의 정치변화의 주도권을 공산당과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문제는 여전히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화, 법치화에 기초한 정치개혁 및 정치변화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이른 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주도하에 안정적 정치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경제적 고도 성장으로 인하여 초래된 이른바 ‘성공의 위기’, 즉 실업, 빈부격차, 부패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시민사회의 성장과 저항이라는 위기에 대해 통치 엘리트들이 내부적 결집과 단결을 유지하면서, 정치참여를 제도화된 틀로 수렴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은 내부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강사회론을 전면에 내걸고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시민사회 내의 각종 저항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인 변화들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법치화, 제도화, 절차화에 기초한 보다 탄력 있는 ‘권위주의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대응이다. 따라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여 제도화 시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안고 있다. 또 이러한 조건이 통치 엘리트의 통치 능력에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형성 과정에 있는 과도기 시민사회이고, 매년 수만 건의 대중시위가 폭발하고 있지만, 이는 권리를 요구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주화와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결집해낼 만한 전국적인 수준의 조직화된 지도부의 형성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중국의 정치변화 및 그 방향은 여전히 공산당에 의하여 주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산당은 더욱 더 자유화의 범위를 넓혀서 보다 유연한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유화적인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더욱 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 결과 당정부분과 시민사회와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줄 당기기가 서서히 팽팽해지면서, 양자가 주도하는 정치개혁 및 민주화의 담론 사이의 긴장관계 역시 출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정이 구상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보다 선명하게 대별되면서,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전환 과정의 복합적인 구도가 서서히 부각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문

- 게오르그 쇠렌센. 김만홍 역. 1994. 《민주주의와 민주화: 민주화 물결의 과정과 전망》. 서울: 풀빛.
- 이정남. 2005.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현대중국의 이해》. 김익수·이정남 외. 서울: 나남.
- \_\_\_\_\_. 2007. 《중국의 기층선거,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변화》. 서울: 폴리테이아.
- \_\_\_\_\_. 2008.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모색인가?.” 현대중국학회 2008년 추계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 \_\_\_\_\_. 2009.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학회) 제10집, 2호.
- 장영석. 2005. “중국의 경제성장과 도시 실업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1호.

### 2. 영문

- Diamond, Larry and Ramon H. Myers. 2004. “Introduction: Elections and democracy in Greater China,” *Elections and democracy in Greater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 Huang Jing. 2008.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Succession in China: Progress and Implications.” In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ed. Cheng Li. The Brookings Institution.
- Miller, Alice. 2009. “Leadership Sustains Public Unity amid St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No.29(Summer).
- Nathan, Andrew J. 2008. “China's Political Trajectory: What are the Chinese Saying?” In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ed. Cheng Li. The Brookings Institution.
- O'Brien, Kevin J. and Lianjiang Li. 2006.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Donnell, Guillermo,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 Thornton, John L. 2008. "Long Time Coming: The Prospect for Democracy in China." *Foreign Affairs* (Jan/Feb) Vol. 87, Issue 1.
- Wei, Pan. 2006. "Toward a Consultative Rule of Law Regime in China." In *Debating Political Reform in China*, ed. Suisheg Zao. Armonk, New York; London, England: An East Gate Book.
- Zhao, Suisheng. 2000. "A Tragedy of History: China's Search for Democracy in the Twentieth Century." In *China and Democracy: The Prospect for a Democratic China*, ed. Suisheng Zhao. Armonk, New York; London, England: Routledge Press.
- \_\_\_\_\_. 2006. "Toward a Rule of Law Regime—Political Reform Under China's Fourth Generation of Leadership." In *Debating Political Reform in China: Rule of Law vs. Democratization*, ed. Suisheng Zhao. Armonk, New York; London, England: An East Gate Book.

### 3. 중문

- 肖文濤. 2009. "治理群体性事件与加强基層政府應對能力建設," <中國行政管理>. 第6期.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52317>(검색일: 2009.7.13).
- 許忠明. 2008. "中体西用'与中國特.'"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34984>(검색일: 2008.9.24).
- 朱學勤. 2008. "2007: 思想在破局, 改革要改放," <南方都市報>. 1月1日.
- 漢广. 2008. "西方民主模式中國民主模式." <http://www.chinaelections.org/NewInfo.asp?NewsID=122522>(검색일: 2008.3.11).
- 曾世逸. 2007. "房宁訪談: 讓民主從誤解中擺脫出來," <學術探索>. 第5期.
- 劉熙瑞. 2007. "中國的民主模式已經确立," <人民論壇>. 4月25日.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7.4.25).

- 吳建民, 2008. “中國要什麼樣的民主,” <人民日報海外版>. 2月4日.
- 范亞峰. 2009. “中國民主化的轉型模式.”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51705>(검색일: 2009.7.17).
- 范亞峰·李凡等. 2009. “中國民主化的轉型模式研討會紀要.”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53462>(검색일: 2009.7.31).
- 陳奕敏. 2007. “基層民主化与民主基層化,” <中國改革>. 第9期.
- 尹冬華. 2008. “人大民主應成爲中國政改的火車頭.”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8.4.4).
- 尤澤勇. 2008. “人代會不妨先改起來.”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23494>(검색일: 2008.4.3).
- 陳家剛. 2008. “協商民主与当代中國的政治發展,” <北京聯合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期.
- 謝韜. 2007. “只有民主社會主義才能救中國,” <黃炎春秋>. 第2期(12月).
- 徐湘林. 2003. “80年代以來的中國漸進政治改革,” <<民主, 政治秩序 与社會 變革>>. 王浦劬·謝慶奎 主編. 北京: 中信出版社.
- 熊光清. 2009. “中國網絡社團興起的影響: 國家与社會關係的視角,” <南京社會科學>. 第5期,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76530> (검색일: 2010.6.7).
- 俞可平. 2008. “中國政治發展30年,” <文匯報>. 12月17日.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39891>(검색일: 2009.6.12).
- \_\_\_\_\_. 2007. “中國公民社會的興起及其對治理的意義,” <中央編譯局网站>. 2月5日.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17001>(검색일: 2009.6.12).
- 俞可平·裴智勇. 2008. “30年盤点: 中國民主增量發展,” <人民日報>. 12月3日.
- 潘維. 2003. <<法治与民主的迷信>>.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 趙穗生. 2009. “中國模式探索: 能否取代西方的現代化模式?,” <中國共產黨新聞网>. 5月31日.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51153> (검색일: 2009.7.14).
- 燕繼榮. 2008. “解讀中國式民主.” <중국모델의 적용 가능성> 국제심포지움.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학원 공동주최 발표 논문집. 4월 12일.

- 尹冬華. 2008. “人大民主應成爲中國政改的火車頭.”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8.4.4).
- 尤澤勇. 2008. “人代會不妨先改起來.”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23494>(검색일: 2008.4.3).
- 劉軍宁. 2008. “黨內民主, 或憲政民主.”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8.4.3).
- 周天勇·王長江·王安崙. 2007. 《攻堅:中國政治体制改革研究報告》. 新疆生產建設兵團出版社.
- 張旭昆. 2008. “中國政治民主化的可能路徑.”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27738>(검색일: 2008.5.15).
- 賈西律. 2009. “認真對待中國的民主.”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48074>(검색일: 2009.5.21).
- 李凡. 2005. “中國大陸基層選舉及民主的發展-在台湾銘傳大學兩岸研究所的演講,” <世界与中國研究所>. 6月28日.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Info.asp?NewsID=5307>(검색일: 2009.5.18).
- 張騏. 2009. “走向和諧-当代中國的公民社會探析.”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40403>(검색일: 2009.6.12).
- 李景鵬. 2006. “后全能主義与中國的公民社會,” <中國政治學網>. 3月2日.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34984>(검색일: 2009.6.12).
- 于建嵘. 2007. “中國的騷亂事件与管治危机-2007年10月30日在美國加州大學伯克利分校的演講,” <大道網刊>. 第7期.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ID=118361>(검색일: 2009.6.12).
- <新華網>. 2006. “溫家宝青年要繼承五四傳統:溫家宝五四青年節看望北師大學生.” 5月4日.
- <中國新聞網>. 2006. “溫家宝再談鄉鎮直選:溫家宝訪歐前接受歐洲媒体採訪.” 9月6日.
- <新華網>. 2007. “溫家宝談社會主義初級階段的歷史任務和對外政策.” 2月27日.
- <人民網>. 2007. “全國人大會議開幕 溫家宝作政府工作報告(全文).” 3月5日.
- <中國共產黨十六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 社會主義事業新局面.” 11月18日. <http://www.cs.com.cn/csnews/20021118/300508.asp>(검색일: 2008.12.20).

<零八憲章>. 2008. <http://news.boxun.com/news/후/china/2008/12/200812111309.shtml>(검색일: 2009.3.9). 12月10日 公布.

<中國的民主政治建設白皮書 (全文)>. <http://news.sina.com.cn/c/2005-10-19/11208053056.shtml>(검색일: 2008.7.16).



## 2011 외안독회 자료집

인 쇄 2011년 12월 22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 행 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전 화 02-20671-022

팩시밀리 02-730-1390

인 쇄 처 웃고문화사 Tel. 2267-3956

